

#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2011. 12

박형수 · 홍승현



## 서 언

고령화·인구감소 문제는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로의 이행, 경제 양극화 및 세계화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미래환경 변화이다. 특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2.57명의 절반 수준인 1.22명(2005~2010년 기준)으로 조사대상 196개국 중에서 193위에 불과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11.0%(2010년 기준)로 G7 국가들의 21~55년 이전 수준이지만 조만간 이들 국가들의 고령인구 비중을 초과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세계에서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고령인구 비중의 급속한 증가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여 꾸준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와 재정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수많은 경제학자 및 재정학자, 인구학자, 복지학자, 사회학자들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많은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특히 고령화·인구감소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 등 소득 관련 세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 관련 세수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산 관련 세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미미하게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적연금이나 의료 관련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는 이러한 재정수입 증가속도에 비해 훨씬 빠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주택, SOC,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재정지출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국가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저자들은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가 세목별 및 지출분야별 정책에 시사하는 함의와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미래에 대한 준비에 있어 본 연구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방향 수립 및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박형수 박사와 홍승현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특히 박형수 박사는 내년도에 추진될 후속연구에서 세목별로 과거 세수변동 요인을 세제변화, 과세베이스 변동 등 변동요인별로 분해하여 분석한 후,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연계시켜 주요 세목별로 중장기 세수전망을 시도할 계획이다. 저자들은 본 연구에 도움을 준 익명의 논평자 두 분과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에서 좋은 조언을 해주신 원내외 논평자들, 자료를 정리해 준 이성호 연구원과 원고를 편집해준 안상숙 연구행정원에게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저자들이 속한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조 원 동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G7국가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과거 인구증가율의 하락,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1인당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주요 재정지표, 세입 및 세출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실증분석해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고령화·인구감소가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국민소득의 지출, 분배, 생산 측면, 고용공급 및 수요 구조, 가계소득 및 소비구조, 자산규모 및 자산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지출 증가, 세수 감소 등 거시경제 전반이나 재정총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인구고령화의 부문별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발굴에 중점을 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총량적인 분석이나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나열식 분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세입, 세출 등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고령화·인구감소의 영향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세입·세출 규모 및 각각의 구조에 미치는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특히 성장률 둔화로 세입 및 지출 증가율도 하락할 전망이므로 세입 및 지출 규모 자체 보다는 세수 및 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세목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크게 세원 변동과 세제 변화 두 가지가 있지만 미래의 조세정책을 예견할 수는 없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향후 세원의 변동방향을 짐작해 보아 세목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만 분석(qualitative analysis)하였다. 세목별 세원에는 소득, 소비, 자산 수준과 같은 규모변수 외에 금리, 주가, 부동산 가격 등 가격변수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4대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 공교육 관련 재정지출 등의 규모를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계했으며, 이러한 정량적 분석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성적 분석만 시도하였다.

내년도에 추진될 후속연구에서는 세목별로 과거 세수변동 요인을 세제 변화, 과세베이스 변동 등 변동 요인별로 분해하여 분석한 후,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연계시켜 주요 세목별로 중장기 세수전망을 시도할 계획이다.

## II. 인구감소·고령화와 재정

### 1. 인구감소·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우리나라와 G7국가의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인구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등의 추이 및 2100년까지의 통계청 및 UN의 추계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최근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급속한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를 경험한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3개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진행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는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우리나라와 G7국가의 1970~2009년 데이터 추이, 동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 2008년 현재 OECD 국가들의 현황 비교 등의 분석을 통해 인구증가율의 하락,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1인당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주요 재정지표, 세입 및 세출 구조의 변화를 실증분석한 결과, 사회보장기여금과 일반소비세,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경제나 교육 관련 지출이 감소하였지만 사회보장지출이 급증하여 전체적인 재정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정부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순자산 규모도 감소하는 등 국가재정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실증분석 결과에는 재정당국이 지출증가에 대응하여 세입을 늘리는 등의 정책적으로 대응한 효과도 포함되어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표 2>에 정리된 OECD(2001)에서 추계한 소득세, 법인세, 노동 관련, 자본 관련, 소비 관련 평균유효세율들(1970~1996년)을 이용한 패널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1인당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일부 유효세율을 인하하기도 하였으나,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모든 유효세율들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 및 자본 관련 유효세율을 크게 인상시켰다. 특히 OECD Tax Database(2010)의 소득세 및 법인세 법정최고세율은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인하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효세율 기준으로는 모두 인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율은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인상되어 왔으며, 소비세 유효세율도 약하기는 하지만 인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제Ⅲ장에서는 세입 및 세출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과 관련 없이 인구구조 변화가 세원(tax base)의 변동이나 재정수요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표 1〉 재정지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종속변수(GDP 대비, %)	인구증가율 하락	고령인구 비중 증가	1인당 소득 증가	인구구조 변화 반영 <sup>1)</sup>
재정수입	?	+	?	+26.6
- 조세수입	?	+	?	+21.9
국민부담률		+		+14.1
· 소득과세		+	+	+7.2
(소득세)			+	?
(법인세)	+		+	+0.0
(사회보장기여금)		+	+	+7.3
· 소비과세		+	(-)	+3.1
(일반소비세)	(-)	+		+5.1
· 자산과세		+		+1.9
(상속증여 관련세)	+			+0.0
(자산보유 관련세)		+	(-)	+2.0
(자산거래 관련세)	+	(-)	+	-1.0
- 세외수입	+	+	?	+5.9
재정지출	?	+	+	+9.4
- 인건비	?	?	(-)	?
· 일반공공행정			(-)	?
· 국방	(-)	+	(-)	+2.1
· 공공질서,안전	+	(-)	+	-0.9
- 사회보장	+	+	+	+10.9
· 사회보호	++	++	(-)	+12.2
· 보건	(-)	+	++	+1.4
- 재정투자	+	(-)	+	-10.1
· 경제업무		(--)		-3.5
· 주택,지역개발		(-)		-0.6
- 기타: 환경보호	(-)			-0.0
- 기타: 오락,문화,종교	(-)		+	-0.0
- 기타: 교육	+	(--)	+	-2.4
재정수지	(-)	+	?	+18.2
정부부채	+	+	?	+69.1
정부순자산	(-)	(-)	?	-97.3

주: 1)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1.16%p(+0.35% → -0.81%) 하락하고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3.2%p(11.0% → 31.2%) 증가할 경우 분석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표 2〉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평균유효세율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소득세 유효세율	-0.015	-1.002	0.851	5.277	-0.034	-1.578	0.879
법인세 유효세율	-1.290	-0.538	3.123	3.043	<b>-0.754</b>	-3.914	0.688
노동 관련 유효세율	-0.017	-0.865	1.096	6.313	0.268	9.299	0.958
자본 관련 유효세율	0.100	1.962	3.606	8.615	<b>-0.356</b>	-5.415	0.835
소비 관련 유효세율	0.042	1.831	0.316	8.512	<b>-0.055</b>	-3.270	0.977

주: 1. 대상국가 및 분석기간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 7개국의 1970~1996년

2. 진한 글씨 및 음영은 각각 회귀계수가 (-) 및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와 G7국가의 1970~2009년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회귀 분석, 국내 경제연구소 및 국제기구, 국내외 학자들의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수준 및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지출 및 수요구조, 분배 및 소득구조, 생산 및 산업구조 측면 등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노동공급 및 수요, 가계소득 및 지출 구조, 자산규모 및 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 1. 소득수준 및 경제성장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표 3〉의 패널회귀분석 결과처럼 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1인당 소득 증가율 및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 금융연구원(2011)은 생산가능인구비율이 1%p 하락할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0.17%p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

산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2009)도 노년부양비율이 5% 증가하면 향후 10여 년간 총수요 측면에서 민간소비가 1.2%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2.0% 하락하면서 실질국내총생산 수준이 0.9% 하락하고 동시에 노동공급량이 1.6% 감소하고 투자 위축으로 자본축적도 0.6% 낮아지면서 경제의 총공급 수준도 1.2%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박형수·류덕현(2006)은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는 1971년 이후 평균 2.5%로 OECD평균(1.7%)보다 높았는데 2050년 1.5%까지 하락, 잠재성장률이 최근 4%대에서 2040년대는 1% 내외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신관호·황윤재(2005)도 인구구조의 변화가 총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임금결정방정식 추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해 보았는데,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는 2020년경 노동생산성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IMF(2004)는 고령인구 비중이 1% 상승하면 1인당 GDP는 0.041%p 하락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 상승할 경우 1인당 GDP는 0.08%p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한 바 있으며, OECD(2001)에서도 고령화로 향후 50년간 GDP 증가율이 매년 0.25~0.75%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EU 『2009 Ageing Report』(2010)에서 27개국의 평균 잠재성장률 하락 규모가 무려 2.0%p에 달하고, 현재 성장률이 높을수록 잠재성장률 하락 규모가 큰 경향을 보였는데, OECD(2010)에서는 2025년까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6%나 하락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표 3〉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소득/성장률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1인당 GDP(US \$)	-16.430	-0.068	3369.855	69.501	-	-	0.932
1인당 소득 증가율	0.085	2.411	-0.295	-4.134	-0.186	-5.857	0.518
개인 순저축률	-1.978	-2.705	-0.942	-8.556	-0.157	-7.014	0.753
노동소득분배율	-0.084	-0.572	0.763	6.692	-0.161	-12.737	0.771

## 2. 경제구조

### (1) 지출 및 수요구조 측면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지만 경제성장률 자체는 둔화되는 동시에, 지출 측면에서의 GDP 구성요소의 비중도 변화할 전망이다. 수입비중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지만 민간소비와 투자지출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정부소비나 수출비중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소비 내에서는 교통, 통신, 음식숙박, 임료·수도광열 등의 항목의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품, 의류·신발, 가계시설·운영, 의료보건, 교육 등의 항목의 지출비중이 감소할 것이다. 소비의 성질별로는 서비스 소비비중이 증가하는 대신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비중이 감소할 것이다. 투자지출 중에서는 기업부문의 투자비중이나 운송장비, 기계류 등 설비투자 비중은 증가하지만, 정부부문 및 가계부문의 투자비중이나 건물, 토목 등 건설투자 비중은 하락할 것이다.

한편, 〈표 3〉의 개인순저축률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OECD(2005)의 가계저축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전영준(2006)의 세대간 회계분석 결과, 김소영·이종화(2006)의 VAR 분석 결과, 금융

연구원(2005)의 전망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저축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2) 분배 및 소득구조 측면

GDP의 분배 측면에서는 '비용자보수'의 비중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지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영업잉여'의 비중이 하락하는 대신 '순생산수입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국민가처분소득(NNDI: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의 분배 측면에서는 가계부문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정부부문 및 기업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부문의 소득구성 변화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는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이 모두 감소하는데 영업잉여의 감소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소득분배율은 Schmidt and Vosen(2010)의 실증분석 결과는 평균수명 증가, 인구감소, 고령인구 비중 증가가 모두 노동소득분배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3>의 패널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은 자영업자 비율 등 경제구조로 인해 낮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상승할 여지가 있는 동시에, 선진국에서 1980년대 이후 나타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산업구조 변화, 노동절감형 기술발전, 세계화로 인한 무역 및 자본이동 자유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기인하였으므로 하락요인도 공존하고 있어 향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구감소 및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소득분배가 악화되며, 이에 대응하여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표 5>의 OECD의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 자료

를 이용하여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표 4> 지출 및 수요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종속변수(지출비중, %)	인구증가율 하락	고령인구 비중 증가	1인당 소득 증가	인구구조 변화 반영 <sup>1)</sup>
소비지출	(+)	+	+	4.0
-민간최종소비지출	(+)	(-)	+	-4.1
· 내구재	+	+	(-)	3.6
· 준내구재	+	(-)	(-)	-8.5
· 비내구재		(-)	(-)	-13.7
· 서비스	(-)	+	+	16.7
1. 식료품·비주류·음료품		(-)	(-)	-14.6
2. 주류 및 담배	(-)		(-)	0.0
3. 의류 및 신발		(-)	(-)	-7.6
4. 임료 및 수도광열	+	+	+	15.9
5. 가계시설 및 운영		(-)	(-)	-2.4
6. 의료보건	+	(-)	+	-2.1
7. 교통	(-)	+		4.2
8. 통신		+	+	3.6
9. 오락문화			+	?
10. 교육	+	(-)	+	-0.4
11. 음식숙박	(-)	+	(-)	3.7
12. 기타		(-)	+	-2.2
-정부최종소비지출		+	(-)	12.9
총고정자본형성		(-)		-15.4
-건설투자	+	(-)		-17.9
· 건물건설	+	(-)		-9.4
· 토목건설		(-)		-10.0
-설비투자	(-)	+	(-)	17.1
· 운수장비		+	(-)	6.5
· 기계류	(-)	+	(-)	11.7
-경작자산	+	+	(-)	1.8
-무형고정자산투자			+	?
1. 기업부문		+		23.0
2. 정부부문		(-)	+	-10.8
3. 가계부문		(-)		-15.7
총수출		+	+	10.9
총수입			+	?

주: 1)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1.16%p(+0.35% → -0.81%) 하락하고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3.2%p(11.0% → 31.2%) 증가할 경우 분석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3) 생산 및 산업구조 측면

패널회귀분석 결과 도소매·음식숙박·교통,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부동산업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54개국의 1970~2004년 데이터와 동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고령인구 비중 증가가 9개 산업별 고용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Thiessen et al.(2008)의 결론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일치하였으나 제조업 및 광업의 비중도 하락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금융업의 비중의 증가한다고 주장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충되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2006) 및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는 실버산업으로 요양, 의료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교육 등 14개 산업을 지목하면서 향후 이들 실버산업의 전망이 매우 밝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표 5〉 분배 및 소득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종속변수(비중, %)	인구증가율 하락	고령인구 비중 증가	1인당 소득 증가	인구구조 변화 반영 <sup>1)</sup>
본원소득 분배				
피용자보수 비중			(-)	?
-근로소득 비중			(-)	?
영업잉여/혼합소득 비중		(-)	+	-12.0
순 생산·수입세 비중		+		5.1
1.기업부문 가처분소득 비중	+	+		9.9
2.정부부문 가처분소득 비중		+	(-)	16.3
3.가계부문 가처분소득 비중		(-)		-25.0
-피용자보수	+	(-)	(-)	-5.2
-영업잉여	(-)	(-)	+	-16.2
-재산소득	+	(-)	+	-11.3
-순재산소득		(-)	+	-4.9
소득 재분배				
(정부부문)				
소득/부에 대한 경상세 수입		+	+	5.5
사회부담금 수입		+	+	4.2
사회수혜금 지출	+	+	+	5.7
기타 경상이전 지출	+	+	(-)	4.7
기타 경상이전 수입	+		+	0.1
기타 경상이전 순수입		(-)	+	-4.2
(가계부문)				
소득/부에 대한 경상세 지출			+	?
사회부담금 지출	+	+	+	4.8
사회수혜금 수입		+	+	4.4
기타 경상이전 지출	-	(-)	+	-2.1
기타 경상이전 수입		+	(-)	2.4
기타 경상이전 순수입	+	+	(-)	2.0

주: 1)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1.16%p(+0.35% → -0.81%) 하락하고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3.2%p(11.0% → 31.2%) 증가할 경우 분석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표 6〉 생산 및 산업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종속변수(비중, %)	인구증가율 하락	고령인구 비중 증가	1인당 소득 증가	인구구조 변화 반영 <sup>1)</sup>
농림어업		(-)	(-)	-6.3
광공업			(-)	
건설업		(-)		-5.5
도소매, 음식숙박, 교통		+	(-)	2.7
금융·부동산		(-)	+	-3.6
기타 서비스업		+	+	5.9

주: 1)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1.16%p(+0.35% → -0.81%) 하락하고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3.2%p(11.0% → 31.2%) 증가할 경우 분석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3. 노동공급 및 수요

#### (1) 노동 공급 측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저출산 추세와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른 기대수명의 증가, 적은 규모이지만 꾸준한 인구의 순수출은 가까운 미래에 인구의 절대규모 감소와 더불어 그 구성에 있어서도 고령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예상되고 있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에 3,619만명 이후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핵심 생산가능인구라고 분류되는 25세~49세의 인구는 이미 2008년을 기준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추후 이 핵심 생산가능인구에 유입되는 15~24세 인구는 지속적인 저출산의 영향으로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저축률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부양비율(총부양비율, 유소년 부양비율, 노년부양비율)에도 영향을 미쳐, G7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2000년대부터 급격하게 노년부양비율이

증가하여 2050년에는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60%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축률 또한 다른 G7국가들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저축률은 1990년대 초반 25%에 육박하였으나 2011년에는 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의 절대수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노동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 특히 20대와 40~50대 여성 그룹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반면 남성의 경우 20~30대에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이 60~64세 그룹에서는 참가율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어, 연령별·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대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뿐 아니라 고용률에 있어서도 남성은 꾸준한 하락을, 여성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7년 이후에는 때로는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을 추월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과는 달리 근속연수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50세 이상 그룹, 특히 남성 그룹에서 그 증가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하는 대로 노동의 고령화에 따라 전반적인 근속연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상황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근속연수의 증가로 임금수준에 있어 50세 이상 남성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도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데, 노동자들의 고령화가 전반적인 임금 상승 혹은 임금의 세대간 불균형 심화로 나타나는 추세이다.

## (2) 노동 수요 측면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 변화는 국가경제의 산업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30여 년간의 산업구조 변화로 2000년대 후반 3차산업의 고용비중이 67% 수준까지 상승하고, 1970~1980년대 산업화와 고속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은 90년대 이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대 후반 전체 고용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1차산업은 더 급격한 고용 감소로 1980년대 초반 28.5%에 달하던 고용비중이 2000년대 후반에는 7.5%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고용변화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각 산업별로는 더 다양한 고용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산업별로 연령별 분포의 변화가 뚜렷한 산업들, 예를 들어 급격한 고령화가 보이는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이라든가 청장년층 중심의 '제조업' 및 '건설업'들도 전체 산업의 연령분포의 변화를 넘어서는 꾸준한 연령분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은퇴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1차·2차산업들에서는 정년의 감소가, 고용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서는 정년의 연장이 향후 전반적인 정년 연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동 형태의 다양화와 함께 중년·고령 노동자의 일자리가 주로 비정규직과 시간제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고령화는 비정규직의 전체 비중 또한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4. 가계소득 및 지출 구조

### (1) 연령별 소득구조

근로소득 비중은 2003년 이후 4%p 이상 증가하였지만 60% 내외에서 안정적인 반면 사업소득 비중이 하락하고 이전소득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39세 이하 가구는 사업소득의 비중이 낮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 60세 이상 가구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고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국제비교에서는 일본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령별 소비구조

한·미·일 3개국의 가구주 연령에 따른 소비패턴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식료품(미국 제외), 주택 관련 주거·광열, 보건 관련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오락·문화(일본 제외), 교육, 교통·통신 지출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OECD의 2005년 보고서에서도 주택, 에너지, 의료 관련 지출비중이 증가하고 교통, 오락, 교육 관련 지출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1982년,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등 5년 간격의 총 6개 연도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지출을 시대효과·연령효과·세대효과 3개 효과로 분리하는 코호트 분석(cohort analysis)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식료품, 광열수도,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통·통신, 기타소비 지출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주거비, 교육, 교양·오락 지출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통신 및 주거비 지출규모에 대한 전망 결과만 본 연구 및 OECE(2005)의 소비 비중에 대한 전망 결과와 상충하였다.

또한, 연령별 평균소비(저축)성향 측면에서 50~59세 및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2003년 이후 40~49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60세 이상 가구보다 높아지는 생애주기 가설에 다소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세분화된 연령대별로 분석해 본 결과, 50대 후반 및 60대 초반의 중고령대에서 다소 평균저축성향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저축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한·미·일의 연령대별 소비지출 구조 비교

한국		미국		일본	
식료품·비주류음료	+	Food	-	식료	+
주류·담배		Alcoholic bev. & Tobacco	-	n.a.	
의류·신발	-	Apparel and services	-	피복 및 신발	-
주거·수도·광열	+	Housing	+	주거 & 광열·수도	+
가정용품·가사서비스		n.a.		가구·가사 용품	+
보건	+	Health care	+	보건의료	+
교통		Transportation	-	교통·통신	-
통신	-	n.a.		교통·통신	-
오락·문화	-	Entertainment	-	교양 오락	-
교육	-	Education	-	교육	-
음식·숙박	-	n.a.		n.a.	

## 5. 자산규모 및 구조

우리나라의 가계당 자산규모는 2008년 말 현재 11만 8,400달러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작지는 않지만, 금융자산 비중이 37.4%에 불과하여 호주, 체코, 프랑스와는 비슷하지만 캐나다나 일본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28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1인당 금융자산규모는 20위에 불과하였다.

〈표 8〉의 패널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고령화 진전에 따라 1인당 금융자산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비금융자산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통화·예금, 채권, 보험 보유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대출금 및 주식 보유 규모는 감소한다. 비금융자산은 주택, 토지를 가리지 않고 1인당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흥수 등(2005), 보험연구원(2011), 영국, 독일, 캐나다, 일

본 등 주요 선진국의 국가대차대조표 장기시계열 분석 등에서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일치한다. 또 금융자산 내에서는 예·적금, 연금, 보험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가계의 주식 보유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도 일치한다. 비금융자산 내에서는 주택, 토지, 기타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모두 감소하는데 주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부문 실물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도 있다.

연령대별 자산 및 부채 구조를 보면 경제이론이나 이상호(2010)의 연구결과는 향후 노령인구 비중 증대로 저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데 비해, 고광수 외(2005) 및 김기호·유경원(2008) 등은 교육수준이나 자산규모 증가 등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자산가격에 대해서는 Miles(2002), OECD(2005), Poterba(2004), Brooks(2006), OECD(2006), IMF(2006), World Bank(2009) 등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자산시장 붕괴설과는 달리 실질금리(금융자산 수익률 및 비금융자산 수익률)가 하락하여 자산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다. 다만 금융연구원(2005)은 저축이 감소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질이자율이 유의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가는 Davis and Li(2003), OECD(2006) 등 많은 연구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큰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의 누적 및 고갈 과정에서 국내금리(또는 채권가격)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asset meltdown' 가설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표 8〉 가계자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종속변수(비중, %)	인구증가율 하락	고령인구 비중 증가	1인당 소득 증가	인구구조 변화 반영 <sup>1)</sup>
1인당 총자산 규모			+	
1인당 비금융자산 규모		(-)	+	-67,081
- 주택		(-)	+	-79,025
- 토지		(-)	+	-36,454
- 기타 비금융자산	(-)	(-)	+	-16,952
1인당 금융자산 규모		+	+	46,352
- 통화 및 예금	(-)	+		76,023
- 채권		+		1,956
- 대출금		(-)	+	-288
- 주식	+	(-)	+	-20,785
- 보험			+	
- 기타 금융자산	+		+	

주: 1)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1.16%p(+0.35% → -0.81%) 하락하고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3.2%p(11.0% → 31.2%) 증가할 경우 분석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IV. 세입 및 세출에 미치는 영향

### 1. 세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상의 분석결과와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연령별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 분포와 자산종류별 세원분포, 항목별 평균유효소비세율, 재정패널의 연령별 세부담 분포 등을 바탕으로 고령화·인구감소가 세입규모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과세 중에서 소득세는 연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

가하겠으나 세수규모가 가장 큰 근로소득세 등 나머지 소득세 항목들의 변화방향이 불명확하지만 다소 감소할 전망이므로 전체적인 소득세수는 크게 변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 전체의 영업잉여 비중이 하락하겠지만 금융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전반적인 법인세수의 향방은 명확하지 않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들의 유효세율도 전 업종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였다. 반면, 공적연금과 의료보장 관련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 4대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사회보험료 부담이 2010년 현재 GDP 대비 3.07%에서 2050년에는 3.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소비 관련 과세는 노인 고령화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성향의 상승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세수가 증가하겠지만, 순국민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항목별 평균 유효세율을 감안할 때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항목별 소비패턴의 변화가 소비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소비 관련 세수의 증가추세를 제한하는 요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관세수입은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전체 GDP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FTA 체결 확대, 도하계 발아젠다(DDA) 다자간 무역협상에 의한 관세율 인하 등 관세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산 관련 과세는 경제 전체의 자산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노인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비금융자산이 줄어드는 대신 금융자산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주식 비중이 줄어들고 예금 및 채권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잔액(stock)으로 과세되는 자산보유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담은 증가하겠지만, 세수 비중

이 더 큰 유량(flow)에 대해 과세하는 자산거래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상속증여세는 향후 고령자 가구가 많아지고 1인당 자산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향후 관련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소득 관련 세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 관련 세수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산 관련 세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미미하게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 2. 세출구조에 미치는 영향

우선 현행 제도 유지를 전제로 4대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 공교육 관련 재정지출 등의 규모를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계해 보았다. 4대 공적연금의 지출규모는 2010년 GDP 대비 2.3%에서 2050년 7.7%로 GDP 대비 5.4%p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노령연금 지출규모는 2010년 GDP 대비 0.4%에서 2050년 3.1%로 2.7%p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지출규모가 각각 2010년 GDP 대비 3.1% 및 0.2%에서 2050년 6.5% 및 1.7%로 3.4%p 및 1.5%p나 증가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관련 재정지출 규모는 2010년 GDP 대비 0.8%에서 2050년 1.1%로 다소 증가하고, 향후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원 및 사무직원의 수가 감소하여 공교육관련 지출규모는 2010년 GDP 대비 4.5%에서 2050년 3.0%로 1.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교육 관련 재정지출이 실제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량적 분석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성적 분석만 시도하였다. 주택 관련 재정지출 수요는 향후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주거비에 대한 가계지출이 감소한다는 분석결과와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엇갈렸지만, 건설투자 및 건설업 비중이 낮아지고 민간소비지출 중에서 가계시설 및 운영비 지출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들을 감안할 때 향후 주택에 대한 정부지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보육 등 가족 관련 재정지출은 당분간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정책으로 관련 지출규모가 증가할 수 있겠으나 향후 출산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상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출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향후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 상승 등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향후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경제 관련 재정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SOC는 교통비에 대한 가계지출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과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렸지만, 건설투자 및 건설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민간소비지출 중에서 가계시설 및 운영비 지출비중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들을 감안할 때 향후 SOC에 대한 정부지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농림·수산·식품 관련 재정지출 수요는 농림어업의 산업 비중이 하락하는 등 이 분야 지출규모가 줄어들 것이 확실해 보인다. 또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재정지출 수요도 광공업의 산업 비중에 뚜렷한 변화 방향이 없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광열·수도 관련 가계지출비중이 증가하더라도 이 분야의 재정지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이 분야 지출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기 때문에 하락 압력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다만 R&D 관련 재정지출 수요는 향후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동인력 공급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공공행정 등 기타 재정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분석결과에

의한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다만 패널 회귀분석에서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출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국방 분야 지출 비중은 증가한다는 추정결과는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일반공공행정, 외교·통일, 문화·체육·관광, 환경 등 분야의 재정지출 수요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3. 정책적 시사점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 등 소득 관련 세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 관련 세수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산 관련 세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미미하게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적연금이나 의료관련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는 이러한 재정수입 증가속도에 비해 훨씬 빠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주택, SOC, 농업·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재정지출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국가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세입 확충 및 세출 절감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리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본 연구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정책방향 수립 및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가 세목별 및 지출분야별 정책에 시사하는 함의와 정책과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우선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 사업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금융소득 및 고부가가치 사업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인구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소득구성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득종류별 세부담 구조를 재편하여 소득세의 국고조달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연금소득이 급증할 것이지만 일본처럼 관대한 연금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면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세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업종별로 유효세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인구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전반적인 법인세수의 향방이 불분명하다. 다만 기업의 설비투자 비중이 증가할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법인세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 전체의 자산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비금융자산이 줄어드는 대신 금융자산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주식비중이 줄어들고 예금 및 채권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토지, 주택, 주식 등의 보유 또는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이들 세목의 세수는 잔액(stock)으로 과세되는 자산보유 관련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유량(flow)에 대해 과세하는 자산거래 관련 세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세에서 자산 관련 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세목별로 세수 변동 방향이 다양하게 나타난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수 여건이 낙관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지방세 세원 변화에 대응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대한 정책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 전체의 소비성향이 높아져 소비 관련 세수가 증가하겠지만, 경제 전체의 소비패턴이 고령

자가 선호하는 항목 위주로 변동하더라도 소비 관련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중립적이다. 따라서 소비 관련 세수의 증가추세가 제한될 것이므로 향후 복지지출 확대 등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할 때 캐나다 및 일본(5%), 스위스(7.6%)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10%)의 조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 관련 세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부의 과도한 대물림 방지와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출 측면에서도 공적연금 및 의료 관련 지출에 대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공식적인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제도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를 개혁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향후 공교육, 주택, SOC, 보육, 농업 및 중소기업 등 지원정책 관련 재정지출은 수요가 감소하겠지만 기득권층이 이러한 재정지출을 고착화시키려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를 타파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와 중장기적인 재정전략에 입각한 재원배분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내년도에 추진될 후속연구에서 세목별로 과거 세수변동 요인을 세제 변화, 과세베이스 변동 등 변동 요인별로 분해하여 분석한 후,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연계시켜 주요 세목별로 중장기 세수전망을 시도할 계획인데, 동 연구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보다 과학적인 중장기 세입전망이 완성되길 기대한다.

# 목 차

I. 서론	41
II. 인구 감소·고령화와 재정	46
1. 인구 감소·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46
2.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52
가. 주요 재정지표	52
나. 국민부담률 및 세입구조	54
다. 재정규모 및 지출구조	56
라. 소결	58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64
1. 개관	64
2. 소득수준 및 경제성장	69
가. 주요 지표에 대한 실증분석	69
나.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73
3. 경제구조	82
가. 국민소득 지출 및 수요구조에 미치는 영향	86
나. 국민소득 분배 및 소득구조에 미치는 영향	97
다. 국민소득의 생산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115
4. 노동공급 및 수요	120
가. 노동공급 측면	121
나. 노동수요 측면	139
5. 가계소득 및 지출구조	148

가. 연령별 소득구조 .....	148
나. 연령별 소비구조 .....	155
다. 평균소비(저축)성향 .....	178
라. 코호트 분석 .....	181
6. 자산규모 및 구조 .....	192
가. 우리나라의 자산 규모 및 구조 .....	192
나. OECD 국가와의 비교 .....	199
다. 연령대별 자산 및 부채 구성 .....	207
라. 금융자산 가격 .....	229
IV. 세입 및 세출에 미치는 영향 .....	234
1. 세입구조에 미치는 영향 .....	234
가. 세목별 국세수입 .....	234
나. 세목별 지방세수입 .....	266
다. 사회보장기여금 .....	271
라. 향후 우리나라의 세수구조 .....	272
2. 세출구조에 미치는 영향 .....	284
가. 사회복지 및 보건 지출 .....	284
나. 교육 .....	292
다. 경제 관련 재정지출 .....	295
라. 공공행정 등 기타 재정지출 .....	296
3.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297
가. 고령화·인구 감소가 세입·세출에 미치는 영향 .....	297
나. 정책적 시사점 .....	300
참고문헌 .....	303

[부록 1] 인구증가 및 고령인구 비중과 재정지표 .....	311
[부록 2] OECD 국가의 GDP 구조(2008년 기준) .....	355
[부록 3] 주요 선진국의 자산·부채 규모 및 구성 추이 .....	365

## 표 목 차

〈표 II-1-1〉 노인 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	48
〈표 II-1-2〉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주요 인구지표 추이 및 전망 .....	49
〈표 II-2-1〉 인구구조 변화/소득증가와 주요 재정지표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	54
〈표 II-2-2〉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조세구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	56
〈표 II-2-3〉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지출구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	58
〈표 II-2-4〉 재정지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	60
〈표 II-2-5〉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평균유효세율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	61
〈표 III-1-1〉 인구구조변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	69
〈표 III-2-1〉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소득/성장률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	70
〈표 III-2-2〉 인구지표와 1인당 소득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	74
〈표 III-2-3〉 경제성장률의 요인분해 결과 .....	76
〈표 III-2-4〉 OECD(2010)의 잠재성장률 전망 .....	78
〈표 III-2-5〉 EU(2010)의 잠재성장률 전망 .....	79
〈표 III-2-6〉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	81
〈표 III-3-1〉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지출측면 GDP구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	87
〈표 III-3-2〉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지출측면 민간최종소비	

지출구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	88
〈표 Ⅲ-3-3〉 인구구조변화/소득 증가와 지출측면 총고정자본형성 구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	89
〈표 Ⅲ-3-4〉 지출 및 수요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	92
〈표 Ⅲ-3-5〉 개인 순저축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	94
〈표 Ⅲ-3-6〉 OECD의 인구구조와 가계저축률 실증분석 결과 .....	95
〈표 Ⅲ-3-7〉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및 투자를 전망 .....	96
〈표 Ⅲ-3-8〉 국민계정의 소득분배 계정 .....	99
〈표 Ⅲ-3-9〉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분배측면 GDP 구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1 .....	101
〈표 Ⅲ-3-10〉 Schmidt and Vosen(2010)의 실증분석 결과 .....	105
〈표 Ⅲ-3-11〉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	106
〈표 Ⅲ-3-12〉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분배측면 GDP 구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2 .....	107
〈표 Ⅲ-3-13〉 분배 및 소득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	109
〈표 Ⅲ-3-14〉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재분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	111
〈표 Ⅲ-3-15〉 OECD 국가의 세전 및 세후 지니계수 .....	112
〈표 Ⅲ-3-16〉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생산측면 산업구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	117
〈표 Ⅲ-3-17〉 생산 및 산업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	117
〈표 Ⅲ-3-18〉 Thiessen et al.(2008)의 산업별 고용비중 실증분석 .....	119
〈표 Ⅲ-4- 1〉 연령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	129
〈표 Ⅲ-4- 2〉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08~2018) .....	141
〈표 Ⅲ-4- 3〉 제조업 및 관련 지원사업의 인력수요 비중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142

〈표 III-4- 4〉	업종별 평균정년(통계청) .....	146
〈표 III-4- 5〉	55세 이상 인구의 근로형태 분포(장지연, 2007) .....	146
〈표 III-5- 1〉	우리나라 가계의 연령별 소득구성 .....	153
〈표 III-5- 2〉	재정패널자료의 연령별 주요 소득항목의 분포 .....	154
〈표 III-5- 3〉	한·미·일의 가구소비 구조 비교 (2인 이상 가구, 2000년) .....	156
〈표 III-5- 4〉	한·미·일의 연령대별 소비지출 구조 비교 .....	159
〈표 III-5-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품목별 소비비중 전망 결과 .....	177
〈표 III-5- 6〉	우리나라 연령별 소득·소비·평균소비성향 .....	179
〈표 III-5- 7〉	재정패널자료의 연령별 소득·소비·평균저축성향 .....	180
〈표 III-5- 8〉	표준 코호트표와 3개의 효과에 대한 예시 .....	182
〈표 III-6- 1〉	우리나라의 자산형태별 실물자산 추이 .....	194
〈표 III-6- 2〉	우리나라의 부문별 금융자산 구조 추이 .....	198
〈표 III-6- 3〉	가구당 자산규모의 국제비교(2008년 기준) .....	200
〈표 III-6- 4〉	G7국가와의 가계부문 자산 비교 .....	201
〈표 III-6- 5〉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가계자산 패널회귀분석 결과 .....	203
〈표 III-6- 6〉	가계자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	204
〈표 III-6-11〉	재정패널자료의 연령별 자산 및 부채 규모 .....	209
〈표 III-6-12〉	가구주 연령별 주요 자산 항목의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	211
〈표 III-6-13〉	가구주 연령별 주요 부채 항목의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	212
〈표 III-6-14〉	2006년 가계자산조사의 가구주 연령별 자산보유 현황 .....	213
〈표 III-6-15〉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의 자산부채 항목 .....	214
〈표 III-6-16〉	1997년 대우패널의 연령별 자산 및 부채 평균 보유액 .....	217

〈표 III-6-17〉	연령대별 평균 자산보유 현황(실질 기준) .....	219
〈표 III-6-18〉	삼성경제연구소의 가계의 자산 및 부채 실태조사 결과 (2008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의 부가조사) .....	219
〈표 III-6-19〉	연령대별 토지소유 현황(2005년 기준) .....	220
〈표 III-6-20〉	이상호(2010)의 Tobit 모형 추정결과 .....	222
〈표 III-6-21〉	개인투자자의 연령별 주식분포 추이 .....	223
〈표 III-6-22〉	일본 가계의 연령대별 자산·부채 현황(2010년) ..	225
〈표 III-6-23〉	주요 선진국의 연령대별 자산·부채 규모 .....	227
〈표 III-6-24〉	고령인구 변화가 채권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	231
〈표 III-6-25〉	시나리오별 유럽의 실질금리 전망 .....	231
〈표 IV-1- 1〉	세목별 국세수입 추이 .....	235
〈표 IV-1- 2〉	가구주 연령별 주요 세목의 세부담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	236
〈표 IV-1- 3〉	소득종류별 종합소득 및 원천징수 현황 .....	238
〈표 IV-1- 4〉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령별 신고 현황 .....	239
〈표 IV-1- 5〉	부동산 거래량 추이 .....	241
〈표 IV-1- 6〉	양도소득세 신고(예정 + 확정) 현황 .....	242
〈표 IV-1- 7〉	사업소득세의 연령별 신고 현황 .....	244
〈표 IV-1- 8〉	퇴직소득세의 연령별 신고 현황 .....	246
〈표 IV-1- 9〉	연금소득세의 연령별 신고 현황 .....	246
〈표 IV-1-10〉	국민연금 수급금액별 수급자 분포(2010년 기준) .....	247
〈표 IV-1-11〉	종합부동산세 연령별 현황 .....	249
〈표 IV-1-12〉	상속세 피상속인의 연령별 현황 .....	250
〈표 IV-1-13〉	증여세 수증인의 연령별 현황 .....	251
〈표 IV-1-14〉	법인세의 업대별 현황 .....	254
〈표 IV-1-15〉	업종별 법인세 유효세율 .....	257
〈표 IV-1-16〉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	259

〈표 IV-1-17〉 소비항목별 세부담 .....	262
〈표 IV-1-18〉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가 소비 관련 세수에 미치는 영향 .....	264
〈표 IV-1-19〉 세목별 지방세수입 추이 .....	266
〈표 IV-1-20〉 지방세 세목별 과세대상 및 세율 .....	267
〈표 IV-1-21〉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지방세수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	270
〈표 IV-1-22〉 우리나라 및 OECD 국가의 중앙/지방정부 세수구조 .....	270
〈표 IV-1-23〉 OECD 조세 분류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세분류 .....	274
〈표 IV-2- 1〉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	285
〈표 IV-2- 2〉 기초노령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	286
〈표 IV-2- 3〉 의료지출 장기재정추계 결과 .....	288
〈표 IV-2- 4〉 기초생활보장 장기재정추계 결과 .....	291
〈표 IV-2- 5〉 교육과정별 학생 1인당 교원 및 사무직원 수 (2009년 기준) .....	294
〈표 IV-2- 6〉 교육과정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분해 (2009년 예산 기준) .....	294
〈표 IV-2-7〉 교육재정 장기추계 결과 .....	295

## 그림 목차

[그림 II-1-1]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50
[그림 II-1-2]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출생시 기대수명 추이 및 전망	50
[그림 II-1-3]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인구증가율 추이 및 전망	51
[그림 II-1-4]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비중 추이 및 전망	51
[그림 II-2-1] 고령인구 증가와 법정최고세율/평균유효세율 추이	62
[그림 III-1-1] Age structure effects on the economy	65
[그림 III-1-2] Lindh and Malmberg의 추계결과	65
[그림 III-2-1]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수준 및 성장률	71
[그림 III-2-2] 저출산·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73
[그림 III-2-3]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전망 결과	77
[그림 III-2-4] EU국가들의 성장률 수준과 잠재성장률 하락	80
[그림 III-2-5]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추이	81
[그림 III-3-1] 국민소득의 3면 등가 원칙	84
[그림 III-3-2] 우리나라 총저축률 전망 결과	97
[그림 III-3-3]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02
[그림 III-3-4] 우리나라/G7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04
[그림 III-3-5] OECD 국가의 세전 지니계수 (2000년대 중반 기준)	114
[그림 III-3-6] OECD 국가의 세후 지니계수 변화율 (2000년대 중반 기준)	115

[그림 III-3-7] 실버산업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0~2020년) .....	118
[그림 III-3- 8] Thiessen et al.(2008)의 산업별 고용비중 전망 .....	120
[그림 III-4- 1] 인구구조변화 추이 및 전망 .....	122
[그림 III-4- 2] 생산가능인구 추이 및 전망 .....	123
[그림 III-4- 3] 인구구성변화 추이 및 전망 .....	124
[그림 III-4- 4]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통계청) .....	125
[그림 III-4- 5] Old Age Dependency Ratio(UN) .....	126
[그림 III-4- 6] Total Dependency Ratio(UN) .....	127
[그림 III-4- 7] 가치분소득 대비 가구저축률 (OECD Factbook 2010) .....	128
[그림 III-4- 8]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통계청) .....	130
[그림 III-4- 9] 50세 이상 그룹의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131
[그림 III-4-10]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	132
[그림 III-4-11] 연령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	133
[그림 III-4-12] 연령그룹별 고용률 추이 .....	133
[그림 III-4-13] 성별 청년·장년·고령층 고용률 변화 .....	134
[그림 III-4-14] 남성·여성 근로자의 연령그룹별 평균 근속연수 .....	135
[그림 III-4-15] 연령 그룹별 실업률 변화 .....	136
[그림 III-4-16] 연령대별 이동요인(통계청) .....	137
[그림 III-4-17] 연령그룹별 상대적 임금수준의 변화(20대=1) .....	138
[그림 III-4-18] 산업별 고용 비중과 증가율의 변화 (OECD STAN Database) .....	139
[그림 III-4-19] 전체 산업에서 근로자의 연령별 변화 .....	143
[그림 III-4-20]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	143
[그림 III-4-21] 제조업 .....	144
[그림 III-4-22] OECD 국가들의 은퇴연령(OECD, 2006) .....	145
[그림 III-4-23] 임금근로자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통계청) .....	147
[그림 III-5- 1] 한·미 가계의 연령대별 소득 추이 .....	151

[그림 III-5- 2]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구성 추이 .....	152
[그림 III-5- 3] 선진국 고령자가구의 가치분소득 구조 .....	153
[그림 III-5- 4] 한·미·일 가계의 연령대별 소비지출 수준 추이 .....	160
[그림 III-5- 5] 한·미·일 가계의 소비구조 추이 .....	161
[그림 III-5- 6] 한·미·일 가계의 연령대별 소비구조 추이 .....	165
[그림 III-5- 7] 우리나라 가계의 연령대별 소비비중 추이 .....	169
[그림 III-5- 8] OECD의 항목별 소비지출의 연령대별 분포 분석결과 .....	173
[그림 III-5- 9] OECD의 항목별 소비지출 수준 추계결과 (2005=100) .....	175
[그림 III-5-10]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	178
[그림 III-5-11] 연령별 총소득·소비지출 분포 (재정패널 데이터, 2009년 기준) .....	181
[그림 III-5-12] 우리나라에 대한 코호트 분석결과 .....	185
[그림 III-6- 1] 우리나라의 부문별 실물자산 추이 .....	193
[그림 III-6- 2] 우리나라의 부문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추이 .....	196
[그림 III-6- 3] 가구당 금융자산규모의 국제비교(2008년 기준) .....	200
[그림 III-6- 4] 주요국의 금융자산 비중 추이 .....	206
[그림 III-6- 5] 가구 연령별 총자산·부채·순자산 분포 (재정패널자료 2009년 기준) .....	210
[그림 III-6- 6] 연령별 자산 및 부채 현황(2010년 기준) .....	214
[그림 III-6- 7] 연령별 자산 및 부채 구성 .....	218
[그림 III-6- 8] 미국 가계의 연령대별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 보유비중 .....	224
[그림 IV-1- 1]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공제액 비교 .....	247
[그림 IV-1- 2] 우리나라의 관세수입 추이 .....	265

[그림 IV-1- 3] 우리나라와 G7 국가 조세/국민부담률 추이 (1965~2009년) .....	274
[그림 IV-1- 4] 우리나라의 세수구조 변동추이 .....	275
[그림 IV-1-5]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세수구조 변동추이 .....	275
[그림 IV-1-6] 인구 고령화에 따른 한·일 조세수입 추이 비교 ...	280
[그림 IV-2-1]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 추이 .....	289

# I. 서론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경제발전 고도화에 따른 저성장 경제로의 이행과 중첩되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중장기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인구 감소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정책적 노력 등을 통해 고용률의 상승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러한 부정적 영향력을 부분적으로나마 상쇄시킬 수 있겠지만,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국가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고령화가 진행되어 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속화되면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더욱 저하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의 관점에서 고령화·인구감소에 따른 변화 양상 및 리스크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입 및 세출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이미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06)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국회예산정책처(2009)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 변화 및 대응 과제』, 김현숙·성명재(2011)의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 소득세수 추계』 및 김현숙(2010)의 『주요 3대 세목 세수 장기추계 : 세원 전망을 중심으로』 등의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지출 증가, 세수 감소 등 거시경제 전반이나 재정총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인구 고령화의 부문별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06)의 연구는 크게 인구 고령화와 인구대책에 관한 연구와 인구 고령화의 부문별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가 거시경제, 노

동시장, 교육·인력개발, 복지·노인주거, 보건·의료, 노후소득보장, 금융·자산시장, 노인 고령화와 재정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로 구성되었다. 인구 고령화와 재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령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로 인해 재정 측면에서 제기되는 정책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을 다루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2009)의 연구에서는 우선 저출산·고령화가 성장잠재력 및 생산성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고령화 대응정책과 출산을 제고 정책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하는 거시경제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노년부양비율 상승을 분석한 실증결과를 현재 2008년에서 12년 연장 적용하여 2020년의 경제 모습을 2008년과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총수요 측면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 확대로 정부소비가 증가하지만 민간소비가 1.2%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2.0% 하락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은 0.9%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공급량이 1.6% 감소하고 투자 위축으로 자본축적 수준도 0.6% 낮아지면서 경제의 잠재생산을 나타내는 총공급 수준도 1.2% 감소한다. 재정 측면에서 보건의료 및 교육 등 사회보장지출의 확대로 총지출이 37%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 증가에 머물러 재정수지는 총 35조 원 정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재정분석에서는 사회보험 장기재정건전성 확보, 지자체 재원부담 완화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및 사업수행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 개편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와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조세구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정비 등 과세 베이스의 확대,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저출산에 대비하는 조세정책, 소비세 중심의 조세구조로의 전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현숙·성명재(2011) 및 김현숙(2010)의 연구에서는 가구별 소득 분포를 전망하여 현행 소득세제가 유지될 경우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

득에 대한 세수전망을 매우 과학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한계를 보였다. 가구별 소득이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회귀분석을 통해 평균 및 분산을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전망을 실시하였는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세수전망은 가구소득 이외에 가구의 인적정보에 기반한 인적공제와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정보를 활용한 특별공제를 추정하여 반영하였다. 추계결과를 보면, 소득세수는 현재 GDP 대비 3.3% 수준에서 2050년에 2.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08)에서처럼 실질소득 증가율이 다소 높아질 경우에는 소득세수가 현재와 비슷한 GDP 대비 3.4~3.7% 수준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총량적인 분석이나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나열식 분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세입, 세출 등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고령화·인구 감소가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국민소득의 지출, 분배, 생산 측면, 고용공급 및 수요 구조, 가계소득 및 소비구조, 자산규모 및 자산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고령화·인구 감소는 향후 우리 경제의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성별·연령별·취업형태별 노동공급 및 수요의 변화가 우리 경제 및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동공급 및 수요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 이러한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의 변화가 세입항목 및 세출항목 각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응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향후 성장률 둔화 등으로 세수 증가율도 하락할 전망이므로 세수 규모 자체보다는 세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 세목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크게 세원 변동과 세제 변화

두 가지가 있지만 미래의 조세정책을 예견할 수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세원의 변동방향을 짐작하여 세목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만 분석(qualitative analysis)하였다<sup>1)</sup>. 세목별 세원에는 소득, 소비, 자산 수준과 같은 규모변수 이외에 금리, 주가, 부동산 가격 등 가격변수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령화·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 및 세원별 변동 분석결과는 세수구조의 변화를 가늠하여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제도 유지를 전제로 4대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 공공육아관련 재정지출 등의 규모를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계해 보았다. 이러한 정량적 분석이 어려운 주택, 보육, 노동 등의 기타 복지분야나 SOC,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 등의 경제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정성적 분석만 시도하였는데, 고령화·인구 감소가 경제성장, 소득수준, 국민소득의 지출, 분배, 생산 측면, 고용공급 및 수요 구조, 가계소득 및 소비구조, 자산규모 및 자산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수요 방향을 가늠해 보았다.<sup>2)</sup> 이처럼 세출구조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가늠해 봄으로써 재정운용과 관련한 제도적·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 장에서는 우선 제1절에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합계출산

- 
- 1) 향후 우리나라 세수의 중장기적 변동요인 분석 등의 추가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정성적 분석을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그러나 일반공공행정, 외교·통일, 문화·체육·관광, 환경 등 분야의 재정지출 수요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을, 기대수명, 인구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등의 추이 및 2010년까지의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살펴보았다. 이후 제2절에서는 이러한 고령인구 비중 증가 및 인구 감소가 주요 재정지표, 국민부담률 및 세입구조, 재정규모 및 지출구조 등의 측면에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제1절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개관한 후, 제2절에서 소득수준 및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3절에서는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지출 및 수요구조, 분배 및 소득구조, 생산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 각각 분석해 보았다. 제4절은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 및 수요에, 제5절은 가계소득 및 지출 구조에, 제6절은 자산규모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제Ⅳ장에서는 제Ⅱ장 및 제Ⅲ장의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세입구조와 세출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될 것인지 분석해 보았다.

## Ⅱ. 인구 감소 · 고령화와 재정

우선 제1절에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인구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등의 추이 및 2010년까지의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 고령화의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살펴보았다. 이후 제2절에서는 이러한 고령인구 비중 증가 및 인구 감소가 주요 재정지표, 국민부담률 및 세입구조, 재정규모 및 지출구조 등의 측면에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 1. 인구 감소 ·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2010년 고령인구 비중은 11.0%로 G7 국가들의 21~55년 이전 수준(캐나다 1989년, 일본 1988년, 이탈리아 1974년 전후, 미국 1978년, 독일 1961년, 프랑스 및 영국 1955년 이전)이지만, 조만간 일본을 제외한 이들 국가들의 고령인구 비중을 초과(미국 2025년 전후, 캐나다 및 영국 2030년 전후, 프랑스 2035년 전후, 독일 2045년 전후, 이탈리아 2050년 전후)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G7국가, 전 세계의 1950년 이후 합계출산율, 출생 시 기대수명, 인구증가율, 65세 이상 인구비중 등 추이 및 2100년까지의 UN의 2010년 인구전망을 분석한 결과, 최근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급속한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를 경험한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3개국(이하 '인구문제 심각 국가'라 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4개국(이하 '인구문제 완만 국가'라 함)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

인구문제 심각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낮

아진 적이 있고 2050년에도 1.8명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반면, 인구문제 완만 국가는 합계출산율이 1.5명 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고 2050년에도 1.9명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인구문제 심각 국가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1950~2010년 기간중 출생 시 기대수명이 15세 이상 증가하였고 인구증가율이 정체 또는 마이너스였으며 인구 감소가 2100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구문제 심각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201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두 40% 내외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인구문제 심각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수준, 출생 시 기대수명 증가속도, 인구증가율, 65세 이상 인구 비중 증가속도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UN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5~2010년 합계출산율 1.29명은 전 세계 2.62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조사대상 196개국 중에서 193위이다. 사망률 감소로 출생 시 기대수명이 1950~1955년 47.9세에서 2005~2010년 80.0세, 2050년 84.5세, 2100년 90.0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 감소와 더불어 노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혈연 기반 없는 세대 간 사회적 부양체제에서 후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하여 세대 간 갈등이 격화, 사회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 II-1-1〉 노인 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국가	도달연도			소요연수	
	7%	14%	20%	7%→14%	14%→20%
캐나다	1945년	2010년	2024년	65년	14년
프랑스	1864년	1978년	2018년	114년	40년
독일	1932년	1972년	2008년	40년	36년
이탈리아	1927년	1988년	2007년	61년	19년
일본	1970년	1995년	2006년	25년	11년
영국	n.a.	1975년	2028년	n.a.	53년
미국	1942년	2014년	2031년	72년	17년
우리나라	1999년	2018년	2026년	19년	8년
(통계청)	2000년	2018년	2026년	18년	8년
전세계	2002년	2039년	n.a.	37년	n.a.

주: UN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14%, 20% 이상일 경우 각각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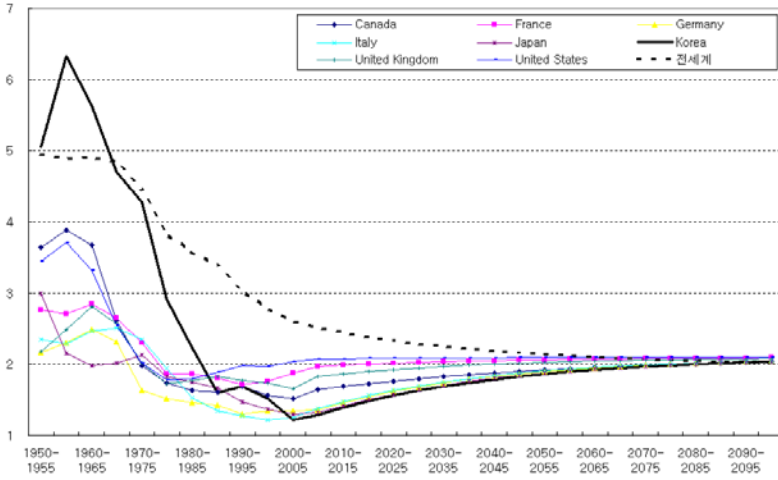
자료: UN(2009. 4)의 중위추계 및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2006. 11)의 중위추계

〈표 II-1-2〉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주요 인구지표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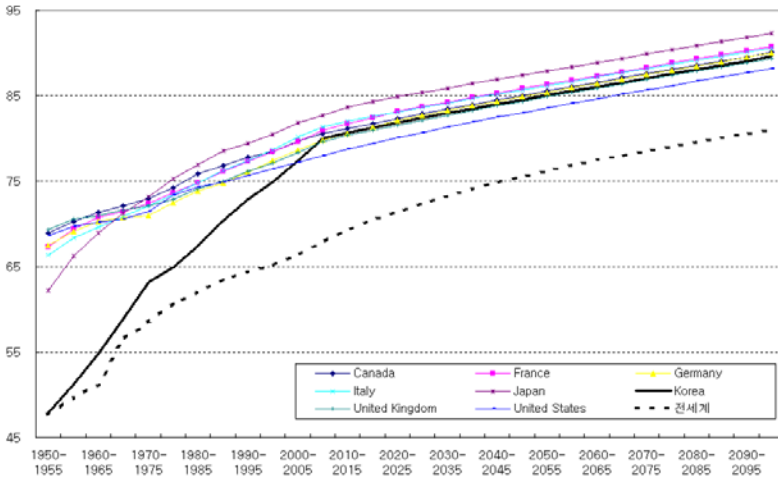
	합계출산율				출생시 기대수명 증가				인구증가율				65세 이상 인구비중 증가							
	2005~2010		2015~2020		50~55=>05~10=>45~50=>95~10		1950~1955		2005~2010		2005~2010		2005~2010		50~55=>05~10=>45~50=>95~10					
	2010	2050	2100	2050	2100	05~10	45~50	95~10	1955	2010	2050	2100	05~10	45~50	95~10					
독일	2.16	1.36	1.87	2.05	12.3	5.0	5.1	0.56	-0.06	-0.34	0.04	13.5	14.8	-2.6						
이탈리아	2.36	1.38	1.88	2.05	15.1	4.3	4.9	0.75	0.63	-0.20	0.12	15.9	15.7	-2.3						
일본	3.00	1.32	1.84	2.04	20.6	4.7	4.9	1.45	0.02	-0.51	-0.09	22.0	16.5	-2.8						
한국	5.05	1.29	1.83	2.03	32.1	4.5	5.0	1.94	0.48	-0.53	-0.18	9.5	27.3	-1.2						
캐나다	3.65	1.65	1.90	2.03	11.6	4.5	5.0	2.72	1.05	0.40	0.06	9.6	14.2	5.0						
프랑스	2.76	1.97	2.06	2.09	13.7	4.9	5.0	0.75	0.58	0.23	0.17	9.5	10.7	4.1						
영국	2.18	1.83	2.02	2.08	10.3	4.8	5.0	0.22	0.60	0.15	0.08	8.9	9.6	5.7						
미국	3.45	2.07	2.09	2.10	9.3	5.1	5.2	1.62	0.89	0.48	0.21	7.4	10.7	6.1						
전세계	4.95	2.52	2.17	2.03	20.2	7.7	5.5	1.82	1.16	0.44	0.06	3.9	10.7	8.3						
	합계출산율(1950~2010)												출생시 기대수명(1950~2010)				65세 이상 인구비중(1950~2010)			
	최고 (시기)	최저 (시기)	변동	최저 (시기)	최고 (시기)	변동	최저 (시기)	최고 (시기)	변동	최저 (시기)	최고 (시기)	변동	최저 (시기)	최고 (시기)	변동					
독일	2.49	60-65	1.31	90-95	-1.18	67.50	50-55	79.90	05-10	12.40	9.70	1950	20.50	2010	10.80					
이탈리아	2.52	65-70	1.22	95-00	-1.30	66.30	50-55	81.20	05-10	14.90	8.10	1950	20.40	2010	12.30					
일본	3.00	50-55	1.27	05-10	-1.73	62.10	50-55	82.70	05-10	20.60	4.90	1950	22.60	2010	17.70					
한국	6.33	55-60	1.22	00-05	-5.11	47.90	50-55	79.40	05-10	31.50	2.90	1950	11.00	2010	8.10					
캐나다	3.88	55-60	1.52	00-05	-2.36	69.10	50-55	80.70	05-10	11.60	7.50	1960	14.10	2010	6.60					
프랑스	2.85	60-65	1.71	90-95	-1.14	67.10	50-55	81.20	05-10	14.10	11.40	1950	17.00	2010	5.60					
영국	2.81	60-65	1.70	95-00	-1.11	69.20	50-55	79.40	05-10	10.20	10.70	1950	16.60	2010	5.90					
미국	3.71	55-60	1.79	75-80	-1.92	68.90	50-55	79.20	05-10	10.30	8.30	1950	13.00	2010	4.70					
전세계	4.95	50-55	2.52	05-10	-2.43	47.66	50-55	67.88	05-10	20.22	5.07	1950	8.99	2010	3.92					

출처: UN의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0 Revision』(2011. 4)의 중위추계(Medium variant) 기준

[그림 II-1-1]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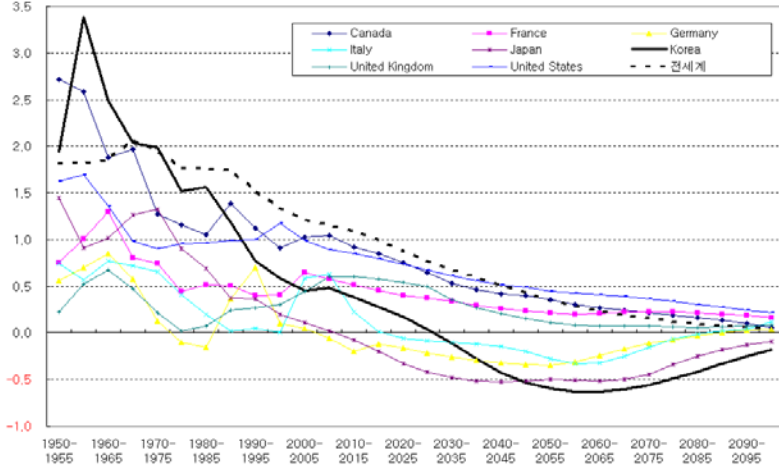


[그림 II-1-2]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출생 시 기대수명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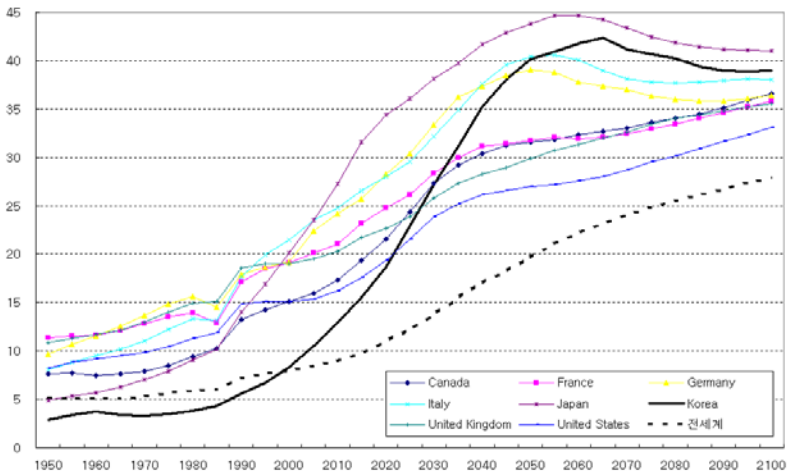


출처 : UN의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0 Revision』(2011. 4)의 중위추계(Medium variant) 기준

[그림 II-1-3]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인구증가율 추이 및 전망



[그림 II-1-4]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비중 추이 및 전망



출처 : UN의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0 Revision』 (2011. 4)의 중위추계(Medium variant) 기준

## 2.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 가. 주요 재정지표

우선 OECD에서 발표하는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General Government Accounts』에 수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 증가율 하락 및 고령인구 비중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주요 재정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대상 변수와 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정수입 측면에서의 지표로는 재정수입(Total revenue)과 그 구성요소인 조세수입(Total tax receipts + Actual social contributions) 및 세외수입(=재정수입 - 조세수입)을 선정하였다. 재정지출 측면의 지표는 재정지출(Total expenditure)과 그 구성요소인 인건비(Compensation of employees), 사회보장(Social benefits and transfers in kind), 재정투자(Gross fixed capital formation)를 선정하였다. 이외에 재정수지(Net lending (+)/Net borrowing (-)), 정부부채(Total liabilities (consolidated)), 정부순자산(Financial net worth, = 정부자산 - 정부부채)을 주요 재정지표로 선정하였다. 모든 분석대상 지표는 명목GDP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우선 우리나라와 G7 국가들의 주요 재정지표, 고령인구 비율 및 1인당 GDP<sup>3)</sup>에 대한 1970~2009년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fixed effect model with white's cross-section error

---

3) 주요 재정지표는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GENERAL GOVERNMENT ACCOUNTS』에 수록된 데이터를,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및 1인당 GDP는 OECD.Stat(<http://stats.oecd.org/>)에 수록된 'population over 65 as % of population'(Labour Force Statistics Summary tables) 및 'Per head, US 달러, current prices, current PPPs'(Annual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correction)<sup>4)</sup>을 통해 고령인구 증가가 주요 재정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후 비교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OECD 국가별 고령화 정도와 각 재정지표의 수준을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와 G7 국가들의 고령화와 각 재정지표에 대한 시계열 추이도 분석하여, 회귀분석 결과의 적절성을 재확인하였다<sup>5)</sup>.

〈표 II-2-1〉 및 [부록 1]의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와 G7 국가들의 경우 인구 증가율이 하락하면 사회보장지출과 재정투자가 증가하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악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세외수입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인 수입에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노인 고령화에 따라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재정지출은 사회보장지출은 증가하지만 재정투자는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정수입 증가속도가 재정지출 증가속도보다 빨라 재정수지가 다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외견상의 결과는 재정당국이 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세입을 늘리는 등 정책적으로 대응한 효과도 포함하고 있어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의 적자 추세는 지속되어 노인 고령화에 따라 정부부채가 증가하고 정부순자산도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인건비 지출은 감소하지만 사회보장지출과 재정투자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지출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4) 주요 재정지표를 종속변수로 하고 상수항,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1인당 GDP를 설명변수로 하는 국가별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국가별 오차항의 이분산성 문제를 감안하여 GLS추정법으로 추정하고, t-값 계산시에도 White의 cross-section 오차수정법을 적용하였다.

5) 가장 최근 연도의 OECD 국가별 인구구조와 각 재정지표의 수준 비교 및 우리나라와 G7 국가들의 인구구조 변화와 각 재정지표에 대한 시계열 추이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조하라.

타났다.

〈표 II-2-1〉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주요 재정지표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재정수입	0.032	0.580	1.148	14.684	-0.010	-0.555	0.949
· 조세수입	-0.547	-1.382	0.944	8.208	-0.035	-1.651	0.969
· 세외수입	<b>-0.684</b>	-5.437	0.219	4.402	-0.010	-1.343	0.911
재정지출	-0.051	-0.645	0.406	2.899	0.068	2.172	0.929
· 인건비	0.012	1.496	0.031	1.417	<b>-0.045</b>	-6.352	0.971
· 사회보장	<b>-0.069</b>	-3.371	0.467	10.523	0.061	4.700	0.993
· 재정투자	<b>-0.019</b>	-4.285	<b>-0.435</b>	-17.790	0.013	2.312	0.842
재정수지	0.081	2.722	0.789	5.223	-0.077	-1.727	0.706
정부부채	<b>-0.461</b>	-4.626	2.957	3.837	0.154	0.997	0.949
정부순자산	0.342	4.161	<b>-4.177</b>	-8.884	0.090	0.702	0.826

주: 1. 대상국가 및 분석기간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 8개국의 1970~2009년

2. 진한 글씨 및 음영은 각각 회귀계수가 (-) 및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 나. 국민부담률 및 세입구조

다음으로 OECD에서 발표하는 『Revenue Statistics』에 수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인구 증가가 국민부담률 및 주요 세입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대상 변수와 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at market prices)과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at

market prices)을 살펴본 후에 국민부담을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소득과세(『Revenue Statistics』의 분류기준으로는 10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 2000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에는 소득세(10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중에서 1100 Of individuals), 법인세(10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중에서 1200 Corporate), 사회보장기여금(2000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이 포함된다. 소비과세(5000 Taxes on goods and services)와 이를 구성하는 가장 큰 항목인 일반소비세(5110 General taxes)를 분석대상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재산과세(4000 Taxes on property)는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분석대상 지표는 명목GDP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였다.

주요 재정지표에서처럼 우리나라와 G7 국가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연도 분석 및 우리나라와 G7 국가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를 <표 II-2-2> 및 [부록-1]에 정리했다. 우리나라와 G7국가들의 경우 인구 증가율이 하락하면 일반소비세 세수가 감소하지만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여 전반적인 세수는 '가. 주요 재정지표'에서처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 및 일반소비세의 세수는 강하게, 자산과세 세수는 다소 약하게 증가하여 '가. 주요 재정지표'에서처럼 전반적인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적 유의성이 약하기는 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소득세 세수가 증가하고 법인세 세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 세수는 감소하지만 지방정부 세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소득과세 세수는 증가하는 반면 소비과세 세수는 감소하여 전반적인 세수는 '가. 주요 재정지표'에서처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표 II-2-2〉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조세구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국민부담률	0.011	0.315	0.606	7.393	0.023	1.215	0.911
· 소득과세	-0.010	-0.216	0.310	4.945	0.061	4.187	0.869
(소득세)	-0.027	-0.857	0.038	1.298	0.034	3.784	0.924
(법인세)	<b>-0.011</b>	-2.485	-0.033	-1.619	0.011	2.303	0.628
(사회보장기여금)	-0.009	-0.198	0.313	14.901	0.022	5.079	0.961
· 소비과세	0.014	1.297	0.134	15.410	<b>-0.019</b>	-7.283	0.969
(일반소비세)	0.012	3.324	0.220	21.730	0.001	1.432	0.969
· 자산과세	-0.001	-0.170	0.081	4.925	-0.003	-0.695	0.815
(상속증여 관련세)	<b>-0.001</b>	-2.522	0.001	0.347	0.001	1.676	0.678
(자산보유 관련세)	0.001	0.099	0.086	7.140	<b>-0.008</b>	-2.300	0.954
(자산거래 관련세)	<b>-0.004</b>	-2.800	<b>-0.045</b>	-8.629	0.014	9.136	0.922
· 중앙정부 세수	-0.003	-0.635	<b>-0.111</b>	-2.701	0.013	1.245	0.942
· 지방정부 세수	-0.019	-1.975	0.127	4.346	0.018	5.326	0.971

주: 1. 대상국가 및 분석기간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 8개국의 1970~2009년

2. 진한 글씨 및 음영은 각각 회귀계수가 (-) 및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 다. 재정규모 및 지출구조

마지막으로 OECD에서 발표하는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GENERAL GOVERNMENT ACCOUNTS』에 수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인구 증가가 재정규모 및 분야별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대상변수와 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정규모(Total expenditure) 이외에 UN이 분류한 정부의 10대 기능별(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sup>6)</sup> 지출

규모를 분석대상 변수로 선정하였다. 모든 분석대상 지표는 명목GDP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였다.

〈표 II-2-3〉 및 [부록 1]에 정리된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와 G7국가들의 경우 인구 증가율이 하락하면 사회보호 관련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고, 교육 관련 지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방, 환경보호, 보건 관련 지출과 보다 약하게는 오락·문화·종교 관련 지출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규모는 '가. 주요 재정지표'에서처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규모 증가 경향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는데, 사회보호 분야의 증가 추세는 강했고, 국방 및 보건 관련 지출의 증가세는 약했다. 반면, 경제업무 및 교육 분야의 지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공공질서 및 안전, 주택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보건 분야의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가 강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 등의 지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국방, 사회보호 분야의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일반공공행정(010: General public services), 국방(020: Defence), 공공질서 및 안전(030: Public order and safety), 경제업무(040: Economic affairs), 환경보호(050: Environment protection), 주택 및 지역개발(060: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보건(070: Health), 오락문화 및 종교(080: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교육(090: Education), 사회보호(100: Social protection)

〈표 II-2-3〉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지출구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재정규모	-0.051	-0.645	0.406	2.899	0.068	2.172	0.929
- 일반공공행정	0.000	0.048	0.009	0.334	<b>-0.042</b>	-4.741	0.825
- 국방	0.019	15.934	0.091	11.462	<b>-0.050</b>	-11.867	0.947
- 공공질서, 안전	<b>-0.003</b>	-4.629	<b>-0.038</b>	-9.133	0.024	15.535	0.924
- 경제업무	-0.001	-0.024	<b>-0.151</b>	-7.124	-0.006	-1.572	0.785
- 환경보호	0.017	3.406	0.009	1.930	0.000	-0.695	0.978
- 주택, 지역개발	0.000	-0.368	<b>-0.027</b>	-4.658	0.003	1.394	0.771
- 보건	0.018	2.863	0.059	3.695	0.105	21.779	0.932
- 오락, 문화, 종교	0.007	9.199	-0.002	-1.357	0.001	5.965	0.977
- 교육	<b>-0.016</b>	-11.799	<b>-0.103</b>	-7.755	0.013	3.924	0.924
- 사회보호	<b>-0.065</b>	-3.387	0.521	27.782	<b>-0.036</b>	-5.345	0.994

주: 1. 대상국가 및 분석기간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 8개국의 1970~2009년

2. 진한 글씨 및 음영은 각각 회귀계수가 (-) 및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 라. 소결

이상과 같은 〈표 II-2-1〉~〈표 II-2-3〉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 〈표 II-2-4〉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반영'에는 패널회귀 분석에서 추정된 탄성치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1.16%p(+0.35% → -0.81%) 하락하고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3.2%p(11.0% → 31.2%) 증가할 경우 분석대상 지표에 미칠 영향을 추계한 결과를 표시하였다. 요약해 보면 향후 전개될 인구증가율의 하락,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과 일반소비세,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재정수입이 증가

하고, 경제나 교육 관련 지출이 감소하겠지만 사회보장지출이 급증하여 전체적인 재정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되겠지만, 정부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순자산 규모는 감소하는 등 국가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의견상의 결과는 재정당국의 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세입을 늘리는 등 정책적 대응을 한 효과도 포함하고 있어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표 II-2-5>에 정리된 OECD(2001)<sup>7)</sup>에서 추계한 소득세, 법인세, 노동 관련, 자본 관련, 소비 관련 평균유효세율들(1970~1996년)을 이용한 패널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1인당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일부 유효세율을 인하하기도 하였으나,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모든 유효세율들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 및 자본관련 유효세율을 크게 인상하였다. 특히 [그림 II-2-1]에 정리된 OECD Tax Database(2010)의 소득세 및 법인세 법정최고세율은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인하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효세율 기준으로는 모두 인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부가치세율은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인상되어 왔으며, 소비세 유효세율도 약하기는 하지만 인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제Ⅲ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주요 세목의 세원(tax base)이 되는 각종 경제변수들의 변화 방향을 추정하고 예측해 보기로 하자.

---

7) 『Tax Ratios : A CRITICAL SURVEY』 OECD Tax Policy Studies No. 5에 수록된 Table 14: Personal income tax ratios (own calculations, based on Mendoza et al.(1994)), Table 15: Labour income tax ratios (own calculations, based on Mendoza et al.(1994)), Table 16: Capital income tax ratios (own calculations, based on Mendoza et al.(1994)), Table 17: Corporate income tax ratios (own calculations, based on Mendoza et al.(1994)), Table 18: Consumption tax ratios (own calculations, based on Mendoza et al.(1994)).

〈표 II-2-4〉 재정지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종속변수(GDP 대비, %)	인구증가율 하락	고령인구 비중 증가	1인당 소득 증가	인구구조 변화 반영 <sup>1)</sup>
<b>재정수입</b>	?	+	?	<b>+26.6</b>
- 조세수입	?	+	?	+21.9
국민부담률		+		+14.1
· 소득과세		+	+	+7.2
(소득세)			+	?
(법인세)	+		+	+0.0
(사회보장기여금)		+	+	+7.3
· 소비과세		+	(-)	+3.1
(일반소비세)	(-)	+		+5.1
· 자산과세		+		+1.9
(상속증여 관련세)	+			+0.0
(자산보유 관련세)		+	(-)	+2.0
(자산거래 관련세)	+	(-)	+	-1.0
- 세외수입	+	+	?	+5.9
<b>재정지출</b>	?	+	+	<b>+9.4</b>
- 인건비	?	?	(-)	?
· 일반공공행정			(-)	?
· 국방	(-)	+	(-)	+2.1
· 공공질서, 안전	+	(-)	+	-0.9
- 사회보장	+	+	+	+10.9
· 사회보호	++	++	(-)	+12.2
· 보건	(-)	+	++	+1.4
- 재정투자	+	(-)	+	-10.1
· 경제업무		(--)		-3.5
· 주택, 지역개발		(-)		-0.6
- 기타: 환경보호	(-)			-0.0
- 기타: 오락, 문화, 종교	(-)		+	-0.0
- 기타: 교육	+	(--)	+	-2.4
<b>재정수지</b>	<b>(-)</b>	<b>+</b>	<b>?</b>	<b>+18.2</b>
<b>정부부채</b>	<b>+</b>	<b>+</b>	<b>?</b>	<b>+69.1</b>
<b>정부순자산</b>	<b>(-)</b>	<b>(-)</b>	<b>?</b>	<b>-97.3</b>

주: 1)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1.16%p(+0.35% → -0.81%) 하락하고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3.2%p(11.0% → 31.2%) 증가했을 때 분석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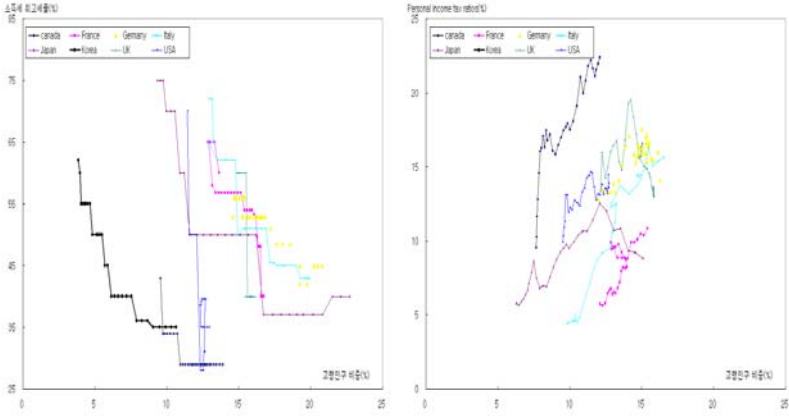
〈표 II-2-5〉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평균유효세율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소득세 유효세율	-0.015	-1.002	0.851	5.277	-0.034	-1.578	0.879
법인세 유효세율	-1.290	-0.538	3.123	3.043	<b>-0.754</b>	-3.914	0.688
노동 관련 유효세율	-0.017	-0.865	1.096	6.313	0.268	9.299	0.958
자본 관련 유효세율	0.100	1.962	3.606	8.615	<b>-0.356</b>	-5.415	0.835
소비 관련 유효세율	0.042	1.831	0.316	8.512	<b>-0.055</b>	-3.270	0.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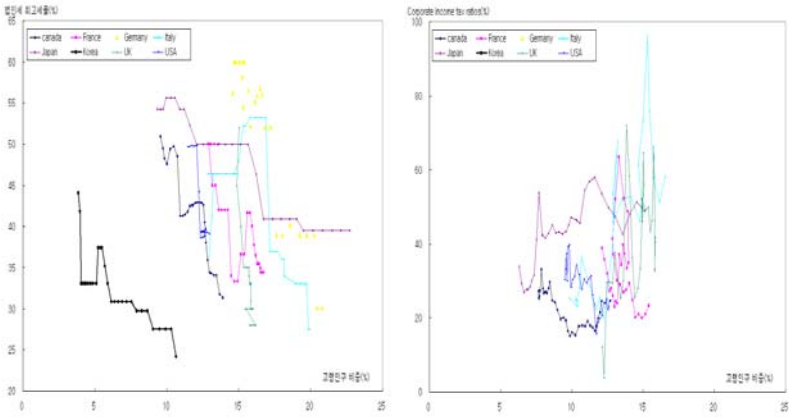
주: 1. 대상국가 및 분석기간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 7개국의 1970~1996년

2. 진한 글씨 및 음영은 각각 회귀계수가 (-) 및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그림 II-2-1] 고령인구 증가와 법정최고세율/평균유효세율 추이  
(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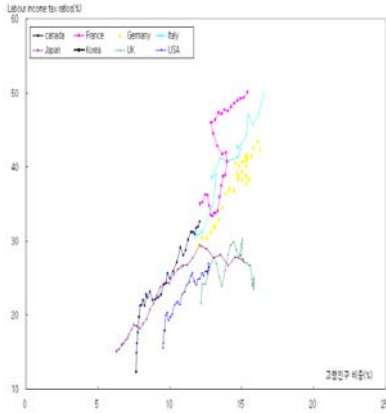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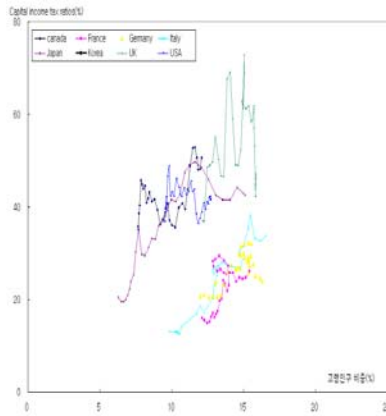


## II. 인구 감소 · 고령화와 재정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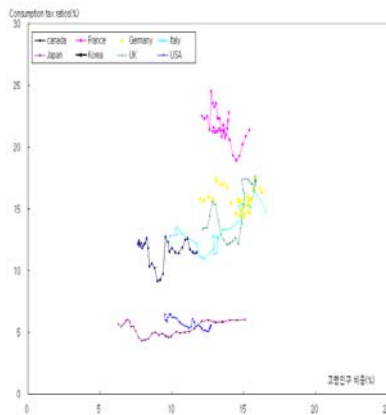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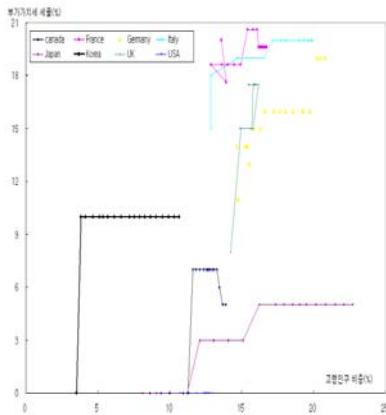
(노동소득)



(자본소득)



(소비세)



출처: OECD Tax Database(2010) 및 『Tax Ratios : A CRITICAL SURVEY』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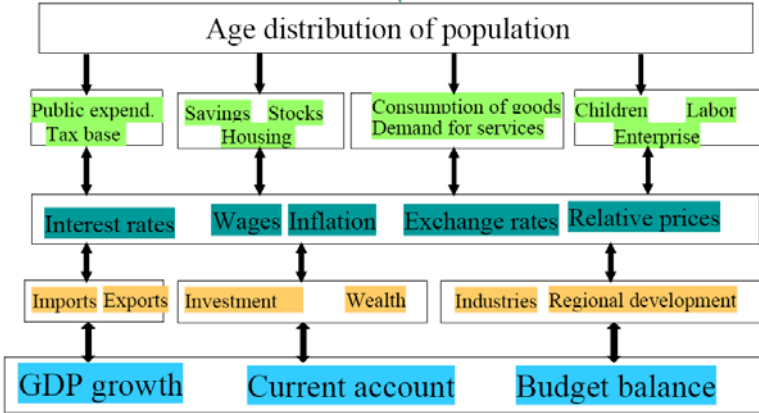
### Ⅲ.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본장에서는 세입 및 세출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과 관련 없이 인구구조 변화가 세원(tax base)의 변동이나 재정수요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 보았다. 제1절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개관한 후, 제2절에서 소득수준 및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3절에서는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지출 및 수요구조, 분배 및 소득구조, 생산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 각각 분석해 보았다. 제4절은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 및 수요에, 제5절은 가계소득 및 지출 구조에, 제6절은 자산규모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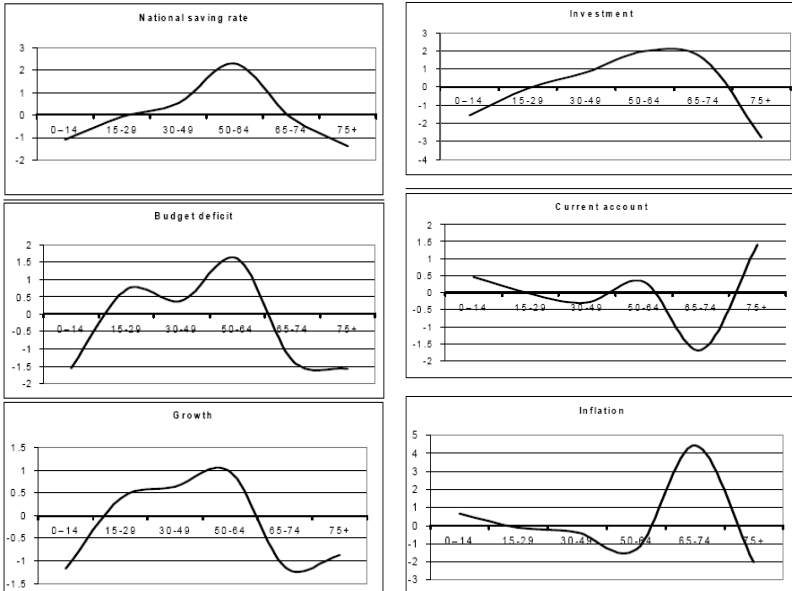
#### 1. 개관

Lindh and Malmberg(1998, 1999, 2007)가 정리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그림 Ⅲ-1-1]과 같다. 또, 이들이 인구구조가 스웨덴 경제의 각종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민총저축은 50~64세 연령대만 (+)이고 나머지 연령대는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15~29세 및 50~64세 연령대만, 경제성장률에는 15~64세의 넓은 연령대에서, 투자는 30~74세 연령대만 (+)이고 나머지 연령대는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에는 50~64세 및 75세 이상 연령대는 (+), 65~74세 연령대는 (-)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물가에는 반대로 65~74세 연령대만 (+), 50~64세 및 75세 이상 연령대는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1] Age structure effects on the economy



[그림 III-1-2] Lindh and Malmberg의 추계결과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2011)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IMF,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의 보고서들을 정리한 바 있다.

우선 저축 및 투자와의 관계, 소비패턴의 변화, 경상수지와와의 관계 등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총저축은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반면, 고령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예비적 동기에 의하여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으나, 고령자는 기존의 저축을 통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소득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의하면 고령자의 평균 소비성향이 근로계층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 고령자의 저축 감소가 근로계층의 저축 증대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부양비율 증가는 근로계층의 가용자산을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고령자에게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어 전체 인구의 평균 소비는 증가하고 저축은 감소한다. 총저축 감소에 따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투자재원이 감소하여 장기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성장 저하에 따라 소비 증가율도 둔화된다.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precautionary saving)이 더욱 증가되는 경향도 있으나, 그 정도는 국가별 연금 및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편, 고령화는 근로계층과 피부양계층의 상대적 비율을 변화시켜 전체 소비패턴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총수요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고령층은 주택, 에너지, 의료 관련 지출을 늘리는 반면, 자동차, 교통, 오락, 의복 관련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고령자 수요 품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실버산업의 성장률이 전체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S(저축)-I(투자)=X(수출)-M(수입)'라는 균형식에서 볼 때, 경상수지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수록 개선되는 반면, 노인부양비율이 증가할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투자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생산가

능인구가 늘어나면 저축이 증가하여 경상수지는 개선되고, 노인부양비가 높아지면 저축이 감소하여 경상수지는 악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저축과 투자가 모두 감소할 경우에는 상대적 감소폭에 따라 경상수지의 적자, 균형, 흑자 모두 가능하다. OECD는 일본, 유럽 등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저축 감소에 의한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중동 및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고령화에 크게 노출되지 않은 개도국의 경우 경상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시계열자료에 의하면 고령화의 성숙 정도에 따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고령화 초기<sup>8)</sup>에는 저축은 상당기간 동안 감소하지 않는 반면, 투자는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선반영하여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고령화는 저축 및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경상수지에 부정적이나 그 경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및 생산성(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고령화는 노동공급을 현 수준보다 감소하게 하여 직·간접적으로 성장둔화를 초래한다. 직접적 효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생산 감소는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을, 간접적 효과로는 노인부양비율의 증가에 따른 저축 감소는 투자 등 총수요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데, 기술혁신, 1인당 자본비율 증대, 노동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생산성 제고 노력을 통해 노동력 감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다양한 계층(여성, 고령자, 외국인력 등)의 노동활동 참가를 활성화하는 정책 등을 통해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적투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연령에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고령자에 대한 투자는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자의

8)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정의.

조기은퇴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투자 수익 대비 비용이 과다'한 결과를 초래한다. IMF는 평생교육 장려, 고령자의 전문성 경험과 사회봉사와의 연계, 세대간 경험 전수 등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는 정책의 추진을 권고하고 있다. 고령자의 고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의 생산성과 임금수준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령화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정리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자산붕괴(asset meltdown) 위험 또는 주가폭락 위험 등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고령화가 금리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어 자산붕괴(Asset Meltdown) 가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산붕괴 가설'이란 고령화 초기에는 pension saving 증가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현재의 연금제도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발생(연금지급액 총합이 연금기여금과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초과할 우려)하고 현금유입(cash inflow)을 초과하는 현금유출(cash outflow)을 충당하기 위해 연금금의 대대적인 금융상품 매각이 발생하여 자산가격 하락, 금리상승, 자본비용 상승 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미시적 관점에서 고령화가 금융자산 중 주식과 채권의 보유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연령에 따른 위험회피도의 변화에 대한 가정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므로 고령화에 따라 주식에서 채권으로의 대대적인 포트폴리오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 반면, 고령화에 따른 저축 및 투자 감소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낮은 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위험자산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IMF 분석에서도 고령화 진전으로 주가 폭락 등의 사태는 없을 것으

###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69

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인구 변화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되므로 주가에 인구 정보 등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되고, 소수 부유층의 높은 주식 보유 비율을 감안할 때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의 은퇴 시에도 보유 주식 매도가 급격히 늘어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는 없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OECD 국가의 경우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예금 등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주요국 가계의 금융자산은 총자산의 30% 내외 수준인데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인구구조 변화가 국민경제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인 인 수치로 추정한 연구인 IMF(2004)에서 1960~2000년중 11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표 III-1-1>과 같은 정도로 고령화 진전이나 노동인구비중 감소는 성장 및 생산성 둔화, 저축 및 투자 감소,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인구구조변화의 거시경제적 효과<sup>1)</sup>

	1인당 실질GDP	저축/GDP	투자/GDP	재정수지 /GDP	경상수지 /GDP
노동가능인구 비율 <sup>2)</sup>	0.08	0.72	0.31	0.06	0.12
노령인구 비율 <sup>3)</sup>	-0.041	-0.35	-0.14	-0.46	-0.39

주: 1) 노동가능인구, 노령인구 등의 비율이 1% 변동할 경우 나타나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률

2) 노동가능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15~64세 인구비율

3) 노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2004. 9)

## 2. 소득수준 및 경제성장

### 가. 주요 지표에 대한 실증분석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1인당 소득이나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게 된다. OECD에서 발표하는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Main Aggregates』에 수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분석대상 변수는 1인당 GDP(Per head, US달러, current prices, current PPPs)와 1인당 소득 증가율이다.

〈표 Ⅲ-2-1〉 및 [그림 Ⅲ-2-1]에 정리된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1인당 소득 증가율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1인당 GDP 수준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과관계가 아니고 선진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등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tion)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 일종의 추격(catch-up) 현상이 발견되었다.

〈표 Ⅲ-2-1〉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소득/성장률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1인당 GDP(US \$)	-16.430	-0.068	3369,855	69,501	-	-	0.932
1인당 소득 증가율	0.085	2.411	-0.295	-4.134	-0.186	-5.857	0.518

주: 1. 대상국가 및 분석기간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 8개국의 197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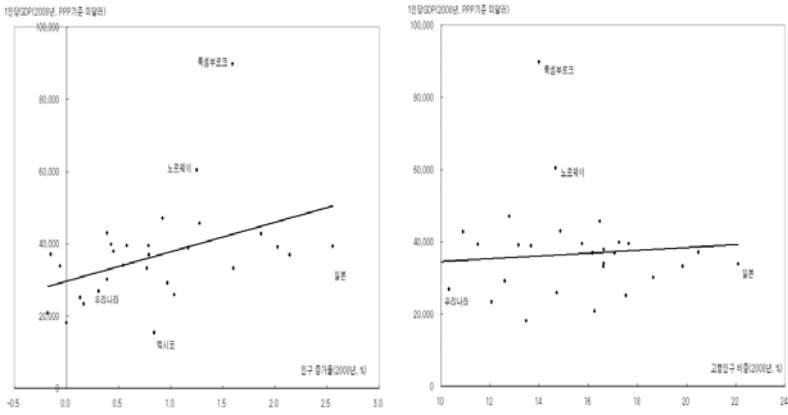
2. 진한 글씨 및 음영은 각각 회귀계수가 (-) 및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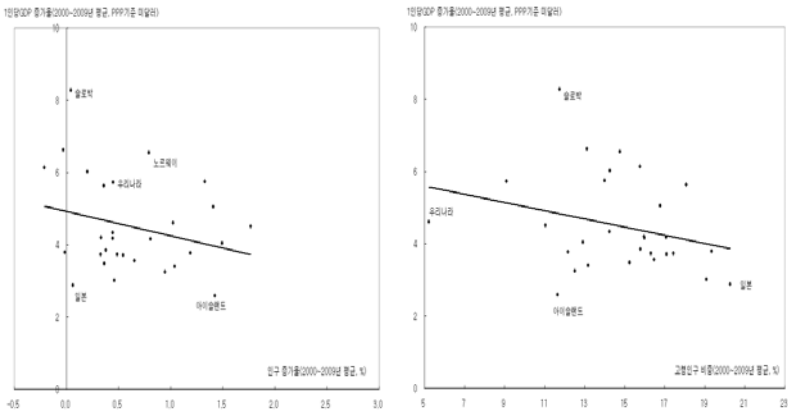
[그림 III-2-1]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수준 및 성장률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정도와 소득 :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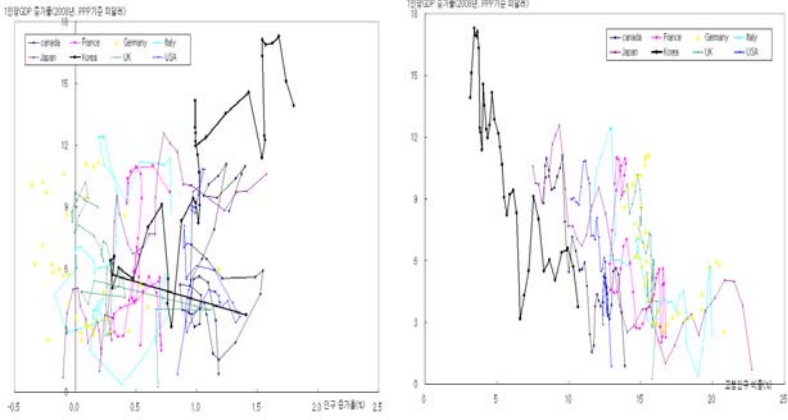
- 1인당 소득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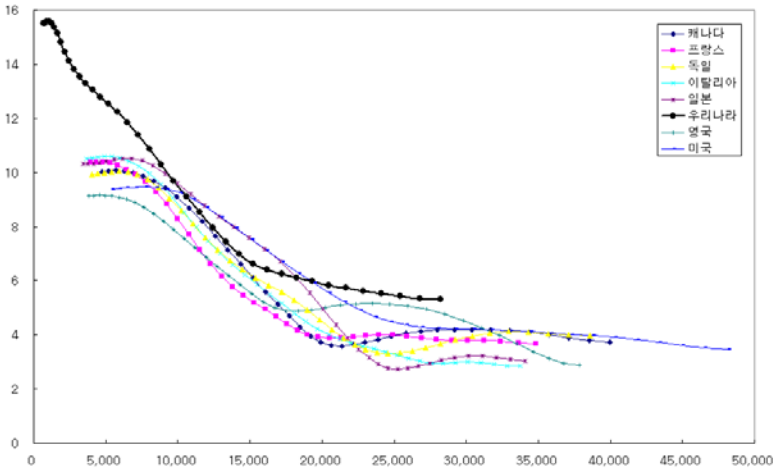
- 1인당 소득 증가율 -



(우리나라/G7의 고령화 정도와 소득 : 1970~2009)  
 - 1인당 소득 증가율(5년 이동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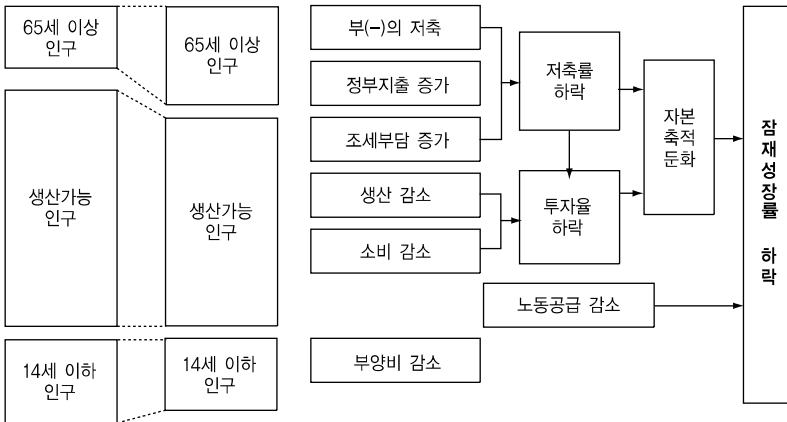
(우리나라/G-7의 소득 수준과 성장률 : 1970~2009)  
 - 1인당 소득 증가율(추세, HP filtered) -



### 나.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급속한 저축·고령화는 거시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투입 저하를 야기하고, 노동력 질과 양 저하,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소비성향이 상승하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등의 증가로 조세부담이 상승하여 저축률을 하락시킨다. 이는 경제 전반의 투자수준을 하락시켜 자본투입도 약화시킴으로써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킨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 투자의 감소 및 사회적 역동성의 저하 등으로 생산성의 하락이 초래하지만 지식 및 경험의 축적 등으로 생산성을 상승시키는 요인도 병존한다. 결국 생산성의 변동은 정책적 대응의 성공 정도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키기도 혹은 하락시키기도 할 것이다.

[그림 III-2-2] 저출산·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출처: 윤성훈(2010)

금융연구원(2011)에 따르면,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기초한 신고전학과 이론이 타당하다면 인구구조와 1인당 소득 증가율 간에는 안정적 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향후 고령화 진전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비율이 1%p 하락할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0.17%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II-2-2〉 인구지표와 1인당 소득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종속변수	상 수	인구증가율	출산율	생산가능인구비율	Adjusted R <sup>2</sup>
1인당 GNI 성장률	0.07 (3.49)	0.32 (2.78)	-0.10 (-1.55)	0.17 (5.44)	0.6

주: 1. OLS 추정에 이용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음

$$GNI_t = \beta_1 + \beta_2 \text{인구증가율}_t + \beta_3 \text{출산율}_t + \beta_4 \text{생산가능인구비율}_t + \epsilon_t$$

2. ( ) 안은 t값임.

출처: 금융연구원(2011)

국회예산정책처(2009)도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간 거시재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인 노년부양비율을 5% 증가시키는 충격을 주어 향후 10여 년간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08년 대비 2020년의 우리 경제 모습이 총수요 측면에서 민간소비가 1.2%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2.0% 하락하면서 실질국내총생산 수준이 0.9%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노동공급량이 1.6% 감소하고 투자위축으로 자본축적 정도도 0.6% 낮아지면서 경제의 잠재성장을 나타내는 총공급 수준도 1.2% 감소하였다.

박형수·류덕현(2006)에서 실제로 OECD의 STAN(STructural ANalys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노동투입(생산가능인구, 고용률, 근로시간),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 성장기여도를 분해한 결과에서도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매우 크게 변동함을 알 수 있다. 또 우

###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75

리나라 중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1971년 이후 평균 2.5%로 OECD평균(1.7%) 보다 높은 수준이었는데, 향후 중요소생산성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19개 OECD 국가들의 1996년 이후 중요소생산성을 상수항, 1인당 GDP(미 달러 기준), 무역개방도(수출입 ÷ GDP), GDP 대비 R&D투자비율, 국가별 fixed effect 등에 회귀분석한 결과<sup>9)</sup>를 이용하여 전망<sup>10)</sup>한 결과 2050년경에 1.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관호·황윤재(2005)도 인구구조의 변화가 총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임금결정 방정식 추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는데, 노동구조의 변화는 통계적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총노동생산성에 유의한 효과를 미쳐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는 2020년경 노동생산성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

9)  $\ln(\text{중요소생산성}) = -13.488 + 0.353 \cdot \ln(\text{1인당GDP}) + 0.0078 \cdot \text{OPEN} + 0.039 \cdot \text{R\&D}$

10) 무역개방도는 2005년 수준(82.3%, 2004년 83.8%)이 유지되는 것으로, GDP 대비 R&D투자비율은 최근의 3% 수준에서 2025년까지 4%로 증가한 후 동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표 III-2-3〉 경제성장률의 요인분해 결과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캐나다	Y	3.8	1.2	3.6	3.0	1.2
	MFP	-0.1	0.2	1.2	0.5	-0.1
	L	2.5	0.0	1.3	1.3	0.4
	K	1.4	1.0	1.0	1.1	0.9
프랑스	Y	3.0	1.3	2.4	2.0	0.8
	MFP	3.7	0.4	1.3	1.1	-0.1
	L	-1.3	0.2	0.4	0.2	0.3
	K	0.7	0.7	0.7	0.8	0.6
독일	Y	-	1.3	1.7	1.1	0.5
	MFP	-	1.3	1.2	0.9	0.2
	L	-	-0.7	-0.2	-0.3	0.0
	K	-	0.7	0.7	0.5	0.3
이탈리아	Y	3.2	1.1	1.7	1.5	-0.5
	MFP	1.6	0.8	0.4	-0.1	-1.0
	L	0.7	-0.4	0.5	0.7	-0.1
	K	1.0	0.7	0.8	0.9	0.6
일본	Y	5.0	2.1	0.8	1.5	2.1
	MFP	3.5	1.4	0.7	1.5	1.6
	L	0.3	-0.5	-0.9	-0.6	0.3
	K	1.1	1.2	0.9	0.6	0.2
한국	Y	9.6	7.7	5.1	5.3	3.3
	MFP	5.3	4.0	3.8	3.0	2.7
	L	2.2	1.4	-0.5	0.9	-0.4
	K	2.1	2.2	1.8	1.4	1.0
영국	Y	3.8	1.2	3.2	2.8	2.5
	MFP	1.0	1.2	1.3	1.6	0.9
	L	2.0	-1.1	0.9	0.3	0.7
	K	0.8	1.1	1.1	0.9	0.9
미국	Y	3.6	2.3	3.9	2.6	1.1
	MFP	0.7	0.9	1.1	1.8	0.8
	L	1.9	0.7	1.7	0.0	-0.3
	K	1.0	0.8	1.2	0.9	0.6

출처: 박형수·류덕현(2006)

[그림 III-2-3]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전망 결과



출처: 박형수·류덕현(2006)

한편, IMF, OECD, EU 등 국제기구도 오래 전부터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III-2-1>에서 보았듯이 IMF(2004)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 상승할 경우 1인당 GDP가 0.041%p 하락하고, 반대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1% 상승할 경우 1인당 GDP가 0.08%p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OECD(2001)<sup>11)</sup>도 고령화로 인해 향후 50년간 GDP 증가율이 매년 0.25~0.75%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장 최근인 2010년에 OECD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의 2025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한 결과<sup>12)</sup>를 보면 우리나라가 1.6%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EU도 『2009 Ageing Report』(2010)를 통해 27개 회원국들의 잠재성장률을 동일한 방법으로 2060년까지 전망하였다. 전망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중 27개국의 평균 잠재

11) OECD, 『Facts and Figures』, 2001.

12)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2010.

성장률 하락 규모는 무려 2.0%p에 달했다. 특히 [그림 Ⅲ-2-4]에서 보듯이 현재의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잠재성장률 하락 규모가 큰 경향이 있다.

〈표 Ⅲ-2-4〉 OECD(2010)의 잠재성장률 전망

(단위: %, %p)

국가	2010~ 11(A)	2012~ 25(B)	B-A	국가	2010~ 11(A)	2012~ 25(B)	B-A
인구문제 심각 국가				인구문제 완만 국가			
독일	1.2	1.3	0.1	캐나다	1.6	1.6	0.0
이탈리아	0.3	1.5	1.2	프랑스	1.2	1.5	0.3
일본	0.8	0.9	0.1	영국	1.2	1.8	0.6
<b>한국</b>	<b>4.0</b>	<b>2.4</b>	<b>-1.6</b>	<b>미국</b>	<b>1.4</b>	<b>2.3</b>	<b>0.9</b>
※ 비교							
유로존	0.8	1.5	0.7	OECD	1.2	1.9	0.7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2010.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79

〈표 III-2-5〉 EU(2010)의 잠재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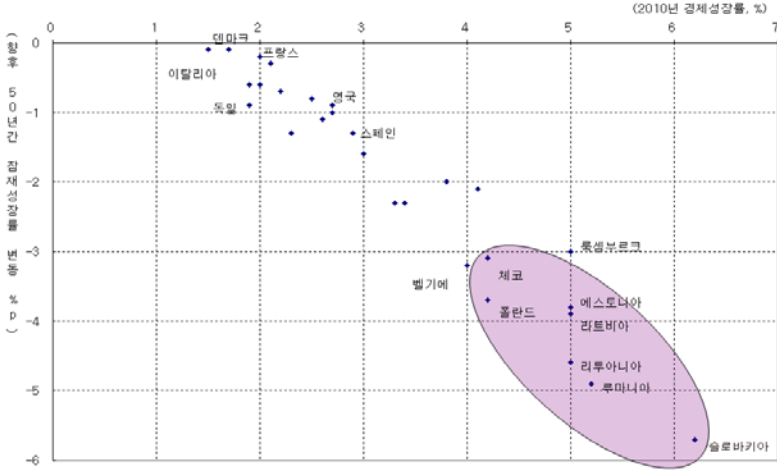
(단위: %, %p)

국가	2010	2060	변동	국가	2010	2060	변동
SK	6.2	0.5	-5.7	MT	2.3	1.0	-1.3
RO	5.2	0.3	-4.9	FI	2.6	1.5	-1.1
LT	5.0	0.4	-4.6	SE	2.7	1.7	-1.0
LV	5.0	1.1	-3.9	DE	1.9	1.0	-0.9
EE	5.0	1.2	-3.8	UK	2.7	1.8	-0.9
PL	4.2	0.5	-3.7	BE	2.5	1.7	-0.8
BG	4.0	0.8	-3.2	AT	2.2	1.5	-0.7
CZ	4.2	1.1	-3.1	NL	1.9	1.3	-0.6
LU	5.0	2.0	-3.0	PT	2.0	1.4	-0.6
HU	3.3	1.0	-2.3	NO	2.1	1.8	-0.3
SI	3.4	1.1	-2.3	FR	2.0	1.8	-0.2
IE	4.1	2.0	-2.1	IT	1.5	1.4	-0.1
CY	3.8	1.8	-2.0	DK	1.7	1.6	-0.1
EL	3.0	1.4	-1.6	<b>EU27 전체</b>	<b>2.5</b>	<b>1.4</b>	<b>-1.1</b>
ES	2.9	1.6	-1.3	<b>EU27 평균</b>	<b>3.3</b>	<b>1.3</b>	<b>-2.0</b>

주: BE(Belgium), BG(Bulgaria), CZ(Czech), DK(Denmark), DE(Germany), IE(Ireland), EE(Estonia), EL(Greece), ES(Spain), FR(France), IT(Italy), CY(Cyprus), LV(Latvia), LT(Lithuania), LU(Luxembourg), HU(Hungary), MT(Malta), NL(The Netherlands), AT(Austria), PL(Poland), PT(Portugal), RO(Romania), SI(Slovenia), SK(Slovak), FI(Finland), SE(Sweden), UK(United Kingdom)

출처: EU, 『2009 Ageing Report』, 2010.

[그림 III-2-4] EU국가들의 성장률 수준과 잠재성장률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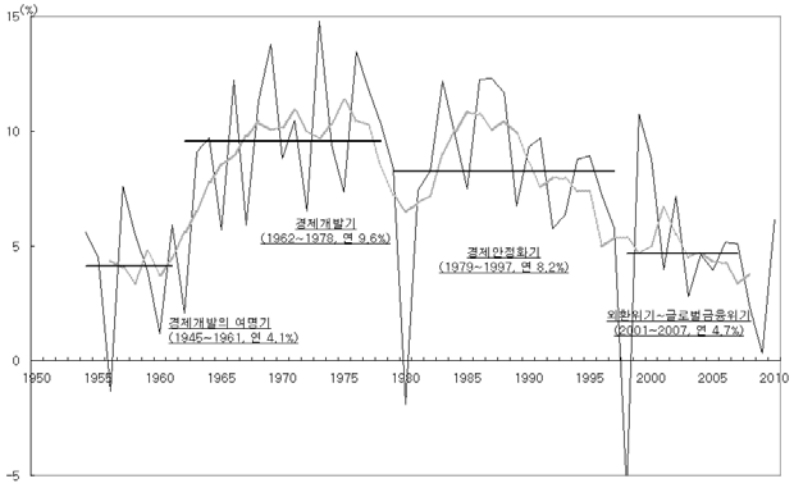
따라서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은 우리나라도 한국조세연구원의 박형수·류덕현(2006) 등의 추계결과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이 최근의 4%대에서 2040년대에는 1% 내외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김기호(2005)도 통계청의 2005년 인구전망을 기초로 2050년까지 급속한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한 성장 둔화의 주요인임을 보인바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030~2050년간 평균 2% 수준으로 전망되어 평균 5%대의 성장을 시현한 2000~2005년에 비해 3%p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III-2-6〉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81~90	91~00	01~10	11~20	21~30	31~40	41~50
KDI (2003, 2006)	8.29	5.97	4.40	4.21	2.91	1.60	0.74
한국조세연구원(2006)	8.62	6.27	4.62	4.27	2.81	1.70	1.20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2008)	n.a.	n.a.	n.a.	4.10	2.80	1.70	1.20
국회예산정책처 (2010)	n.a.	n.a.	n.a.	3.4.	2.0	1.2	0.8

[그림 III-2-5]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추이



주: 1953~1969년 경제성장률은 1975년 기준년 통계, 1970~2010년은 2005년 기준년 통계임.

### 3. 경제구조

국민소득의 구성은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 분배, 지출의 세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생산 측면에서의 국내총생산(시장가격)은 기초가격<sup>13)</sup>으로 평가한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와 순생산물세(생산물세 - 생산물보조금)로 구성되어 있다. 한 나라의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경제부문을 보통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생산 측면에서 파악한 2009년중 당해연도 가격 기준 국내총생산액은 1,063조 591억원으로 제조업이 265조 7,830억원, 서비스업이 581조 4,641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begin{aligned} \text{국내총생산(시장가격)} &= \text{경제활동별 부가가치(기초가격)} \\ &+ \text{순생산물세(생산물세 - 생산물보조금)} \end{aligned}$$

다음으로 2009년중 분배소득 측면에서 파악한 국내총생산을 보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임금과 급여 등 피용자보수 490조 7,100억원,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인 영업잉여 312조 6,623억원,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고정자본(시설)의 가치감소분인 고정자본소모 142조 4,614억원, 정부가 다른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세금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제외한 순생산 및 수입세 117조 2,253억원으로 구성된다.

13) 구매자가격에서 순생산물세와 운송마진을 뺀 가격으로 1993 SNA에서는 경제활동별 부가가치를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세금이나 보조금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각 산업부문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여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분석 및 정책수립에 보다 유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83

$$\begin{aligned} \text{국내총생산} &= \text{피용자보수} + \text{영업잉여} + \text{고정자본소모} \\ &+ \text{순생산 및 수입세} \end{aligned}$$

마지막으로 2009년중 지출 측면의 국내총생산은 국내총생산의 지출 내역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민간최종소비지출 577조 4,047억원, 정부최종소비지출 170조 2,556억원, 총고정자본형성 311조 5,936억원, 재고증감 -36조 512억원,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530조 4,706억원과 공제항목인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488조 8,25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생산 측면에서 파악한 국내총생산과 지출항목의 합 간 차이는 통계상 불일치로 표시된다.

$$\begin{aligned} \text{국내총생산} &= \text{민간최종소비지출} + \text{정부최종소비지출} \\ &+ \text{총고정자본형성} + \text{재고증감} + \text{수출} - \text{수입} \\ &+ \text{통계상 불일치} \end{aligned}$$

[그림 III-3-1]에는 우리나라의 생산, 분배, 지출 측면에서의 GDP통계가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2009년 통계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활용된 OECD 국가의 생산, 분배, 지출 측면에서의 GDP 통계는 <부록 2>에 2008년 통계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 [그림 Ⅲ-3-1] 국민소득의 3면 등가 원칙

(단위: 십억원)

2009년 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잠정치)  
(당해연도가격 기준)

생산 국내총생산		분배 국내총생산		지출 국내총생산	
농업 임업 및 어업	24,929	피용자보수	490,710	민간최종소비지출	577,405
광공업	267,953	영업잉여	312,662	정부최종소비지출	170,256
(제조업)	265,783	고정자본소모	142,461	총고정자본형성	311,594
전기 가스 수도업	17,413	생산 및 수입세	122,134	재고증감	-36,051
건설업	66,472	(공제) 보조금	4,909	재화와서비스수출	530,471
서비스업	581,464			(공제) 재화와서비스수입	488,825
총부가가치	958,231			통계상 불일치	-1,789
순생산물세	104,828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1,063,059	국내총생산	1,063,059	국내총생산	1,063,059

출처: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10.



## 가. 국민소득 지출 및 수요구조에 미치는 영향

### (1) 주요 지표들에 대한 실증분석

우선 OECD에서 발표하는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Main Aggregates』에 수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 증가율 하락 및 고령인구 비중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지출 측면의 GDP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대상 변수와 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민간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 Households and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은 가계소비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의 합으로 측정된다. 가계소비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가계 시설 및 운영, 의료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등으로 더 세분된다. 또 가계소비는 그 성질에 따라 내구재 소비, 준내구재 소비, 비내구재 소비, 서비스 소비로 세분된다.

정부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도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 및 안전, 4. 경제업무, 5. 환경보호, 6. 주택 및 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 문화 및 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로 세분된다.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은 건설투자, 설비투자, 경작자산(Cultivated assets), 무형고정자산투자(Intangible fixed assets)의 합으로 측정된다<sup>14)</sup>. 건설투자는 건물건설(Dwellings)과 토목건설(Other buildings and structures)로 더 세분되고, 설비투자는 운수장비(Transport equipment)와 기계류(Other machinery and equipment)로 더 세분된다.

마지막으로 총수출(Exports of goods and services)과 총수입(Imports of goods and services)이 지출 측면의 GDP 구조를 구성한다.

14) 재고증감(Changes in inventories and acquisitions less disposals of valuables)은 제외한다.

###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8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출 측면에서 GDP구조의 변화를 패널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부최종소비지출과 총수출의 비중이 증가하지만 민간최종소비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의 비중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정부최종소비지출비중의 상승 및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의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인당 소득 증가에 따라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을 증가시키지만 정부최종소비지출비중은 하락시켜 전체적인 소비지출은 규모가 큰 민간최종소비지출처럼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여도 측면에서는 5가지 지출항목 모두 인구 증가율 하락 및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II-3-1〉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지출측면 GDP구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b>지출비중</b>							
소비지출	<b>-0.121</b>	-2.277	0.165	3,240	0.112	8,093	0.791
· 민간최종소비지출	<b>-0.070</b>	-3.989	<b>-0.179</b>	-3,888	0.103	8,584	0.811
· 정부최종소비지출	-0.032	-0.665	0.555	17,111	<b>-0.070</b>	-5,323	0.899
총고정자본형성	0.059	1.273	<b>-0.665</b>	-11,038	-0.009	-0,702	0.827
총수출	-0.144	-1.005	0.471	4,829	0.171	8,406	0.852
총수입	-0.057	-1.064	0.142	1,385	0.235	15,718	0.914
<b>성장기여도</b>							
민간최종소비지출	0.058	3,310	<b>-0.143</b>	-4,630	-0.018	-1,357	0.301
정부최종소비지출	0.009	2,820	<b>-0.024</b>	-3,043	-0.004	-1,523	0.209
총고정자본형성	0.045	2,122	<b>-0.125</b>	-3,625	0.003	0,174	0.088
총수출	0.058	3,311	<b>-0.143</b>	-4,631	-0.018	-1,357	0.301
총수입	0.009	2,824	<b>-0.024</b>	-3,042	-0.004	-1,524	0.209

주: 1. 대상국가 및 분석기간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 8개국의 1970~2009년

2. 진한 글씨 및 음영은 각각 회귀계수가 (-) 및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의 하락을 12개 지출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서비스 소비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소비 비중에 대한 분석에서는 교통, 통신, 음식숙박, 임료 및 수도광열 등 4개 항목만 증가한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품, 의류·신발, 가계시설·운영, 의료보건, 교육, 기타 등 6개 항목이 감소하였다. 예상과 달리 의료보건 지출 비중이 감소한 것은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민간소비지출 부분만 포함되기 때문으로 제Ⅱ장 2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고령화에 따른 의료보건 지출 부담의 대부분을 정부재정에서 부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Ⅲ-3-2〉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지출측면 민간최종소비지출 구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b>품목별 비중</b>							
식료품, 비주류, 음료품	-0.004	-0.074	<b>-0.628</b>	-6.960	<b>-0.154</b>	-12.899	0.921
주류 및 담배	0.012	2.398	-0.023	-1.320	<b>-0.044</b>	-30.200	0.909
의류 및 신발	0.021	1.946	<b>-0.329</b>	-20.523	<b>-0.075</b>	-35.015	0.944
임료 및 수도광열	<b>-0.043</b>	-3.775	0.684	19.572	0.038	5.514	0.870
가계시설 및 운영	0.003	0.856	<b>-0.104</b>	-4.924	<b>-0.050</b>	-12.249	0.895
의료보건	<b>-0.032</b>	-8.954	<b>-0.092</b>	-3.962	0.098	16.702	0.923
교통	0.060	10.002	0.184	4.951	-0.007	-0.686	0.796
통신	-0.009	-1.185	0.155	19.116	0.015	7.860	0.722
오락문화	0.005	0.351	0.037	1.806	0.056	13.857	0.867
교육	<b>-0.005</b>	-2.095	<b>-0.018</b>	-3.871	0.021	15.758	0.934
음식숙박	0.021	5.345	0.160	16.818	<b>-0.029</b>	-12.750	0.960
기타	0.008	0.573	<b>-0.096</b>	-4.994	0.120	17.567	0.850
<b>성질별 비중</b>							
내구재	0.067	3.631	0.160	3.535	<b>-0.053</b>	-5.358	0.726
준내구재	0.035	4.206	<b>-0.366</b>	-18.372	<b>-0.076</b>	-37.905	0.953
비내구재	-0.010	-0.316	<b>-0.592</b>	-6.137	<b>-0.233</b>	-11.616	0.905
서비스	<b>-0.063</b>	-2.003	0.715	15.538	0.379	18.526	0.963

주: 1. 대상국가 및 분석기간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 8개국의 1970~2009년

2. 진한 글씨 및 음영은 각각 회귀계수가 (-) 및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89

다음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의 하락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 기업부문의 투자비중은 증가하지만 정부부문 및 가계부문의 투자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형태별 투자 비중에 대한 분석에서는 운송장비, 기계류 등 설비투자는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건물, 토목 등 건설투자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지출측면 총고정자본형성 구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b>자산형태별 비중</b>							
건설투자	<b>-0.200</b>	-5.077	<b>-0.784</b>	-8.097	-0.044	-0.909	0.702
· 건물건설	<b>-0.139</b>	-2.740	<b>-0.413</b>	-5.637	0.037	1.071	0.844
· 토목건설	-0.012	-0.281	<b>-0.429</b>	-5.117	-0.012	-0.296	0.802
설비투자	0.235	6.244	0.748	8.558	<b>-0.179</b>	-4.370	0.759
· 운송장비	0.105	1.743	0.279	7.116	<b>-0.072</b>	-5.592	0.483
· 기계류	0.156	6.575	0.514	5.375	<b>-0.176</b>	-5.837	0.759
경작자산	<b>-0.004</b>	-2.455	0.077	4.783	<b>-0.029</b>	-7.876	0.837
무형고정자산투자	-0.026	-1.581	0.064	1.425	0.207	14.534	0.894
<b>주체별 비중</b>							
기업부문	0.337	0.524	0.992	4.525	-0.007	-0.168	0.750
정부부문	0.149	0.324	<b>-0.466</b>	-5.372	0.063	3.495	0.836
가계부문	-0.070	-0.111	<b>-0.679</b>	-4.862	-0.004	-0.114	0.922

주: 1. 대상국가 및 분석기간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 8개국의 1970~2009년

2. 진한 글씨 및 음영은 각각 회귀계수가 (-) 및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 (2) 고령화와 소비·저축 수준

〈표 Ⅲ-3-4〉에 정리된 바와 같이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저출산·고령화가 소비지출의 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소비의 증가가 민간소비 감소를 상쇄하여 총소비를 증가시키는데,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사회 전체에 대해 공공행정, 국방, 법률의 시행, 공중보건 등과 같은 집합서비스(collective services)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행하는 지출과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립대학 등의 개별서비스(individual services)를 개별 가계에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출로 구성되어 민간소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물론 정부소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소비가 증가하더라도 정부소비에 의한 부분이 많다면 세원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경제이론에서도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로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면 소비수준이 감소하지만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선호에 따라 소비수준 이외에 소비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직업이 있는 청·장년기에는 은퇴 후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적 저축을 하고 노년기에는 기존의 저축을 통하여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소비성향은 높아지는 반면, 민간저축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경제의 총저축은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반면 고령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된다면 고령자의 저축 감소가 근로계층의 저축 증대를 크게 상회하여 총저축이 감소하게 된다. 또 고령화의 진전으로 세수는 적어지고 정부지출은 증가하여 정부재정수지가 악화되면 정부저축률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인부양비용 증가는 근로계층의 가용자산을 상대적으로 소

비성향이 높은 고령자에게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어 전체 인구의 평균 소비는 증가하고 저축은 감소하게 된다.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precautionary saving)이 더욱 증가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으나<sup>15)</sup>, 그 정도는 국가별 연금 및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총저축 감소에 따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투자재원이 감소하여 장기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이러한 성장 저하에 따라 소비 증가도 둔화될 수 있다.

---

15) 특히 고령화의 전환시기에는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저축동기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표 III-3-4〉 지출 및 수요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종속변수(지출비중, %)	인구증가율 하락	고령인구 비중 증가	1인당 소득 증가	인구구조 변화 반영 <sup>1)</sup>
<b>소비지출</b>	(+)	+	+	4.0
-민간최종소비지출	(+)	(-)	+	-4.1
· 내구재	+	+	(-)	3.6
· 준내구재	+	(-)	(-)	-8.5
· 비내구재		(-)	(-)	-13.7
· 서비스	(-)	+	+	16.7
1.식료품, 비주류, 음료품		(-)	(-)	-14.6
2.주류 및 담배	(-)		(-)	0.0
3.의류 및 신발		(-)	(-)	-7.6
4.임료 및 수도광열	+	+	+	15.9
5.가계시설 및 운영		(-)	(-)	-2.4
6.의료보건	+	(-)	+	-2.1
7.교통	(-)	+		4.2
8.통신		+	+	3.6
9.오락문화			+	?
10.교육	+	(-)	+	-0.4
11.음식숙박	(-)	+	(-)	3.7
12.기타		(-)	+	-2.2
-정부최종소비지출		+	(-)	12.9
<b>총고정자본형성</b>		(-)		<b>-15.4</b>
-건설투자	+	(-)		-17.9
· 건물건설	+	(-)		-9.4
· 토목건설		(-)		-10.0
-설비투자	(-)	+	(-)	17.1
· 운수장비		+	(-)	6.5
· 기계류	(-)	+	(-)	11.7
-경작자산	+	+	(-)	1.8
-무형고정자산투자			+	?
1.기업부문		+		23.0
2.정부부문		(-)	+	-10.8
3.가계부문		(-)		-15.7
<b>총수출</b>		+	+	<b>10.9</b>
<b>총수입</b>			+	<b>?</b>

주: 1)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1.16%p(+0.35% → -0.81%) 하락하고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3.2%p(11.0% → 31.2%) 증가할 경우 분석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표 III-3-5〉에 정리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및 G7국가들의 개인 순저축률(household net saving rate)<sup>16)</sup>의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인구 증가율의 하락 및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저축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6〉에 정리된 OECD의 2005년 보고서<sup>17)</sup>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60세 이상 인구비중이 1%p 상승하면 가계저축률이 4.3%p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이용한 전영준(2006)의 분석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와 정부재정의 장기 불균형은 향후 수십 년간 국민저축률의 대폭적인 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각종 현 보유자산, 인적자본, 순연금자산을 포함한 각종 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에서도 인구의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성숙에 따른 자산의 연금화로 인해 저축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김소영·이종화(2006)에서도 G7국가의 자료를 이용한 패널 VAR모형 및 한국 자료를 이용한 VAR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부양률의 증가가 저축률, 특히 정부 저축률과 경상수지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 총저축률은 개인, 기업, 정부 등 부문별로 나누어지는데 개인 총저축률의 경우 개인 총저축액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에 비해 개인순저축률은 개인 순저축액을 개인의 순조정처분가능소득과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인 순저축률(%) = 개인 순저축 ÷ (개인 순조정처분가능소득 +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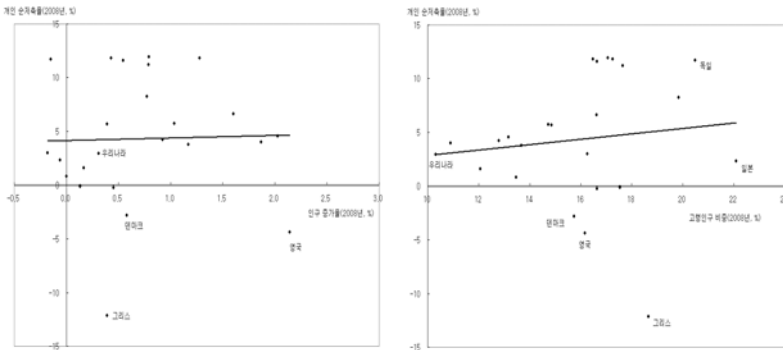
17) Martins et al.(2005)

(1) 우리나라/G7의 고령화 정도와 개인 순저축률 패널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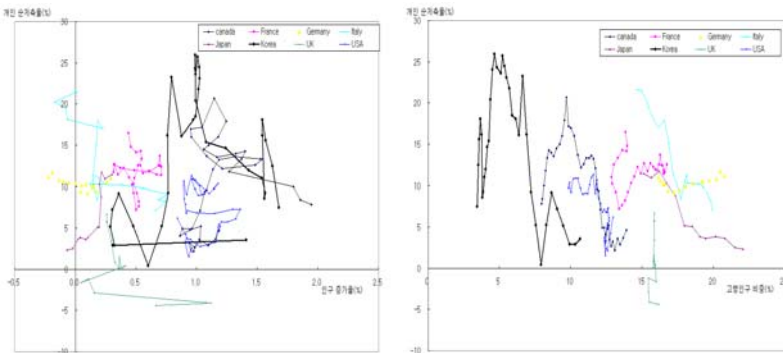
〈표 III-3-5〉 개인 순저축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종속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개인 순저축률	-1.978	-2.705	-0.942	-8.556	-0.157	-7.014	0.753

(2)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정도와 개인 순저축률 : 2008년



(3) 우리나라/G7의 고령화 정도와 개인 순저축률 추이: 1970~2009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95

〈표 III-3-6〉 OECD의 인구구조와 가계저축률 실증분석 결과

	Coefficients	student-t	Coefficients	student-t
<i>Dependent variable:</i> Household saving rate				
<i>Control variables:</i>				
Budget deficit <sup>1</sup>	-0.632	-7.5	-0.633	-7.5
Real interest rate <sup>2</sup>	0.321	3.4	0.327	3.5
GDP per capita	8.58 10 <sup>-6</sup>	4.4	7.97 10 <sup>-6</sup>	3.9
Inflation <sup>3</sup>	0.193	1.9	0.200	1.9
Share of population 25-59 <sup>4</sup>	0.778	2.8	0.558	1.6
Share of population 60-99 <sup>4</sup>	-4.267	-7.0	-4.322	-7.0
Share of public health expenditures <sup>5</sup>	-0.327	-3.9	-0.335	-3.9
Interaction pension replacement rates & prime-age population	-0.015	-4.1	-0.016	-4.2
Interaction pension replacement rates & old-age population	0.053	5.1	0.054	5.1
Life expectancy at birth	-0.400	-0.9	-0.845	-1.4
Time trend	..	..	0.173	1.0
R <sup>2</sup> within (country-fixed effects)	0.52		0.51	
Observations	254		254	
Period	1970-2003		1970-2003	
Countries	30		30	

1. Cyclically adjusted government net lending as a % of potential GDP.

2. Real short-term interest rate.

3. Based on CPI indices.

4. In total population.

5. Public expenditure on health as a % of total expenditure on health.

Source: OECD calculations.

금융연구원의 최공필 등(2005)은 인구 고령화로 2020년과 2030년 우리나라의 저축률을 2002년에 비해 각각 4.6%p, 11.8%p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 생산성 하락 및 저축 감소로 인해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노동력의 양적·질적 저하로 인한 생산성 하락은 자본수익률을 하락시켜 전반적인 투자위축을 초래하고 저축 감소는 국내 투자재원 축소로 이어져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연구원의 최공필 등(2005)은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투자율도 2002년에 비해 2020년과 2030년에 각각 1.1%p, 2.6%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III-3-7〉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및 투자율 전망

(단위: %, %p)

	2002년	2010년	2020년	2030년
노년부양비율	10.1	15.5	22	36.7
저축률 변화	-	-2.8	-4.6	-11.8
투자율 변화	-	-0.9	-1.1	-2.6

자료: 최공필 외(2005),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대응』

본 연구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 OECD 국가의 1970년 이후 총저축률<sup>18)</sup>을 경제성장률, 피부양인구(15세 이하 및 65세 이상)비율, 가계부채/GDP<sup>19)</sup> 등의 데이터와 이분산성 교정한 Pooled OLS 방법으로 회귀분석한 결과<sup>20)</sup>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총저축 및 총투자율<sup>21)</sup>을 전망해 보았는데, 현재 30%를 초과하는 저축률이 2050년에는 2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sup>22)</sup>.

18) 총저축률 = 총저축 ÷ NDI(National Disposal Income)

19) 실질경제성장률이나 가계부채비율이 총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동성 제약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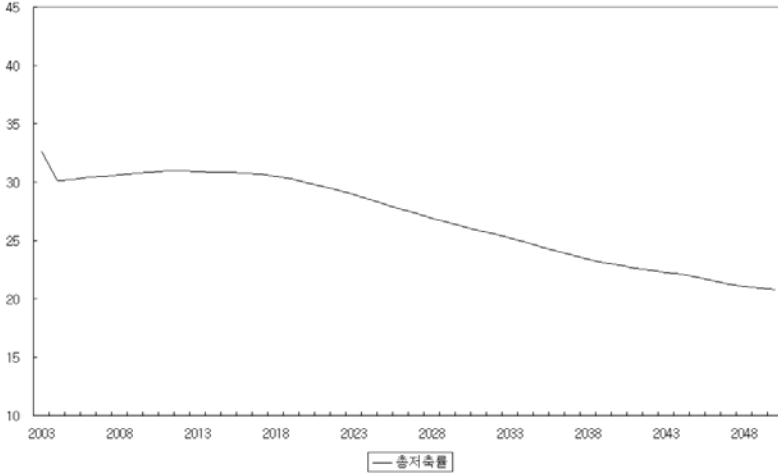
20) 총저축률 = 0.433 - 0.452 × 피부양인구비율 - 0.022 × 가계부채/GDP + 0.443 × 경제성장률

21)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가 균형을 유지한다면 국민경제 전체의 총저축율은 총투자율과 동일해진다.

22) 피부양인구 비율은 인구전망으로부터 구해지며, 가계부채비율은 2003년 현재 77%로서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이므로 향후에도 동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2015년까지는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총투자율이 총저축률을 다소 하회하지만 이후에는 경상수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III-3-2] 우리나라 총저축률 전망 결과

(단위: %)



#### 나. 국민소득 분배 및 소득구조에 미치는 영향

OECD에서 발표하는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Main Aggregates』와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Detailed Tables』에 수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 증가율 하락 및 고령인구 비중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분배 측면의 GDP 구조와 소득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대상 변수와 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 전체의 소득분배 지표(Generation of income account)로는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 영업잉여/혼합소득(Gross operating surplus and gross mixed income), 순생산·수입세(Taxes less subsidies on production and imports) 등이 있다.

다음으로 금융부문을 제외한 NNDI(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의 부문별 배분 지표가 있다.

경제전체의 NNDI = 가계부문 + 기업부문 + 정부부문

한편, 가계부문의 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Distribution of income account)해 보면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 영업잉여/혼합소득(Gross operating surplus and gross mixed income), 재산소득(Property income) 등이 있으며, 재산소득은 '재산소득(수입) - 재산소득(지급)'으로도 측정되는 순재산소득으로 대체될 수 있다.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99

〈표 III-3-8〉 국민계정의 소득분배 계정

제도부문별 생산계정(2008년)

(단위: 십억원)

거래 및 균형항목	비금융		금융법인		일반정부	개인	국외		
	법인기업 <sup>1)</sup>	기업	기업	기업					
	사용 원천	사용 원천	사용 원천	사용 원천	사용 원천	사용 원천	사용 원천	사용 원천	사용 원천
본원소득분배계정									
피용자보수	-	-	-	-	-	474,654	474,654	903	1,208
영업잉여	-153,124	-	34,146	-	-	109,098	108,098	-	-
생산및 수입세	-	-	-	-	-	-	-	-	-
보조금	-	-	-	-	-	-	-	-	-
재산소득	95,306	40,438	166,816	166,896	13,964	44,289	91,791	91,791	25,218
이자	36,828	31,097	163,149	163,928	13,964	43,582	44,351	44,351	17,995
법인기업분배소득	55,642	8,996	3,576	2,988	-	-	44,389	44,389	7,223
배당금	26,407	8,996	3,576	2,988	-	-	15,134	15,134	7,223
준법인기업소득인출	29,235	-	-	-	-	-	29,235	29,235	-
입료	2,836	355	91	-	10	707	3,070	3,070	-
순분원소득잔액/NNI	98,256	98,266	34,226	34,226	135,603	630,253	530,253	630,253	-
총분원소득잔액/GNI	179,548	179,548	38,109	38,109	157,459	659,000	659,000	659,000	-
제2차 소득분배계정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30,013	-	13,684	-	-	90,863	47,166	-	-
사회부담금	-	22,243	-	16,418	-	62,631	101,297	-	-
실제사회부담금	-	-	-	13,779	-	61,160	74,933	-	-
권속사회부담금	-	22,249	-	2,645	-	1,470	26,364	-	-
사회수혜금	22,249	-	15,846	-	35,132	-	73,227	-	-
사회보장수혜금	-	-	-	-	-12,351	-	12,351	-	-
민간사회보험수혜금	-	-	13,201	-	-	-	13,201	-	-
피용자에 대한 비금융형수혜금	22,249	-	2,645	-	1,470	-	26,364	-	-
사회보조수혜금	-	-	-	-	21,311	-	21,311	-	-
기타경상이전	20,133	12,826	12,294	19,339	40,850	18,091	49,683	72,537	15,681
비생명보험의 순보험료	5,601	-	178	10,280	11	-	4,504	-	36
비생명보험의 보험금	-	5,743	10,260	199	-	7	4,344	70	36
기타경상이전	14,533	7,082	1,856	8,880	40,839	18,084	45,179	68,193	15,575
거주자	13,778	7,082	1,856	8,880	39,263	17,751	31,767	52,951	-
국외	756	-	-	-	1,576	333	13,412	15,242	15,743
순처분가능소득/NDI	60,935	60,935	28,159	28,159	231,106	231,106	577,870	577,870	-
총처분가능소득/GDI	142,227	142,227	32,042	32,042	253,061	253,061	606,616	606,616	-
현물소득재분배계정									
사회적 현물이전	-	-	-	-	67,066	-	14,893	81,980	-
순조정처분가능소득	60,935	60,935	28,159	28,159	164,040	164,040	644,936	644,936	-
총조정처분가능소득	142,227	142,227	32,042	32,042	185,995	185,995	673,683	673,683	-
소득사용계정									
최종소비지출	-	-	-	-	156,944	-	561,627	-	-
실제 최종소비	-	-	-	-	89,878	-	628,694	-	-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	-	-	572	-	-	-	572	-	-
손저축	60,935	-	27,587	-	74,162	-	16,815	-	-
총저축	142,227	-	31,470	-	96,117	-	45,561	-	-

주: 1) 비금융준법인기업 포함

2) 가계(민간 비금융법인기업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 (1) 경제 전체의 소득분배 지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배 측면에서 GDP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순생산·수입세(생산·수입세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지만 영업잉여/혼합소득 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등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고령화에 따라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감소 및 고령 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는데 대부분 취업자 수의 감소 등 노동투입의 감소에 기인하므로 임금이 그만큼 상승하여 상쇄하지 않는다면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23)</sup>.

OECD에서는 자영업자(ES)에 대해 임금근로자(EE)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노동소득분배율( $\alpha$ )을 계산하고 있다.

$$\alpha = \frac{WSSE \cdot ETB}{GDPB}$$

WSSE = Compensation per Employee(EE), Private Sector

ETB = Employment, Business

= EE(Total Dependent Employment) +

ES(Self-Employed)

GDPB = Gross Domestic Product, Business(Factor Cost)

23) Cobb-Douglas 총생산함수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 $\alpha$ )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표 III-3-9〉 인구구조 변화/소득증가와 분배측면 GDP 구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1

종속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피용자보수 비중	-0.048	-0.671	-0.029	-0.323	<b>-0.083</b>	-10.247	0.841
·근로소득 비중	0.019	1.475	0.000	0.007	<b>-0.164</b>	-15.952	0.933
영업잉여/혼합소득 비중	-0.009	-0.235	<b>-0.516</b>	-7.380	0.161	12.556	0.886
순 생산·수입세 비중	-0.001	-0.241	0.219	18.532	-0.003	-0.527	0.919

주: 1. 대상국가 및 분석기간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 8개국의 1970~2009년  
2. 진한 글씨 및 음영은 각각 회귀계수가 (-) 및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박형수·류덕현(2006)에서는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민간부문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한 결과 0.835(1980~2004년 평균)로 OECD의 다른 국가들(0.400~0.764)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 그들은 OECD의 계산공식으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고, 생산성이 매우 낮아 임금근로자들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현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에 박형수·류덕현(2006)에서는 자영업의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여 자영업자의 임금수준을 낮게 적용<sup>24)</sup>하여 구한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을 0.595(1980~2004년 평균)로 추정하였다. 한편, 국민계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노동소득분배율'<sup>25)</sup>은 민간부문이 0.535(1980~2004년 평균)이며, 1997년 이후에는

24) 자영업에 해당하는 '농림어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해당산업의 부가가치÷취업자수)은 여타 산업 노동생산성의 27~45%(평균 36%)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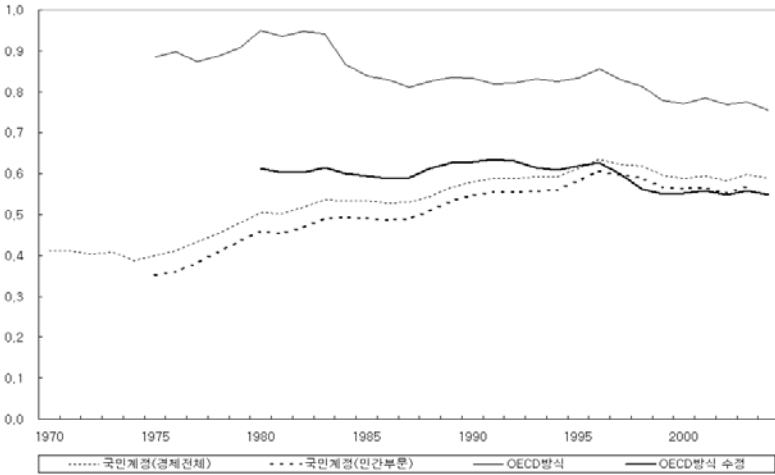
25)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 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노동소득분배율이다. 2009년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60.6%는 피용자보수 490.0조원

OECD 방식을 수정하여 구한 수치와 거의 동일하다.

노동소득분배율

$$= \frac{\text{비용자보수}}{\text{요소비용국민소득중비용자보수+기업및재산소득}}$$

[그림 III-3-3]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Main Aggregates』에 수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sup>26)</sup>한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8년 61.0%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편(OECD 평균 67.6%, G7 평균 67.2%)인데, 이들 나라와 비교하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농업이나 영세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은 데다 대부분 가족단위의 자영업이기 때문에 소득의 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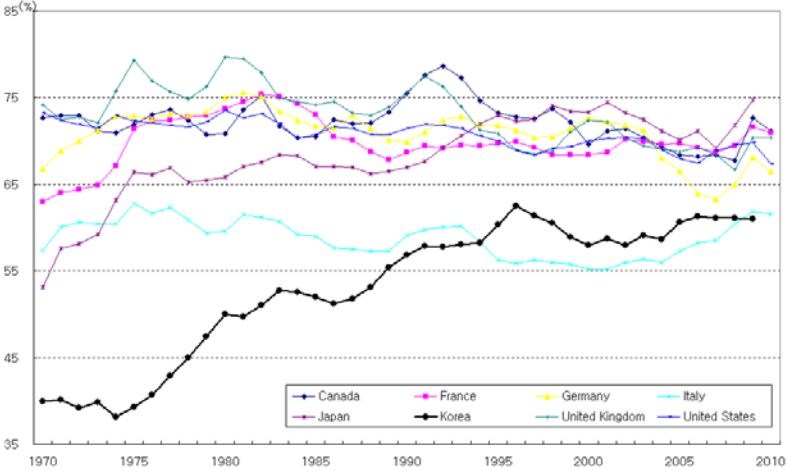
을 요소비용 국민소득 809,0조원으로 나누어 구한 값이다.

26) 노동소득분배율 = D1: Compensation of employees ÷ {B5\_NS1: Net national income at market prices - D2\_D3: Taxes less subsidies on production and imports} × 100

분이 영업잉여로 계상되는 데 비해 외국의 경우에는 농업이나 영세 도  
소매업의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부문에서도 피용자보수로 계  
상되는 노동소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그림 III-3-4]에서 보듯이 1970  
년대까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하락세 또는 안정세를 지속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변동추이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구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일본의 경우 최근의 장기 경기침체  
이전까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1970년대까  
지는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높은 실질임금  
상승률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였으나, 1970년대 말 발생한  
석유과동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둔화, 1980년대 이후 시작된 노동  
비용 절감 및 설비투자 확대에 의한 기업이윤율의 상승 등에 따라 하  
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노동소  
득분배율의 변동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었다.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실업률이나 실질임금 상승률이 주요 요인은 아니며 De  
Serres et al.(2001)은 산업구조 변화를, Guscina(2006)은 노동절감형  
기술발전을, Guscina(2006) 및 Jayadev(2007)는 세계화로 인한 무역  
및 자본이동 자유화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림 III-3-4] 우리나라/G7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최근 Schmidt and Vosen(2010)은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의 주요 변동요인이라는 이론모형 시뮬레이션 및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폐쇄경제의 경우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진전이 생산에 있어 자본심화를 초래하는데 노동과 자본 간 대체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이자율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결정되므로 국내 생산함수에 변동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인구구조 변화가 국내저축과 국내투자 간의 갭을 발생시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AYGO 시스템의 공적연금제도를 가진 국가의 경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강하게 나타났다.

또 <표 III-3-10>에서 보듯이 Schmidt and Vosen(2010)은 18개 OECD 국가들의 1960~2008년 연간 데이터 자료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한 결과, 평균수명 증가(Exp. retirement duration), 인구 감소(Population growth), 고령인구 비중 증가(Exp. old-age dep. ratio)가

모두 노동소득분배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주요 변동요인으로 지목된 경제 개방도나 PAYGO는 제한된 영향을 주거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표 III-3-11>에 정리된 우리나라와 G7국가들만의 데이터를 이용한 간단한 패널회귀분석에서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경제구조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지만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및 경제구조 변화로 다소 상승할 여지가 있으며, 동시에 선진국에서 1980년대 이후 나타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요인도 있어 전망이 쉽지 않다.

<표 III-3-10> Schmidt and Vosen(2010)의 실증분석 결과  
(Long-run elasticities with respect to the labour share)

	(1)	(2)	(3)	(4)	(5)	(6)	(7)	(8)	(9)	(10)
Exp. retirement duration	-0.302 (0.049)			-0.431 (0.011)			-0.280 (0.085)	-0.362 (0.099)		
Population growth		0.094 (0.028)			0.064 (0.001)		-0.006 (0.031)		-0.001 (0.021)	
Exp. old-age dep. ratio			-0.211 (0.065)			-0.219 (0.065)				-0.061 (0.004)
Openness				0.045 (0.080)	-0.157 (0.011)	-0.096 (0.067)	-0.068 (0.094)			
PAYGO								0.124 (0.088)	0.296 (0.369)	0.356 (0.420)
Observations	690	826	573 <sup>1</sup>	690	826	573 <sup>1</sup>	550 <sup>1</sup>	546 <sup>2</sup>	641 <sup>3</sup>	484 <sup>2</sup>
Order of ARDL	3,2	3,2	3,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Model	PMG	PMG	MG	PMG	PMG	MG	MG	PMG	MG	MG
Estimation	SUR	SUR	LS	LS	SUR	LS	LS	LS	SUR	SUR
Cointegration										
Panel-ADF	4.08***	6.90***	7.93***	4.94***	6.38***	7.16***	4.68***	3.60***	7.42***	8.14***
Group-ADF	10.69***	14.22***	11.66***	10.90***	13.15***	9.96***	9.43***	7.84***	9.90***	8.71***
Group-Rho	2.85***	2.99***	1.02	4.40***	1.48	1.77*	3.89***	2.23***	1.47	0.31

\*, \*\*,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0 %, 5 %, 1 % significance level respectively.

<sup>1</sup>Finland, Greece, Italy, Spain, UK were excluded

<sup>2</sup>Austria, Finland, Italy, Spain, UK were exclu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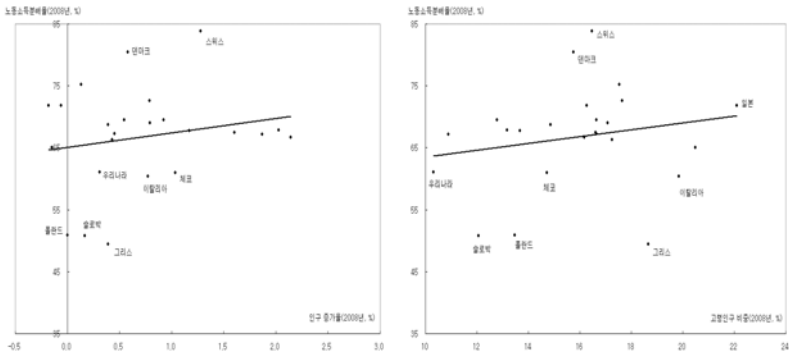
<sup>3</sup>Austria, Finland were excluded

〈표 III-3-11〉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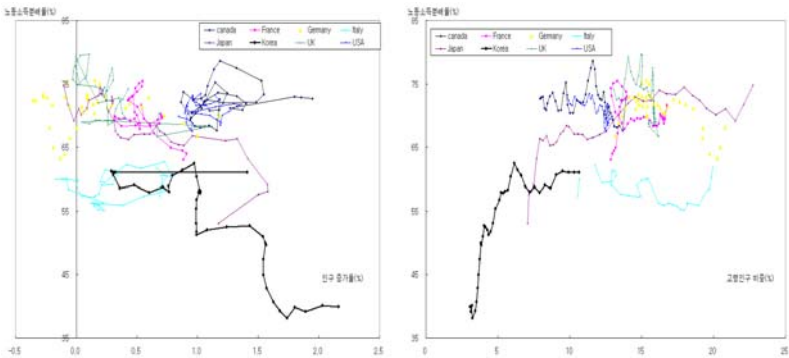
(1) 우리나라/G7의 고령화 정도와 노동소득분배율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노동소득분배율	-0.084	-0.572	0.763	6.692	-0.161	-12.737	0.771

(2)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정도와 노동소득분배율 : 2008년



(3) 우리나라/G7의 고령화 정도와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970~2009



(2) 순국민가처분소득의 부문별 배분

한편, 고령화에 따라 순국민가처분소득(NNDI: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의 가계, 정부, 기업 등 부문(금융부문 제외) 간 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한 결과, 가계부문의 비중이 감소하고 대신 정부부문 및 기업부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부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계부문의 NNDI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화에 따른 가계부문의 소득구성 변화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에서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모두 감소하는데 영업잉여의 감소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소득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산소득 지급분을 차감한 순재산소득의 감소는 제한적이었다.

〈표 III-3-12〉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분배측면 GDP 구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2

(부문별 배분)

종속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기업부문	<b>-1.003</b>	-2.878	0.378	5.813	-0.019	-1.627	0.662
정부부문	-0.011	-0.021	0.705	4.249	<b>-0.087</b>	-2.324	0.729
가계부문	0.794	1.107	<b>-1.078</b>	-6.551	0.080	1.899	0.648

## (가계부문 소득구조)

종속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피용자보수	<b>-0.669</b>	-2.504	<b>-0.257</b>	-3.076	<b>-0.051</b>	-5.005	0.931
영업잉여	1.414	4.646	<b>-0.630</b>	-10.458	0.081	11.566	0.916
재산소득	<b>-1.740</b>	-4.366	<b>-0.573</b>	-8.379	0.145	7.295	0.877
순재산소득	-0.030	-0.084	<b>-0.212</b>	-3.231	0.066	4.533	0.858

주: 1. 대상국가 및 분석기간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 8개국의 1970~2009년

2. 진한 글씨 및 음영은 각각 회귀계수가 (-) 및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 (3) 소득 재분배

〈표 III-3-13〉에 정리된 분배 및 소득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저출산·고령화가 영업잉여, 특히 가계부문의 영업잉여/혼합소득의 감소와 정부부문의 가치분소득 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109

〈표 III-3-13〉 분배 및 소득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종속변수(비중, %)	인구증가율 하락	고령인구 비중 증가	1인당 소득 증가	인구구조 변화 반영 <sup>1)</sup>
<b>본원소득 분배</b>				
피용자보수 비중			(-)	?
-근로소득 비중			(-)	?
영업잉여/혼합소득 비중		(-)	+	-12.0
순 생산·수입세 비중		+		5.1
1.기업부문 가처분소득 비중	+	+		9.9
2.정부부문 가처분소득 비중		+	(-)	16.3
<b>3.가계부문 가처분소득 비중</b>		<b>(-)</b>		<b>-25.0</b>
-피용자보수	+	(-)	(-)	-5.2
-영업잉여	(-)	(-)	+	-16.2
-재산소득	+	(-)	+	-11.3
-순재산소득		(-)	+	-4.9
<b>소득 재분배</b>				
(정부부문)				
소득/부에 대한 경상세 수입		+	+	5.5
사회부담금 수입		+	+	4.2
사회수혜금 지출	+	+	+	5.7
기타 경상이전 지출	+	+	(-)	4.7
기타 경상이전 수입	+		+	0.1
기타 경상이전 순수입		(-)	+	-4.2
(가계부문)				
소득/부에 대한 경상세 지출			+	?
사회부담금 지출	+	+	+	4.8
사회수혜금 수입		+	+	4.4
기타 경상이전 지출	-	(-)	+	-2.1
기타 경상이전 수입		+	(-)	2.4
기타 경상이전 순수입	+	+	(-)	2.0

주: 1)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1.16%p(+0.35% → -0.81%) 하락하고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3.2%p(11.0% → 31.2%) 증가할 경우 분석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러나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이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되는 피용자보수, 영업이익, 이자·배당금·임료 등 재산소득과 같은 본원소득(primary income)은 조세·사회부담금·사회보장 수혜금·기타 경상이전 등 여러 형태로 경제주체 간에 재분배되고 이전되어 각 경제주체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최종적으로 이 소득이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최종소비지출)에 쓰이거나 저축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표 Ⅲ-3-14〉에 정리된 재분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사회부담금·사회보장 수혜금·기타 경상이전 등을 통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재분배에 따른 조세 및 사회부담금 부담이 사회수혜금보다 커 가계부문 소득이 본원소득 기준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감소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더욱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면 2008년의 경우 가계부문의 순본원소득(NNI)에서는 70.2%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순처분가능소득(NDI) 기준으로는 64.3%로 하락하였다.

실제로 OECD의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Income distribution - Inequality)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표 Ⅲ-3-15〉 및 [그림 Ⅲ-3-5]에서 보는 것처럼 고령인구의 소득분배 상황이 생산가능인구에 비해 훨씬 심각하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되며, 이에 대응하여 [그림 Ⅲ-3-6]과 같이 정부의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고령인구 비중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전체 인구 및 고령인구의 소득분배 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약한 편이다.

〈표 III-3-14〉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재분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정부부문)

종속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소득/부 경상세 수입	-0.314	-1.816	0.238	2.653	0.037	2.022	0.956
사회부담금 수입	0.249	1.421	0.180	3.485	0.078	5.190	0.983
사회수혜금 지출	<b>-0.824</b>	-4.923	0.204	8.106	0.038	5.916	0.976
기타 경상이전 지출	<b>-0.195</b>	-2.906	0.192	12.472	<b>-0.007</b>	-3.846	0.957
기타 경상이전 수입	<b>-0.056</b>	-2.277	-0.003	-0.362	0.011	8.207	0.941
기타 경상이전 순수입	0.077	1.788	<b>-0.182</b>	-9.196	0.019	6.578	0.904

(가계부문)

종속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소득/부 경상세 지출	-0.044	-0.450	0.030	0.590	0.055	4.307	0.971
사회부담금 지출	<b>-0.988</b>	-4.724	0.157	3.998	0.043	5.976	0.977
사회수혜금 수입	-0.281	-1.670	0.192	3.753	0.085	6.396	0.968
기타 경상이전 지출	0.216	3.372	<b>-0.081</b>	-7.246	0.025	18.423	0.962
기타 경상이전 수입	-0.050	-1.103	0.102	9.564	<b>-0.007</b>	-6.365	0.994
기타 경상이전 순수입	<b>-0.214</b>	-6.538	0.075	5.849	<b>-0.015</b>	-6.299	0.944

주: 1. 대상국가 및 분석기간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 8개국의 1970~2010년

2. 진한 글씨 및 음영은 각각 회귀계수가 (-) 및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 〈표 III-3-15〉 OECD 국가의 세전 및 세후 지니계수

## (1) 2000년대 중반 기준

	Total population			Working age population: 18~65세			Retirement age population: above 65		
	세전	세후	변동률	세전	세후	변동률	세전	세후	변동률
Australia	0.46	0.30	-34.8	0.42	0.31	-26.2	0.73	0.30	-58.9
Austria	0.43	0.27	-37.2	0.39	0.27	-30.8	0.77	0.28	-63.6
Belgium	0.49	0.27	-44.9	0.43	0.27	-37.2	0.86	0.24	-72.1
Canada	0.44	0.32	-27.3	0.41	0.32	-22.0	0.56	0.27	-51.8
Czech	0.47	0.27	-42.6	0.40	0.27	-32.5	0.87	0.20	-77.0
Denmark	0.42	0.23	-45.2	0.37	0.23	-37.8	0.68	0.20	-70.6
Finland	0.39	0.27	-30.8	0.38	0.27	-28.9	0.39	0.24	-38.5
France	0.48	0.28	-41.7	0.41	0.28	-31.7	0.82	0.31	-62.2
Germany	0.51	0.30	-41.2	0.43	0.30	-30.2	0.76	0.27	-64.5
Greece	n.a.	0.32	n.a.	n.a.	0.31	n.a.	n.a.	0.33	n.a.
Hungary	n.a.	0.29	n.a.	n.a.	0.30	n.a.	n.a.	0.22	n.a.
Iceland	0.37	0.28	-24.3	0.33	0.29	-12.1	0.70	0.24	-65.7
Ireland	0.42	0.33	-21.4	0.39	0.32	-17.9	0.51	0.28	-45.1
Italy	0.56	0.35	-37.5	0.49	0.35	-28.6	0.86	0.31	-64.0
Japan	0.44	0.32	-27.3	0.38	0.31	-18.4	0.68	0.34	-50.0
Korea	0.34	0.31	-8.8	0.32	0.30	-6.3	0.47	0.40	-14.9
Luxembourg	0.45	0.26	-42.2	0.40	0.26	-35.0	0.81	0.23	-71.6
Mexico	n.a.	0.47	n.a.	n.a.	0.47	n.a.	n.a.	0.56	n.a.
Netherlands	0.42	0.27	-35.7	0.39	0.27	-30.8	0.57	0.24	-57.9
New Zealand	0.47	0.34	-27.7	0.42	0.33	-21.4	0.72	0.23	-68.1
Norway	0.43	0.28	-34.9	0.39	0.28	-28.2	0.65	0.25	-61.5
Poland	0.57	0.37	-35.1	0.54	0.38	-29.6	0.85	0.28	-67.1
Portugal	0.54	0.38	-29.6	0.49	0.38	-22.4	0.49	0.38	-22.4
Slovak	0.46	0.27	-41.3	0.41	0.27	-34.1	0.88	0.20	-77.3
Spain	n.a.	0.32	n.a.	n.a.	0.31	n.a.	n.a.	0.31	n.a.
Sweden	0.43	0.23	-46.5	0.37	0.24	-35.1	0.64	0.22	-65.6
Switzerland	0.35	0.28	-20.0	0.31	0.27	-12.9	0.53	0.28	-47.2
Turkey	n.a.	0.43	n.a.	n.a.	0.42	n.a.	n.a.	0.37	n.a.
U. K.	0.46	0.34	-26.1	0.41	0.34	-17.1	0.60	0.27	-55.0
U. S. A.	0.46	0.38	-17.4	0.43	0.37	-14.0	0.60	0.40	-33.3
OECD Total	0.45	0.31	-31.1	0.40	0.31	-22.5	0.67	0.29	-56.7

주: 세후 지니계수는 조세 및 정부이전지출을 반영한 소득 기준.

(2) 세전 지니계수 변동 추이

(인구 전체)

	mid~70s	mid~80s	1990 전후	mid~90s	전후 2000	mid~2000s
Canada	0.38	0.40	0.40	0.43	0.44	0.44
Czech	..	..	..	0.44	0.47	0.47
Denmark	..	0.37	0.40	0.42	0.41	0.42
Finland	0.34	0.33	..	0.39	0.39	0.39
France	..	0.52	0.51	0.48	0.50	0.48
Germany	..	0.44	0.42	0.46	0.48	0.51
Italy	..	0.42	0.44	0.51	0.52	0.56
Japan	..	0.35	..	0.40	0.43	0.44
Netherlands	0.42	0.47	0.47	0.48	0.42	0.42
New Zealand	..	0.41	0.47	0.49	0.48	0.47
Norway	..	0.35	..	0.40	0.41	0.43
Portugal	0.46	..	0.44	0.49	0.48	0.54
Sweden	0.39	0.40	0.41	0.44	0.45	0.43
U. K.	0.36	0.44	0.46	0.48	0.48	0.46
U. S. A.	0.37	0.40	0.42	0.45	0.45	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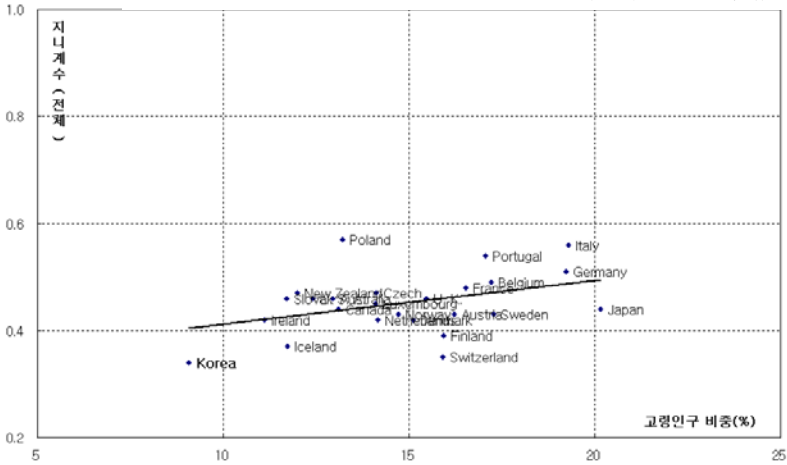
(65세 이상)

	mid~70s	mid~80s	1990 전후	mid~90s	전후 2000	mid~2000s
Canada	0.65	0.63	0.59	0.60	0.57	0.56
Czech	..	..	..	0.88	0.91	0.87
Denmark	..	0.70	0.71	0.71	0.70	0.68
Finland	0.59	0.50	..	0.43	0.41	0.39
France	..	1.07	0.99	0.85	0.85	0.82
Germany	..	0.83	0.78	0.78	0.78	0.76
Italy	..	0.36	0.34	0.77	0.80	0.86
Japan	..	0.50	..	0.61	0.65	0.68
Netherlands	0.68	0.67	0.66	0.63	0.60	0.57
New Zealand	..	0.70	0.68	0.71	0.72	0.72
Norway	..	0.65	..	0.65	0.61	0.65
Portugal	..	..	0.73	0.75	0.76	0.49
Sweden	0.76	0.71	0.72	0.60	0.65	0.64
U. K.	0.66	0.67	0.65	0.63	0.61	0.60
U. S. A.	0.56	0.56	0.58	0.59	0.59	0.60

[그림 III-3-5] OECD 국가의 세전 지니계수(2000년대 중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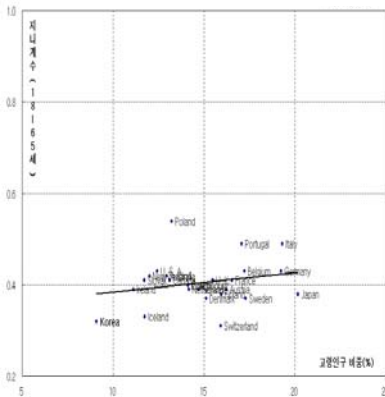
(전체 인구)

(단위: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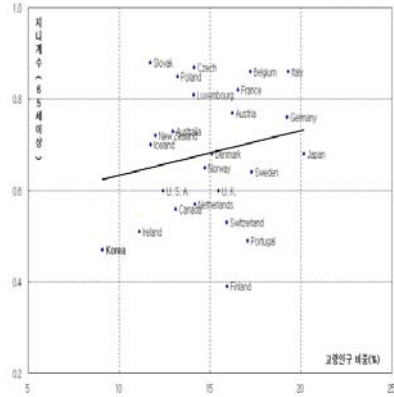
(18~65세)

(단위: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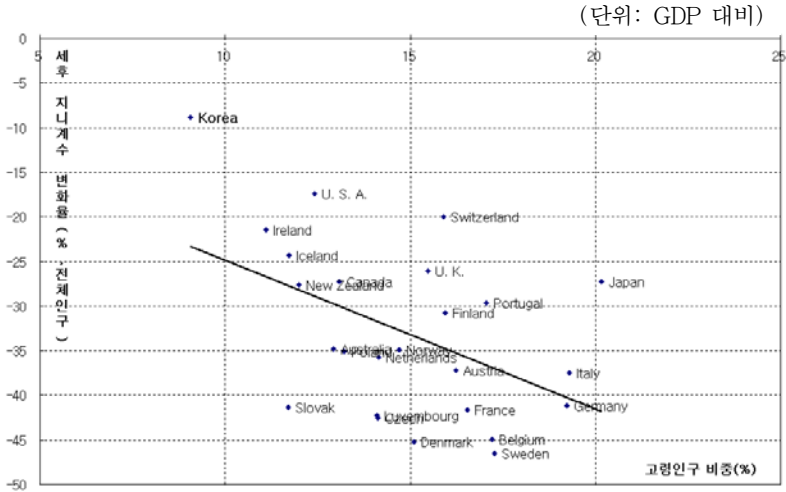


(65세 이상)

(단위: GDP 대비)



[그림 III-3-6] OECD 국가의 세후 지니계수 변화율  
(2000년대 중반 기준)



#### 다. 국민소득의 생산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OECD에서 발표하는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Main Aggregates』에 수록된 16개 대산업 부문별 GDP<sup>27)</sup>를 농림어업 (Agriculture, hunting and forestry, fishing), 광공업(Industry, including energy), 건설업(Construction), 도소매·음식숙박·교통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s, hotels and restaurants, transport), 금융·부동산(Financial intermediation, real estate, renting and business activities), 기타 서비스업(Other service activities) 등 6개 부문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산업구조(부가가치비중 = 해당 산업부문의 부가가치/전 부분의 부

27)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가가치<sup>28)</sup>×100)는 명목기준 부가가치로, 성장률 및 성장기여도(또는 기여율)는 실질기준 부가가치로 측정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 측면에서의 GDP구조 변화, 즉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한 <표 Ⅲ-3-16> 및 <표 Ⅲ-3-17>을 보면, 노동인력을 많이 필요한 산업인 농림어업 및 건설업, 그리고 금융·부동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도소매·음식숙박·교통 관련 산업과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의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산업별 성장기여도는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8) 참고로 산업별로 추계된 부가가치를 모두 더하면 전체 국내총생산(GDP)과 같지 않는데 이는 산업별 부가가치가 기초가격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총생산(시장가격)은 기초가격으로 평가된 산업별 부가가치의 합, 즉 총부가가치(GVA : gross value added)에 순생산물세(=생산물세 - 보조금)를 더해서 산출한다.

〈표 III-3-16〉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생산측면 산업구조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b>산업비중</b>							
농림어업	0.003	0.105	<b>-0.270</b>	-7.981	<b>-0.078</b>	-13.917	0.834
광공업	0.007	0.155	0.015	0.544	<b>-0.389</b>	-33.249	0.942
건설업	-0.022	-1.556	<b>-0.236</b>	-12.536	-0.005	-0.902	0.702
도소매, 음식숙박, 교통	0.016	1.828	0.117	5.000	<b>-0.059</b>	-9.440	0.853
금융·부동산	0.022	0.637	<b>-0.155</b>	-5.230	0.486	46.206	0.967
기타 서비스업	-0.066	-1.327	0.254	7.816	0.104	16.616	0.871
<b>성장기여도</b>							
농림어업	-0.001	-0.786	-0.002	-0.256	-0.002	-1.194	0.009
광공업	0.036	2.778	-0.060	-1.591	-0.023	-1.816	0.247
건설업	0.005	0.687	-0.021	-1.682	0.001	0.364	0.057
도소매, 음식숙박, 교통	0.041	6.244	<b>-0.099</b>	-4.138	0.002	0.218	0.311
금융·부동산	0.033	5.788	<b>-0.094</b>	-5.259	0.017	2.951	0.166
기타 서비스업	0.004	1.386	<b>-0.038</b>	-4.016	-0.003	-1.402	0.318

주: 1. 대상국가 및 분석기간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 8개국의 1970~2009년  
2. 진한 글씨 및 음영은 각각 회귀계수가 (-) 및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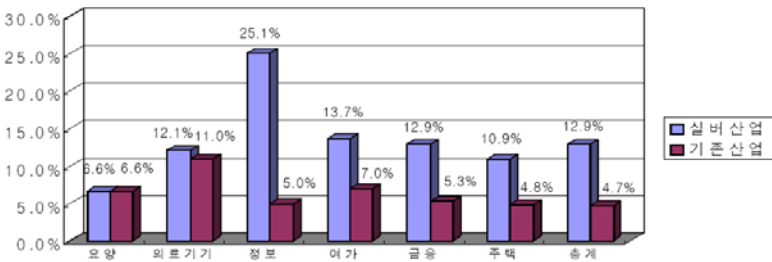
〈표 III-3-17〉 생산 및 산업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종속변수(비중, %)	인구증가율 하락	고령인구 비중 증가	1인당 소득 증가	인구구조 변화 반영 <sup>1)</sup>
농림어업		(-)	(-)	-6.3
광공업			(-)	
건설업		(-)		-5.5
도소매, 음식숙박, 교통		+	(-)	2.7
금융·부동산		(-)	+	-3.6
기타 서비스업		+	+	5.9

주: 1)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1.16%p(+0.35% → -0.81%) 하락하고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3.2%p(11.0% → 31.2%) 증가할 경우 분석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최근 대한상공회의소(2006)는 2008년을 전후해 은퇴노인 소비층이 늘어나면서 [그림 Ⅲ-2-7]과 같이 우리나라 실버산업<sup>29)</sup>이 오는 2010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2.9%로 기존 산업의 4.7%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에서도 고령친화산업<sup>30)</sup>의 매출액 기준 시장규모가 2002년 현재 12.8조원(명목GDP 대비 1.9% 수준)으로 추정하고, 2010년에 43.9조원, 2020년에는 148.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림 Ⅲ-3-7] 실버산업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0~2020년)



또한 Thiessen et al.(2008)은 54개국의 1970~2004년 데이터와 동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고령인구 비중 증가가 9개 산업별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표 Ⅲ-2-18>에서 보듯이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광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 및 금융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또 그는 [그림 Ⅲ-2-8]처럼 2050년까지 각 산업별 고용 비중을 전망해 보기도 하였다.

29) 요양, 의료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교육 등 14개 산업.

30)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통일된 분류체계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는 현재 고령친화산업을 14개 부문 34개 품목으로 구분하였다.

〈표 III-3-18〉 Thiessen et al.(2008)의 산업별 고용비중 실증분석  
 (Estimation results: the aging proxy - the share of elderly in total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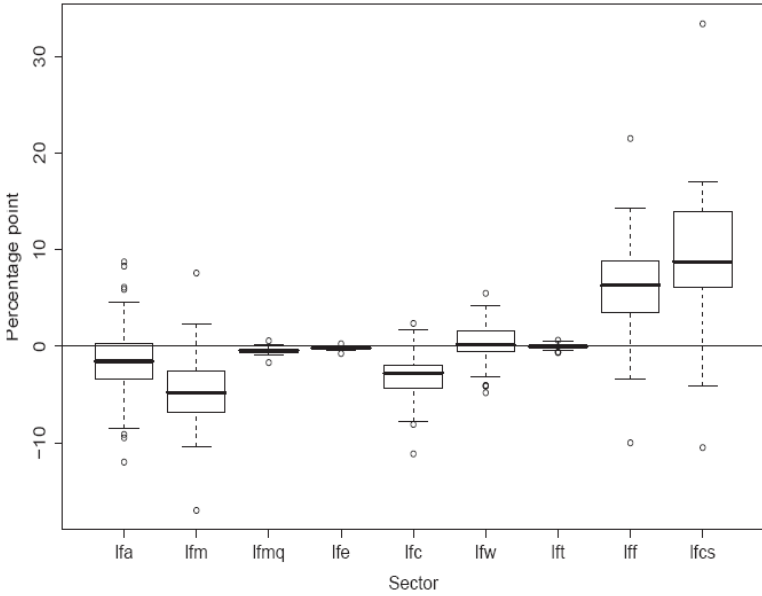
	$\Delta lfa$	$\Delta lfm$	$\Delta lfmq$	$\Delta lfe$	$\Delta lfc$	$\Delta lfw$	$\Delta lft$	$\Delta lff$	$\Delta lfcs$
Own lag	-0.146 *** (0.065)	-0.010 (0.037)	-0.025 (0.049)	-0.176 *** (0.052)	0.022 (0.054)	-0.090 * (0.050)	-0.158 ** (0.073)	-0.250 ** (0.118)	-0.128 (0.104)
$\Delta lgdppc$	-8.024 *** (1.790)	3.087 * (1.610)	0.209 (0.150)	-0.102 (0.127)	3.951 *** (0.830)	0.780 (1.126)	0.382 (0.472)	0.934 (0.602)	-1.413 (2.083)
$(\Delta lgdppc)^2$	3.774 (13.590)	-28.693 (36.680)	-1.588 (1.960)	0.257 (3.392)	-32.434 * (17.310)	11.024 (26.580)	4.013 (10.660)		-7.355 (22.830)
$\Delta tr$	0.018 * (0.009)	0.004 (0.008)	0.001 (0.001)	0.000 (0.001)	-0.001 (0.003)	-0.006 (0.005)	-0.001 (0.001)	0.002 (0.003)	0.003 (0.007)
$\Delta lpop$	-10.154 *** (2.873)	-2.674 (3.317)	0.055 (0.431)	0.017 (0.115)	4.169 * (2.256)	5.771 (4.488)	0.695 (1.044)	3.677 ** (1.702)	-1.588 (5.435)
$\Delta gcofdp$	-0.052 (0.039)	-0.002 (0.073)	0.009 (0.006)	0.001 (0.004)	-0.015 (0.025)	0.021 (0.030)	0.018 (0.015)	0.016 (0.022)	0.048 (0.047)
$\Delta xaxme$	0.046 (0.037)								
$\Delta age$	-0.688 ** (0.314)	-0.805 ** (0.336)	-0.063 *** (0.020)	-0.024 (0.025)	-0.239 ** (0.115)	0.321 (0.253)	0.032 (0.066)	0.831 *** (0.174)	1.077 *** (0.399)
$\bar{\sigma}$	1.332	1.020	0.139	0.198	0.460	0.693	0.290	0.498	1.050
N	50	51	51	51	51	51	51	51	51
$T_{max}$	28	28	28	28	28	28	28	27	28
$T_{min}$	3	3	3	3	3	3	3	3	3
Obs	825	862	861	862	862	862	862	852	862
Sargan	46.43 [1.000]	43.21 [1.000]	41.15 [1.000]	46.58 [1.000]	42.65 [1.000]	44.33 [1.000]	48.39 [1.000]	46.32 [1.000]	46.61 [1.000]
AR(1)	-2.38 [0.017]**	-2.15 [0.032]**	-2.67 [0.008]***	-3.90 [0.000]***	-4.00 [0.000]***	-3.54 [0.000]***	-3.58 [0.000]***	-1.97 [0.049]**	-2.26 [0.024]**
AR(2)	0.13 [0.900]	1.18 [0.239]	-0.43 [0.668]	-0.50 [0.619]	1.62 [0.105]	-1.01 [0.312]	0.61 [0.541]	-1.31 [0.189]	-1.02 [0.307]

The sectors are named as follows: agriculture (lfa), manufacturing (lfm), mining and quarrying (lfn), electricity, gas and water (lfo), construction (lfc), wholesale, retail trade, restaurants and hotels (lff), transport, storage, communication (lft), financial services, real estate and related services (lft), and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lfc).

Table entries are estimated coefficients with the corresponding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 and \* denote 1%, 5%, and 10% significance levels, respectively.

[그림 III-3-8] Thiessen et al.(2008)의 산업별 고용비중 전망  
(Difference between the base and alternative scenarios: %p, 2050)



주: agriculture (lfa), manufacturing (lfm), mining and quarrying (lfmq), electricity, gas and water (lfe), construction (lfc), wholesale, retail trade, restaurants and hotels (lfw), transport, storage, communication (lft), financial services, real estate and related services (lff), and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lfcs)

#### 4. 노동공급 및 수요

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는 국민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노동 시장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진다.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에서 비롯된 인구 감소는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노동공급의 규모 감소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연령구조의 변화는 각 연령그

롭별로 상이한 노동공급의 특성에 따라 전체 노동공급의 특성 또한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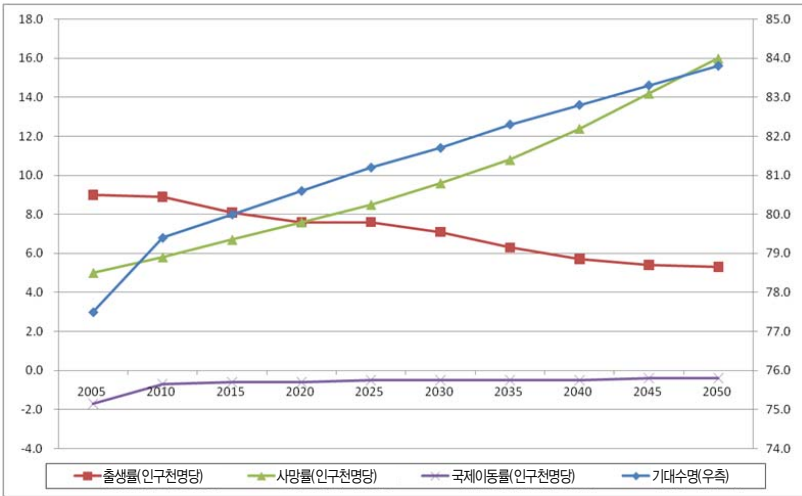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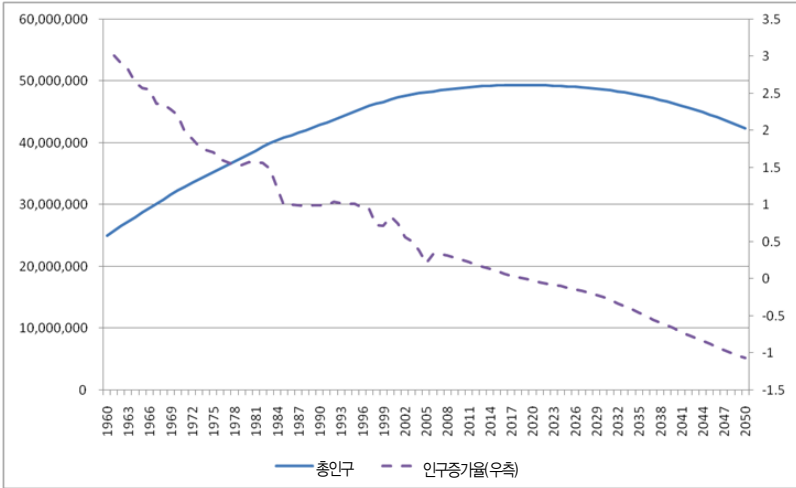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 공급을 통해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한편 노동 수요의 측면에서는 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각 산업이 필요한 노동 수요와 함께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의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노동시장 안에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양측의 변화가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가. 노동공급 측면

현재의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지만, 최근 이찬영(2011)에서는 '3S', 즉 노동력 부족(Shortage), 생산성 저하(Shrinkage), 그리고 세대간 일자리 경합(Struggle)으로 요약하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들이 기존의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지적되어 왔지만, 이 절에서는 노동자의 절대적인 수와 연령분포를 중심으로 그 영향을 살펴보자.

노동 공급과 관련되어 가장 먼저 살펴볼 측면은 노동인구의 수적 변화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1960년 2,501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899만명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어 2018년 4,934만명을 최고로 전체 인구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는 지속적인 출산율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2005년 인구 천명당 9명이었던 출산율이 2050년에는 5.3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증가율은 1960년 이후 전반적인 하향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내국인의 출생과 사망요인에 추가하여 인구의 국제이동도 작은 규모이지만 지속적으로 순유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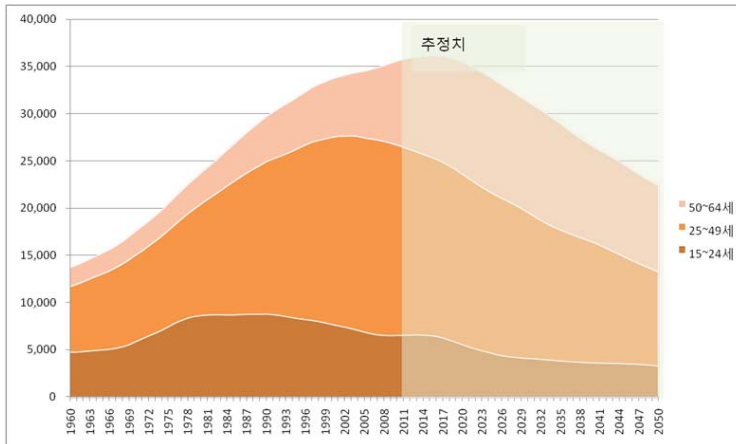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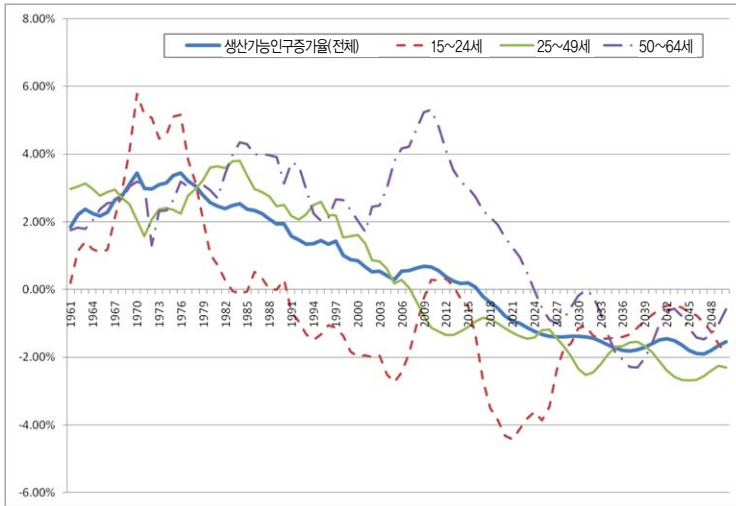
[그림 III-4-1] 인구구조변화 추이 및 전망



이렇게, 여러 인구 관련 지표들이 앞으로의 전반적인 인구 수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인구의 절대수 감소는 15~64세 인구의 생산가능인구의 전반적인 감소와 함께 경제활동인구 수로 대변되는 전체 노동공급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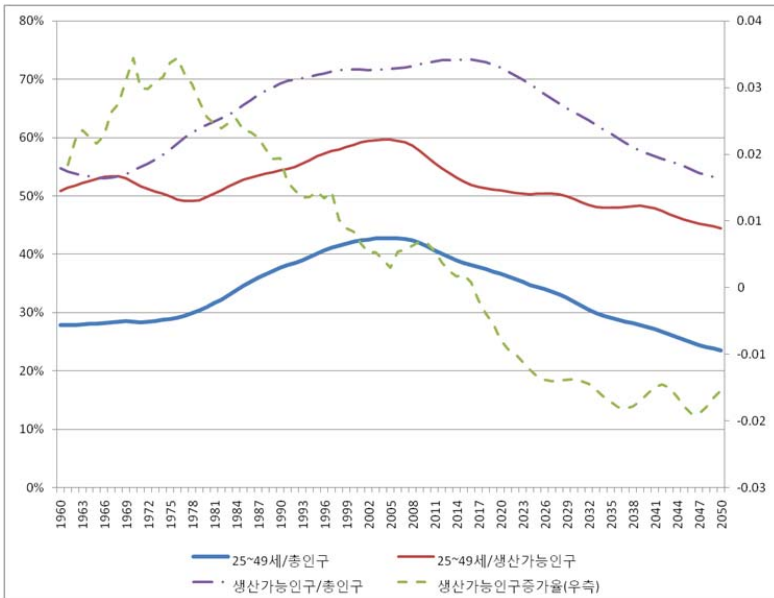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그 구성도 새로 진입하는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점차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III-4-2] 생산가능인구 추이 및 전망



더욱이, 핵심 생산가능인구라고 분류되는 25~49세 인구는 이미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15~24세의 향후 핵심 노동력으로 성장할 생산가능인구 집단은 출산율의 감소추세의 영향으로 더 빠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5세~24세 그룹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0년을 전후해서 몇 년간 잠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급속한 하락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Ⅲ-4-3] 인구구성변화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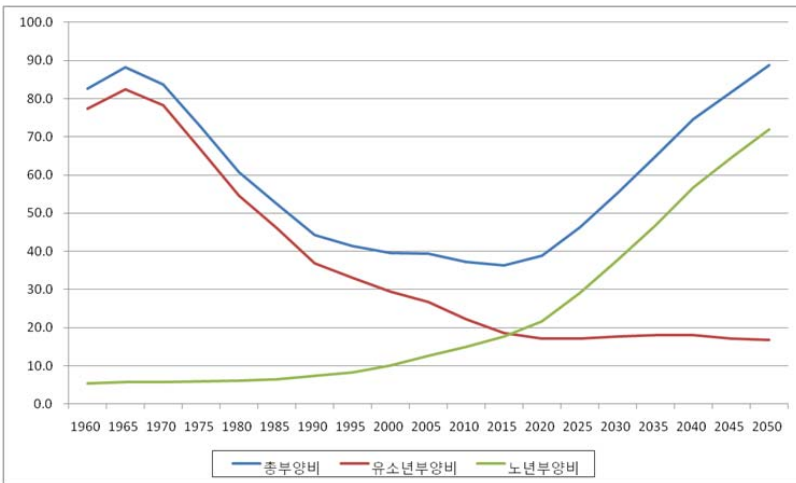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해 1990년대 초반 그 비중이 70%를 넘어섰고,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10년 72.9%, 2016년에는 73.4%를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더 빠른 감소세를 보이는 25~49세의 핵

십 생산인구의 총인구 대비 비율이나 생산가능인구 대비 비율은 이미 2004년에 각각 42.8%, 59.7%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동 공급에 있어 고령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동공급의 고령화는 전체 인구 중 비생산인구의 비중의 변화, 특히 노년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아래의 그림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대비 15세 미만 인구의 비중(유소년 부양비, Child Dependency Ratio),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노년 부양비, Old Age Dependency Ratio), 그리고 15세 미만과 65세 이상 인구를 합친 부양인구의 비중(총부양비, Total Dependency Ratio)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I-4-4]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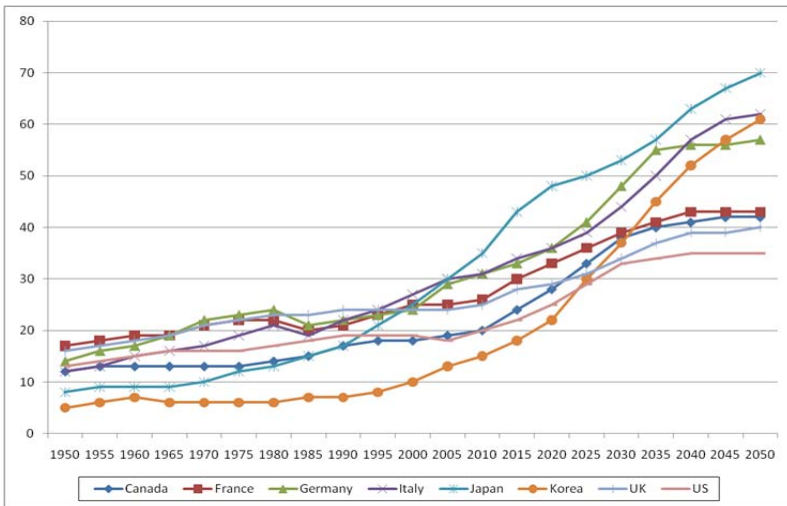


인구 구조상으로 기존의 높은 유소년 부양비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완만히 증가하여, 총부양비율은 1965년 88.3%에서 점차

낮아지면서 2015년에는 36.3%까지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노년부양비율의 증가로 총부양비율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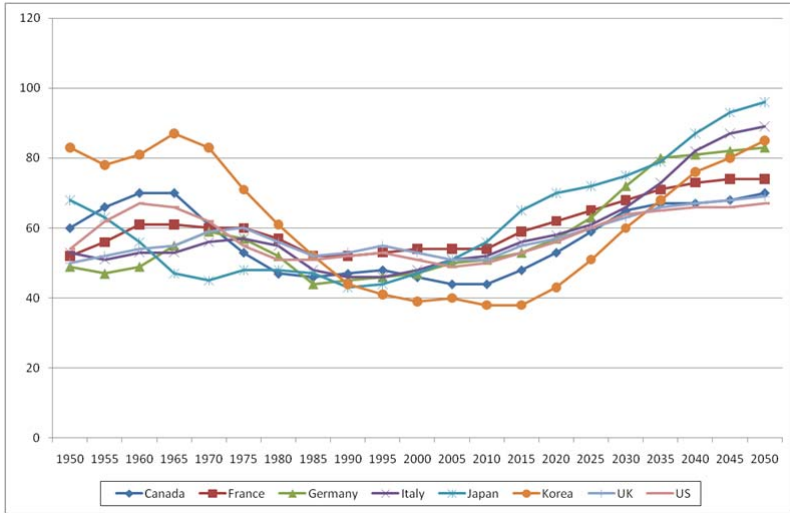
이러한 부양비율의 변화나 노년부양비율의 증가 추세는, 비록 정확한 시기나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G7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현상이다. UN의 인구추계자료를 살펴보면, G7국가들 모두 노년부양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일본, 이탈리아, 독일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높아서 2050년에는 60~70%의 높은 수준의 부양비율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sup>31)</sup>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빨라 노년부양비율도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수준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소년부양을 포함하는 총부양비율을 살펴봐도 G7국가에 비해 그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4-5] Old Age Dependency Ratio(UN)



31) 예측치의 경우 통계청의 자료와 UN의 자료 사이에 숫자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변화의 모양은 일치.

[그림 III-4-6] Total Dependency Ratio(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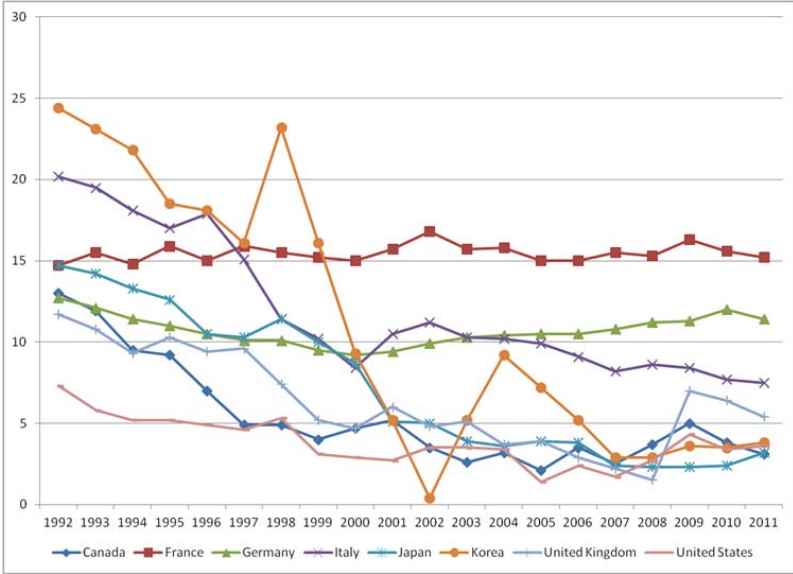


부양비율의 변화는 흔히 거시적으로 총저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적 요인으로 해석된다. 즉, 부양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음(-)의 순저축을, 반대로 부양을 하는 집단은 전체적으로 양(+)의 순저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령별 저축률 등의 기타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부양비율의 하락은 사회 전체적으로 양(+)의 순저축을 가져오고 이는 자산의 축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G7국가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영국의 저축률 하락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sup>32)</sup>. 한국의 경우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2000년대에 뚜렷한 저축률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행(2009)은 이러한 저축률 하락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피부양인구의 비중 증가뿐 아니라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출의 확대 등 경제·사회적 요인이 복합

32) De Serres and Pelgrin(2003)에서도 OECD 국가들의 개인저축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공공부문의 저축 증가, 인구 노령, 노동생산성 증가, 세 둔화, 교역조건 악화 및 실질금리 하락 등을 거론하고 있다.

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림 III-4-7]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저축률(OECD Factbook 2010)



이은미(2011)는 한국 가계저축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근로소득의 증가세 둔화, 사회부담금 확대,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저축률은 외환위기 이후와 카드 대란 이후로 두 번의 큰 폭 하락을 보이는데, 첫 번째 하락기에서는 사회부담금 확대에 의한 저축 필요성 감소와 가계소득의 하락이 큰 이유이고, 두 번째 하락기에서는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채 증가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저축의 상대적 투자유인 감소가 그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노동공급의 특성은 생산가능인구의 구성상 평균연령 수준의 증가에 따른 구성 변화뿐 아니라, 각 연령별 노동집단의 노동행태에 따라서도 그 특성이 변화하게 된다. 우선 노동행태 중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

###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129

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중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8~2018)』에 따르면 2018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상승세를 유지하는데, 특히 30세 이상 여성의 참가율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30세 미만의 청년층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뚜렷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III-4-1〉 연령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

	2008	2013	2018	연평균 증감분			
				'08~'13	'13~'18	'08~'18	
합계	61.37	60.99	62.14	-0.07	0.23	0.08	
남자	73.38	72.15	73	-0.25	0.17	-0.04	
	15~29세	43.68	39.46	39.24	-0.84	-0.04	-0.44
	30~44세	93.84	93.76	96.61	-0.02	0.57	0.28
	45~54세	91.79	91.13	92.76	-0.13	0.32	0.1
	55세 이상	59.79	59.95	62.26	0.03	0.46	0.25
여자	49.91	50.3	51.73	0.08	0.29	0.18	
	15~29세	45.48	44.05	42.75	-0.29	-0.26	-0.27
	30~44세	59.24	60.92	66.48	0.33	1.11	0.72
	45~54세	63.23	64.94	68.61	0.34	0.73	0.54
	55세 이상	33.77	35.81	38.02	0.41	0.44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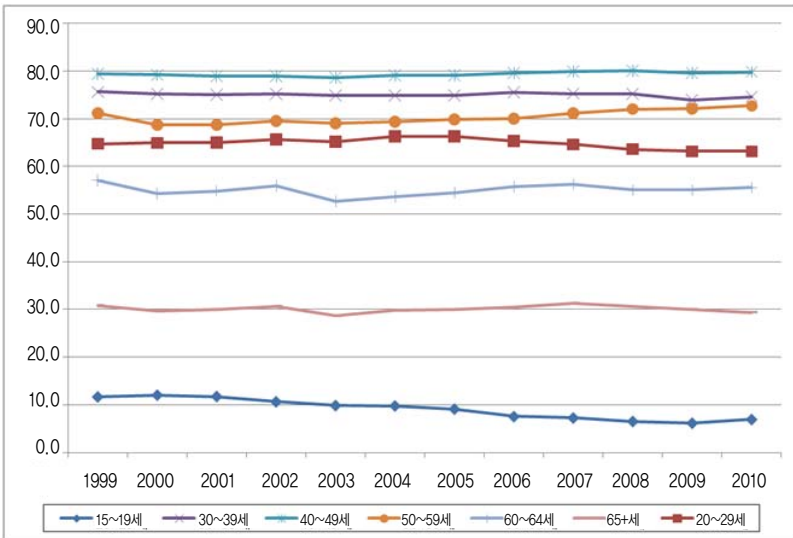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8~2018)』

지난 10여 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60%대 초반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나, 65세 이상 인구만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2007년 이후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는 여러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전방

적인 사회복지 혜택의 증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육체노동자들의 숙련된 기술에 대한 수요의 감소, 금융시장의 발달을 통한 은퇴를 위한 저축수준의 증가 등이 거론되고 있다(Dixon, 2003).

[그림 III-4-8]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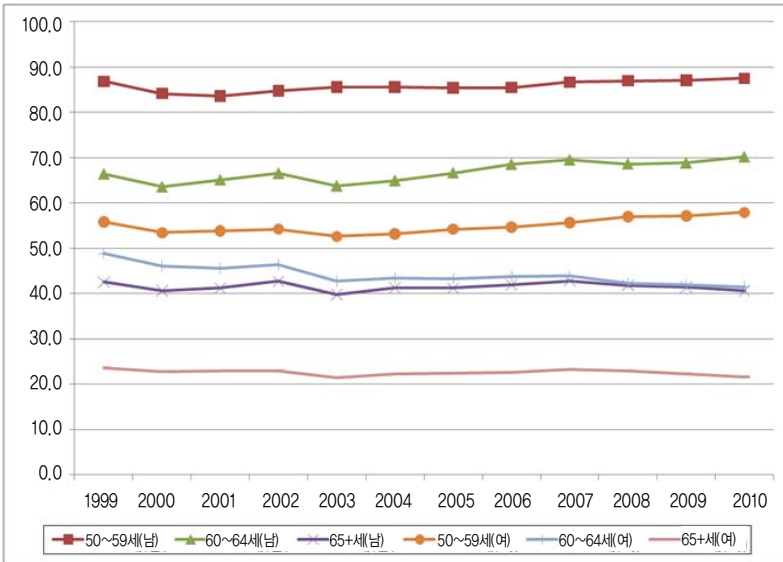
(단위: %)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미만 그룹에서 뚜렷한 하락세가, 50~59세 그룹에서는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003년 이후 상승하다가 2007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40대 노동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았고, 그다음을 30대가 따르고 있었으나, 50대 그룹의 장년층 노동자의 경제활동 증가로 30대와의 차이가 급격하게 좁혀지고 있다.

[그림 III-4-9] 50세 이상 그룹의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50세 이상 장년·고령 노동자 그룹들만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로 전체적인 하락이 있는 이후 성별·연령별로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50~59세 장년 남자그룹, 60~64세 고령 남자그룹과 50~59세 장년 여자그룹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60~64세 여자그룹의 경우는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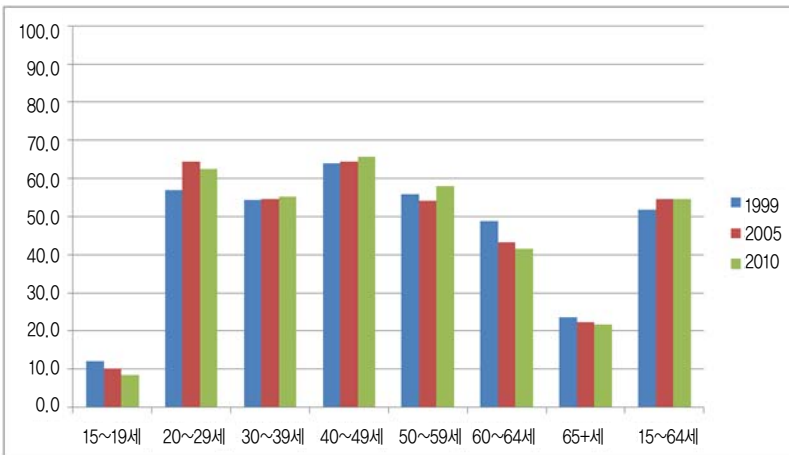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들의 구성이 변화하여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화하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의 참가자들의 본질적인 노동행태 변화에 따른 참가율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변화가 두드러진 시기인 2004~2007년 사이를 분석한 이시균(2007)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청년층에서는 주로 참가 성향의 변화가, 장년·고령자 층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적 구조의 변화가 그 주원인인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남성, 그리고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에 있어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참가 성향의 변화가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들 그룹들의 행태 변화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그림 III-4-10]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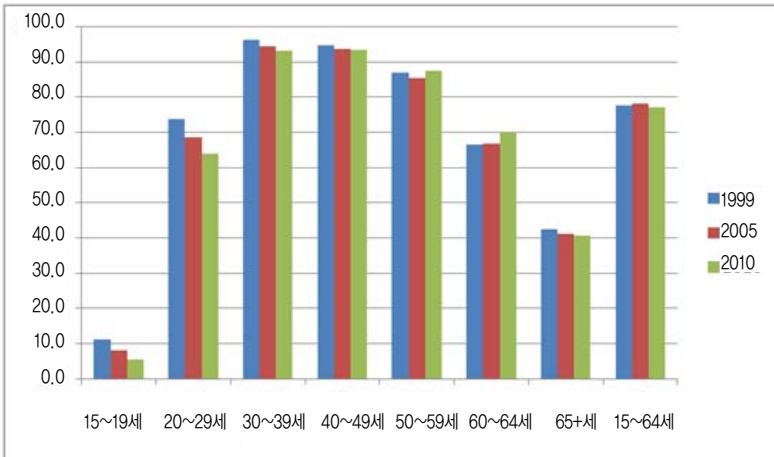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결혼·출산·육아의 효과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M자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형태는 지난 10여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15~19세 그룹과 60대 고령 여성노동자들의 경제활동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20대와 40대 여성 노동자들의 경제활동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여성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은 미약하게나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성의 경우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급격한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하락세가 30대 연령 그룹에서도 미약하게나마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년·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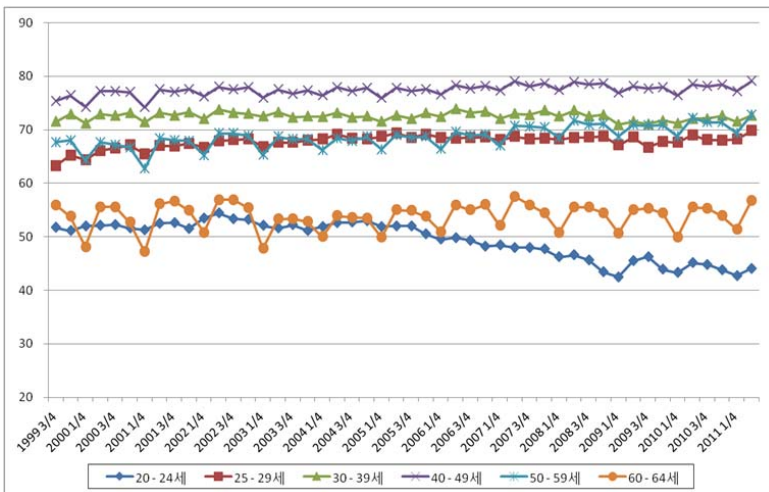
[그림 III-4-11] 연령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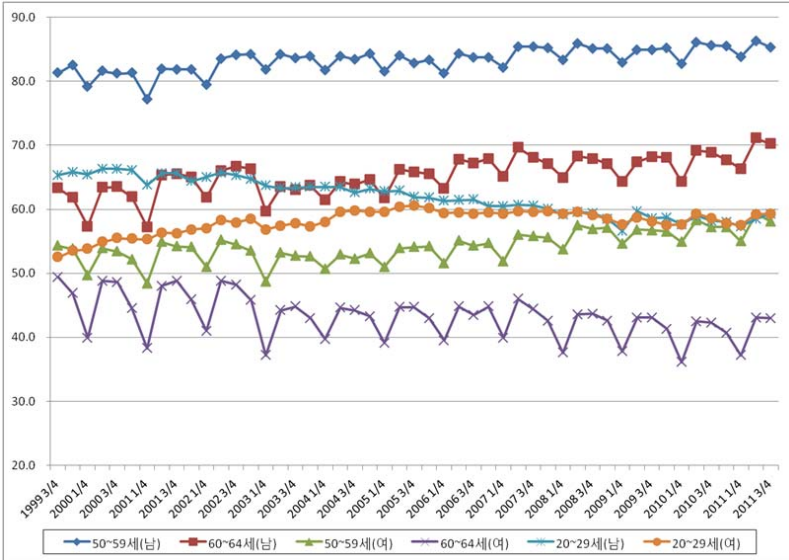
[그림 III-4-12] 연령그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그림 III-4-13] 성별 청년·장년·고령층 고용률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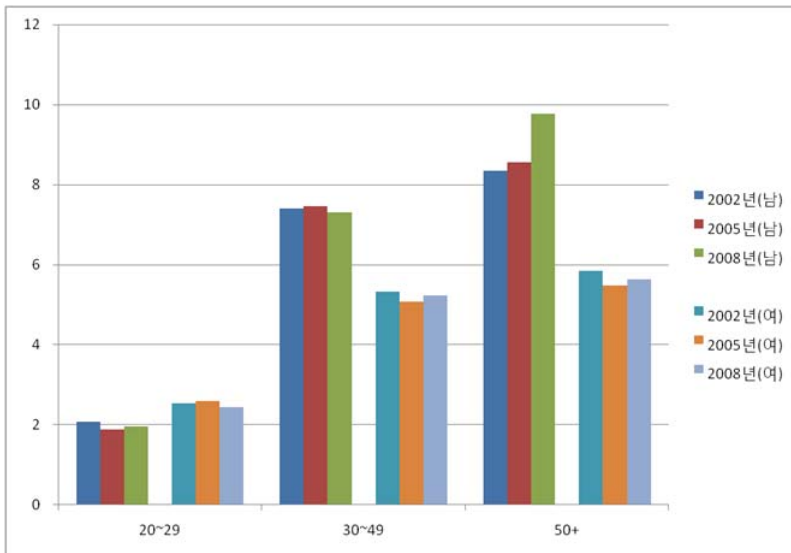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 이외에 생산가능인구 중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혹은 취업인구비율)을 살펴보면, 20~29세 남자와 여자의 상반된 고용률 변화 방향, 특히 남자 청년층 중 · 고등교육의 증가에 따른 20대 초반 남성들의 고용률 감소가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장년층에 있어 남녀 모두 고용률은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거나 고령의 60~64세 그룹에서는 남성은 증가세를, 여성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20대 남성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경제활동참가도 줄어들고, 고용률도 하락한 반면, 20대 여성 노동자들은 반대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경우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모두 남성은 꾸준한 상승세를, 여성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의 고령화는 노동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그 중 하나가 직업의 이동성이나 산업 내 회전율의 감

소를 들 수 있다. 고령 노동자들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이직의 확률이 작고, 실업의 확률도 낮으나, 일단 실업자가 되면 재취업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반면 젊은층의 노동자들은 직업과 직장을 바꾸는 빈도가 높아서, 노동자 그룹의 전체적 고령화는 전체적으로 근속기간의 증가와 실업률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Gregg & Wadsworth, 1999). 이러한 경향성은 우리나라의 자료에도 일부 보이고 있는데, [그림 III-4-14]에서 보듯이 남성에게 있어 50세 이상 장년·고령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I-4-14] 남성·여성 근로자의 연령그룹별 평균 근속연수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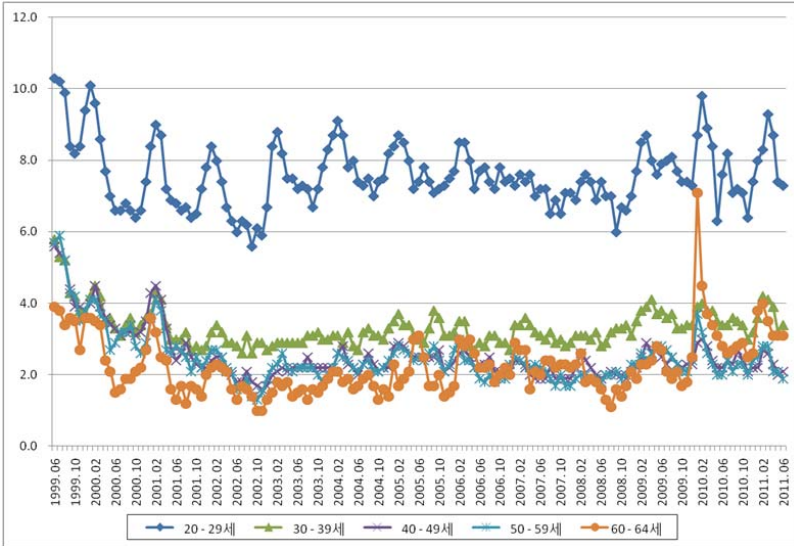


반면 다른 연령층이나 여성의 경우, 눈에 띄는 근속연수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도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간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장년·고령층 노동자의 실업률이 20대 청년층

에 비해 5%p 이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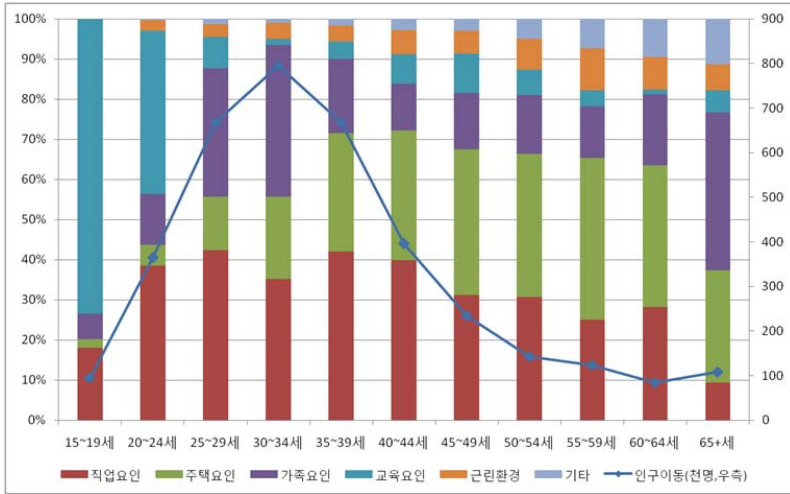
[그림 III-4-15] 연령 그룹별 실업률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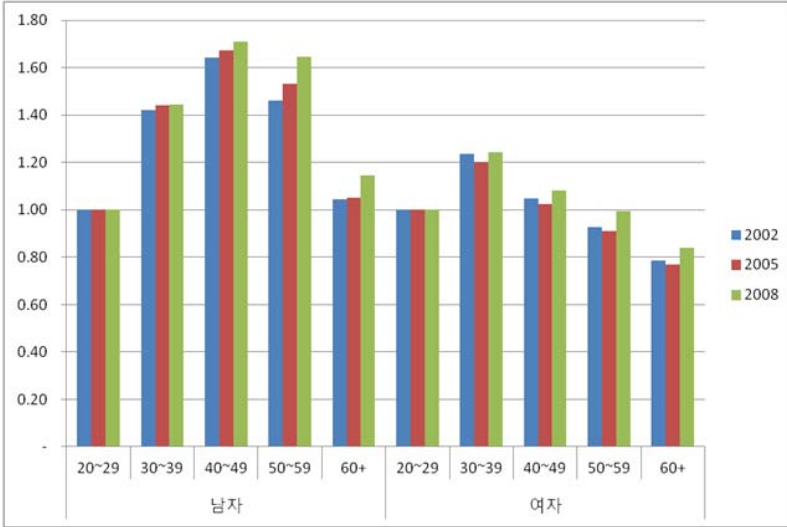
다만, 20대 실업률이 2000년대 초중반에는 졸업과 관련하여 뚜렷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사라졌고, 상대적 변동성 수준을 살펴보면,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변동지수는 오히려 장년·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III-4-16] 연령대별 이동요인(통계청)



이직 혹은 직업 관련 이동과 관련하여, 고령 노동자의 증가는 평균 근속년수의 증가뿐 아니라 직장 관련 지역적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Dixon, 2003). 통계청의 1997년 자료를 살펴보면, 조사 당시 최근 5년간의 지역 이동요인의 분석에서 [그림 III-4-16]에 나타난 것처럼, 지역 이동성 측면에서 30대, 특히 30대 초반 그룹이 가장 유동적인 측면을 보이고 그 다음이 20대 후반과 30대 후반, 그리고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이동 패턴에서 그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15~24세 그룹에서는 학업 관련 지역 이동이 주를 이루는 반면 그 이후 40대 초반까지는 주로 직업과 주택 요인, 그 이후에는 주택 관련 요인이 지역 이동의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30대 초반 그룹에서 직업요인과 가족요인을 정확하게 분리하여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자료에서도 직업 관련 지역 이동성의 문제에 있어, 문헌에 언급되는 연령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4-17] 연령그룹별 상대적 임금수준의 변화(20대=1)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를 설명하는 데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근속이나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임금방식이다. 이 연공임금방식은 외국에도 많은 예가 있어, 이 제도를 설명 혹은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에 많은 이론·실증 연구들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이 다양화되고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복잡해지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정규직에는 연공임금의 경향이 아직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황수경, 2004). [그림 Ⅲ-4-17]은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20대의 월평균임금을 1로 표준화했을 때 다른 연령대의 월평균임금의 상대적 크기를 3개 연도의 변화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황수경(2004)에서 보이는 것처럼, 연령과 임금은 전형적인 역U자 형태를 보이고, 특히 남자 노동자들의 경우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최근 들어 중년·장년·고령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 50대 임금노동자들의 상승이 두드러진다. 기존의 여러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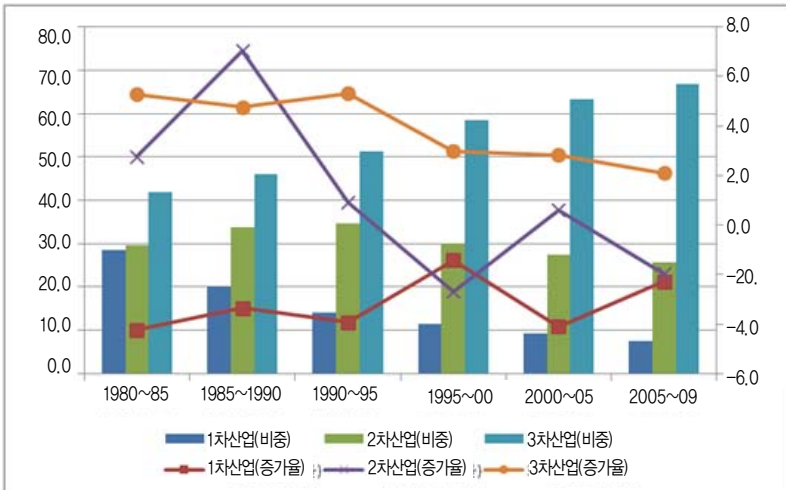
구(Johnson & Zimmermann, 1992; Disney, 1996)들이 노동자들의 평균연령의 증가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20대의 월 평균 임금이 2003~2008년 사이 남녀 각각 5.8%, 6.5%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상대적 임금수준의 상승은 향후 고령화되는 국내 노동시장에도 전반적인 임금수준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나. 노동수요 측면

노동시장의 상황변화는 국가경제 전반의 산업구조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1970~8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고속성장으로 제조업 중심의 고용 증가가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했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 사회가 급격한 탈공업화의 추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더불어 경공업을 중심으로 급격한 사양화가 이루어졌다(김종일, 2006).

[그림 III-4-18] 산업별 고용 비중과 증가율의 변화(OECD STAN Database)

(단위: %)



[그림 Ⅲ-4-18]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30여 년간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용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OECD의 자료<sup>33)</sup>에 의하면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과 '광공업'으로 대표되는 1차산업의 고용 비중이 1980년대 초반에는 28.5%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7.5%로 감소하고, 반면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그리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의 서비스 관련 3차산업의 비중은 1980년대 초반 42%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67% 수준까지 증가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80% 수준까지 빠르게 근접해 가고 있다. 증가율을 살펴보면 1차산업의 고용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2차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는 1990년대의 탈공업화를 겪으면서 확실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3차산업에서는 확실한 증가세를, 그러나 그 증가속도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33) OECD Structural Analysis(STAN) Database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141

〈표 III-4-2〉산업별 인력수요 전망(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08~2018)

(단위: 천명, %)

	2008	2013	2018	연평균 증감률		
				'08~'13	'13~'18	'08~'18
전 산업	23,577	24,525	25,659	0.8	0.9	0.8
A 농업, 임업 및 어업	1,686	1,495	1,244	-2.4	-3.6	-3.0
B 광업	23	25	27	2.2	1.2	1.7
C 제조업	3,963	3,800	3,763	-0.8	-0.2	-0.5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0	99	107	1.9	1.5	1.7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66	87	112	5.5	5.3	5.4
F 건설업	1,812	1,891	1,936	0.9	0.5	0.7
G 도매 및 소매업	3,631	3,514	3,307	-0.7	-1.2	-0.9
H 운수업	1,248	1,315	1,386	1.1	1.1	1.1
I 숙박 및 음식점업	2,044	1,989	1,968	-0.5	-0.2	-0.4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627	730	897	3.1	4.2	3.6
K 금융 및 보험업	821	912	1,047	2.1	2.8	2.5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489	513	529	1.0	0.6	0.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6	973	1,202	5.2	4.3	4.7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 비스업	974	1,313	1,760	6.2	6.0	6.1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0	904	933	1.5	0.6	1.1
P 교육 서비스업	1,784	1,945	2,015	1.7	0.7	1.2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42	1,068	1,377	4.9	5.2	5.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 비스업	419	478	557	2.7	3.1	2.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97	1,339	1,381	0.6	0.6	0.6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50	114	85	-5.2	-5.7	-5.5
U 국제 및 외국기관	16	19	26	2.8	6.4	4.6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 간 고용비중 변화의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08~2018』에 의하면 2008~2018년 10년간 연평균 전 산업에서 약 0.8%의 소폭 수요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산업별 수요전망에서는 산업 별로 향후 상당한 수요의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단일 부분으로는 전체 고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하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III-4-3〉 제조업 및 관련 지원사업의 인력수요 비중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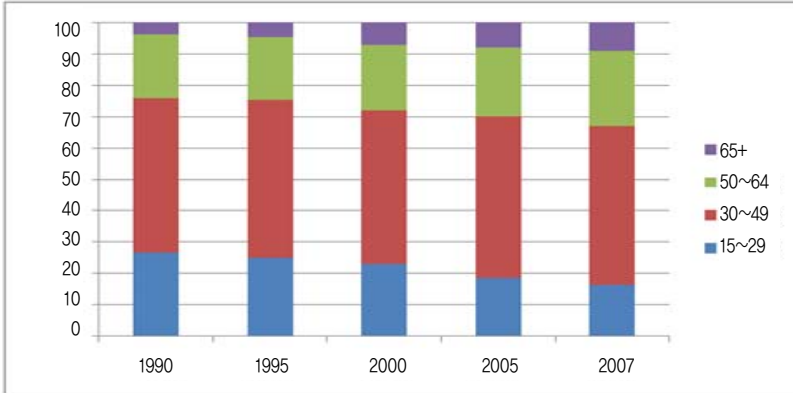
(단위: %)

연도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업	제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 + 사업시설관리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2003	18.3	2.2	0.3	20.5	20.8
2008	16.8	3.7	0.4	20.5	20.9
2013	15.5	4.7	0.6	20.2	20.8
2018	14.7	5.9	0.9	20.6	21.5

이러한 산업별 고용추세의 변화와 더불어 몇몇 산업에서 근로자의 연령분포에도 뚜렷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산업을 보았을 때 장년·고령 노동자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고학력화에 따라 젊은 청년층의 비중은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III-4-19] 전체 산업에서 근로자의 연령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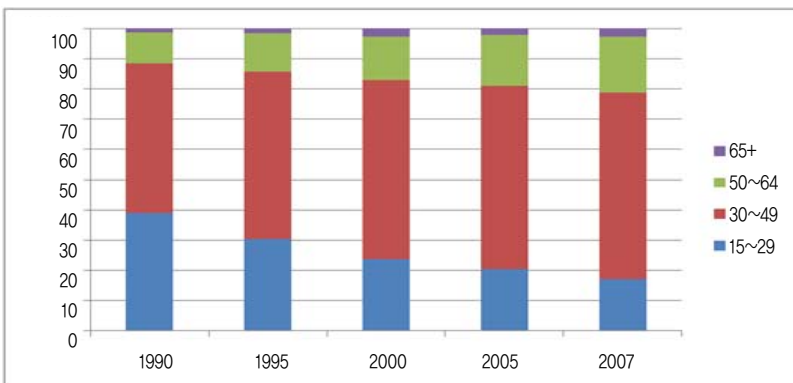
(단위: %)



여러 산업 중 특히 고령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으로 1990년에는 56%가 50대 이상이었으나 2007년에는 그 비율이 81%로 증가했다. 이는 산업 내 노동자들의 자연스런 고령화의 추세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전체 고용이 감소하는 중에 특히 청·장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III-4-20]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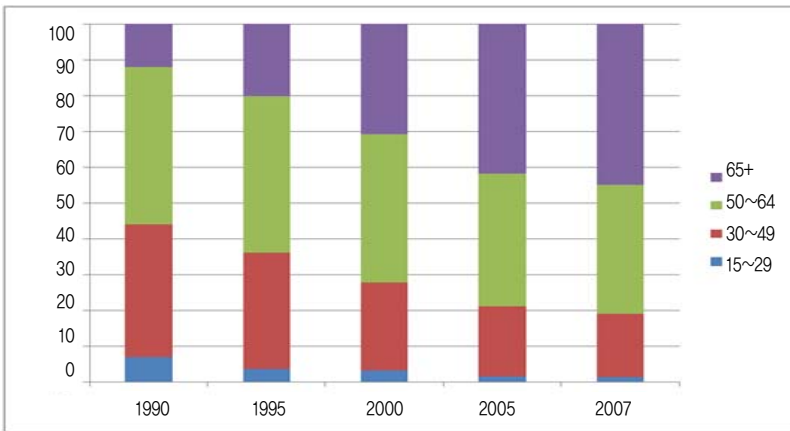
(단위: %)



제조업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탈공업화 추세에 따라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고용의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미 젊은층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동자의 고령화와 고용비중의 감소에도 고령 노동자의 비중 증가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I-4-21]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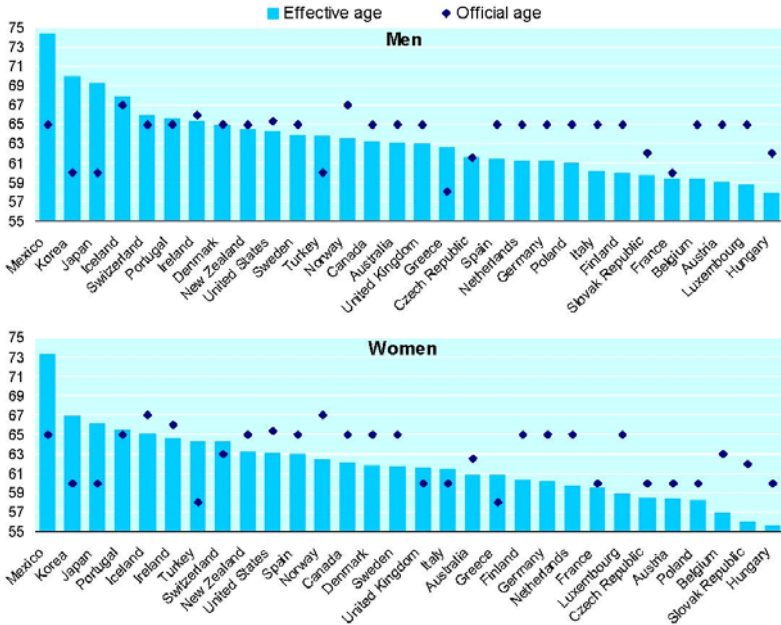
(단위: %)



건설업의 경우도 비슷한 연령분포 변화를 보이는데, 제조업의 고용 감소와는 달리 1990년대 이후 부동산경기의 꾸준한 호황으로 지난 20여년간 연평균 1% 이상의 꾸준한 고용 증가세를 유지해 왔지만, 연령별 비중 변화는 제조업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에 정년제가 도입된 것은 1950년대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 산업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88년에는 약 93%의 기업이 정년제를 도입했으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면서 2002년 노동연구원의 조사자료에는 64.4%의 기업만이 정년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방하남 외, 2005).

[그림 III-4-22] OECD 국가들의 은퇴연령(OECD, 2006)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은퇴연령은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 중에 높은 편이나,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의 비중 때문이고, 중·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는 50대 중반으로 나타나고 있다(장지연, 2007).

OECD(2006)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은퇴연령(effective retirement age)<sup>34)</sup>는 남자의 경우 70세에 가깝고 여자의 경우 60세에 가까워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를 제외한 사업장 중 단일정년제 채택 사업장들을 조사한 결과, 평균정년은 2006년에는 56.93세,

34) 반면 공식 은퇴연령(Official Retirement Age)은 2004년 기준으로 추가적인 납입 없이 공적연금을 전부 수령할 수 있는 법적 최소연령을 의미한다.

2010년에는 57.35세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업종별로 볼 때 점차 고용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농림어업이나 광업, 제조업 등에서 정년의 감소가, 고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정년의 증가가 나타나는 추세로, 미래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점진적인 정년의 연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III-4-4〉 업종별 평균정년(통계청)

(단위: 세)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업종별	56.93	56.95	57.14	57.18	57.35
농림어업	-	-	57.00	55.00	55.00
광업	57.71	58.50	58.33	58.50	58.30
제조업	56.54	56.60	56.69	56.76	56.88
전기가스수도업	58.00	57.78	57.62	58.00	58.15
건설업	56.21	56.48	56.62	56.68	56.51
도매 및 소매업	56.26	56.09	56.34	56.52	56.63
숙박 및 음식점업	56.59	56.33	56.46	56.04	56.31
운수업	58.27	58.71	58.91	58.80	58.74
통신업	57.19	56.75	57.29	57.48	57.23
금융 및 보험업	56.73	56.66	56.66	56.68	56.57
부동산 및 임대업	58.40	58.43	59.36	59.07	59.33
기타서비스업	57.49	57.56	57.81	57.68	5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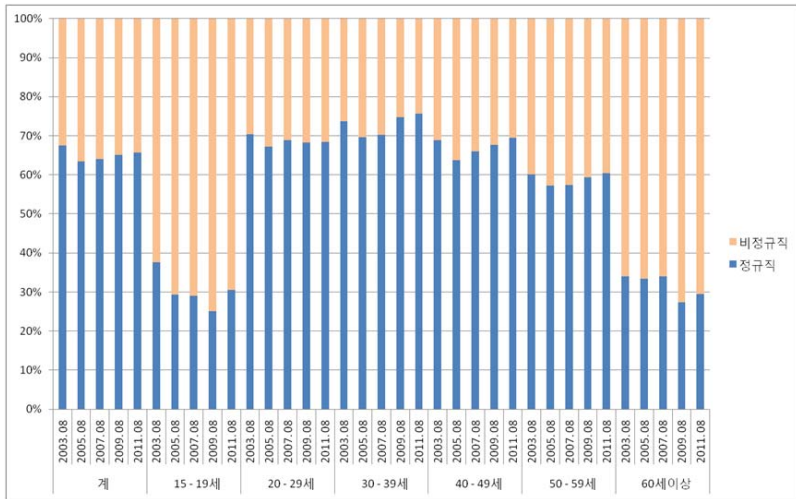
〈표 III-4-5〉 55세 이상 인구의 근로형태 분포(장지연, 2007)

(단위: %)

	55~59세	60~69세	70+세	전체
100인 이상 기업 정규직 근로자	14.5	4.8	0.3	5.8
100인 이하 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23.9	20.2	7.8	17.1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36.2	36.7	25.3	32.8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25.5	38.3	66.6	44.3
전체	100	100	100	100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노동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고용형태를 전환해 가며 고용을 유지하는 부분은퇴(partial retirement)의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방하남 외, 2005). 장지연(2007)은 2005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중·고령자 부가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50대 이후 근로자들이 빠르게 비정규직과 자영업,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 III-4-23] 임금근로자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통계청)



결국 중년·고령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주로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년·장년층에서 정규직의 비율이 늘어가는 것과는 다르게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최근 들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70%가 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체적으로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3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5. 가계소득 및 지출구조

인구구조 변화는 근로계층과 피부양계층의 상대적 비율을 변화시켜 전체 소비패턴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총수요의 구조에 영향을 준다.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자가 선호하는 소비가 증가하고 기피하는 소비는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소비구조 변화가 경제구조, 나아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버산업의 성장률이 전체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본절에서는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비중 증가가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가. 연령별 소득구조

우선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구조가 가구주 연령대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 보았다. 이용 자료는 통계청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의 1982~2007년 원시자료 및 2003~2010년 집계표, 『가구소비실태조사』의 1991년 1996년 2000년(2인 이상 가구) 원시자료 및 집계표(2인 이상 및 도시가구 기준) 등의 데이터이다. 참고로 『도시가계조사』에 포함된 소득 및 가계지출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처분가능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
  
- 가계지출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 소비지출(구기준은 10대 분류, 1964~2008년) = 식료품 + 주거 + 광열·수도 + 가구집기가사용품 + 의류·신발 + 보건 의료 + 교육 + 교양오락 + 교통·통신 + 기타소비지출

### Ⅲ.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149

- 소비지출(신기준은 2003~현재) = 식료품·비주류음료 + 주류·담배 + 의류·신발 + 주거·수도·광열 + 가정용품·가사서비스 + 보건 + 교통 + 통신 + 오락·문화 + 교육 + 음식·숙박 + 기타 상품·서비스

○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

[그림 Ⅲ-5-1]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998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50~59세 가구 및 60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5-2]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경우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이후 4%p 이상 증가하였지만 대체로 60% 내외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소득의 비중이 하락하는 반면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만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소득 비중이 40%대에서 변동이 다소 큰 반면, 최근으로 올수록 사업소득 비중은 낮아지고 이전소득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8년을 정점으로 평균 가구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45~54세 가구의 소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74세 가구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5~64세 가구 및 7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의 경우에는 별다른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Ⅲ-5-1〉에 정리된 가계의 연령별 소득구성 차이를 종합해 보면 39세 이하 가구는 사업소득의 비중이 낮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 60세 이상 가구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고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다만 근로자 외 가구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아졌다. 일본의 경우 가구주 연령별 가계조사

데이터를 입수할 수 없었다. 또한 <표 Ⅲ-5-2>에 정리된 2009년 재정 패널 데이터에 나타난 가구주 연령별 주요 소득항목의 분포를 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같이 주로 노동공급의 대가로 수취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최고점을 나타내는 연령대가 주로 40대 후반~50대 초반에서 형성된다. 반면에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 등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평균적인 규모가 더 커져서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최고 수준을 나타낸다.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연령대는 60대 초반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의 수령연령이 주로 60세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에 비해 60대 초반가구의 사회보험 수혜규모가 더 큰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기간이 짧아 노인들 중에서 국민연금 등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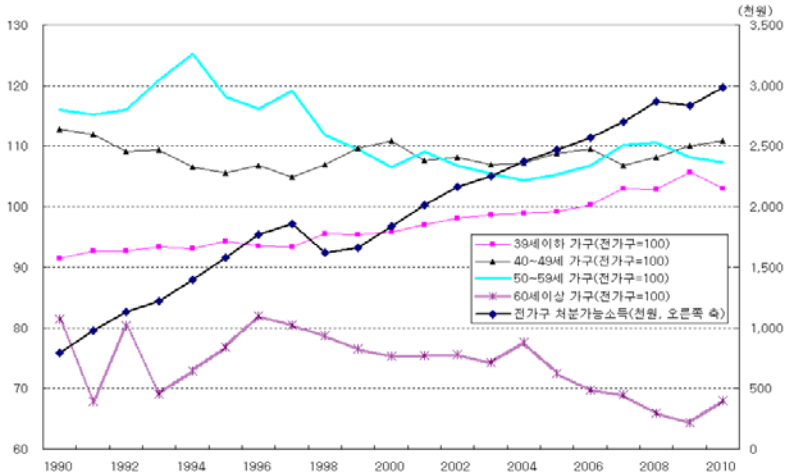
한편, OECD의 2005년 보고서<sup>35)</sup>에 따르면 고령자가구의 가처분소득 구조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그림 Ⅲ-5-3]에서 보듯이 일본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매우 높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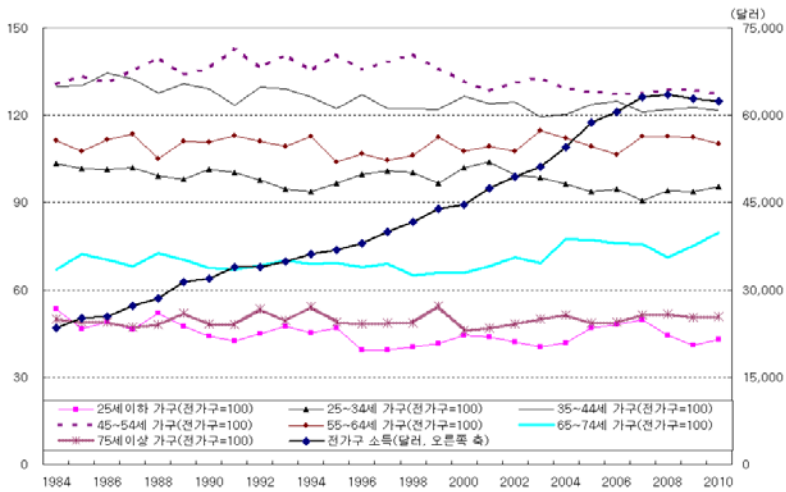
35) Martins et al.(2005)

[그림 Ⅲ-5-1] 한·미 가계의 연령대별 소득 추이

(1)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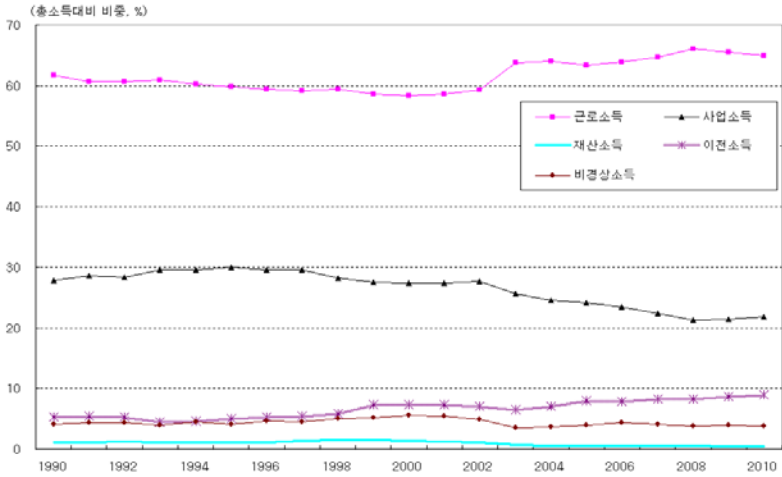


(2)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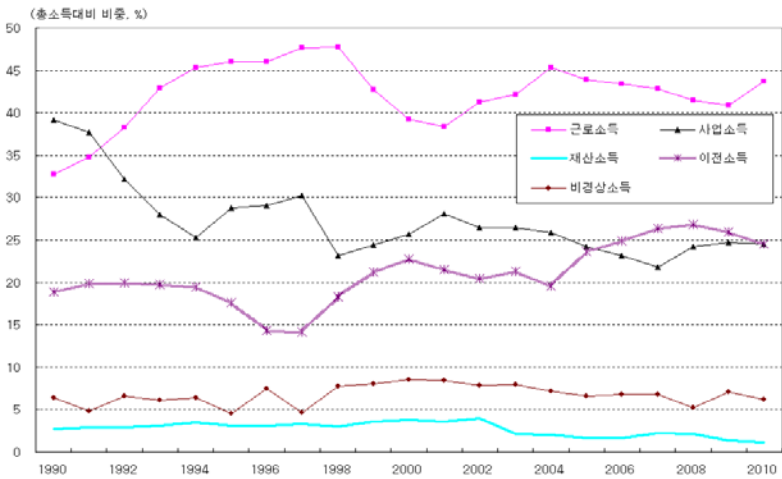


[그림 III-5-2]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구성 추이

(1) 전체 가구



(2) 60세 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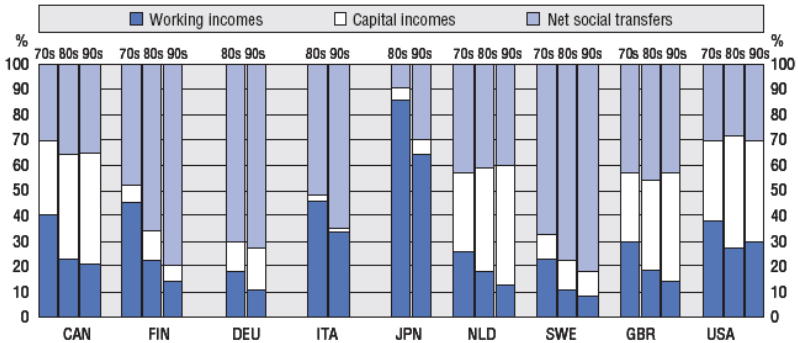


〈표 III-5-1〉 우리나라 가계의 연령별 소득구성

(단위: 비중, %)

		전체 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전체 가구	근로소득	61.7	58.4	65.0	85.3	83.3	86.8	11.3	19.0	22.4
	사업소득	27.8	27.4	21.8	5.6	6.4	4.4	75.1	60.8	55.8
	재산소득	1.1	1.3	0.4	1.0	0.9	0.3	1.4	2.1	0.6
	이전소득	5.2	7.3	8.9	3.6	3.5	5.3	8.9	13.3	16.0
	비경상소득	4.1	5.5	3.9	4.5	6.0	3.2	3.3	4.8	5.2
39세 이하 가구	근로소득	66.4	65.6	75.0	85.4	85.1	87.7	10.4	15.3	16.3
	사업소득	23.2	23.0	14.2	4.7	4.6	3.5	77.5	70.7	63.7
	재산소득	0.7	0.6	0.2	0.7	0.5	0.2	0.6	1.0	0.2
	이전소득	5.1	5.4	6.8	4.0	3.7	4.9	8.2	9.9	15.9
	비경상소득	4.6	5.2	3.8	5.1	6.0	3.7	3.3	3.1	4.0
40~49세 가구	근로소득	57.9	55.8	65.6	87.0	82.8	89.2	7.5	15.4	14.5
	사업소득	33.4	32.0	23.8	5.9	7.0	3.8	80.9	69.4	67.3
	재산소득	1.5	1.2	0.2	1.6	1.2	0.3	1.5	1.3	0.2
	이전소득	4.2	5.9	7.2	2.1	2.8	4.8	7.7	10.5	12.6
	비경상소득	3.0	5.0	3.1	3.4	6.1	2.0	2.4	3.4	5.4
50~59세 가구	근로소득	58.9	57.4	65.0	84.6	81.7	86.5	20.2	26.5	31.6
	사업소득	29.8	28.8	25.1	7.0	8.4	5.5	64.0	54.8	55.5
	재산소득	1.5	1.8	0.5	0.9	1.3	0.6	2.3	2.5	0.3
	이전소득	5.6	6.3	5.6	3.6	2.9	4.0	8.5	10.6	8.1
	비경상소득	4.3	5.7	3.9	4.0	5.8	3.4	4.9	5.6	4.6
60세 이상 가구	근로소득	32.7	39.2	43.7	57.9	75.5	71.9	14.0	22.0	26.3
	사업소득	39.2	25.7	24.5	21.6	10.3	7.9	52.3	33.0	34.8
	재산소득	2.8	3.8	1.2	0.6	0.7	0.3	4.4	5.3	1.7
	이전소득	18.9	22.8	24.5	12.0	8.2	14.2	24.1	29.7	30.8
	비경상소득	6.4	8.5	6.2	8.0	5.3	5.7	5.2	10.0	6.4

〔그림 III-5-3〕 선진국 고령자가구의 가처분소득 구조



출처: OECD questionnaire on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s(1999). OECD (2001)에서 재인용

〈표 III-5-2〉 재정패널자료의 연령별 주요 소득항목의 분포

(단위: 만원)

	24세 이하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평균
근로소득											
2007	956	2,263	2,828	2,892	2,814	2,566	2,454	1,840	1,127	363	2,110
2008	793	2,230	2,847	2,839	2,887	2,498	2,681	1,970	1,307	339	2,142
2009	1,490	2,316	2,769	3,186	2,860	2,912	2,785	2,138	1,356	372	2,282
사업소득											
2007	267	288	609	986	1,306	1,307	1,148	1,007	703	290	870
2008	62	126	472	864	1,023	1,271	1,126	701	559	261	747
2009	264	196	489	790	1,148	1,129	1,163	1,015	561	290	783
부동산임대소득											
2007	0	1	9	29	34	93	58	83	190	88	61
2008	0	15	11	65	50	52	83	80	122	92	63
2009	0	29	10	67	54	48	99	90	134	122	74
이자배당소득											
2007	0	1	22	15	20	44	13	27	17	23	21
2008	0	1	19	17	29	27	19	38	40	17	22
2009	0	0	5	23	6	21	16	41	40	30	20
기타소득											
2007	383	149	115	76	72	81	178	262	294	353	174
2008	184	194	127	97	98	140	158	201	260	406	189
2009	144	79	117	86	151	140	134	157	235	380	176
사회보험											
2007	0	7	7	8	22	14	59	82	200	173	61
2008	5	10	30	11	20	14	45	147	274	192	75
2009	8	17	11	14	37	25	41	101	313	184	76
민간보험											
2007	1	2	9	5	8	11	6	28	17	6	9
2008	0	5	4	8	10	29	26	16	55	11	17
2009	0	9	13	12	14	12	6	34	29	16	15

주: 음영 처리는 가장 높은 수치의 연령대를 표시  
출처: 성명재(2011)

## 나. 연령별 소비구조

우선 한국, 미국, 일본의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구조가 가구 연령대별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았다. 한국은 『가구소비실태조사』(1991년, 1996년, 2000년)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가계수지(2인 이상 가구) 집계표를, 미국은 노동성(Bureau of Labor Statistics : BLS)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는 『Consumer Expenditure Survey』 1984~2010년 집계통계<sup>36)</sup>를, 일본은 총무성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는 『가계조사』 2000~2007년 집계통계(2인 이상) 및 2002~2010년 집계통계(전세대, 농림어가세대 제외)<sup>37)</sup>를 이용하였다. 이들 3개국의 공통연도는 1991년, 2000년, 2007년 등 3개년이다. 한·미·일 3개국의 가장 최근 공통연도인 2000년 및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연령대별(~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로 분석대상 변수들을 비교해 보았다.

〈표 III-5-3〉에 정리된 결과를 보면, 평균적인 가구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가계는 식료품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미국 가계는 주거광열비 비중이 가장 높다. 일본의 보건의료비와 교통통신비 비중이 미국의 절반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양국의 중간 정도이다. 반면 일본의 교양오락비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에 따른 소비패턴이 한·미·일 3개국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식료품(미국 제외), 주택 관련 주거·광열·보건 관련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오락·문화(일본 제외), 교육, 교통·통신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이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36) [www.bls.gov/cex/](http://www.bls.gov/cex/)

37) [www.stat.go.jp/data/kakei/index.htm](http://www.stat.go.jp/data/kakei/index.htm) 및 [http://www.e-stat.go.jp/SG1/estat/GL08020102.do?\\_toGL08020102\\_&tclassID=000000330001&cycleCode=7&requestSender=dsearch](http://www.e-stat.go.jp/SG1/estat/GL08020102.do?_toGL08020102_&tclassID=000000330001&cycleCode=7&requestSender=dsearch)

〈표 Ⅲ-5-3〉 한·미·일의 가구소비 구조 비교(2인 이상 가구, 2000년)

## (1)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평균	25세 미만	25 ~34세	35~ 44세	45~ 54세	55~ 64세	65세 이상
한 국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5.2	23.8	25.5	25.3	23.9	26.2	28.2
주거광열비	10.2	11.3	10.1	10.0	9.5	10.9	13.5
가구집기가사용품비	5.1	5.2	7.0	5.2	4.3	4.9	4.8
피복신발비	5.7	7.3	6.2	5.5	5.5	5.9	5.4
보건의료비	4.5	2.7	4.2	3.7	4.2	5.8	9.6
교육비	12.8	16.4	6.5	15.6	16.3	6.5	4.1
교양오락비	5.1	6.6	5.8	5.4	4.6	4.4	4.0
교통·통신비	17.1	15.9	20.6	16.5	17.4	16.6	13.0
기타 소비지출	14.4	10.8	14.1	12.8	14.2	19.0	17.3
미 국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5.4	15.2	15.2	15.4	15.8	15.1	15.4
주거광열비	27.5	25.4	29.0	28.6	26.0	25.1	29.4
가구집기가사용품비	4.6	4.1	4.3	4.8	4.8	5.5	3.7
피복신발비	5.5	6.7	5.9	5.9	6.0	5.0	3.9
보건의료비	6.2	2.4	3.6	4.5	5.5	7.3	13.7
교육비	1.9	5.9	1.7	1.6	2.9	1.1	0.5
교양오락비	5.6	5.2	5.4	6.2	5.6	5.7	4.5
교통·통신비	22.1	24.5	24.1	22.0	22.2	22.9	18.5
기타 소비지출	11.1	10.5	10.8	11.1	11.3	12.2	10.5
일 본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3.3	17.5	20.3	24.3	22.2	23.3	25.5
주거광열비	13.3	26.3	19.2	13.6	10.6	12.6	15.2
가구집기가사용품비	3.5	3.5	3.2	3.3	3.2	3.6	4.1
피복신발비	5.1	4.3	4.8	5.4	5.2	5.2	4.7
보건의료비	3.6	2.8	4.0	3.4	2.7	3.6	4.9
교육비	4.4	2.3	2.6	6.5	8.6	1.3	0.5
교양오락비	10.1	7.8	10.4	12.2	8.7	9.6	10.8
교통·통신비	11.4	21.0	17.2	12.9	10.9	10.8	8.4
기타 소비지출	25.3	14.6	18.4	18.4	27.9	30.2	25.8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157

(2) 연령별 상대적 비교(평균가구 = 100)

	평균	25세 미만	25~ 34세	35~ 44세	45~ 54세	55~ 64세	65세 이상
한 국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00.0	94.3	101.1	100.5	94.9	103.8	112.0
주거광열비	100.0	111.6	99.5	98.4	93.7	106.7	133.0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00.0	101.4	136.3	101.0	84.4	94.3	93.5
피복신발비	100.0	129.2	108.8	97.1	98.0	103.5	95.6
보건의료비	100.0	60.9	93.2	83.2	93.6	129.3	216.2
교육비	100.0	128.2	50.8	121.8	127.6	51.0	32.2
교양오락비	100.0	129.8	115.1	107.1	91.1	87.9	80.2
교통·통신비	100.0	92.8	120.4	96.1	101.5	96.8	75.6
기타 소비지출	100.0	75.1	98.2	89.0	98.7	131.6	120.1
미 국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00.0	98.7	98.5	99.9	102.6	98.1	99.8
주거광열비	100.0	92.3	105.3	103.7	94.4	91.1	106.9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00.0	88.7	93.2	104.1	103.7	119.5	80.2
피복신발비	100.0	121.2	107.1	105.9	107.4	89.4	70.2
보건의료비	100.0	38.6	58.7	72.7	89.5	118.9	221.5
교육비	100.0	315.1	89.4	82.3	152.5	58.9	24.1
교양오락비	100.0	92.8	97.2	111.9	100.7	102.8	80.9
교통·통신비	100.0	110.8	108.8	99.3	100.1	103.5	83.5
기타 소비지출	100.0	94.5	96.8	99.9	101.3	109.9	94.2
일 본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00.0	75.0	87.0	104.3	95.4	100.0	109.5
주거광열비	100.0	197.3	144.1	101.7	79.3	94.3	114.1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00.0	99.9	92.3	94.9	92.1	102.8	117.9
피복신발비	100.0	84.8	94.4	106.3	101.9	101.4	91.7
보건의료비	100.0	77.5	111.8	95.6	74.4	100.5	138.5
교육비	100.0	51.7	59.2	149.8	197.2	28.8	12.5
교양오락비	100.0	77.2	102.3	120.5	86.0	94.5	107.1
교통·통신비	100.0	183.6	150.6	112.8	95.6	94.5	73.5
기타 소비지출	100.0	57.8	72.5	72.6	110.2	119.2	101.8

다음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구조가 가구주 연령대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 보았다. [그림 III-5-4]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도 가처분소득처럼 1998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50~59세 가구 및 60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별 소비수준 자체는 40~49세에서 정점에 도달한 후 나이가 들면서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연령별 소득에서처럼 45~54세 가구의 소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74세 가구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5~64세 가구 및 75세 이상 가구의 소비의 경우에는 별다른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에는 통계 개편 이후 일관된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2002년 이후 전체 가계 평균소비의 절대수준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연령대별로는 60~69세 가구의 소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연령대별 소비수준 자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45~54세(미국) 또는 40~49세(일본)에서 정점에 도달한 후 나이가 들면서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III-5-5]에서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경우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음식·숙박·교육·통신 등 서비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만 자세히 살펴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의 하락세가 2000년대 들어 멈췄고 교육비 지출 비중도 하락세를 보인 반면, 보건 관련 비용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주택, 개인보험 및 연금 관련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음식·교통·의복 관련 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65~74세 연령대에서는 주택, 보건 관련 지출 비중의 증가와 음식·교통·의복 관련 지출 비중의 하락이 두드러졌으나,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별다른 변

동이 없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출항목별로 뚜렷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60~69세 연령대의 교통·통신 관련 지출 비중과 70세 이상 연령대의 교양·오락 관련 지출 비중의 증가만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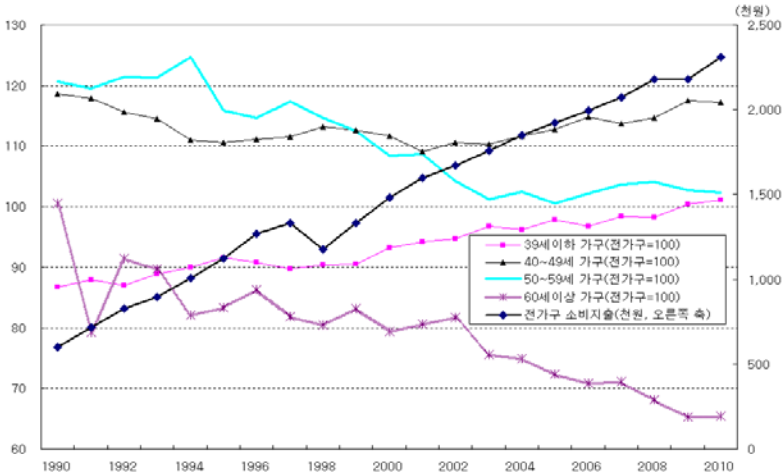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림 III-5-3]에 정리된 연령대별 소비지출 구조의 차이를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식료품·비주류음료, 주택 관련 주거·수도·광열, 보건 관련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이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한편, [그림 III-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년, 1992년, 2002년 원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식료품, 주택 관련 광열·수도, 보건 관련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교양·오락, 교육, 교통·통신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이는 경향이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표 III-5-4〉 한·미·일의 연령대별 소비지출 구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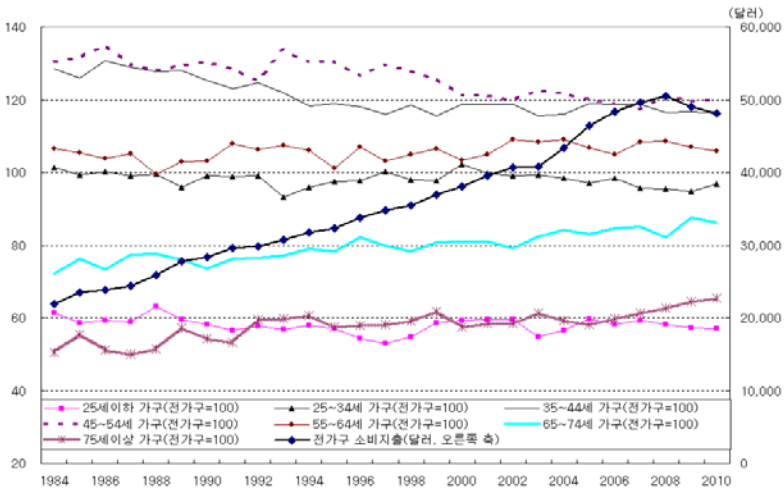
한국		미국		일본	
식료품·비주류음료	+	Food	-	식료	+
주류·담배		Alcoholic bev. & Tobacco	-	n.a.	
의류·신발	-	Apparel and services	-	피복 및 신발	-
주거·수도·광열	+	Housing	+	주거 & 광열·수도	+
가정용품·가사서비스		n.a.		가구·가사 용품	+
보건	+	Health care	+	보건의료	+
교통		Transportation	-	교통·통신	-
통신	-	n.a.		교통·통신	-
오락·문화	-	Entertainment	-	교양 오락	-
교육	-	Education	-	교육	-
음식·숙박	-	n.a.		n.a.	

[그림 Ⅲ-5-4] 한·미·일 가계의 연령대별 소비지출 수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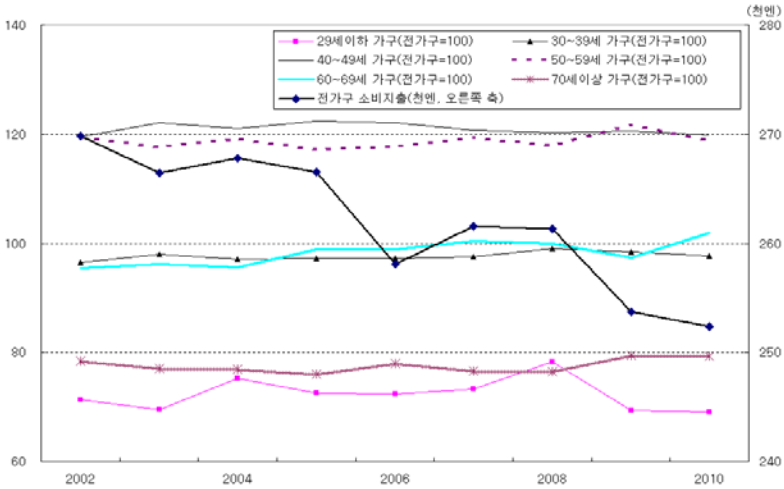
(1) 한국



(2)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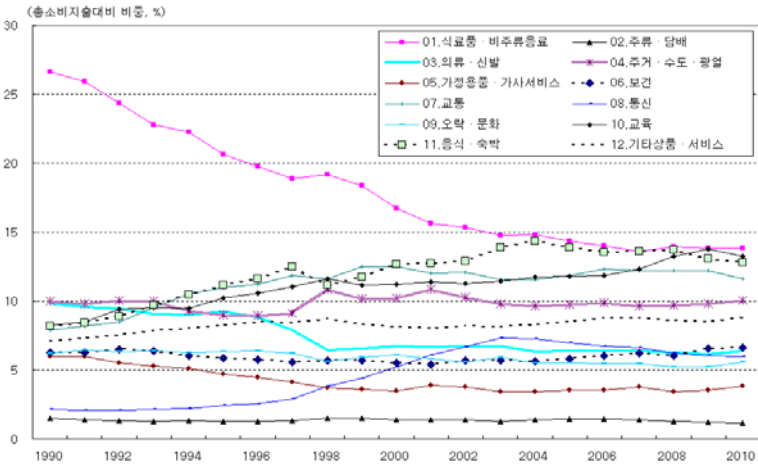
(3)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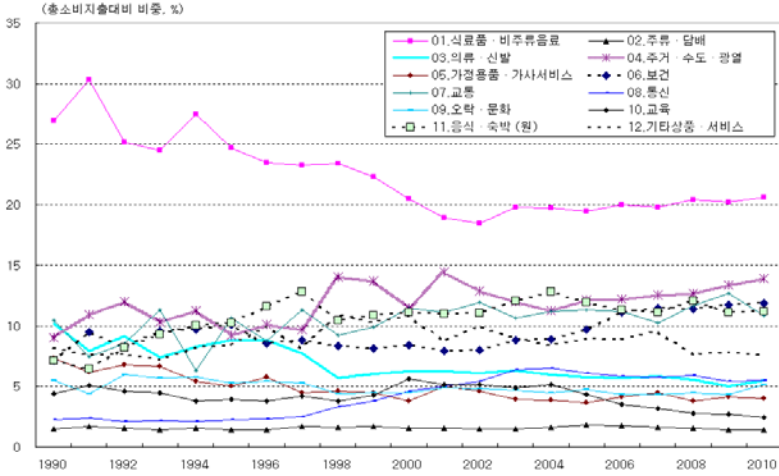
[그림 III-5-5] 한·미·일 가계의 소비구조 추이

(1) 한국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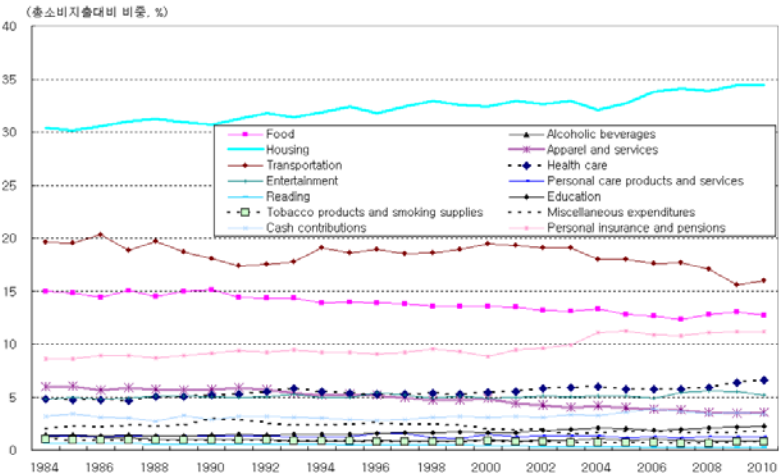


- 60세 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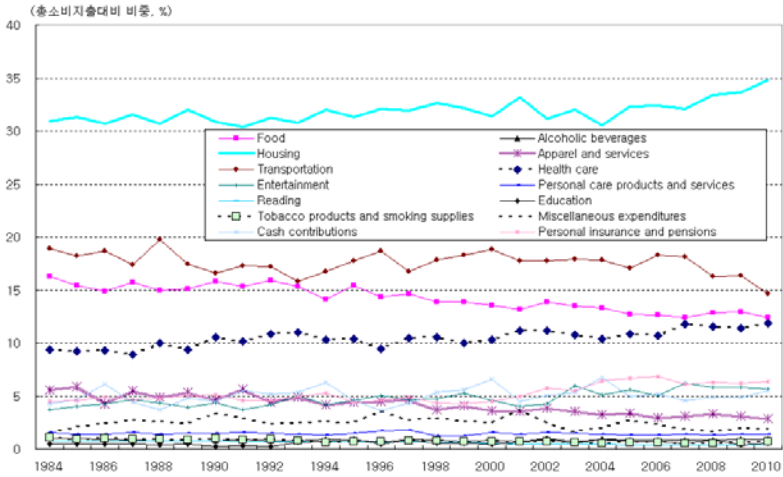
(2) 미국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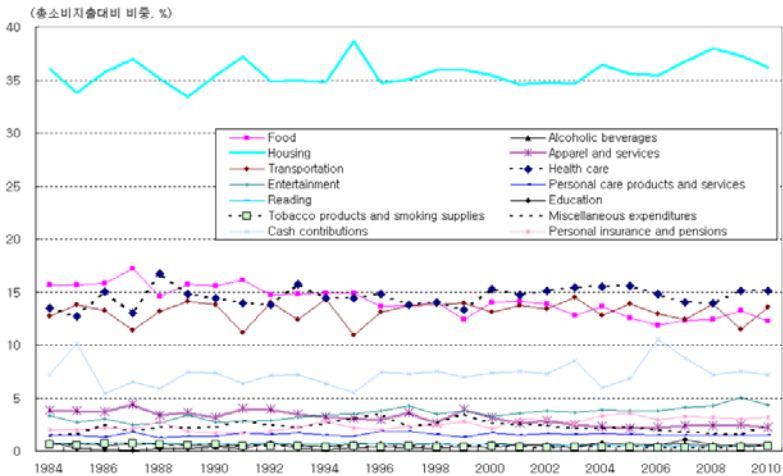


###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163

#### - 65~74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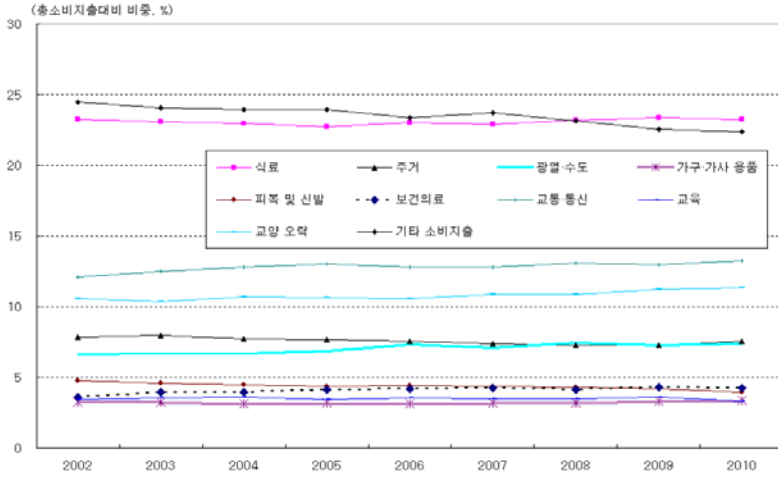


#### - 75세 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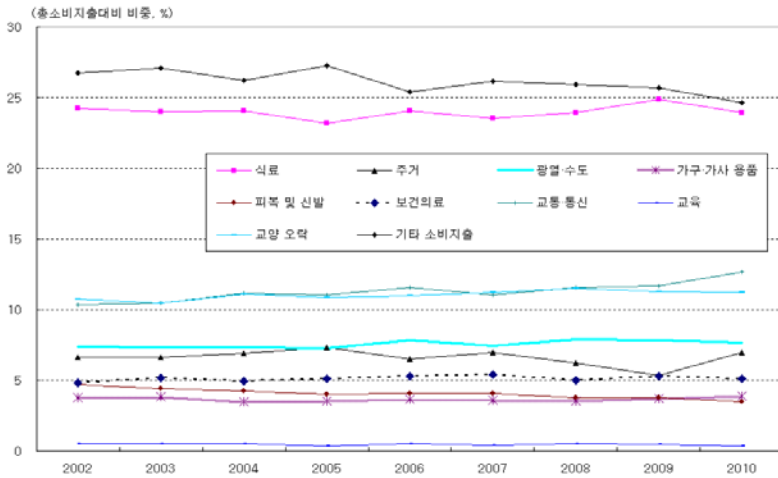


(3)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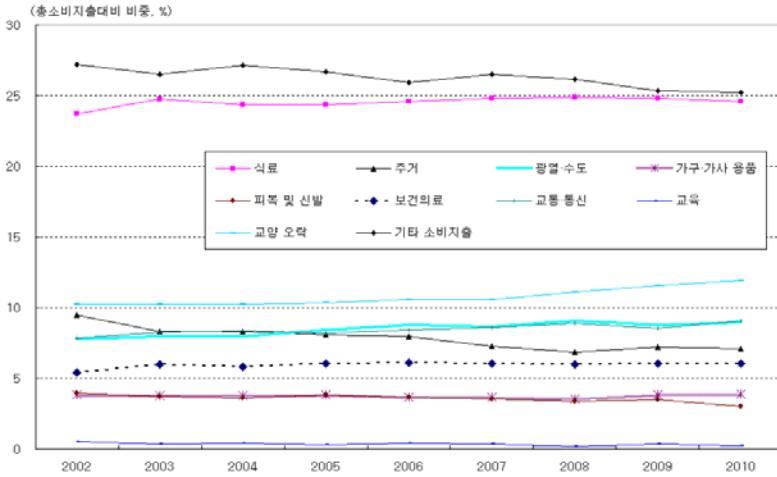
- 전체 가구



- 60~69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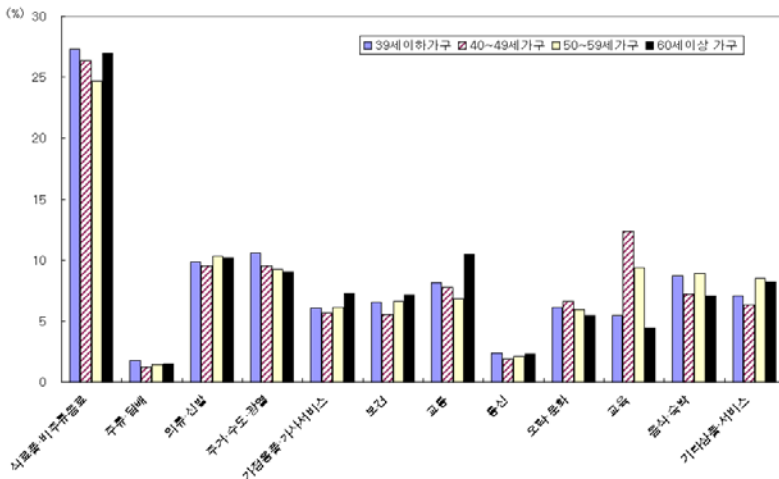
- 70세 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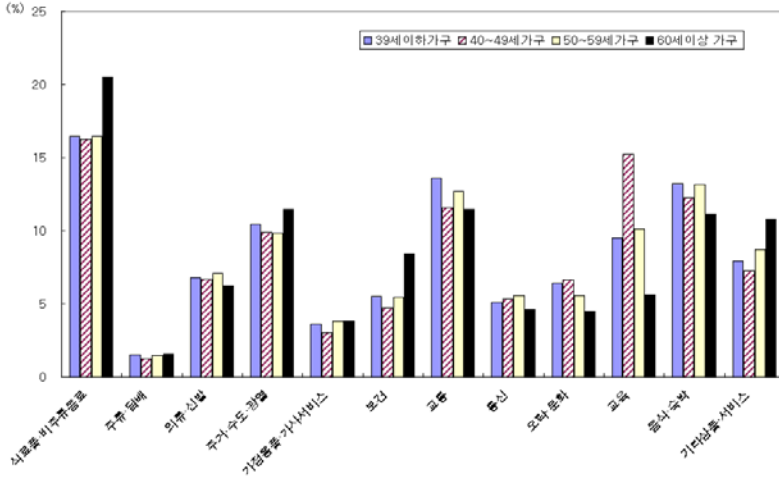
[그림 III-5-6] 한·미·일 가계의 연령대별 소비구조 추이

(1)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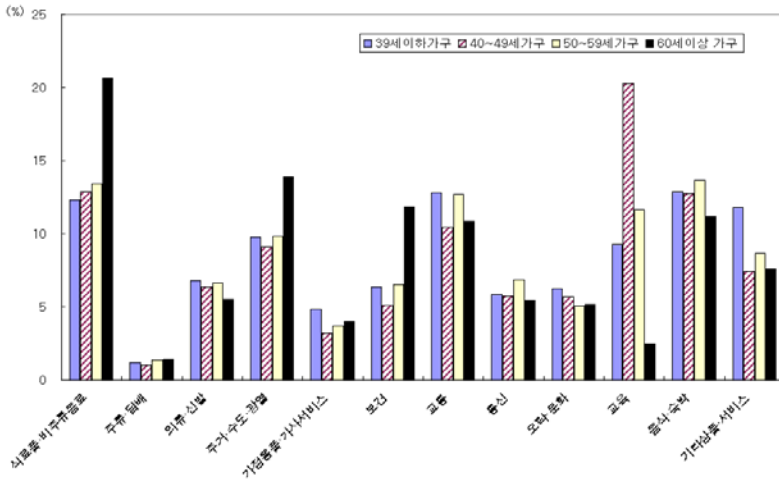
- 1990년



-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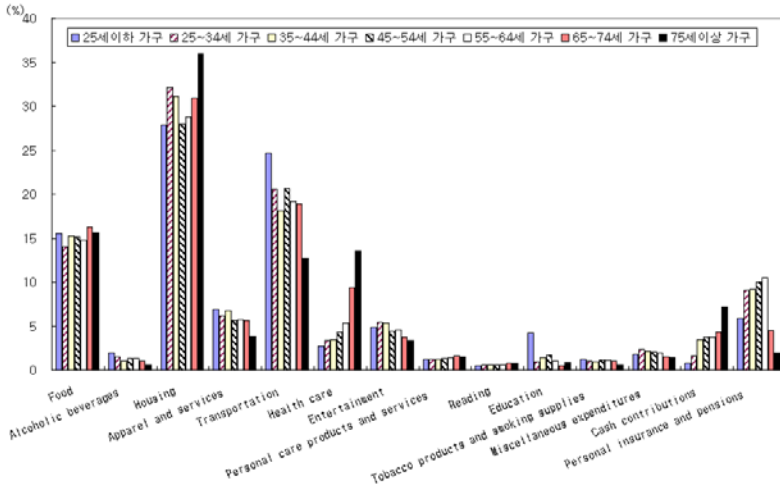


-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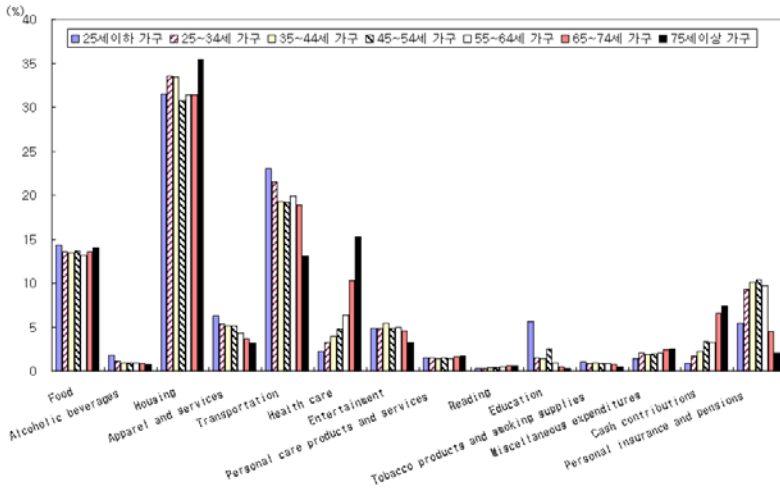


(2)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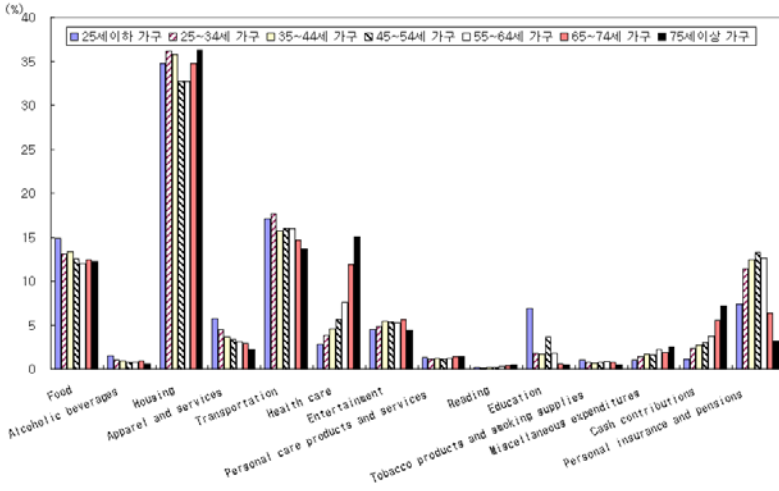
- 1984년



-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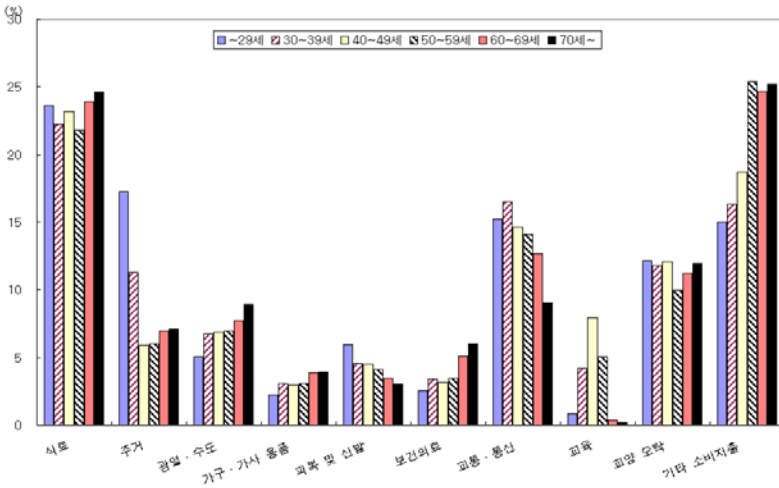


-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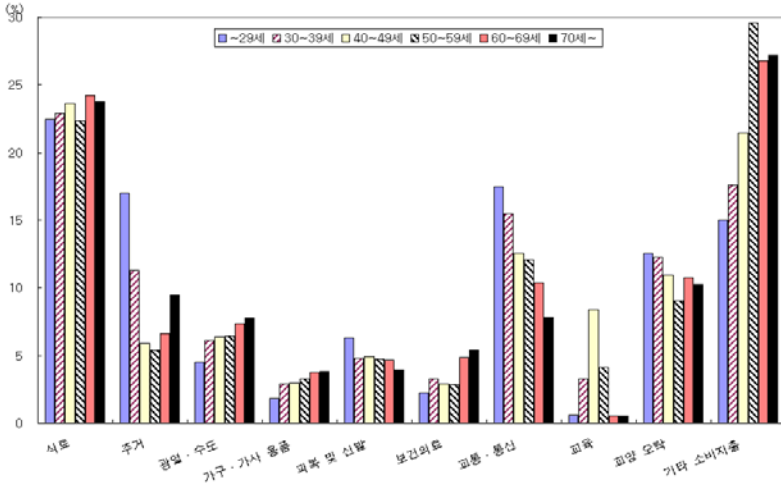


(3) 일본

-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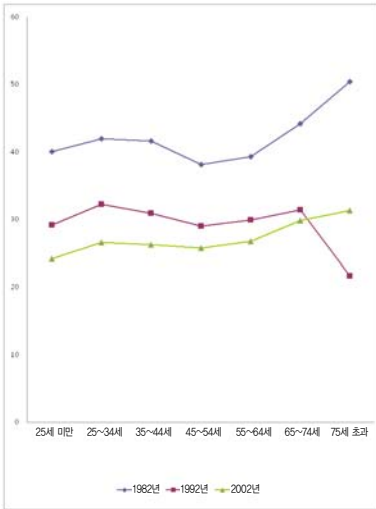


-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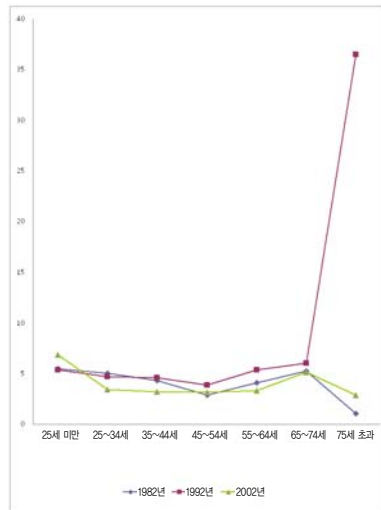


[그림 III-5-7] 우리나라 가계의 연령대별 소비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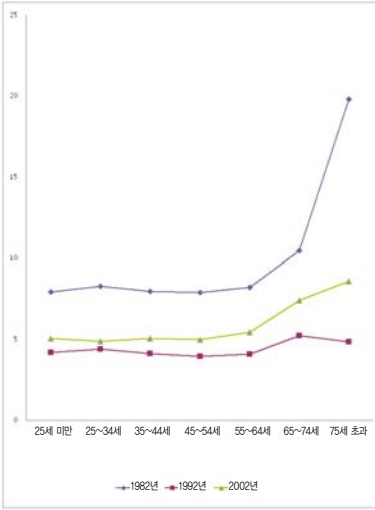
(1) 식료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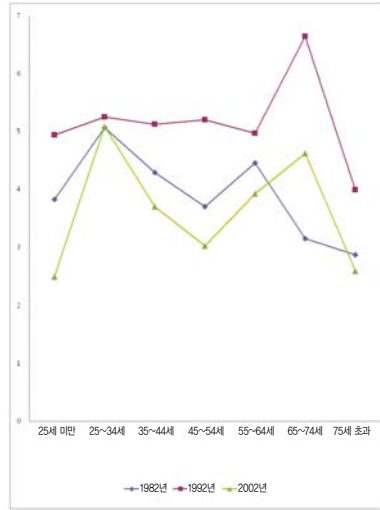
(2) 주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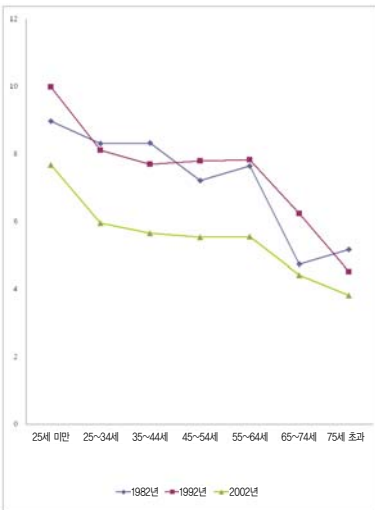
(3) 광열·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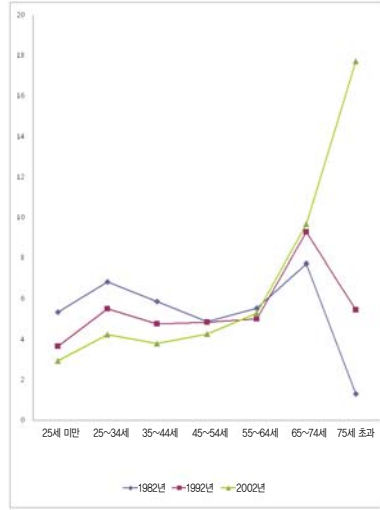
(4) 가구집기 가사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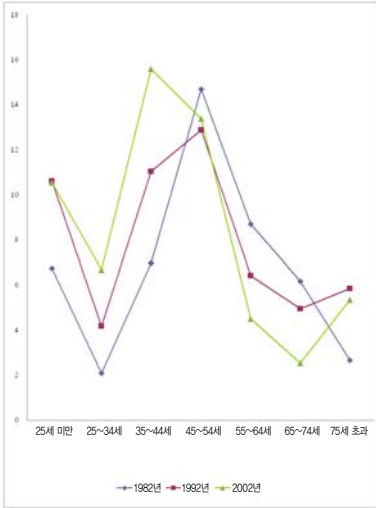
(5) 피복 및 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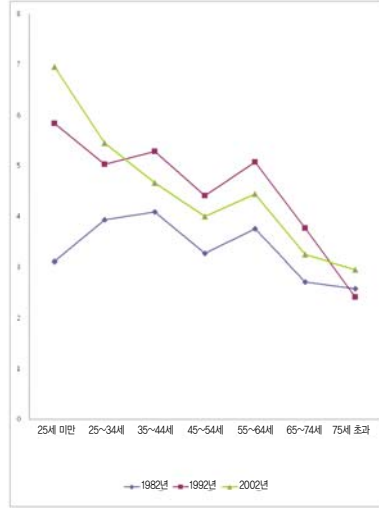
(6) 보건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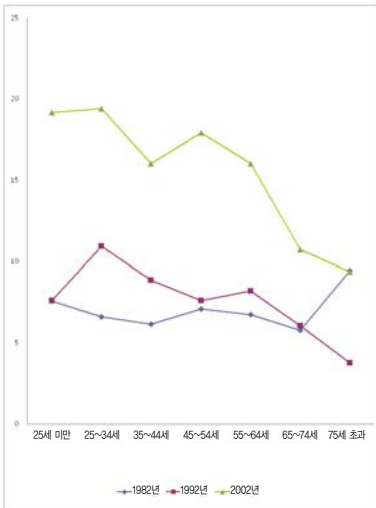
(7)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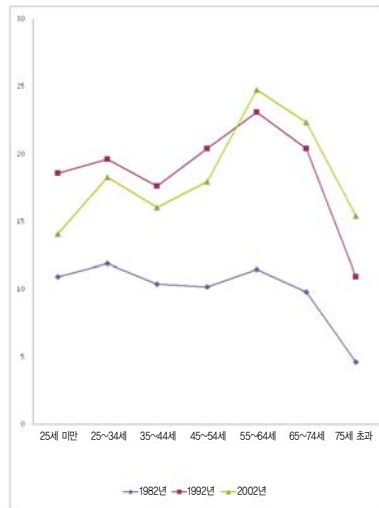
(8) 교양오락



(9) 교통통신



(10) 기타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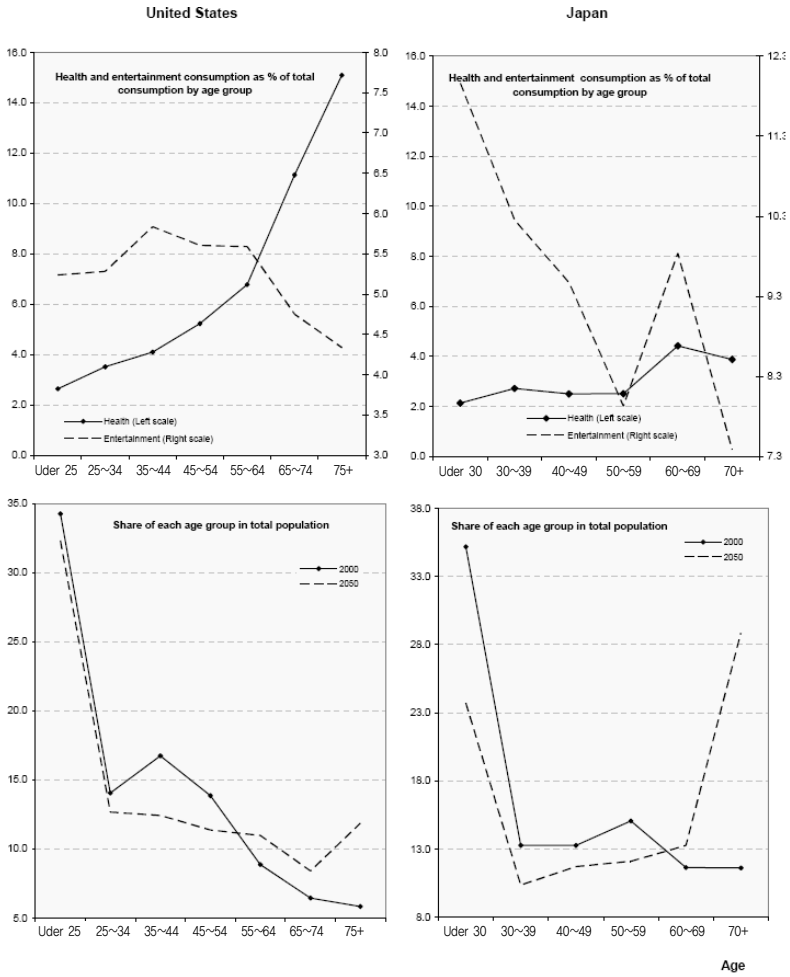
[그림 Ⅲ-5-8]에 정리된 OECD의 2005년 보고서<sup>38)</sup>의 분석결과에서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주택·에너지·의료 관련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교통·오락·교육 관련 지출 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서는 연령대별 소비지출 패턴이 현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항목별 소비지출 수준을 2050년까지 기계적으로 추계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그림 Ⅲ-5-9]에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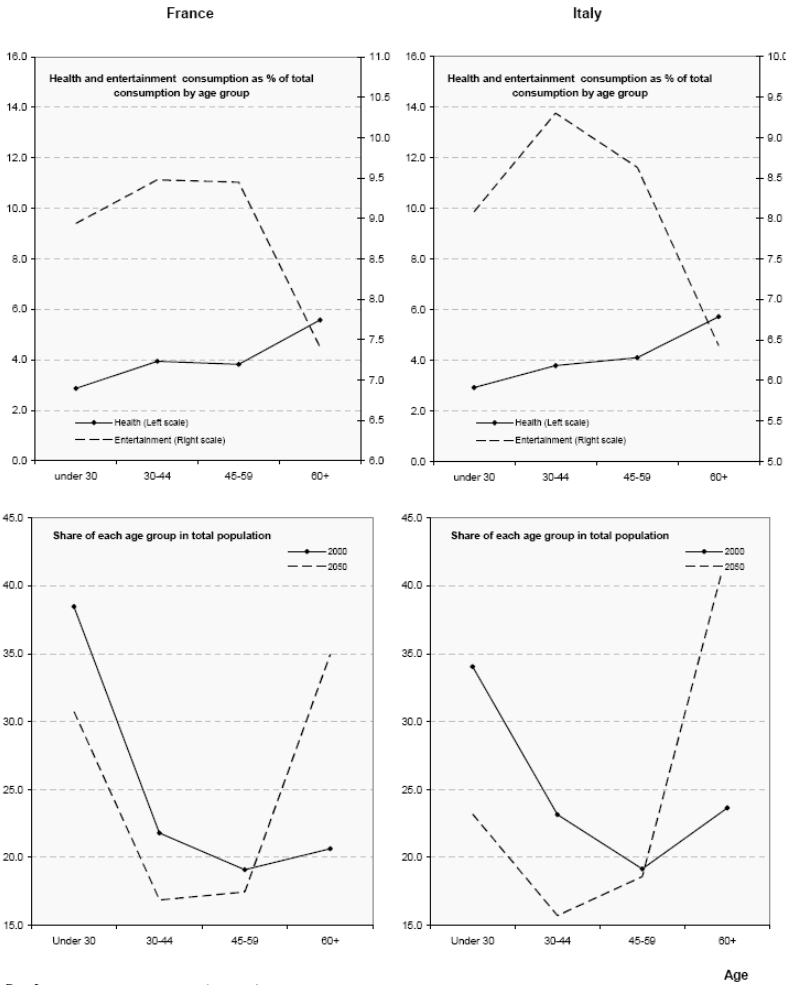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06년 보고서에서도 주거비를 제외한 가계 소비지출을 10개 품목으로 구분하여 QAIDS 모형을 이용하여 품목별 소비지출 구성비 함수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① 식료품비 비중은 가구주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역U자 형태, ② 보건, 의료비 비중은 60대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 ③ 교육비 비중은 가구주 연령 10대, 30대 및 40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④ 교통비 비중은 50대 이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정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향후 전망치를 바탕으로 2005~2020년 기간 중 가계소비지출의 품목별 구성비를 전망한 결과가 <표 Ⅲ-5-5>에 정리되어 있다.

---

38) Martins et al.(2005)

[그림 III-5-8] OECD의 항목별 소비지출의 연령대별 분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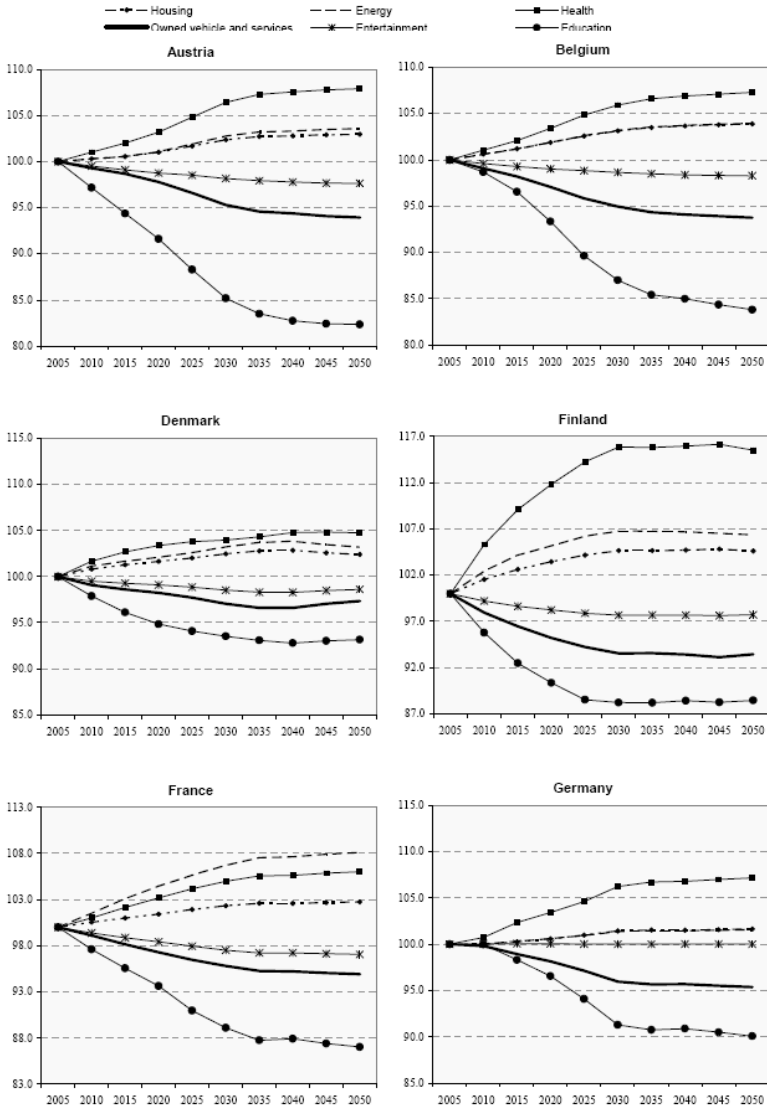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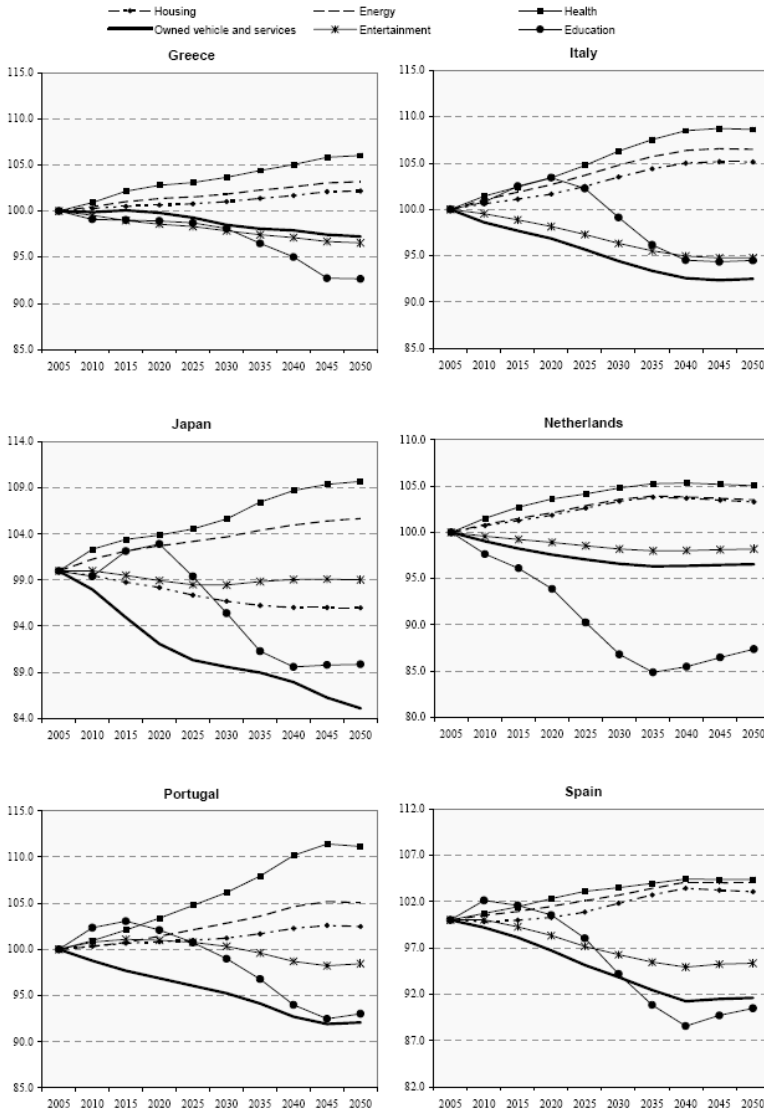


출처: Martins et al.(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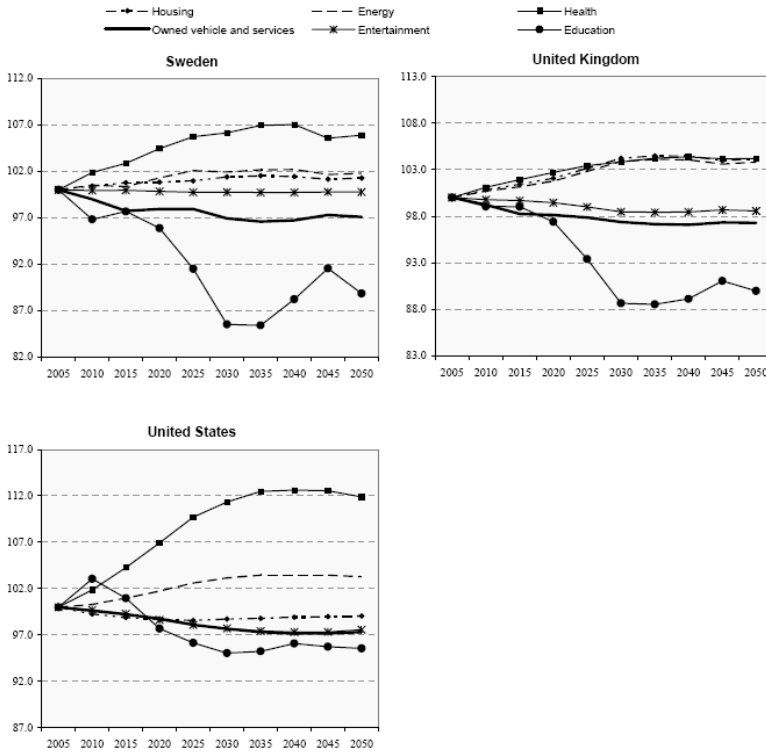
데이터: Consumer Expenditure Survey for the US, Household Budget Survey of Eurostat and Luxembourg Income Study (LIS) for EU countries, and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or Japan, OECD/DELSA Population Database.

[그림 III-5-9] OECD의 항목별 소비지출 수준 추계결과  
(2005 = 100)





###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177



〈표 III-5-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품목별 소비비중 전망 결과

	품목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인구요인	0.75	0.28	-0.1	-0.14	0.42	-1.95	-0.18	-0.19	0.1	1.01
비인구요인	-5.7	-0.77	-0.22	-0.4	0.42	3.92	0.9	1.94	-0.49	0.41
합 계	-4.82	-0.56	-0.53	-0.48	0.74	2.13	0.66	1.64	-0.36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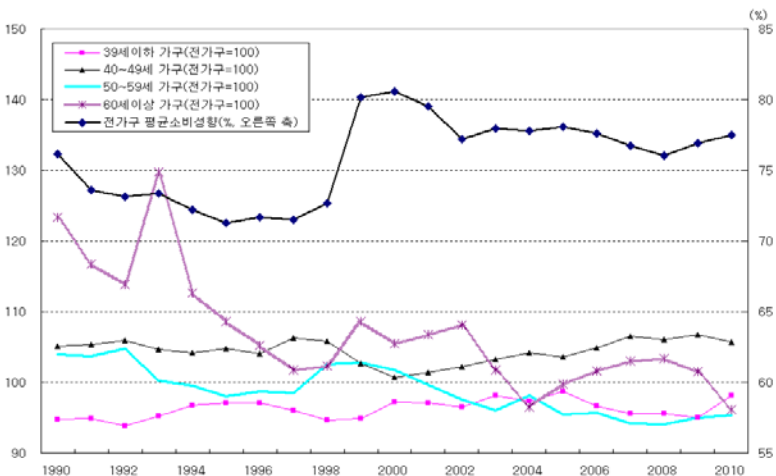
주: 1. ① 식료품, ② 광열·수도, ③ 가구·집기·가사용품, ④ 피복·신발, ⑤ 보건·의료, ⑥ 교육, ⑦ 교양·오락, ⑧ 교통, ⑨ 통신, ⑩ 기타 소비지출.  
 2. 개별요인 기여도의 합이 합계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QAUIDS 모형이 설명변수들에 대하여 비선형(nonlinear)이기 때문이다.

## 다. 평균소비(저축)성향

[그림 Ⅲ-5-10]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외환 위기 직후 한 차례 크게 상승한 이후 77% 내외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체 가구를 100으로 볼 때 50~59세 가구 및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고령인구대 및 이에 진입하는 은퇴연령대가 소비수준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5-6>을 보면, 이러한 현상은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2003년 이후 40~49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60세 이상 가구보다 높아지는 생애주기 가설에 다소 배치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세분화된 연령대별로 분석한 <표 Ⅲ-5-7> 및 [그림 Ⅲ-5-11]의 결과를 보면, 50대 후반 및 60대 초반의 중고령대에서 다소 평균저축성향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저축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5-10]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179

〈표 III-5-6〉 우리나라 연령별 소득·소비·평균소비성향

(단위: 천원, %)

		전체 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	792	1,841	2,984	791	1,977	3,233	793	1,662	2,600
	소비지출	603	1,484	2,313	579	1,491	2,435	653	1,475	2,124
	평균소비성향	76.2	80.6	77.5	73.2	75.4	75.3	82.3	88.7	81.7
	평균저축성향	23.8	19.4	22.5	26.8	24.6	24.7	17.7	11.3	18.3
39세 이하 가구	처분가능소득	724	1,765	3,074	722	1,858	3,210	731	1,567	2,586
	소비지출	523	1,383	2,339	508	1,392	2,370	565	1,364	2,229
	평균소비성향	72.2	78.3	76.1	70.4	74.9	73.8	77.4	87.0	86.2
	평균저축성향	27.8	21.7	23.9	29.6	25.1	26.2	22.6	13.0	13.8
40~49세 가구	처분가능소득	893	2,043	3,309	900	2,153	3,429	882	1,898	3,083
	소비지출	715	1,657	2,711	704	1,625	2,756	733	1,700	2,627
	평균소비성향	80.1	81.1	81.9	78.2	75.4	80.4	83.1	89.6	85.2
	평균저축성향	19.9	18.9	18.1	21.8	24.6	19.6	16.9	10.4	14.8
50~59세 가구	처분가능소득	919	1,961	3,204	945	2,117	3,372	882	1,793	2,976
	소비지출	728	1,608	2,367	695	1,632	2,402	775	1,583	2,319
	평균소비성향	79.2	82.0	73.9	73.5	77.1	71.2	87.8	88.3	77.9
	평균저축성향	20.8	18.0	26.1	26.5	22.9	28.8	12.2	11.7	22.1
60세 이상 가구	처분가능소득	645	1,387	2,030	784	1,630	2,343	571	1,294	1,873
	소비지출	606	1,178	1,514	660	1,192	1,606	577	1,173	1,467
	평균소비성향	94.0	85.0	74.6	84.2	73.2	68.5	101.1	90.6	78.3
	평균저축성향	6.0	15.0	25.4	15.8	26.8	31.5	-1.1	9.4	21.7

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표 III-5-7〉 재정패널자료의 연령별 소득·소비·평균저축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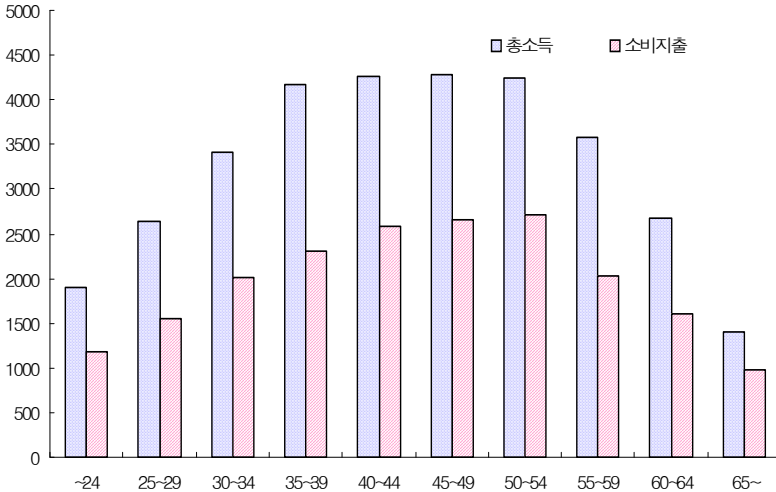
(단위: 만원)

	24세 이하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평균
총소득											
2007	1,607	2,711	3,600	4,011	4,276	4,116	3,916	3,329	2,549	1,297	3,307
2008	1,045	2,581	3,510	3,902	4,117	4,031	4,139	3,154	2,618	1,317	3,256
2009	1,907	2,647	3,414	4,177	4,271	4,288	4,243	3,577	2,668	1,394	3,427
소비지출											
2007	1,066	1,300	1,764	2,158	2,367	2,423	2,183	1,728	1,417	877	1,829
2008	1,352	1,618	2,014	2,366	2,708	2,739	2,601	2,033	1,641	958	2,093
2009	1,187	1,550	2,018	2,304	2,588	2,649	2,721	2,027	1,598	984	2,072
저축성향(%)											
2007	33.7	52.0	51.0	46.2	44.6	41.1	44.3	48.1	44.4	32.4	44.7
2008	-29.4	37.3	42.6	39.4	34.2	32.1	37.2	35.5	37.3	27.3	35.7
2009	37.8	41.4	40.9	44.8	39.4	38.2	35.9	43.3	40.1	29.4	39.5
저축성향(평균=100 기준)											
2007	75	116	114	103	100	92	99	108	99	72	100
2008	-82	104	119	110	96	90	104	100	104	76	100
2009	95	105	103	113	100	97	91	110	101	74	100
적자가구비율(%)											
2007	15.0	6.4	6.6	10.9	11.8	13.2	13.2	17.6	20.2	31.8	15.4
2008	51.0	17.6	10.8	15.2	18.2	23.4	18.3	21.2	26.4	37.2	22.1
2009	13.6	11.1	13.5	12.5	15.4	19.5	18.9	17.5	21.3	32.6	19.0

주: 음영 처리는 가장 높은 수치의 연령대를 표시  
출처: 성명재(2011)

[그림 III-5-11] 연령별 총소득·소비지출 분포  
(재정패널 데이터, 2009년 기준)

(단위: 만원)



출처: 성명재(2011)

### 라. 코호트 분석

코호트 분석(cohort analysis)이란 연령 계급별로 구분되어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시대효과·연령효과·세대효과 3개 효과로 분리하는 방법론으로 소비자의 소비동향을 예측하는 마케팅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시대효과'란 연령이나 세대를 불문하고 사회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면, 경기동향에 따른 추세에 의한 변화 부분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효과'란 세대나 시대에 관련되지 않고 인간의 생리적 측면이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해 변화해 나가는 부분, 즉 연령과 함께 발생하는 변화이다. 예를 들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육류 섭취는 줄어드는 반면, 어패류 섭취는 증가하는 현상을 연령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대효과'란 연령

이나 시대에 의한 변화 이외에 태어나서 자랐던 시대 환경을 반영하는 다른 세대와는 다른 특징, 즉 세대 고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표 III-5-8>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I-5-8> 표준 코호트표와 3개의 효과에 대한 예시

1. 표준 데이터표					2. 시대효과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1990년	A	B	C	D	1990년	●	●	●	●
1995년	E	F	G	H	1995년	×	×	×	×
2000년	I	J	K	L	2000년	△	△	△	△

3. 연령효과					4. 세대효과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1990년	●	×	△	◎	1990년	△	◎	▼	○
1995년	●	×	△	◎	1995년	×	△	◎	▼
2000년	●	×	△	◎	2000년	●	×	△	◎

코호트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1982년,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등 5년 간격의 총 6개 연도의 원시자료이다. 연령대는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등 총 11개 연령대별로 구분하고, 각 연령대 소득 및 소비 데이터의 평균치를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세대는 출생연도에 따라 1922~1926년생, 1927~1931년생, 1932~1936년생, 1937~1941년생, 1942~1946년생, 1947~1951년생, 1952~1956년생, 1957~1961년생, 1962~1966년생, 1967~1971년생, 1972~1976년생, 1977~1981년생, 1982~1986년생, 1987~1991년생, 1992~1996년생, 1997~2001년생, 2002~2006년생, 2007~2011년생, 2012~2016년생, 2017~2021년생, 2022~2026년생, 2027~2031년생, 2032~2036년생, 2037~2041년생, 2042~2046년생, 2047~2051년생, 2052~2056년생, 2057~2061년생, 2062~2066년생, 2067~2071년생, 2072~2076년생, 2077~2081년생, 2082~2086년생, 2087~2091년생, 2092~2096년생, 2097~2101년생, 2102~2106년생, 2107~2111년생, 2112~2116년생, 2117~2121년생, 2122~2126년생, 2127~2131년생, 2132~2136년생, 2137~2141년생, 2142~2146년생, 2147~2151년생, 2152~2156년생, 2157~2161년생, 2162~2166년생, 2167~2171년생, 2172~2176년생, 2177~2181년생, 2182~2186년생, 2187~2191년생, 2192~2196년생, 2197~2201년생, 2202~2206년생, 2207~2211년생, 2212~2216년생, 2217~2221년생, 2222~2226년생, 2227~2231년생, 2232~2236년생, 2237~2241년생, 2242~2246년생, 2247~2251년생, 2252~2256년생, 2257~2261년생, 2262~2266년생, 2267~2271년생, 2272~2276년생, 2277~2281년생, 2282~2286년생, 2287~2291년생, 2292~2296년생, 2297~2301년생, 2302~2306년생, 2307~2311년생, 2312~2316년생, 2317~2321년생, 2322~2326년생, 2327~2331년생, 2332~2336년생, 2337~2341년생, 2342~2346년생, 2347~2351년생, 2352~2356년생, 2357~2361년생, 2362~2366년생, 2367~2371년생, 2372~2376년생, 2377~2381년생, 2382~2386년생, 2387~2391년생, 2392~2396년생, 2397~2401년생, 2402~2406년생, 2407~2411년생, 2412~2416년생, 2417~2421년생, 2422~2426년생, 2427~2431년생, 2432~2436년생, 2437~2441년생, 2442~2446년생, 2447~2451년생, 2452~2456년생, 2457~2461년생, 2462~2466년생, 2467~2471년생, 2472~2476년생, 2477~2481년생, 2482~2486년생, 2487~2491년생, 2492~2496년생, 2497~2501년생, 2502~2506년생, 2507~2511년생, 2512~2516년생, 2517~2521년생, 2522~2526년생, 2527~2531년생, 2532~2536년생, 2537~2541년생, 2542~2546년생, 2547~2551년생, 2552~2556년생, 2557~2561년생, 2562~2566년생, 2567~2571년생, 2572~2576년생, 2577~2581년생, 2582~2586년생, 2587~2591년생, 2592~2596년생, 2597~2601년생, 2602~2606년생, 2607~2611년생, 2612~2616년생, 2617~2621년생, 2622~2626년생, 2627~2631년생, 2632~2636년생, 2637~2641년생, 2642~2646년생, 2647~2651년생, 2652~2656년생, 2657~2661년생, 2662~2666년생, 2667~2671년생, 2672~2676년생, 2677~2681년생, 2682~2686년생, 2687~2691년생, 2692~2696년생, 2697~2701년생, 2702~2706년생, 2707~2711년생, 2712~2716년생, 2717~2721년생, 2722~2726년생, 2727~2731년생, 2732~2736년생, 2737~2741년생, 2742~2746년생, 2747~2751년생, 2752~2756년생, 2757~2761년생, 2762~2766년생, 2767~2771년생, 2772~2776년생, 2777~2781년생, 2782~2786년생, 2787~2791년생, 2792~2796년생, 2797~2801년생, 2802~2806년생, 2807~2811년생, 2812~2816년생, 2817~2821년생, 2822~2826년생, 2827~2831년생, 2832~2836년생, 2837~2841년생, 2842~2846년생, 2847~2851년생, 2852~2856년생, 2857~2861년생, 2862~2866년생, 2867~2871년생, 2872~2876년생, 2877~2881년생, 2882~2886년생, 2887~2891년생, 2892~2896년생, 2897~2901년생, 2902~2906년생, 2907~2911년생, 2912~2916년생, 2917~2921년생, 2922~2926년생, 2927~2931년생, 2932~2936년생, 2937~2941년생, 2942~2946년생, 2947~2951년생, 2952~2956년생, 2957~2961년생, 2962~2966년생, 2967~2971년생, 2972~2976년생, 2977~2981년생, 2982~2986년생, 2987~2991년생, 2992~2996년생, 2997~3001년생, 3002~3006년생, 3007~3011년생, 3012~3016년생, 3017~3021년생, 3022~3026년생, 3027~3031년생, 3032~3036년생, 3037~3041년생, 3042~3046년생, 3047~3051년생, 3052~3056년생, 3057~3061년생, 3062~3066년생, 3067~3071년생, 3072~3076년생, 3077~3081년생, 3082~3086년생, 3087~3091년생, 3092~3096년생, 3097~3101년생, 3102~3106년생, 3107~3111년생, 3112~3116년생, 3117~3121년생, 3122~3126년생, 3127~3131년생, 3132~3136년생, 3137~3141년생, 3142~3146년생, 3147~3151년생, 3152~3156년생, 3157~3161년생, 3162~3166년생, 3167~3171년생, 3172~3176년생, 3177~3181년생, 3182~3186년생, 3187~3191년생, 3192~3196년생, 3197~3201년생, 3202~3206년생, 3207~3211년생, 3212~3216년생, 3217~3221년생, 3222~3226년생, 3227~3231년생, 3232~3236년생, 3237~3241년생, 3242~3246년생, 3247~3251년생, 3252~3256년생, 3257~3261년생, 3262~3266년생, 3267~3271년생, 3272~3276년생, 3277~3281년생, 3282~3286년생, 3287~3291년생, 3292~3296년생, 3297~3301년생, 3302~3306년생, 3307~3311년생, 3312~3316년생, 3317~3321년생, 3322~3326년생, 3327~3331년생, 3332~3336년생, 3337~3341년생, 3342~3346년생, 3347~3351년생, 3352~3356년생, 3357~3361년생, 3362~3366년생, 3367~3371년생, 3372~3376년생, 3377~3381년생, 3382~3386년생, 3387~3391년생, 3392~3396년생, 3397~3401년생, 3402~3406년생, 3407~3411년생, 3412~3416년생, 3417~3421년생, 3422~3426년생, 3427~3431년생, 3432~3436년생, 3437~3441년생, 3442~3446년생, 3447~3451년생, 3452~3456년생, 3457~3461년생, 3462~3466년생, 3467~3471년생, 3472~3476년생, 3477~3481년생, 3482~3486년생, 3487~3491년생, 3492~3496년생, 3497~3501년생, 3502~3506년생, 3507~3511년생, 3512~3516년생, 3517~3521년생, 3522~3526년생, 3527~3531년생, 3532~3536년생, 3537~3541년생, 3542~3546년생, 3547~3551년생, 3552~3556년생, 3557~3561년생, 3562~3566년생, 3567~3571년생, 3572~3576년생, 3577~3581년생, 3582~3586년생, 3587~3591년생, 3592~3596년생, 3597~3601년생, 3602~3606년생, 3607~3611년생, 3612~3616년생, 3617~3621년생, 3622~3626년생, 3627~3631년생, 3632~3636년생, 3637~3641년생, 3642~3646년생, 3647~3651년생, 3652~3656년생, 3657~3661년생, 3662~3666년생, 3667~3671년생, 3672~3676년생, 3677~3681년생, 3682~3686년생, 3687~3691년생, 3692~3696년생, 3697~3701년생, 3702~3706년생, 3707~3711년생, 3712~3716년생, 3717~3721년생, 3722~3726년생, 3727~3731년생, 3732~3736년생, 3737~3741년생, 3742~3746년생, 3747~3751년생, 3752~3756년생, 3757~3761년생, 3762~3766년생, 3767~3771년생, 3772~3776년생, 3777~3781년생, 3782~3786년생, 3787~3791년생, 3792~3796년생, 3797~3801년생, 3802~3806년생, 3807~3811년생, 3812~3816년생, 3817~3821년생, 3822~3826년생, 3827~3831년생, 3832~3836년생, 3837~3841년생, 3842~3846년생, 3847~3851년생, 3852~3856년생, 3857~3861년생, 3862~3866년생, 3867~3871년생, 3872~3876년생, 3877~3881년생, 3882~3886년생, 3887~3891년생, 3892~3896년생, 3897~3901년생, 3902~3906년생, 3907~3911년생, 3912~3916년생, 3917~3921년생, 3922~3926년생, 3927~3931년생, 3932~3936년생, 3937~3941년생, 3942~3946년생, 3947~3951년생, 3952~3956년생, 3957~3961년생, 3962~3966년생, 3967~3971년생, 3972~3976년생, 3977~3981년생, 3982~3986년생, 3987~3991년생, 3992~3996년생, 3997~4001년생, 4002~4006년생, 4007~4011년생, 4012~4016년생, 4017~4021년생, 4022~4026년생, 4027~4031년생, 4032~4036년생, 4037~4041년생, 4042~4046년생, 4047~4051년생, 4052~4056년생, 4057~4061년생, 4062~4066년생, 4067~4071년생, 4072~4076년생, 4077~4081년생, 4082~4086년생, 4087~4091년생, 4092~4096년생, 4097~4101년생, 4102~4106년생, 4107~4111년생, 4112~4116년생, 4117~4121년생, 4122~4126년생, 4127~4131년생, 4132~4136년생, 4137~4141년생, 4142~4146년생, 4147~4151년생, 4152~4156년생, 4157~4161년생, 4162~4166년생, 4167~4171년생, 4172~4176년생, 4177~4181년생, 4182~4186년생, 4187~4191년생, 4192~4196년생, 4197~4201년생, 4202~4206년생, 4207~4211년생, 4212~4216년생, 4217~4221년생, 4222~4226년생, 4227~4231년생, 4232~4236년생, 4237~4241년생, 4242~4246년생, 4247~4251년생, 4252~4256년생, 4257~4261년생, 4262~4266년생, 4267~4271년생, 4272~4276년생, 4277~4281년생, 4282~4286년생, 4287~4291년생, 4292~4296년생, 4297~4301년생, 4302~4306년생, 4307~4311년생, 4312~4316년생, 4317~4321년생, 4322~4326년생, 4327~4331년생, 4332~4336년생, 4337~4341년생, 4342~4346년생, 4347~4351년생, 4352~4356년생, 4357~4361년생, 4362~4366년생, 4367~4371년생, 4372~4376년생, 4377~4381년생, 4382~4386년생, 4387~4391년생, 4392~4396년생, 4397~4401년생, 4402~4406년생, 4407~4411년생, 4412~4416년생, 4417~4421년생, 4422~4426년생, 4427~4431년생, 4432~4436년생, 4437~4441년생, 4442~4446년생, 4447~4451년생, 4452~4456년생, 4457~4461년생, 4462~4466년생, 4467~4471년생, 4472~4476년생, 4477~4481년생, 4482~4486년생, 4487~4491년생, 4492~4496년생, 4497~4501년생, 4502~4506년생, 4507~4511년생, 4512~4516년생, 4517~4521년생, 4522~4526년생, 4527~4531년생, 4532~4536년생, 4537~4541년생, 4542~4546년생, 4547~4551년생, 4552~4556년생, 4557~4561년생, 4562~4566년생, 4567~4571년생, 4572~4576년생, 4577~4581년생, 4582~4586년생, 4587~4591년생, 4592~4596년생, 4597~4601년생, 4602~4606년생, 4607~4611년생, 4612~4616년생, 4617~4621년생, 4622~4626년생, 4627~4631년생, 4632~4636년생, 4637~4641년생, 4642~4646년생, 4647~4651년생, 4652~4656년생, 4657~4661년생, 4662~4666년생, 4667~4671년생, 4672~4676년생, 4677~4681년생, 4682~4686년생, 4687~4691년생, 4692~4696년생, 4697~4701년생, 4702~4706년생, 4707~4711년생, 4712~4716년생, 4717~4721년생, 4722~4726년생, 4727~4731년생, 4732~4736년생, 4737~4741년생, 4742~4746년생, 4747~4751년생, 4752~4756년생, 4757~4761년생, 4762~4766년생, 4767~4771년생, 4772~4776년생, 4777~4781년생, 4782~4786년생, 4787~4791년생, 4792~4796년생, 4797~4801년생, 4802~4806년생, 4807~4811년생, 4812~4816년생, 4817~4821년생, 4822~4826년생, 4827~4831년생, 4832~4836년생, 4837~4841년생, 4842~4846년생, 4847~4851년생, 4852~4856년생, 4857~4861년생, 4862~4866년생, 4867~4871년생, 4872~4876년생, 4877~4881년생, 4882~4886년생, 4887~4891년생, 4892~4896년생, 4897~4901년생, 4902~4906년생, 4907~4911년생, 4912~4916년생, 4917~4921년생, 4922~4926년생, 4927~4931년생, 4932~4936년생, 4937~4941년생, 4942~4946년생, 4947~4951년생, 4952~4956년생, 4957~4961년생, 4962~4966년생, 4967~4971년생, 4972~4976년생, 4977~4981년생, 4982~4986년생, 4987~4991년생, 4992~4996년생, 4997~5001년생, 5002~5006년생, 5007~5011년생, 5012~5016년생, 5017~5021년생, 5022~5026년생, 5027~5031년생, 5032~5036년생, 5037~5041년생, 5042~5046년생, 5047~5051년생, 5052~5056년생, 5057~5061년생, 5062~5066년생, 5067~5071년생, 5072~5076년생, 5077~5081년생, 5082~5086년생, 5087~5091년생, 5092~5096년생, 5097~5101년생, 5102~5106년생, 5107~5111년생, 5112~5116년생, 5117~5121년생, 5122~5126년생, 5127~5131년생, 5132~5136년생, 5137~5141년생, 5142~5146년생, 5147~5151년생, 5152~5156년생, 5157~5161년생, 5162~5166년생, 5167~5171년생, 5172~5176년생, 5177~5181년생, 5182~5186년생, 5187~5191년생, 5192~5196년생, 5197~5201년생, 5202~5206년생, 5207~5211년생, 5212~5216년생, 5217~5221년생, 5222~5226년생, 5227~5231년생, 5232~5236년생, 5237~5241년생, 5242~5246년생, 5247~5251년생, 5252~5256년생, 5257~5261년생, 5262~5266년생, 5267~5271년생, 5272~5276년생, 5277~5281년생, 5282~5286년생, 5287~5291년생, 5292~5296년생, 5297~5301년생, 5302~5306년생, 5307~5311년생, 5312~5316년생, 5317~5321년생, 5322~5326년생, 5327~5331년생, 5332~5336년생, 5337~5341년생, 5342~5346년생, 5347~5351년생, 5352~5356년생, 5357~5361년생, 5362~5366년생, 5367~5371년생, 5372~5376년생, 5377~5381년생, 5382~5386년생, 5387~5391년생, 5392~5396년생, 5397~5401년생, 5402~5406년생, 5407~5411년생, 5412~5416년생, 5417~5421년생, 5422~5426년생, 5427~5431년생, 5432~5436년생, 5437~5441년생, 5442~5446년생, 5447~5451년생, 5452~5456년생, 5457~5461년생, 5462~5466년생, 5467~5471년생, 5472~5476년생, 5477~5481년생, 5482~5486년생, 5487~5491년생, 5492~5496년생, 5497~5501년생, 5502~5506년생, 5507~5511년생, 5512~5516년생, 5517~5521년생, 5522~5526년생, 5527~5531년생, 5532~5536년생, 5537~5541년생, 5542~5546년생, 5547~5551년생, 5552~5556년생, 5557~5561년생, 5562~5566년생, 5567~5571년생, 5572~5576년생, 5577~5581년생, 5582~5586년생, 5587~5591년생, 5592~5596년생, 5597~5601년생, 5602~5606년생, 5607~5611년생, 5612~5616년생, 5617~5621년생, 5622~5626년생, 5627~5631년생, 5632~5636년생, 5637~5641년생, 5642~5646년생, 5647~5651년생, 5652~5656년생, 5657~5661년생, 5662~5666년생, 5667~5671년생, 5672~5676년생, 5677~5681년생, 5682~5686년생, 5687~5691년생, 5692~5696년생, 5697~5701년생, 5702~5706년생, 5707~5711년생, 5712~5716년생, 5717~5721년생, 5722~5726년생, 5727~5731년생, 5732~5736년생, 5737~5741년생, 5742~5746년생, 5747~5751년생, 5752~5756년생, 5757~5761년생, 5762~5766년생, 5767~5771년생, 5772~5776년생, 5777~5781년생, 5782~5786년생, 5787~5791년생, 5792~5796년생, 5797~5801년생, 5802~5806년생, 5807~5811년생, 5812~5816년생, 5817~5821년생, 5822~5826년생, 5827~5831년생, 5832~5836년생, 5837~5841년생, 5842~5846년생, 5847~5851년생, 5852~5856년생, 5857~5861년생, 5862~5866년생, 5867~5871년생, 5872~5876년생, 5877~5881년생, 5882~5886년생, 5887~5891년생, 5892~5896년생, 5897~5901년생, 5902~5906년생, 5907~5911년생, 5912~5916년생, 5917~5921년생, 5922~5926년생, 5927~5931년생, 5932~5936년생, 5937~5941년생, 5942~5946년생, 5947~5951년생, 5952~5956년생, 5957~5961년생, 5962~5966년생, 5967~5971년생, 5972~5976년생, 5977~5981년생, 5982~5986년생, 5987~5991년생, 5992~5996년생, 5997~6001년생, 6002~6006년생, 6007~6011년생, 6012~6016년생, 6017~6021년생, 6022~6026년생, 6027~6031년생, 6032~6036년생, 6037~6041년생, 6042~6046년생, 6047~6051년생, 6052~6056년생, 6057~6061년생, 6062~6066년생, 6067~6071년생, 6072~6076년생, 6077~6081년생, 6082~6086년생, 6087~6091년생, 6092~6096년생, 6097~6101년생, 6102~6106년생, 6107~6111년생, 6112~6116년생, 6117~6121년생, 6122~6126년생, 6127~6131년생, 6132~6136년생, 6137~6141년생, 6142~6146년생, 6147~6151년생, 6152~6156년생, 6157~6161년생, 6162~6166년생, 6167~6171년생, 6172~6176년생, 6177~6181년생, 6182~6186년생, 6187~6191년생, 6192~6196년생, 6197~6201년생, 6202~6206년생, 6207~6211년생, 6212~6216년생, 6217~6221년생, 6222~6226년생, 6227~6231년생, 6232~6236년생, 6237~6241년생, 6242~6246년생, 6247~6251년생, 6252~6256년생, 6257~6261년생, 6262~6266년생, 6267~6271년생, 6272~6276년생, 6277~6281년생, 6282~6286년생, 6287~6291년생, 6292~6296년생, 6297~6301년생, 6302~6306년생, 6307~6311년생, 6312~6316년생, 6317~6321년생, 6322~6326년생, 6327~6331년생, 6332~6336년생, 6337~6341년생, 6342~6346년생, 6347~6351년생, 6352~6356년생, 6357~6361년생, 6362~6366년생, 6367~6371년생, 6372~6376년생, 6377~6381년생, 6382~6386년생, 6387~6391년생, 6392~6396년생, 6397~6401년생, 6402~6406년생, 6407~6411년생, 6412~6416년생, 6417~6421년생, 6422~6426년생, 6427~6431년생, 6432~6436년생, 6437~6441년생, 6442~6446년생, 6447~6451년생, 6452~6456년생, 6457~6461년생, 6462~6466년생, 6467~6471년생, 6472~6476년생, 6477~6481년생, 6482~6486년생, 6487~6491년생, 6492~6496년생, 6497~6501년생, 6502~6506년생, 6507~6511년생, 6512~6516년생, 6517~6521년생, 6522~6526년생,

2~1986년생, 1987~1991년생 등 총 14개 세대로 구분된다.

추정방법은 OLS이며, 더미변수 설정 시 기준이 되는 시대효과, 연령효과는 각각 1982년, 20~24세로 설정하였으며, 세대효과의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세대가 설정되므로 1907~1911년생, 1912~1916년생의 2개를 기준세대로 설정하였다. 조사연도와 가구주의 연령을 알면 가구주의 출생연도(코호트)를 자동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더미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성립되어 추정할 수 없게 되므로 세대더미에서는 2개를 제외시켜야 한다.

[그림 III-5-12]에 정리된 코호트 분석 결과를 통해 시대효과 및 세대효과를 제거한 순수한 연령효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의 경우 70세 이상에서 정점을 보이는 재산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들이 65~69세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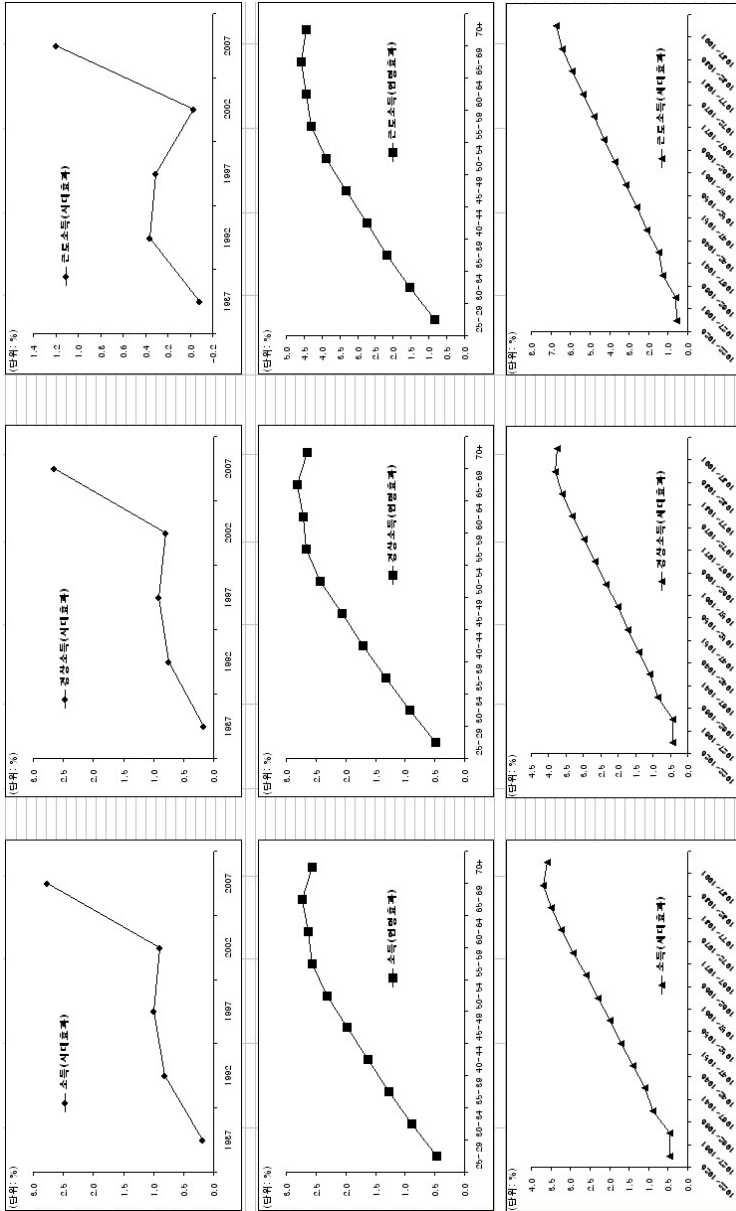
소비지출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소비수준이 높아지는데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 이전, 가구간 이전 등 비소비지출은 65~69세 연령대에서 정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에서는 식료품, 광열수도,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통·통신, 기타소비 등 6개 항목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출수준이 커지는 반면, 주거비, 교육, 교양·오락 등 3개 항목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용품의 경우에는 25~29세 연령대 및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만 지출수준이 작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항목별 소비지출 수준에 대한 코호트 분석결과는 '나. 연령별 소비구조'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식료품·비주류음료, 주택 관련 주거·수도·광열, 보건 관련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오락·문화, 교육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앞에서는 교통·통신 지출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코호트 분석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만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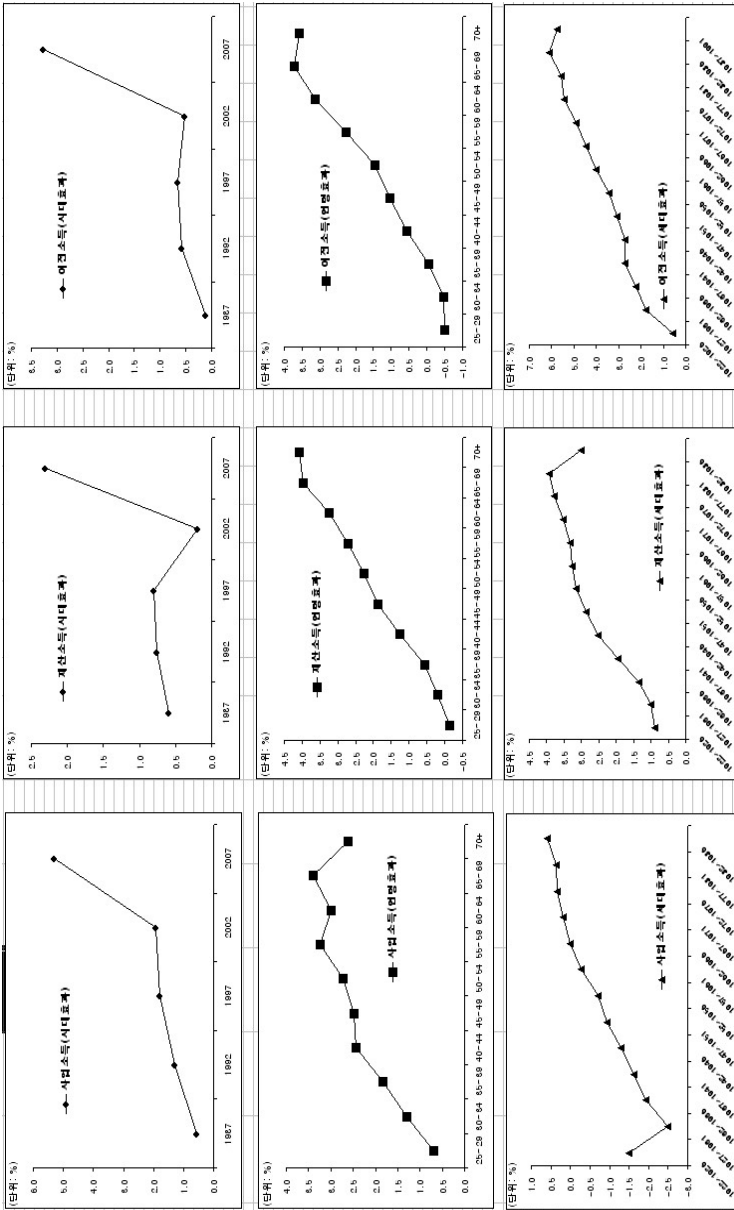
또, 제3절의 '가. 국민소득 지출 및 수요구조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

시한 국민계정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의 품목별 소비 비중 분석결과와 일치한 부분이 많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식료품, 의류·신발, 보건의료 지출의 비중이 감소하였던 것과는 달리 코호트 분석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나. 국민소득 분배 및 소득구조에 미치는 영향'의 가계부문 소득구조에 대한 분석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피용자자보수,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모두 감소했던 것과 달리 코호트 분석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감소하고 재산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와의 차이는 국민계정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의 품목별 소비비중 분석이 인구 증가율과 1인당 소득수준만을 감안한 간단한 회귀분석에 그친 반면, 코호트 분석은 시대효과와 세대효과를 적절히 감안하여 순수한 연령효과만 추출해 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제3절의 '다. 국민소득의 생산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시한 국민계정의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설업이나 금융·부동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도소매·음식숙박·교통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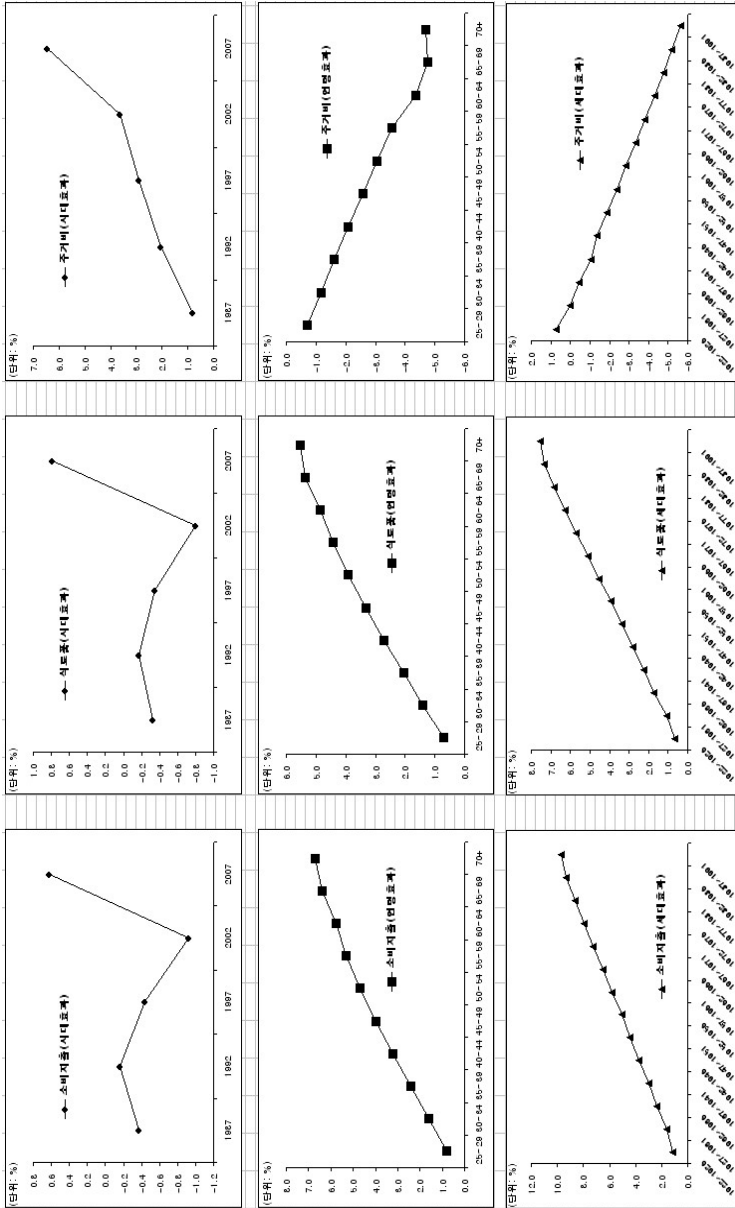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소득 및 소비수준의 연령효과에 따라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은 65~69세에 정점에 도달하고, 평균소비 성향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평균저축성향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애주기 가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코호트 분석결과는 제3절의 '가. 국민소득 지출 및 수요구조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시한 개인 순저축률 및 총저축률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감소한다는 분석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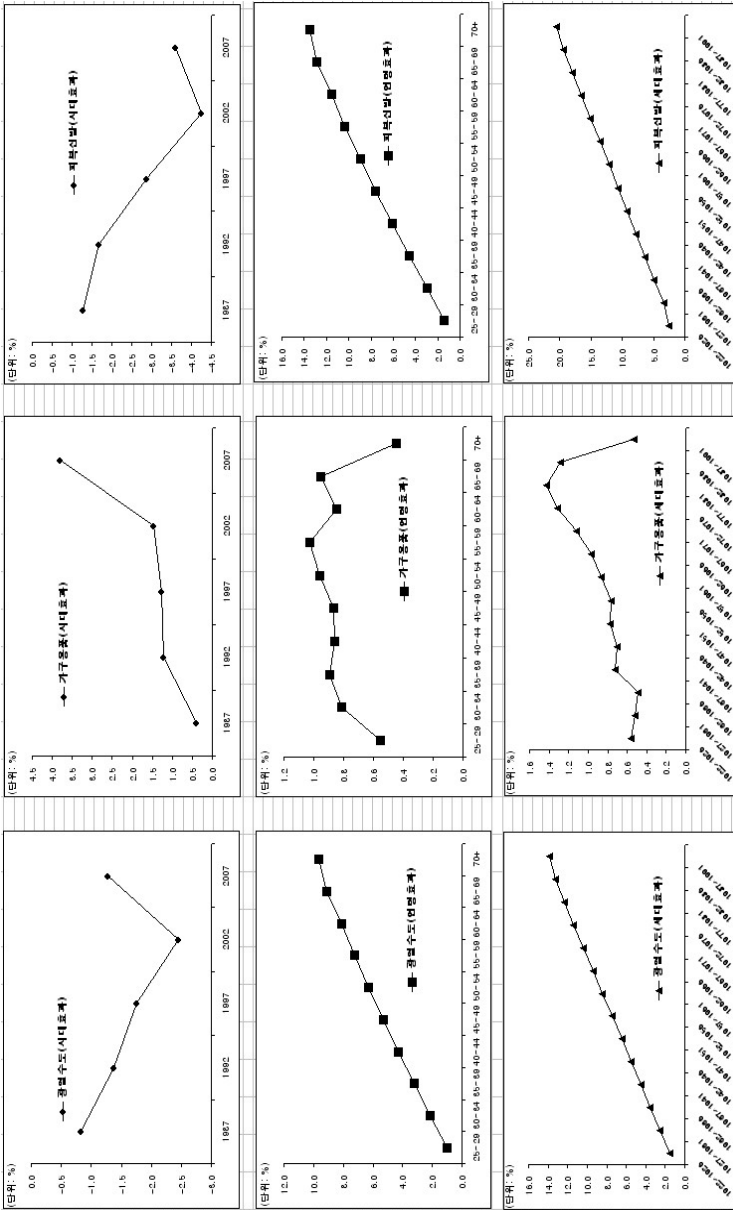
[그림 III-5-12] 우리나라에 대한 코호트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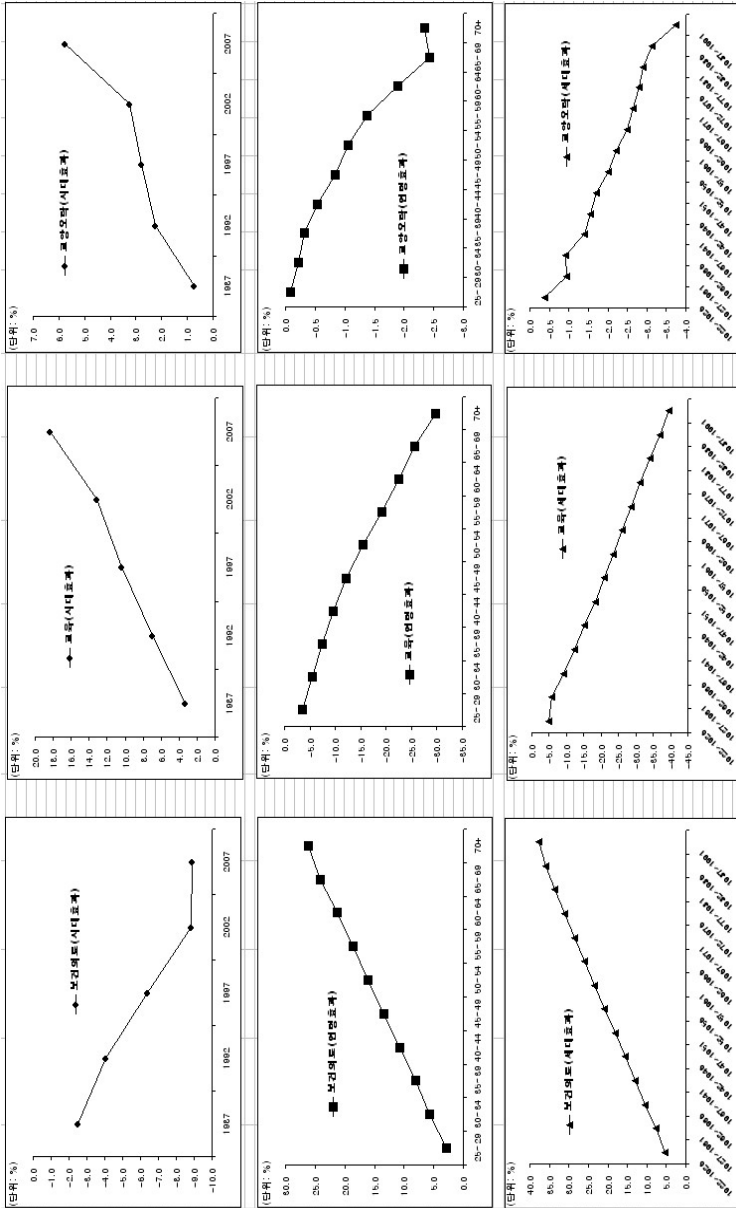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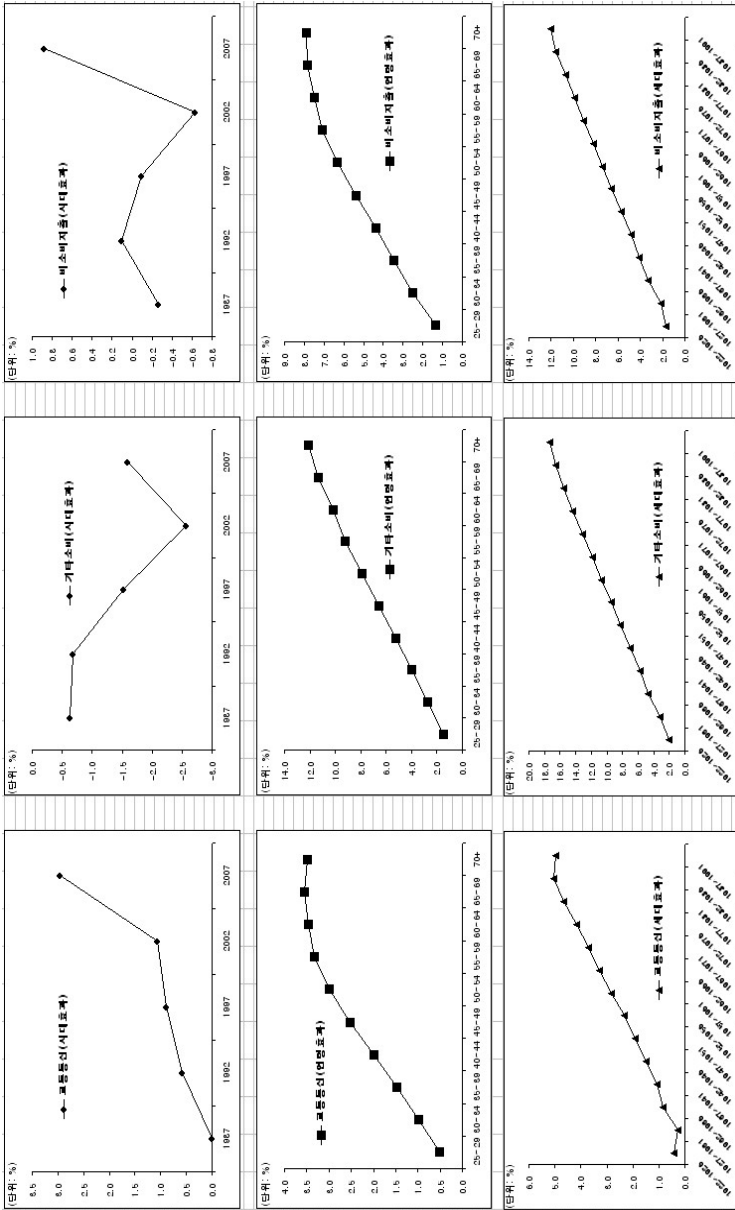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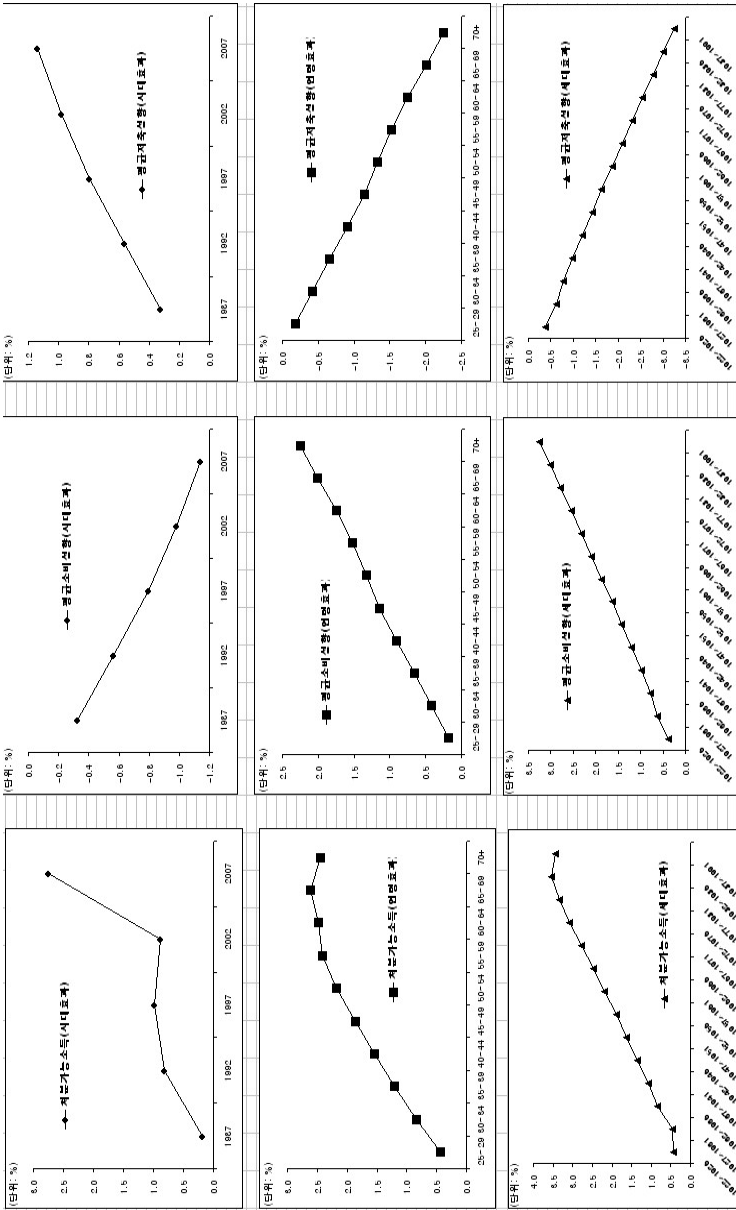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187











## 6. 자산규모 및 구조

본절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자산형태별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 추이, 패널회귀분석, 고령자와 평균세대의 자산 및 부채 보유 비교 등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규모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 가. 우리나라의 자산 규모 및 구조

우선 우리나라 실물자산의 규모 및 구조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통계청 『국가자산통계』의 1997~2009년 집계표이며, 분석대상 변수는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개인 등 제도부문별 자산총액 및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내구소비재별 통계와 자산형태별 통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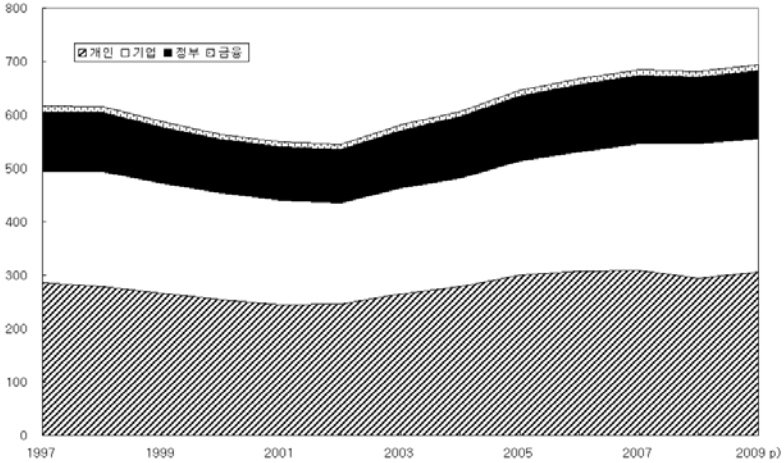
[그림 III-6-1] 및 <표 III-6-1>을 보면, 국민경제 전체의 실물자산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에 잠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현재 GDP의 6.9배 수준에 달한다. 자산형태별로는 건물, 차량, 기계,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생산자산과 토지, 임목, 지하광물 등 비생산자산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개인부문이 보유하는 내구소비재의 비중이 약 3% 정도이다. 생산자산 중에서는 비주거용건물(12.1%), 구축물(11.7%), 주거용건물(10.9%)이, 비생산자산 중에서는 대지(24.9%), 농경지(7.4%), 공공용지(6.4%)의 비중이 크다.

개인부문의 실물자산 규모는 GDP의 2.4~3.1배 범위에서 등락을 보였다. 개인이 보유한 생산자산은 GDP 대비 0.8~0.9배 범위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온 반면, 개인이 보유한 비생산자산은 외환위기 및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림 III-6-1] 우리나라의 부문별 실물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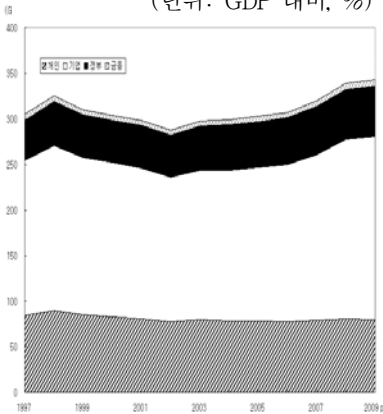
(1) 자산총액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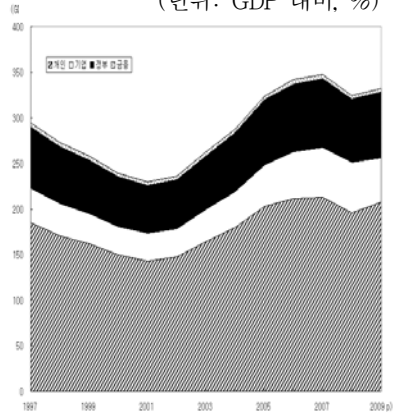
(2) 생산자산

(단위: GDP 대비, %)



(3) 비생산자산

(단위: GDP 대비, %)



〈표 III-6-1〉 우리나라의 자산형태별 실물자산 추이

(단위: GDP 대비, %)

	1997	2000	2003	2006	2009	
					(비중)	
자산총액	616.3	563.6	580.8	667.3	693.4	100.0
비금융자산	599.5	543.1	560.8	649.1	675.5	97.4
생산자산	305.1	303.5	298.0	306.9	343.3	49.5
유형고정자산	258.8	261.0	261.3	268.4	297.0	42.8
주거용건물	64.7	63.1	65.8	70.8	75.6	10.9
비주거용건물	62.9	62.0	67.1	74.9	83.8	12.1
건축물	59.3	65.6	70.6	73.6	81.0	11.7
운수장비	14.4	15.5	12.9	10.9	11.9	1.7
기계장치	57.5	54.8	44.9	38.2	44.7	6.4
무형고정자산	2.4	3.1	3.6	4.0	4.1	0.6
컴퓨터소프트웨어	2.4	3.1	3.6	3.8	4.0	0.6
기타무형고정자산	0.1	0.1	0.1	0.1	0.1	0.0
재고자산	43.9	39.4	33.1	34.6	42.3	6.1
비생산자산	294.4	239.6	262.8	342.1	332.1	47.9
토지자산	289.1	234.3	257.9	336.0	325.3	46.9
농경지	46.7	37.2	38.5	56.7	51.2	7.4
임야	21.9	16.9	16.9	22.6	20.0	2.9
대지	155.4	125.4	140.1	175.3	172.7	24.9
공공용지	36.5	30.6	34.8	45.0	44.4	6.4
공장용지	12.7	11.1	12.1	16.0	16.6	2.4
기타용지	15.9	13.1	15.5	20.5	20.4	2.9
입목자산	1.8	1.9	1.8	1.9	2.3	0.3
침엽수림	0.8	0.8	0.8	0.9	1.2	0.2
활엽수림	0.5	0.5	0.4	0.4	0.5	0.1
혼효림	0.5	0.6	0.6	0.6	0.7	0.1
지하자산	3.6	3.4	3.1	4.3	4.5	0.6
금속광물·천연가스	0.1	0.1	0.1	0.1	0.2	0.0
비금속광물	3.4	3.3	3.0	4.2	4.3	0.6
내구소비재	16.7	20.5	20.1	18.2	17.9	2.6
가구및장치품	3.2	3.1	2.8	2.8	2.8	0.4
가정용기구	2.7	3.1	2.8	2.6	2.5	0.4
개인수송기구	6.1	7.5	8.1	7.7	7.6	1.1
영상·음향·통신기기	3.6	5.6	5.3	4.2	4.1	0.6
기타	1.1	1.1	1.0	0.9	0.9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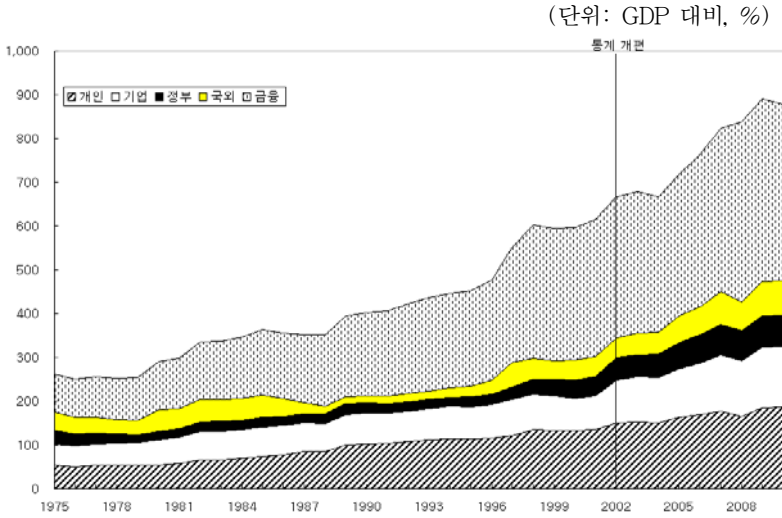
다음은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규모 및 구조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는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 금융자산부채잔액표』의 1975~2005년 집계표(1968 SNA기준) 및 2002~2010년 집계표(1993 SNA기준)이며, 분석대상 변수는 기업, 금융, 일반, 개인, 국외 등 제도부문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총액, 15개(1968 SNA기준) 또는 14개(1993 SNA기준) 항목별 금액이다.

국민경제 전체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규모는 1975년 GDP 대비 262.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에 891.1%에 달하였다. 2010년에는 다소 하락하여 878.1%였다. 기업부문은 항상 자금조달자(순채무 부문)이고 개인 및 정부부문이 자금공급자 역할을 해 왔다. 개인부문의 순금융자산 규모는 조금씩 상승하여 1998년에 GDP 대비 80.3%에 도달한 후 2001년까지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0년 현재는 100.0%에 달한다. 정부부문의 순금융자산 규모도 조금씩 상승하여 최근에는 GDP 대비 4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기업부문의 순금융부채 규모는 1998년에 GDP 대비 105.5%로 정점에 도달한 후 잠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0년 현재는 151.2%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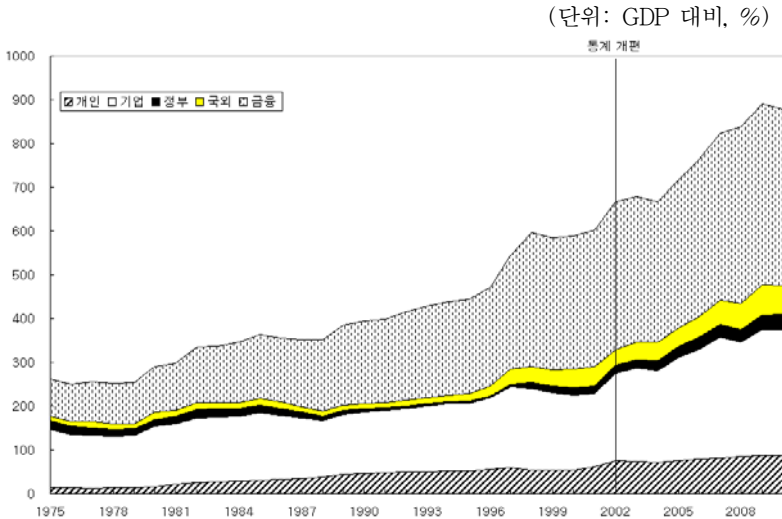
한편, <표 III-6-2>에 정리된 우리나라 부문별 금융자산 구조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이후 예금·채권·대출금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주식·출자지분, 보험·연금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가 개인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예금자산의 비중이 2000년 61.1%에서 2010년 현재 45.0%로 크게 하락한 반면 주식·출자지분의 비중은 8.6%에서 20.1%로, 보험·연금은 18.1%에서 24.4%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업부문에서도 출자지분 자산과 부채 비중이 2000년 9.7% 및 18.4%에서 28.6% 및 45.2%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Ⅲ-6-2] 우리나라의 부문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추이

(1) 금융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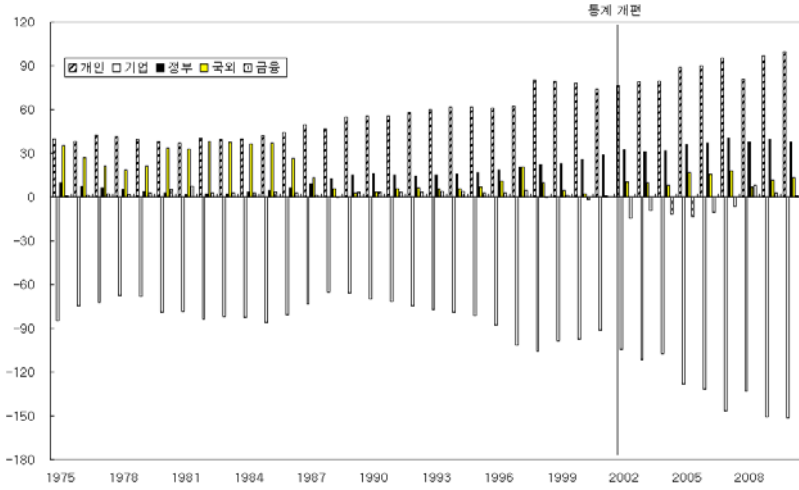
(2) 금융부채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197

(3) 순금융자산

(단위: GDP 대비, %)



〈표 III-6-2〉 우리나라의 부문별 금융자산 구조 추이

(단위: %)

	금융자산				금융부채				
	1975	1990	2000	2010	1975	1990	2000	2010	
합계	금, 통화, 예금	17.7	22.0	21.4	18.1	17.7	22.5	21.7	18.1
	보험, 연금	0.8	4.5	4.0	5.2	0.8	4.6	4.1	5.2
	채권	2.0	14.4	21.6	19.3	2.0	14.7	21.9	19.3
	대출금	22.4	25.2	19.1	17.7	22.4	25.8	19.3	17.7
	주식, 출자지분	13.0	10.5	8.3	18.3	13.0	8.4	7.2	18.3
	정부용자	4.6	1.5	2.1	2.3	4.6	1.6	2.1	2.3
	외환보유액	2.6	1.4	3.4	3.2	2.6	1.4	3.4	3.2
	직접투자	0.0	1.0	2.7	2.9	0.0	1.0	2.8	2.9
	상거래신용	4.5	5.0	2.8	3.2	4.5	5.1	2.8	3.2
기타	32.4	14.6	14.6	9.8	32.4	15.0	14.8	9.8	
개인	금, 통화, 예금	42.8	48.1	61.1	45.0	0.0	0.0	0.0	0.0
	보험, 연금	4.1	17.7	18.1	24.4	0.0	0.0	0.0	0.0
	채권	3.2	14.1	9.3	9.8	0.0	0.0	0.0	0.0
	대출금	0.0	0.0	0.0	0.0	89.8	80.7	88.5	93.6
	주식, 출자지분	24.1	14.6	8.6	20.1	0.0	0.0	0.0	0.0
	정부용자	0.0	0.0	0.0	0.0	1.1	1.7	0.6	0.5
	외환보유액	0.0	0.0	0.0	0.0	0.0	0.0	0.0	0.0
	직접투자	0.0	0.0	0.0	0.3	0.0	0.0	0.0	0.0
	상거래신용	0.0	0.0	0.0	0.0	9.1	12.6	7.4	5.1
기타	25.8	5.5	2.9	0.4	0.0	5.0	3.5	0.8	
기업	금, 통화, 예금	25.4	30.8	33.3	25.6	0.0	0.0	0.0	0.0
	보험, 연금	0.0	0.0	0.0	0.0	0.0	0.0	0.0	0.0
	채권	1.0	9.1	8.3	5.3	1.4	18.5	22.7	12.9
	대출금	0.0	0.0	0.0	0.0	23.6	36.6	31.6	22.6
	주식, 출자지분	5.4	7.1	9.7	28.6	21.7	18.3	18.4	45.2
	정부용자	0.0	0.0	0.0	0.0	5.7	1.1	1.4	0.9
	외환보유액	0.0	0.0	0.0	0.0	0.0	0.0	0.0	0.0
	직접투자	0.0	2.5	10.5	8.7	0.0	1.3	4.2	3.2
	상거래신용	24.4	28.6	22.6	19.4	7.9	10.1	7.4	7.5
기타	43.8	21.9	15.6	12.4	39.7	14.0	14.3	7.6	
금융	금, 통화, 예금	10.6	5.3	4.6	7.5	53.9	47.1	42.1	39.3
	보험, 연금	0.0	0.0	0.0	0.0	2.5	9.6	7.9	11.3
	채권	3.5	17.7	30.6	26.2	3.1	15.6	25.6	22.5
	대출금	67.8	53.1	37.7	38.6	9.1	5.5	3.1	1.6
	주식, 출자지분	3.7	8.3	4.3	8.4	6.2	4.1	3.6	7.4
	정부용자	0.0	0.0	0.0	0.0	5.1	2.0	3.2	4.3
	외환보유액	7.9	2.9	6.7	6.9	0.0	0.0	0.0	0.0
	직접투자	0.0	0.1	0.1	0.2	0.0	0.1	0.3	0.8
	상거래신용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6.5	12.7	16.0	12.1	20.1	16.0	14.2	12.6	

주: 1975~2001년은 1968 SNA기준이며, 2002~2010년은 1993 SNA기준임.

출처: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 금융자산부채잔액표』

## 나. OECD 국가와의 비교

OECD의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28개 OECD 국가에 대한 가계부문의 1인당 비금융자산(Non-financial assets of households per capita, current PPPs, US dollars) 및 주택(Dwellings), 토지(Land), 기타 비금융자산 등 항목별 내역 데이터와 가계부문의 1인당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held by households, per capita, US dollars, current PPPs) 및 금융자산별 비중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제비교를 실시했다. 금융자산은 통화 및 예금(Currency and deposits), 채권(Securities other than shares), 대출금(Loans), 주식(Shares and other equity), 보험(Insurance technical reserves), 기타 금융자산(Other accounts receivable)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표 III-6-3>, <표 III-6-4> 및 [그림 III-6-3]에 정리된 우리나라의 가계당 자산규모는 2008년 말 현재 11만 8,400달러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작지는 않지만, 금융자산의 비중이 37.4%에 불과하여 호주, 체코, 프랑스와 비슷하지만 캐나다나 일본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28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1인당 금융자산규모는 20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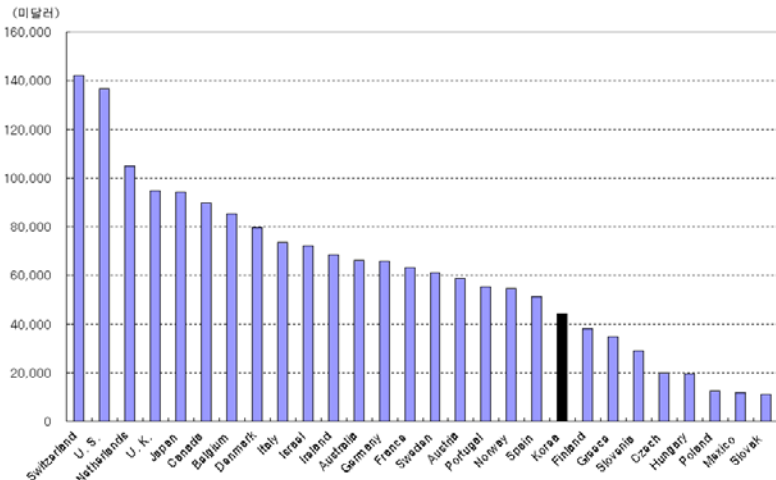
그러나 <표 III-6-5>의 패널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2008년 우리나라의 가계부문 1인당 총자산, 비금융자산, 금융자산에 대한 적정규모를 추정해 보면 각각 12만 1,693달러, 7만 1,572달러, 4만 9,670달러로 나타났다. 실적치가 각각 11만 8,400달러, 7만 4,082달러, 4만 4,317달러로 이러한 추정치의 97.3%, 103.5%, 89.2% 수준이므로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작지는 않지만 그 구성이 비금융자산에 다소 편중되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가계금융 이용 실태』(2006)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비중 78%가 미국(2005년)과 일본(2004년)이 각각 39%, 42%인 것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 III-6-3〉 가구당 자산규모의 국제비교(2008년 기준)

	한국	호주	캐나다	체코	프랑스	일본
노령인구비중	10.32	13.17	13.67	14.72	16.63	22.10
1인당GDP (PPP달러)	26,877	39,058	38,883	25,845	33,963	33,805
비금융자산 (달러)	74,082	132,292	67,536	26,552	123,999	69,980
금융자산 (달러)	44,317	66,164	89,947	20,022	62,958	94,149
총자산(달러) (한국=100)	(100)	(168)	(133)	(39)	(158)	(139)
금융자산 비중 (%)	37.43	33.34	57.12	42.99	33.68	57.36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데이터베이스

[그림 III-6-3] 가구당 금융자산규모의 국제비교(2008년 기준)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데이터베이스

〈표 III-6-4〉 G7국가와의 가계부문 자산 비교

(1) 가구당 자산 규모 및 구성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비금융자산(달러)	67,536	123,999	..	..	69,980	74,082	..	..
금융자산(달러)	89,947	62,958	65,965	73,448	94,149	44,317	94,909	136,693
총자산	157,483	186,957	..	..	164,129	118,400	..	..
금융자산 비중(%)	57.1	33.7	..	..	57.4	37.4	..	..

(2) 가구당 비금융자산 규모 및 구성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비금융자산 규모(달러)								
총규모	67,536	123,999	..	..	69,980	74,082	..	..
비금융자산별 규모(달러)								
- 주택	35,149	54,759	51,040	..	..	..	..	51,167
- 토지	30,783	61,239	..	..	53,082	..	..	..
- 기타 비금융자산	1,604	8,001	..	..	..	..	..	..
비금융자산별 비중(%)								
- 주택	52.04	44.16	..	..	..	38.80	..	..
- 토지	45.58	49.39	..	..	75.85	51.63	..	..
- 기타 비금융자산	2.38	6.45	..	..	..	9.57	..	..

## (3) 가구당 금융자산 규모 및 구성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금융자산 규모(달러)								
총규모	89,947	62,958	65,965	73,448	94,149	44,317	94,909	136,693
금융자산별 비중(%)								
- 통화 및 예금	23.10	30.97	39.19	30.04	55.98	46.73	31.94	15.34
- 채권	3.31	1.61	7.36	21.85	3.11	11.29	0.95	9.32
- 대출금	0.29	0.88	0.00	0.40	0.00	0.00	0.50	2.12
- 주식	32.76	22.98	19.19	27.98	9.17	16.24	11.07	43.55
- 보험	36.48	38.62	33.37	16.65	28.28	21.80	52.05	29.67
- 기타 금융자산	4.06	4.93	0.90	3.08	3.45	3.94	3.50	0.00

한편, 우리나라 이외에 호주, 캐나다, 체코, 프랑스, 일본 등 비금융 자산과 금융자산 통계가 모두 있는 6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비금융자산이 줄어드는 대신 금융자산이 증가하지만 비금융자산 감소를 모두 상쇄하지는 못해 총자산 규모는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종류의 비금융자산이 모두 감소하지만 비금융자산 내에서는 주택의 비중이 증가하고 토지나 기타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금융자산 내에서는 통화 및 예금, 채권, 보험 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주식의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5〉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가계자산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1인당 총자산 규모	-1,408	-0.2	-1,051	-1.3	5,1141	21.8	0.951
1인당 비금융자산 규모	-863	-0.3	-2,891	-4.2	2,6558	15.0	0.879
- 주택	-309	-0.4	-3,406	-7.7	1,5785	27.8	0.971
- 토지	2,018	1.0	-1,571	-2.3	1,4966	9.5	0.833
- 기타 비금융자산	644	3.4	-698	-6.6	0,2133	12.3	0.926
비금융자산 비중	-0.168	-0.3	-2,390	-16.8	0,1710	4.6	0.959
(주택 비중)	1,092	3.1	5,082	15.3	-0,0008	-19.7	0.986
(토지 비중)	-0,790	-1.7	-1,466	-7.9	0,0006	15.6	0.992
(기타 비금융자산 비중)	-0,026	-0.1	-1,078	-5.0	-0,0001	-5.2	0.977
1인당 금융자산 규모	-1,906	-0.9	1,998	7.2	2,3246	21.3	0.980
- 통화 및 예금	1,540	6.4	3,354	44.6	0,0294	1.3	0.994
- 채권	-160	-1.9	84	2.6	0,0067	0.9	0.884
- 대출금	31	1.9	-12	-5.8	0,0080	7.3	0.919
- 주식	-4,102	-3.2	-1,101	-5.7	0,8867	12.6	0.814
- 보험	1,170	1.4	11	0.1	1,1139	24.0	0.963
- 기타 금융자산	-687	-3.5	-34	-1.3	0,1073	12.2	0.879
금융자산 비중	0,168	0.3	2,390	16.8	-0,1710	-4.6	0.959
(통화 및 예금 비중)	3,720	1.6	1,301	5.0	-0,0006	-9.4	0.954
(채권 비중)	1,359	4.5	-0,079	-1.1	-0,0002	-16.2	0.916
(대출금 비중)	0,401	2.5	0,130	6.7	-0,0001	-8.1	0.841
(주식 비중)	-5,123	-2.1	-1,578	-5.7	0,0005	6.8	0.693
(보험 비중)	1,062	3.0	0,492	6.9	0,0004	16.2	0.988
(기타 금융자산 비중)	-0,638	-1.3	-0,229	-4.2	0,0000	0.8	0.733

고광수 등(2005)의 연구에서도 가계의 주식보유는 고연령대 가계일 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의 윤성훈 등(2011)의 연구에서도 고령인구의 비중이 큰 일본은 부동산 보유비중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크고 안전한 자산(예·적금)과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연금 및 보험)의 비중이 늘어났던 점을 들어 인구구조 고령화

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도 부동산 비중은 줄고, 채권과 연금 및 보험의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III-6-6〉 가계자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종속변수(비중, %)	인구증가율 하락	고령인구 비중 증가	1인당 소득 증가	인구구조 변화 반영 <sup>1)</sup>
1인당 총자산 규모			+	
1인당 비금융자산 규모		(-)	+	-67,081
- 주택		(-)	+	-79,025
- 토지		(-)	+	-36,454
- 기타 비금융자산	(-)	(-)	+	-16,952
1인당 금융자산 규모		+	+	46,352
- 통화 및 예금	(-)	+		76,023
- 채권		+		1,956
- 대출금		(-)	+	-288
- 주식	+	(-)	+	-20,785
- 보험			+	
- 기타 금융자산	+		+	

주: 1)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1.16%p(+0.35% → -0.81%) 하락하고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3.2%p(11.0% → 31.2%) 증가할 경우 분석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다음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국가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를 작성하고 있는 영국<sup>39)</sup>, 독일<sup>40)</sup>, 캐나다<sup>41)</sup>, 일본<sup>42)</sup>의 비금융자산,

39) 데이터의 출처는 [http://www.econstats.com/uk/uk\\_bb\\_17a.htm](http://www.econstats.com/uk/uk_bb_17a.htm)이다.

40) 데이터의 출처는 [www.destatis.de](http://www.destatis.de) 「Balance sheets FOR institutional sectors and the total economy」, Statistisches Bundesamt(Federal Statistical Office)이다.

41) 데이터의 출처는 <http://www40.statcan.ca/101/cst01/econ02a-eng.htm>이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규모와 항목별 비중 추이([부록 3] 참조)를 살펴보았다. 우선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 전체의 경우에는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가계부문만으로 한정해 보면 하락하는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자산의 구성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경제 전체의 설비자산이나 주택 이외 건축물의 비중이 낮아지고<sup>43)</sup> 가계부문 실물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제3절의 '가. 국민소득 지출 및 수요구조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설비투자 비중은 상승하는 반면, 건설투자 비중이 하락한다는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는 경제 전체의 대출금과 주식 비중이 하락하는 대신 채권 비중이 상승하고 가계부문 금융자산에서도 대출금과 주식 비중이 하락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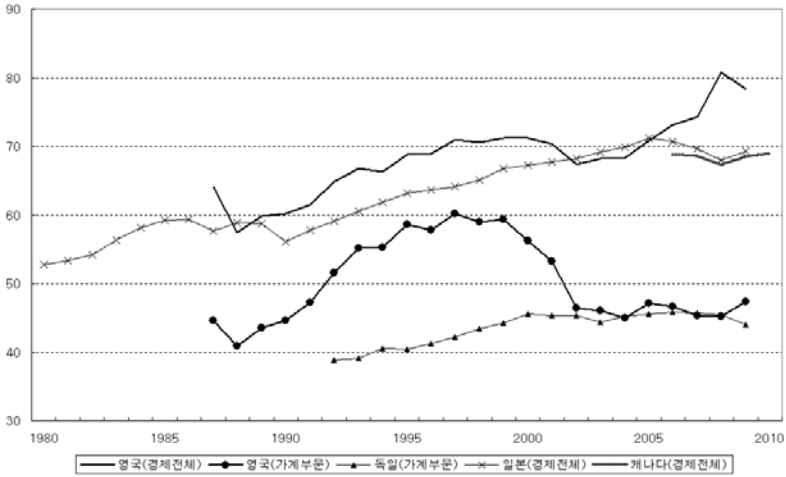
---

42) 데이터의 출처는 [http://www.esri.cao.go.jp/jp/sna/kakuhou/kekka/h21\\_kaku/21ss1\\_jp.xls](http://www.esri.cao.go.jp/jp/sna/kakuhou/kekka/h21_kaku/21ss1_jp.xl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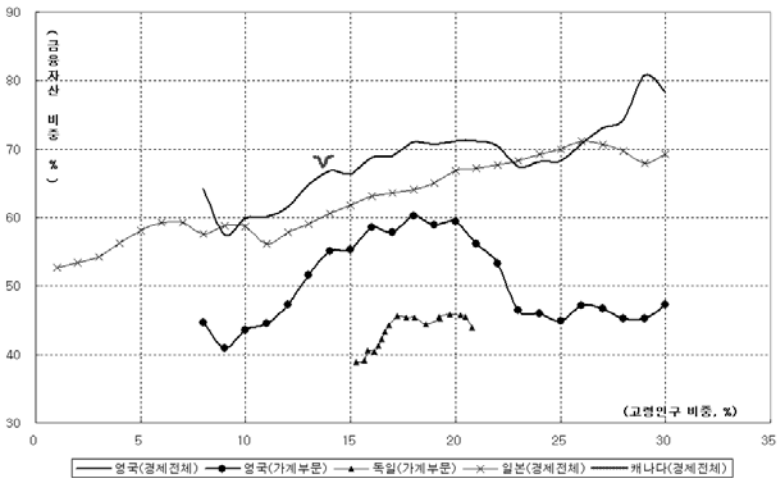
43) 일본은 예외였다.

[그림 III-6-4] 주요국의 금융자산 비중 추이

(1) 시계열 추이



(2) 인구 고령화와의 관계



#### 다. 연령대별 자산 및 부채 구성

인구구성 변화는 통상 연령별 자산선호의 변화 등을 통해 금융부문에 영향을 미치는데 통상 연령별 위험선호에도 차이가 있어 젊을수록 은행예금 및 MMF(Money Market Fund)보다 주식, 채권 등 위험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경향이 있으나 향후 노령인구의 비중 증대로 저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연령대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이 향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전에는 부동산 가격 및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은퇴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향후 자산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 및 실물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 데이터에 나타난 가구주 연령별 자산 및 부채 분포를 정리한 <표 III-6-11>을 보면,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규모는 45~54세 연령대를 정점으로 그 이하의 연령층과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 해당 변수의 값이 작아지는 역U자형의 분포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재(2011)에 따르면 <표 III-6-12>에서 보이듯이 자산유형별로 연령별 평균 자산보유액이 최고점을 나타내는 연령대는 주택자산의 경우 50대 초반, 부동산자산의 경우에는 40대 후반,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50대 초반~50대 후반으로 비교적 연령대가 높다. 이에 반해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30대 후반으로 최고연령대가 낮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 시기에 가장 자산규모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그 이후의 연령대에 진입하면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를 옮김에 따라 전세보증금 중 상당 부분이 주택자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채의 경우 <표 III-6-13>에서 보듯이 대부

분은 금융부채가 차지하고 있다. 금융부채의 경우 40대 후반에서 부채 규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50대 후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가진 주된 연령대가 50대 후반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주택대출금의 경우에는 주로 30대 후반에서 정점을 이루는데 이는 주택을 주로 구입하기 시작하는 주 연령대가 3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40대 후반~50대 후반에 걸쳐 대출금 수준이 가장 높다. 이는 이들 연령대의 가구에서 대학생 자녀 비율이 높고, 따라서 등록금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209

〈표 III-6-11〉 재정패널자료의 연령별 자산 및 부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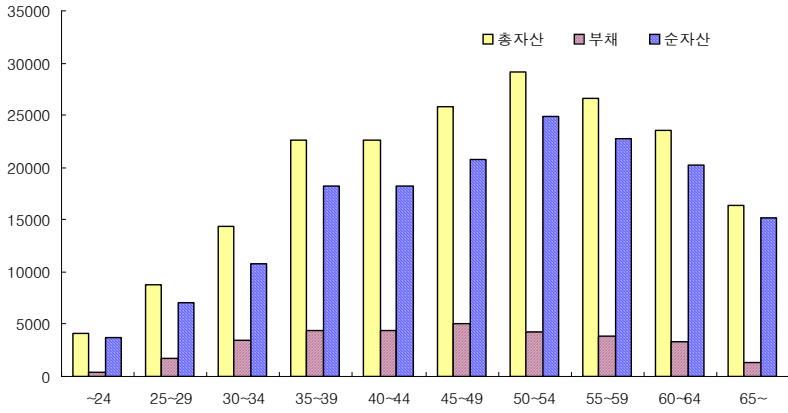
(단위: 만원)

	24세 이하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세 이상	평균
총자산											
2007	3,894	7,646	14,107	21,070	24,517	27,495	27,182	23,883	26,742	16,206	21,084
2008	2,753	9,331	13,695	21,597	23,724	23,567	28,828	25,177	25,909	16,050	20,894
2009	4,060	8,719	14,337	22,658	22,567	25,804	29,197	26,590	23,561	16,423	21,561
총자산(평균=100 기준)											
2007	18	36	67	100	116	130	129	113	127	77	100
2008	13	45	66	103	114	113	138	120	124	77	100
2009	19	40	66	105	105	120	135	123	109	76	100
총부채											
2007	252	1,122	2,822	4,420	4,648	4,330	3,877	3,929	4,577	1,408	3,433
2008	403	1,645	3,135	4,419	4,508	4,734	4,404	4,273	2,992	1,585	3,561
2009	342	1,693	3,505	4,426	4,331	5,094	4,307	3,843	3,298	1,300	3,580
총부채(평균=100 기준)											
2007	7	33	82	129	135	126	113	114	133	41	100
2008	11	46	88	124	127	133	124	120	84	45	100
2009	10	47	98	124	121	142	120	107	92	36	100
순자산											
2007	3,642	6,523	11,285	16,650	19,870	23,164	23,304	19,953	22,165	14,798	17,651
2008	2,350	7,686	10,560	17,178	19,216	18,833	24,424	20,903	22,917	14,465	17,333
2009	3,718	7,026	10,832	18,232	18,237	20,709	24,890	22,747	20,262	15,123	17,981
순자산(평균=100 기준)											
2007	21	37	64	94	113	131	132	113	126	84	100
2008	14	44	61	99	111	109	141	121	132	83	100
2009	21	39	60	101	101	115	138	127	113	84	100

출처: 성명재(2011)

[그림 III-6-5] 가구 연령별 총자산·부채·순자산 분포  
(재정패널자료 2009년 기준)

(단위: 만원)



출처: 성명재(2011)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211

〈표 III-6-12〉 가구주 연령별 주요 자산 항목의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만원)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주택자산											
2007	2,463	3,743	8,648	13,045	16,378	18,050	18,243	17,116	17,161	11,450	13,894
2008	1,526	4,145	8,425	13,745	14,711	15,012	19,730	17,102	15,949	11,560	13,567
2009	2,195	3,365	7,612	12,797	14,263	14,510	18,873	17,848	15,286	11,571	13,292
부동산자산											
2007	0	172	382	2,311	1,991	3,629	3,922	2,999	6,344	2,863	2,660
2008	0	1,504	453	1,610	2,327	3,383	3,805	3,754	6,304	2,187	2,602
2009	0	1,131	1,297	2,835	1,845	4,595	4,409	3,430	4,198	2,463	2,946
전세보증금											
2007	922	2,357	3,049	3,033	2,783	1,895	1,397	932	900	439	1,871
2008	893	2,481	3,071	3,478	3,817	2,324	2,028	1,201	986	682	2,266
2009	1,269	2,928	3,544	3,961	3,461	3,332	2,068	1,489	1,203	712	2,536
회원권											
2007	0	0	0	31	2	169	42	67	99	27	48
2008	0	0	0	25	10	71	53	92	9	42	35
2009	0	0	0	2	10	3	9	13	35	5	7
기타자산											
2007	0	5	137	121	228	1,059	514	96	254	13	288
2008	1	6	91	200	65	93	106	187	168	90	110
2009	10	9	24	143	47	188	276	304	164	48	133
금융자산											
2007	508	1,369	1,891	2,528	3,136	2,693	3,063	2,673	1,984	1,412	2,322
2008	332	1,195	1,655	2,538	2,794	2,684	3,105	2,840	2,492	1,488	2,312
2009	586	1,285	1,860	2,921	2,941	3,176	3,562	3,504	2,675	1,625	2,648

출처: 성명재(2011)

〈표 III-6-13〉 가구주 연령별 주요 부채 항목의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만원)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주택대출											
2007	0	136	402	565	432	329	161	257	139	106	294
2008	64	340	436	470	576	423	373	254	173	95	352
2009	0	98	190	233	119	110	47	37	142	34	111
학자금대출											
2007	62	16	4	2	7	51	98	34	35	9	28
2008	123	55	8	6	8	78	141	57	28	3	41
2009	33	46	16	0	8	85	121	184	5	1	47
금융부채											
2007	181	617	1,794	2,561	2,972	2,710	2,362	2,660	2,772	715	2,102
2008	139	660	1,930	2,314	2,655	2,971	2,150	2,461	1,738	830	1,995
2009	308	969	2,535	2,784	2,988	3,310	2,678	2,024	2,094	655	2,265
전세보증금											
2007	0	280	538	1,049	945	966	1,101	937	1,435	521	845
2008	72	588	717	1,553	1,231	1,156	1,693	1,479	983	640	1,124
2009	0	579	705	1,327	1,060	1,444	1,337	1,496	1,041	597	1,073
기타부채											
2007	8	74	84	242	291	274	155	41	195	56	165
2008	5	2	45	77	39	106	47	22	71	16	49
2009	1	1	58	82	156	145	124	101	17	13	84

출처: 성명재(2011)

다음으로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결과』의 2006년 자료에 따르면, 〈표 III-6-14〉에서 보듯이 자산규모는 총자산과 순자산 모두 가구주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다가 각각 50대와 60대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자산은 40대(5,611만원), 부동산은 50대(2억 2,597만원) 가구주 가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금융 및 기타 자산은 가구주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동산은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중이 상승하였다. 금융자산 비중은 가구주 나이가 29세 이하인 가계(53.6%)가, 부동산 비중은 가구주 나이가 60세 이상 가계(85.2%)가

가장 높았다.

최근 통계인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의 2010년 원시자료 및 집계표의 연령대별(~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자산 및 부채의 1인당 규모 및 <표 III-6-15>와 같은 항목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림 III-6-6]에 정리된 연령대별 자산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는 60~65세에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데, 이는 금융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규모가 큰 비금융자산이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은 45~50세에 정점에 도달하는 반면 금융부채는 이보다 다소 늦은 50~55세에 정점에 도달한다.

<표 III-6-14> 2006년 가계자산조사의 가구주 연령별 자산보유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전체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BB	
							65세~	BB
<b>구성비</b>	<b>100.0</b>	<b>5.9</b>	<b>20.7</b>	<b>30.1</b>	<b>20.4</b>	<b>22.9</b>	<b>15.4</b>	<b>26.6</b>
<b>총자산</b>	28,112.3	5,418.2	18,001.0	30,260.2	37,243.4	32,075.8	29,544.3	31,063.4
<b>금융자산</b>	5,744.8	2,903.8	5,611.3	6,744.3	6,548.4	4,557.4	4,034.9	6,539.4
	20.4	53.6	31.2	22.3	17.6	14.2	13.7	21.1
저축액	4,569.8	1,350.5	3,647.1	5,313.7	5,875.3	4,081.2	3,562.2	5,307.6
은행예적금	2,641.3	915.4	1,944.5	2,662.5	3,514.4	2,905.1	2,724.2	2,721.8
저축성보험	1,028.4	313.9	995.0	1,498.9	1,309.4	370.3	235.3	1,470.6
주식	274.2	24.3	258.5	377.4	201.6	281.1	282.2	332.5
채권	16.3	1.8	13.5	25.2	5.9	20.2	5.1	23.5
기타	609.6	95.2	435.7	749.7	844.0	504.5	315.4	759.2
전월세보증금	1,175.0	1,553.3	1,964.2	1,430.6	673.1	476.1	472.7	1,231.8
<b>부동산</b>	21,604.1	2,137.7	11,598.0	22,597.1	29,723.2	27,072.3	25,175.1	23,606.3
	76.8	39.5	64.4	74.7	79.8	84.4	85.2	76.0
주택	12,755.9	1,673.5	8,602.5	14,345.4	16,470.9	13,934.5	12,769.9	14,743.3
주택 이외	8,848.2	464.2	2,995.6	8,251.7	13,252.3	13,137.9	12,405.2	8,862.9
<b>기타자산</b>	763.5	376.8	791.6	918.9	971.8	446.1	334.3	917.7
	2.7	7.0	4.4	3.0	2.6	1.4	1.1	3.0
<b>부채총액</b>	3,947.9	986.5	3,722.7	4,943.4	4,620.0	2,997.2	2,488.5	4,682.8
<b>순자산</b>	24,164.4	4,431.7	14,278.3	25,316.9	32,623.4	29,078.6	27,055.9	26,380.6

주: 1. BB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로서 2006년 당시 만 43~51세.

2. ( ) 안은 총자산에 대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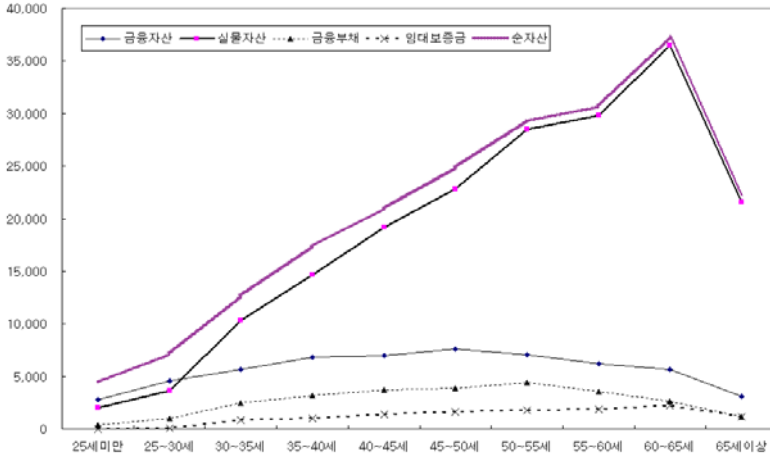
〈표 Ⅲ-6-15〉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의 자산부채 항목

자산총액	부채총액
금융자산	금융부채
저축액	금융대출
적립식	담보대출
목돈투자	신용대출
기타 저축	신용카드 관련 대출
전월세보증금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
실물자산	기타 부채
부동산	갯돈 미불입금
거주주택	임대보증금
거주주택 이외	자가 임대
토지	자가 이외 부동산임대
계약금 및 중도금납입액	
거주주택 이외(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기타실물자산	
자동차	
자동차 이외	순자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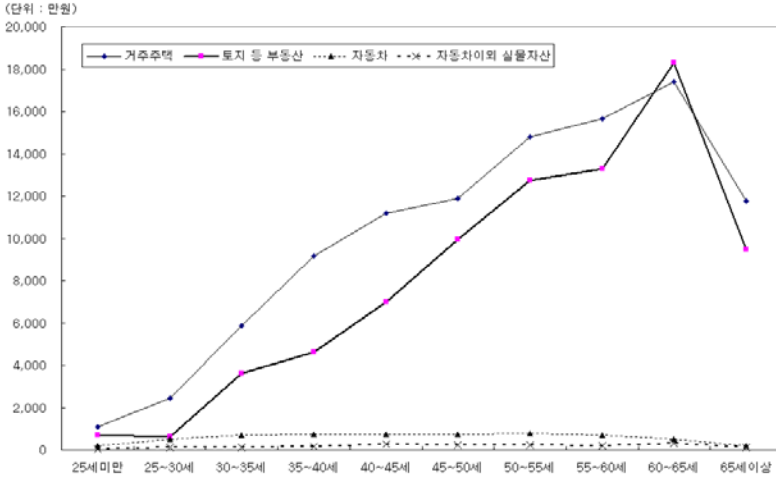
[그림 Ⅲ-6-6] 연령별 자산 및 부채 현황(2010년 기준)

##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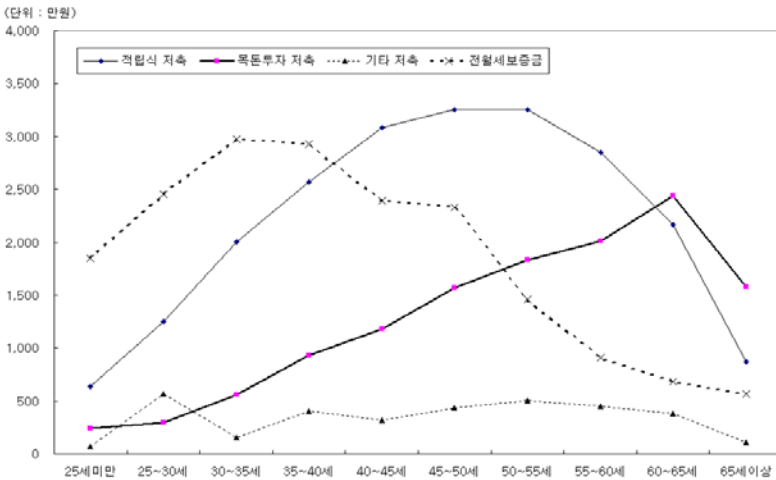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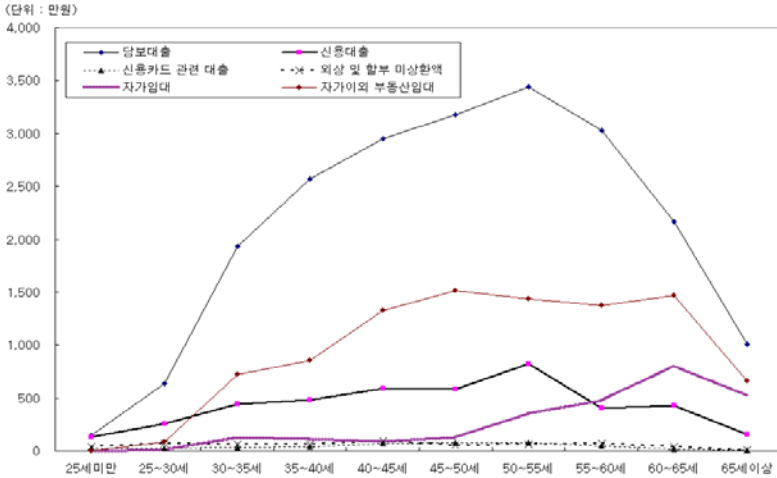
(2) 비금융자산



(3) 금융자산



## (4) 금융부채



〈표 III-6-16〉에 정리된 1997년 대우패널에 나타난 연령별 자산 및 부채 평균 보유액과 비교해 보면 총자산 및 순자산이 45~49세에 정점에 도달했던 것에 비해 지난 10여 년간 고령층의 자산규모가 상당히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비금융자산은 거주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모두 60~65세에 자산 규모가 가장 크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적립식 저축이 45~50세에 정점에 도달하는 반면, 목돈투자 저축은 60~65세, 기타저축은 50~55세에 정점에 도달한다.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50~55세에 정점에 도달하는 반면, 자가임대는 60~65세에 정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16〉 1997년 대우패널의 연령별 자산 및 부채 평균 보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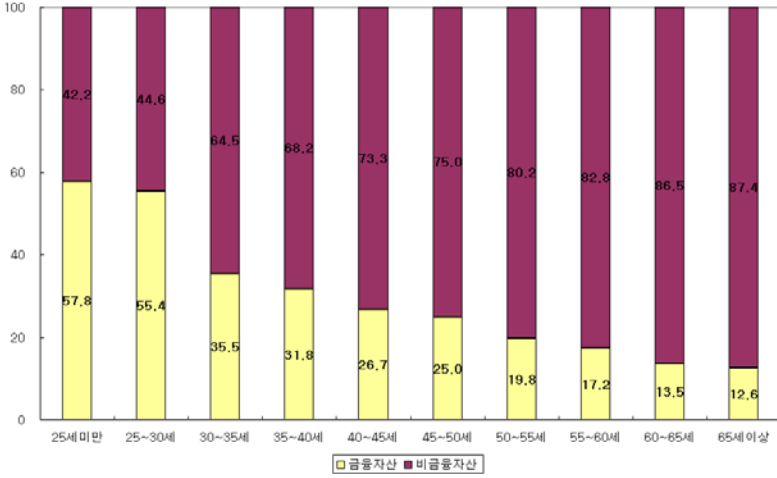
(단위: 만원)

연령(세)	총자산	순자산	순금융자산
15~19	54.59	50.02	3.17
20~24	583.93	529.02	40.47
25~29	1,549.42	1,388.66	14.075
30~34	2,945.83	2,674.72	761.22
35~39	3,868.14	3,310.30	606.62
40~44	5,224.90	4,563.54	524.16
45~49	5,461.69	4,835.11	404.70
50~54	4,960.99	4,563.35	377.61
55~59	4,785.56	4,223.12	10.93
60~64	4,219.06	3,834.11	154.52
65~69	3,726.89	3,479.66	63.44
70~74	3,267.83	3,064.87	43.29
75세 이상	2,437.48	2,342.55	232.91
전체	2,562.73	2,291.93	22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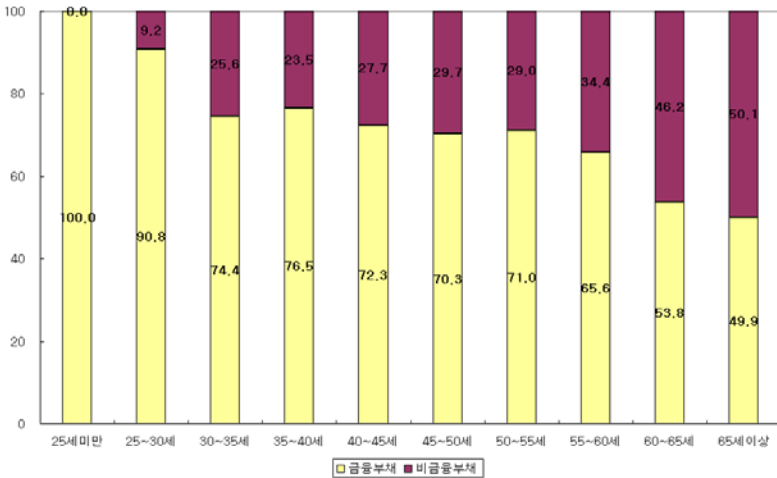
한편, [그림 III-6-7]의 연령대별 가계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 비중이 79%로 매우 높는데,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그 비중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계부채 구성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금융부채 비중도 높아지는데, 60세 이상에서는 50% 내외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표 III-6-17〉 및 〈표 III-6-18〉에 정리된 한국노동패널 및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8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의 부가조사로 실시한 ‘가계의 자산 및 부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부동산정보 종합포털 온나라에 의하면 〈표 III-6-19〉에서 보듯이 50대 및 60대의 토지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6-7] 연령별 자산 및 부채구성

(1) 연령대별 자산구성



(2) 연령대별 부채구성



〈표 III-6-17〉 연령대별 평균 자산보유 현황(실질 기준)

(단위: 만원, %)

	1999년도 조사 (제2차)			2008년도 조사 (제11차)		
	총자산	금융자산	(비중)	총자산	금융자산	(비중)
20~24세	2,599	768	29.5	449	449	100.0
25~29세	2,405	1,115	46.4	7,521	1,506	20.0
30~34세	6,334	1,480	23.4	8,488	1,422	16.8
35~39세	8,520	1,676	19.7	12,493	1,795	14.4
40~44세	10,829	1,622	15.0	14,897	1,863	12.5
45~49세	15,026	1,877	12.5	19,326	1,403	7.3
50~54세	16,778	2,013	12.0	21,552	1,701	7.9
55~59세	14,911	1,715	11.5	27,644	3,278	11.9
60~64세	14,698	1,809	12.3	23,845	2,037	8.5
65~69세	13,550	1,223	9.0	19,443	1,846	9.5
70~74세	11,265	662	5.9	15,013	1,620	10.8
75세 이상	9,737	654	6.7	14,010	1,257	9.0
전체	11,447	1,604	14.0	17,336	1,810	10.4

출처: 한국노동패널(1999년(2차) 및 2008년(11차), 이상호(2010)에서 재인용

〈표 III-6-18〉 삼성경제연구소의 가계의 자산 및 부채 실태조사 결과  
(2008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의 부가조사)

(1) 부동산자산 비중

(단위: 명, %)

	응답자수	20% 미만	20~40%	40~60%	60~80%	80% 이상	평균
20~29세	56	1.8	7.1	26.8	32.1	32.1	62.6
30~39세	232	3.4	4.7	22.0	38.8	31.0	63.7
40~49세	323	1.5	5.3	17.0	37.8	38.4	67.4
50세 이상	389	1.3	1.5	16.5	35.5	45.2	71.6

## (2) 보유자산 대비 부채비율

(단위: 명, %)

	응답자수	10% 미만	10~20%	20~30%	30~40%	40% 이상	무응답	평균
20~29세	31	16.1	22.6	6.5	29.0	25.8	0.0	29.5
30~39세	135	14.8	22.2	17.0	20.0	25.2	0.7	25.1
40~49세	213	27.2	23.9	18.8	13.1	15.5	1.4	20.1
50세 이상	163	27.0	25.2	20.9	11.0	14.7	1.2	19.6

## 〈표 III-6-19〉 연령대별 토지소유 현황(2005년 기준)

(단위: %)

	면적(k㎡)		가액(십억)	
		비율		비율
합계	48,749	100.0	1,263,465	100.0
20세 미만	133	0.3	2,565	0.2
20~29세	771	1.6	21,123	1.7
30~39세	3,414	7.0	135,904	10.8
40~49세	9,507	19.5	309,763	24.5
50~59세	12,926	26.5	354,448	28.1
60~69세	12,319	25.3	283,693	22.5
70~79세	6,900	14.2	123,172	9.7
80세 이상	2,778	5.7	32,798	2.6

출처: 부동산정보 종합포털 온나라(<http://www.onnara.go.kr/>)

이상호(2010)는 〈표 III-6-20〉에 정리된 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Tobit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자산(주식과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그는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함수가 연령에 대해 볼록(convex)한 비선형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만

그 감소폭은 점차 줄어든다고 해석하였다.

반면, 고광수 외(2005)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거나 금융자산의 보유규모가 클 경우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교육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금융자산 보유가 커지게 되면 고령세대의 비중 증가로 인한 주식보유 하락분을 상당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인구구조의 고령화 과정에서 출산율 저하로 가계의 교육투자가 늘어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면 저축과 소득이 증대되어 금융자산 수요가 늘어나 금융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김기호·유경원(2008)의 연구도 있다.

실제로 <표 Ⅲ-6-21>에 정리된 개인투자자의 연령별·연도별 주식 보유분포를 살펴본 결과, 은퇴 이전에는 주식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리지만 은퇴 이후에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는 행태는 다소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6-20〉 이상호(2010)의 Tobit 모형 추정결과

설명변수	모형	위험자산소득 불확실성( $\sigma_a^2$ ) 고려시		노동소득 불확실성( $\sigma_w^2$ ) 고려시	
		모형①	모형②	모형③	모형④
		금융소득간 차( $\mu - r$ )	3.471*** (0.255)	3.507*** (0.255)	2.639*** (0.179)
불확실성	-0.003*** (0.001)	-0.003*** (0.001)	-0.002** (0.001)	-0.004*** (0.001)	
가구주 연령( $\bar{A}$ )	-3.788*** (0.113)	-6.580*** (0.353)	-3.787*** (0.116)	-7.014*** (0.372)	
연령 제공( $(\bar{A})^2$ )/100		4.818*** (0.534)		5.405*** (0.554)	
노동소득( $\bar{y}$ )	-0.367*** (0.023)	-0.253*** (0.026)	-0.309*** (0.022)	-0.166*** (0.026)	
총자산 ( $\bar{W} = \bar{a} + \bar{y}$ )	0.425*** (0.012)	0.415*** (0.012)	0.393*** (0.009)	0.382*** (0.009)	
LR	-7,309.840	-7,267.719	-7,317.998	-7,269.541	
$\hat{\sigma}$	125.277*** (2.864)	125.469*** (2.869)	125.961*** (2.884)	126.193*** (2.891)	
총관측치수/절단된 관측치수	4,985/3,993				

설명변수	모형	위험자산소득 불확실성( $\sigma_a^2$ ) 고려시		노동소득 불확실성( $\sigma_w^2$ ) 고려시	
		모형①	모형②	모형③	모형④
		금융소득간 차( $\mu - r$ )	3.488*** (0.255)	3.522*** (0.255)	2.648*** (0.179)
불확실성	-0.003*** (0.001)	-0.003*** (0.001)	-0.002* (0.001)	-0.004*** (0.001)	
가구주 연령( $\bar{A}$ )	-3.735*** (0.113)	-6.560*** (0.353)	-3.784*** (0.116)	-6.993*** (0.371)	
연령 제공( $(\bar{A})^2$ )/100		4.789*** (0.020)		5.374*** (0.554)	
노동소득( $\bar{y}$ )	-0.056*** (0.017)	0.160*** (0.020)	0.083*** (0.018)	0.214*** (0.023)	
총자산 ( $\bar{W} = \bar{a} + \bar{y}$ )	0.425*** (0.012)	0.415*** (0.012)	0.393*** (0.009)	0.382*** (0.009)	
LR	-7,308.523	-7,267.878	-7,316.930	-7,269.020	
$\hat{\sigma}$	125.202*** (2.862)	125.414*** (2.867)	125.900*** (2.882)	126.155*** (2.890)	
총관측치수/절단된 관측치수	4,985/3,993				

주: 1.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는 각각 1%, 5%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2. 불확실성 변수로 모형① 및 모형②는 '위험자산소득의 불확실성'을, 모형③ 및 모형④는 '노동소득의 불확실성(/100)'을 사용하였음

〈표 III-6-21〉 개인투자자의 연령별 주식분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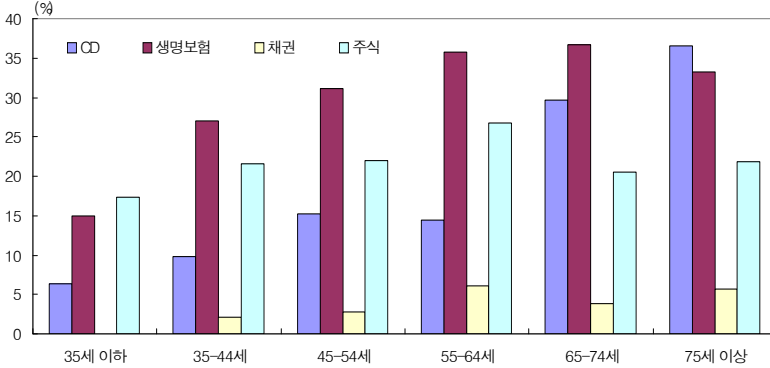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주주 수 기준								
19세 이하	-	0.9	0.8	1.0	1.3	1.3	1.4	0.7
20~29세	-	5.4	4.6	4.9	6.7	7.1	7.4	4.5
30~39세	-	26.9	25.4	24.7	26.3	25.4	26.5	22.6
40~49세	-	34.1	33.9	32.8	31.7	30.3	30.8	30.7
50~59세	-	19.0	20.6	21.2	20.0	20.8	20.9	28.3
60세 이상	-	13.8	14.7	15.4	14.0	15.0	13.0	13.2
보유금액 기준								
19세 이하	0.5	0.3	0.4	0.5	0.6	0.6	0.5	0.3
20~29세	3.4	2.4	2.6	2.8	3.4	2.9	2.6	2.2
30~39세	20.0	16.2	15.2	15.3	16.1	14.0	13.7	11.5
40~49세	32.8	30.4	28.1	28.1	28.7	26.3	26.5	28.3
50~59세	24.3	26.9	27.8	27.6	29.7	31.5	27.6	33.2
60세 이상	19.0	23.6	25.8	25.7	21.5	24.8	29.0	24.6

자료: 한국거래소, 『주식투자인구 및 주식보유현황 통계』

[그림 III-6-8]에 정리된 미국의 경우에도 35세 이하는 보유자산 중 주식 비중이 높은 편인 반면 노년층은 CD, 생명보험 등 안전자산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8] 미국 가계의 연령대별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 보유비중



자료: 미 연준, Survey of Consumer Finance(2001)

또, 일본 총무성의 『가계조사』 2002~2010년 집계통계(전 세대, 농어가세대 제외)에 나타난 일본 가계의 연령대별 자산·부채 현황<sup>44)</sup>(2010년 현황은 <표 III-6-22>에 정리)을 보면 금융자산은 우리나라(45~50세)보다 늦은 60~69세에 정점에 도달하고 금융부채는 우리나라(50~55세)보다 빠른 30~39세에 정점에 도달하여 일본노인들이 우리나라 노인들에 비해 보유한 순자산 규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어 그 만큼 노후 대비가 충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4) 제8-24표 [부채 보유 세대] 세대주의 연령 계급별 저축 및 부채의 1세대당 현재액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225

〈표 III-6-22〉 일본 가계의 연령대별 자산·부채 현황(2010년)

		평균	~29세	30~39	40~49	50~59	60~69	70세~
가구 분포	표본가구수	10,000	239	1,912	3,004	2,542	1,519	784
	조사가구수	2,609	64	505	770	646	406	217
가구 특성	세대인원	3.48	3.39	3.76	3.85	3.46	2.82	2.76
	-18세 미만	0.96	1.33	1.71	1.52	0.43	0.11	0.20
	-65세 이상	0.37	0.02	0.03	0.15	0.25	0.72	1.85
	(퇴직자)	0.27	0.02	0.03	0.14	0.23	0.44	1.27
	소득지수	1.68	1.43	1.48	1.64	2.07	1.68	1.12
	배우자근로 비중	48.3	34.3	44.9	54.0	56.8	42.2	23.4
	세대주 평균연령	50.1	26.7	35.4	44.4	54.4	63.8	74.8
	주택소유 비중	84.8	38.8	74.2	84.7	89.9	92.2	94.0
규모 (만엔)	연간소득	704	442	584	749	841	660	552
	금융자산	1,037	198	490	843	1,248	1,661	1,483
	-통화성예금	199	81	152	170	209	282	265
	-정기예금	346	52	144	248	370	681	575
	-보험	352	39	137	311	506	452	448
	-유가증권	100	19	32	66	105	218	171
	-기타 금융자산	40	7	24	48	57	28	24
	금융부채	1,223	806	1,539	1,497	1,059	886	719
	-토지·주택 관련 부채	1,079	709	1,464	1,378	868	683	555
	-토지·주택 이외 부채	105	58	37	80	147	162	133
	-할부금 등	39	39	38	38	44	41	31
	순금융자산	-186	-608	-1,049	-654	189	775	764
소득 대비 (%)	금융자산	147.3	44.8	83.9	112.6	148.4	251.7	268.7
	금융부채	173.7	182.4	263.5	199.9	125.9	134.2	130.3
	순금융자산	-26.4	-137.6	-179.6	-87.3	22.5	117.4	138.4
구성 비중 (%)	금융자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화성예금	19.2	40.9	31.0	20.2	16.7	17.0	17.9
	-정기예금	33.4	26.3	29.4	29.4	29.6	41.0	38.8
	-보험	33.9	19.7	28.0	36.9	40.5	27.2	30.2
	-유가증권	9.6	9.6	6.5	7.8	8.4	13.1	11.5
	-기타 금융자산	3.9	3.5	4.9	5.7	4.6	1.7	1.6
	금융부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지·주택 관련 부채	88.2	88.0	95.1	92.1	82.0	77.1	77.2
	-토지·주택 이외 부채	8.6	7.2	2.4	5.3	13.9	18.3	18.5
	-할부금 등	3.2	4.8	2.5	2.5	4.2	4.6	4.3

주: 음영 처리는 해당 항목의 규모가 큰 연령대를 나타냄.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의 연령별 자산구조를 분석해 보았다. OECD의 2008년 보고서에서 정리한 7개 OECD 국가의 연령별 자산구조<sup>45)</sup>에서도 순자산 및 금융자산은 모두 55세 이후 연령대에서 정점에 도달하고 부채는 40세 전후에서 정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OECD 주요국의 연령별 자산분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산의 규모가 함께 증가하다가 65세 이상 고령계층에서 그 규모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국가별로 자산의 절대적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순자산(총자산(부동산+금융+기타자산+부채)에서 부채액을 차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탈리아와 영국의 경우 젊은 세대의 자산보유액이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국가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젊은 세대의 자산보유액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55~64세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가구 자산규모는 55~64세 연령대에서 가장 높아졌다가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의 국가와 유사한 형태다. 반면, 핀란드와 스웨덴,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연령대의 자산 감소 현상이 매우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조적 양상을 보였다.

---

45) Figure 10.1. Median wealth-holdings by age of the household head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227

〈표 III-6-23〉 주요 선진국의 연령대별 자산·부채 규모

(단위: 미 달러)

	캐나다	핀란드	이탈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독일	한국
순자산								
25세 미만	0	321	15,534	-193	0	-184	0	7,257
25~34세	1,226	1,132	41,009	1,148	-2	15,676	0	25,399
35~44세	25,401	47,168	106,251	27,932	9,252	60,773	15,911	45,982
45~54세	58,247	76,224	155,338	62,547	27,935	113,988	38,514	63,202
55~64세	83,517	89,054	167,577	90,407	54,062	148,801	95,735	79,505
65~75세	96,349	69,809	123,649	123,428	60,932	135,520	86,164	73,532
76세 이상	87,958	56,791	83,882	125,033	35,779	91,159	29,546	34,085
금융자산								
25세 미만	460	755	2,485	772	360	92	0	6,059
25~34세	1,270	1,509	6,214	2,275	1,664	1,473	0	13,476
35~44세	1,839	3,207	7,829	4,875	3,151	3,401	0	14,731
45~54세	3,241	4,436	10,693	7,374	5,625	8,195	2,201	15,733
55~64세	4,598	6,138	12,427	9,954	12,217	10,611	8,253	16,047
65~75세	8,409	3,773	7,681	17,267	15,031	13,444	6,602	9,775
76세 이상	14,890	3,694	5,965	23,361	15,037	6,998	5,502	5,618
부채								
25세 미만	2,540	1,038	n.a.	3,687	2,450	5,018	n.a.	109
25~34세	12,788	9,434	n.a.	26,022	16,561	62,614	n.a.	6,034
35~44세	24,525	15,283	n.a.	49,769	28,023	65,561	n.a.	10,018
45~54세	18,832	4,906	n.a.	39,815	24,316	31,307	n.a.	10,921
55~64세	2,628	0	n.a.	15,236	14,901	276	n.a.	9,365
65~75세	0	0	n.a.	609	0	0	n.a.	2,569
76세 이상	0	0	n.a.	0	0	0	n.a.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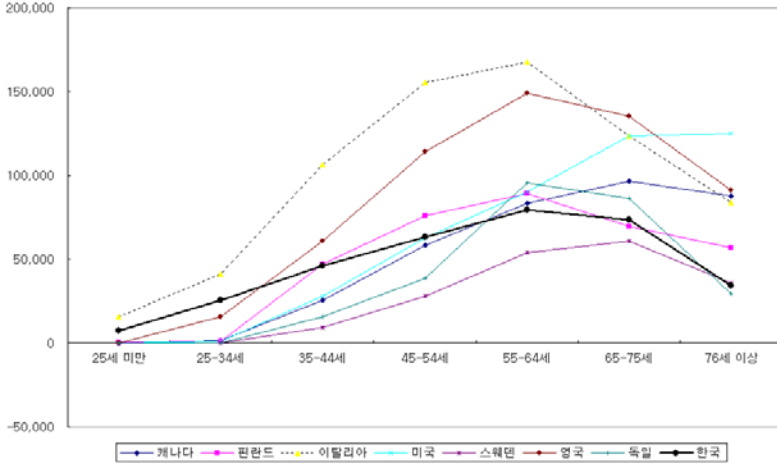
주: 음영 처리는 해당 항목의 규모가 가장 큰 연령대를 나타냄.

출처: OECD(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그림 III-6-9] 주요 선진국의 연령대별 자산·부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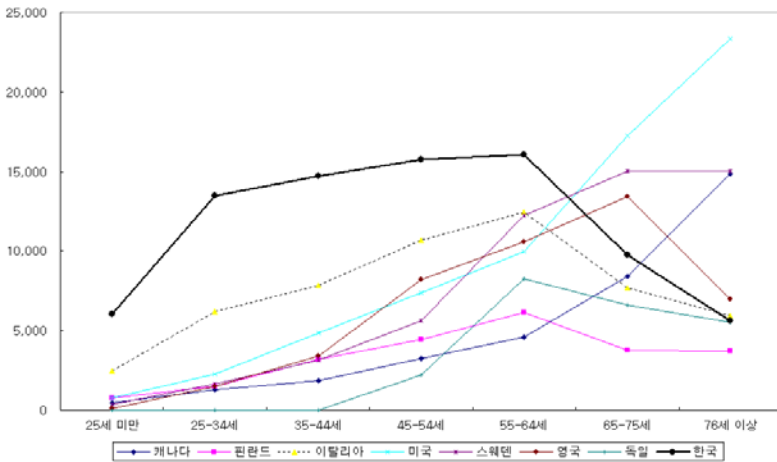
(1) 순자산

(단위: 2002년 미 달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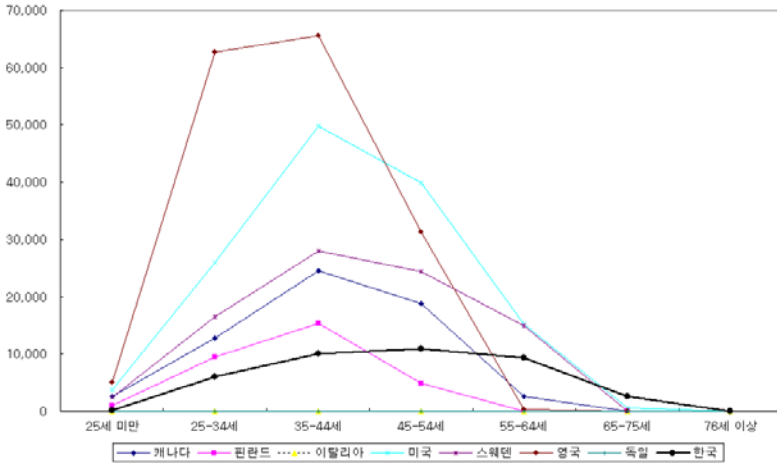
(2) 금융자산

(단위: 2002년 미 달러 기준)



(3) 부채

(단위: 2002년 미 달러 기준)



출처: OECD(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라. 금융자산 가격<sup>46)</sup>

1990년대 초반 주가급등 등 미국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생한 베이비 부머(baby boomer)들이 저축을 크게 늘리는 장년기에 접어든 시기와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Siegel(1993)은 반대로 이들이 은퇴하여 그동안 축적하였던 금융자산을 토대로 소비하는 시점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탈이 본격화되어 주가급락 등 주식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자산시장 붕괴설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고령화의 진전은 축적된 금융자산의 유통화를 통하여 소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인구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하회함에 따라 자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46) 이하는 장동구 『고령화사회 진입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1년 9월)을 많이 참조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고령화로 노동공급이 감소하면 자본노동비율( $K/L$ )이 상승하고 자본의 한계수익률이 저하되어 투자가 위축됨으로써(실질)금리가 하락하고, 즉 금융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생애주기 가설상 저축률이 낮은 노년층 증가 → 총저축 감소 → 실질금리 상승이 초래되는 한편으로 노동공급 감소 → 자본노동비율( $K/L$ ) 상승 → 자본의 한계수익률 저하 → 투자 감소 → 실질금리 하락요인이 발생하는데 후자가 전자의 효과를 능가함으로써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Miles(2002)는 유럽지역의 경우 노동공급 감소 효과가 저축률 하락 효과를 압도하여 향후 50년간 실질금리가 120b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OECD(2005)<sup>47)</sup>도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자본노동비율( $K/L$ )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Poterba(2004)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20~50년 사이에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인구구조와 금융자산 수익률 간의 관계도 뚜렷하지 않다고 한다. World Bank의 Holzmann(2009)에 따르면 정책입안자나 학자들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금융자산 수익률을 50bp 정도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자산시장 붕괴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한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평균 생산성의 하락과 노동력 증가율의 둔화 혹은 감소 등을 고려하면 금융자산 수익률이나 비금융자산 수익률 모두 100b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실증분석이 자산시장 붕괴설을 크게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Brooks(2006)는 자산시장이 발달한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고령화가 진전되더라도 자산가격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분석하였다. OECD의 Hu(2006)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 늘어날 경우 선진국의 국채 및 회사채

---

47) Martins et al.(2005)

III.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231

수익률이 각각 0.13% 및 0.81%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MF의 Batini et al.(2006)도 고령화로 인해 유럽의 실질금리가 2050년까지 100bp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Miles(2002)에 따르면 연금 제도의 보장수준이 저하될수록 개인저축이 늘어나 자본스톡이 커지고 자본의 한계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실질금리는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한다.

〈표 III-6-24〉 고령인구 변화가 채권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단위: %)

	OECD(16개국)	OECD(16개국) + 신흥시장국(8개국)
국 채	-0.13	-0.15
회사채	-0.81	-0.84
주가	-0.4	-0.8

주: 65세 이상 인구 1% 증가시 실질 채권수익률 및 주가 변화분  
출처: Hu(2006)

〈표 III-6-25〉 시나리오별 유럽의 실질금리 전망

(단위: %)

	연금의 소득대체율 일정 시	연금기여율 일정 시	2020 이후 공적연금 폐지 시
1990	4.78	4.78	4.78
2000	4.68	4.6	4.6
2010	4.49	4.37	4.3
2020	4.28	4.14	3.95
2030	4.14(-54bp)	3.97(-63bp)	3.84(-76bp)
2040	4.16	3.87	3.71
2050	4.28(-40bp)	3.83(-77bp)	3.42(-118bp)

주: ( ) 안은 2000년과의 차이  
출처: Miles(2002), 윤창준(2007)에서 재인용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융시장 통합의 진전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신흥시장국 등과의 자본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질금리의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금융연구원의 최공필 외(2005)가 25개국을 대상으로 1980~2002년간의 연도별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40~64세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국채의 만기 실질이자율이 유의하게 하락하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질이자율이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주가 면에서는 고령층이 퇴직 후 일정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추세에 따라 주가에는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대체다. IMF(2004)는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가 장년층이 된 1990년대 말경부터 주가가 크게 올랐으나 이들이 대거 퇴직하는 2010년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한 Davis and Li(2003)는 40~65세 인구 비중의 확대는 주가를 상승시키지만 65세 이상 인구 증가는 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OECD의 Hu(2006)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 늘어날 경우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주가가 각각 0.4%, 6.0%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주요 선진국이나 OECD 국가의 경험이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가 2010년 말 현재 352조원에 달해 경제규모나 국내 금융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큰 편이며, 향후에도 2044년에 1,033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up>48)</sup>. 그러나 연금급여 규모가 연금수입보다 커지는 2045년 이후에는 기금잔액이 급속도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모두 고갈될 것이다. 이렇듯 국민연금 기금의 누적 및 고갈과정에서 국내금리(또는 채권가격)와 주가에 큰 영

48)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2008년 11월)

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산시장 붕괴(asset meltdown) 가설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 IV. 세입 및 세출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는 고령화·인구 감소가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국민소득의 지출, 분배, 생산측면, 가계소득 및 소비구조, 자산규모 및 자산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았으니,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세입 및 세출 규모와 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분석해 보았다. 특히 향후 성장률 둔화 등으로 세수 증가율도 하락할 전망이다. 세수 규모 자체보다는 세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 세목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크게 세원 변동과 세제 변화 두 가지가 있지만 미래의 조세정책을 예견할 수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세원의 변동방향을 짐작하여 세목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만 분석(qualitative analysis)하였다. 세목별 세원에는 소득, 소비, 자산 수준과 같은 규모변수 이외에 금리, 주가, 부동산 가격 등 가격변수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세수의 중장기적 변동요인 분석 등의 추가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정성적 분석이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 세입구조에 미치는 영향

#### 가. 세목별 국세수입

〈표 IV-1-1〉에 정리된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구조를 보면, 부가가치세가 28.6%(2009년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법인세(21.4%), 소득세(20.9%)의 순으로 이들 3대 기간세목이 총국세

IV. 세입 및 세출에 미치는 영향 235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9%에 달한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이 교통세(6.1%), 관세(5.6%)이다.

한편, 성명재(2011)의 연령별 세부담 분포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소비세는 연령별 소비지출 분포와 상당히 유사한 반면, 소득세의 연령별 부담 분포는 소득분포와 유사하지만 우리나라 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고 누진소득세율 체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소득분포에 비해 역U자 형태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표 IV-1-1〉 세목별 국세수입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총 국 세	1,614,588	100.0	1,673,057	100.0	1,645,405	100.0
[일반회계]	1,553,899	96.2	1,607,197	96.1	1,579,285	96.0
○ 내 국 세	1,302,401	80.7	1,337,252	79.9	1,337,060	81.3
소 득 세	388,560	24.1	363,551	21.7	344,233	20.9
-신 고 분	174,774	10.8	134,372	8.0	134,799	8.2
종합소득세	61,513	3.8	40,776	2.4	61,170	3.7
음근소득세	334	0.0	344	0.0	549	0.0
양도소득세	112,921	7.0	93,251	5.6	73,080	4.4
-원 천 분	213,786	13.2	229,179	13.7	209,434	12.7
이자소득세	29,144	1.8	30,943	1.8	34,085	2.1
배당소득세	17,671	1.1	15,647	0.9	13,532	0.8
사업소득세	13,354	0.8	13,435	0.8	14,008	0.9
근로소득세	141,236	8.7	155,951	9.3	134,069	8.1
기타소득세	6,401	0.4	6,878	0.4	7,363	0.4
퇴직소득세	5,980	0.4	6,323	0.4	6,373	0.4
법 인 세	354,173	21.9	391,545	23.4	352,514	21.4
-신 고 분	270,571	16.8	317,374	19.0	305,703	18.6
-원 천 분	83,602	5.2	74,171	4.4	46,811	2.8
상속증여세	28,419	1.8	27,771	1.7	24,303	1.5
-상 속 세	10,590	0.7	11,817	0.7	12,207	0.7
-증 여 세	17,829	1.1	15,954	1.0	12,096	0.7
부가가치세	409,419	25.4	438,198	26.2	46,915	28.6
-국 내 분	122,902	7.6	52,398	3.1	126,276	7.7
-수 입 분	286,517	17.7	385,800	23.1	343,639	20.9
개별소비세	51,611	3.2	44,994	2.7	36,420	2.2
증권거래세	34,688	2.1	27,875	1.7	35,339	2.1
인 지 세	5,880	0.4	5,729	0.3	5,437	0.3
과년도수입	29,651	1.8	37,589	2.2	68,899	4.2
○ 교 통 세	114,635	7.1	119,093	7.1	100,920	6.1
○ 관 세	74,108	4.6	87,757	5.2	91,691	5.6
○ 교 육 세	38,612	2.4	41,796	2.5	37,543	2.3
○ 종합부동산세	24,143	1.5	21,299	1.3	12,071	0.7
[특별회계]	60,689	3.8	65,860	3.9	66,120	4.0
주 세	22,680	1.4	28,311	1.7	27,708	1.7
농 특 세	38,009	2.4	37,549	2.2	38,412	2.3

〈표 IV-1-2〉 가구주 연령별 주요 세목의 세부담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만원)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근로소득세											
2007	3	28	36	57	63	47	43	31	17	3	37
2008	5	16	29	51	50	49	52	32	16	2	34
2009	5	16	26	46	50	66	56	38	13	2	36
사업소득세											
2007	1	1	4	17	26	19	13	4	5	3	11
2008	0	0	1	5	13	13	13	2	3	1	6
2009	1	3	2	19	7	10	12	7	3	3	8
부가가치세											
2007	60	78	108	134	147	150	135	104	84	48	111
2008	70	96	124	146	168	169	162	123	98	53	128
2009	68	91	123	142	160	163	169	124	95	54	126
교통세											
2007	5	13	18	22	23	22	22	16	12	4	17
2008	4	13	21	23	26	27	26	18	13	4	19
2009	4	14	21	23	24	26	24	22	15	4	19
주세											
2007	8	14	15	11	10	9	9	7	7	4	9
2008	7	11	11	10	7	8	7	5	6	3	7
2009	2	8	9	9	8	8	7	6	5	3	7
담배세											
2007	12	18	23	22	22	23	21	21	16	9	19
2008	13	19	20	20	20	22	19	20	13	8	18
2009	14	15	18	21	19	19	20	20	14	7	17

주: 음영 처리는 가장 높은 수치의 연령대를 표시.

출처: 성명재(2011)

### (1) 소득세

우선 소득세의 세부항목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자. 〈표

IV-1-3)에 정리된 과세대상인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을 보면 근로소득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사업소득, 이자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의 순이다. 반면, 소득세수는 근로소득세가 39%(2009년 기준)로 가장 많고 양도소득세 21%, 종합소득세 18%, 이자소득세 10%, 배당소득세 4% 등의 순서다.

소득세 중에서 세수규모가 가장 큰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에는 근로계약에 의한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향후 근로소득세 세수 변동에는 취업자 수의 변동과 더불어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피용자보수의 규모의 향배가 중요하며, 소득세법의 과세표준 및 각종 공제항목들이 모두 명목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세수 증가와 더불어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세부담 증가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향후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용률은 증가하겠지만 취업자 수는 절대규모 면에서 감소하고, 임금상승률은 1인당 소득증가율을 상회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그동안 산업구조의 특성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상승한다는 실증분석 결과의 증가요인과 더불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최근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등의 하락요인이 모두 존재하여 전망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 중에서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하락한다는 실증분석 결과와 비록 우리나라 노년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이 높고 향후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 지기는 하겠지만 근로연령가구에 비해서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소득 비중이 훨씬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향후 근로소득세 세원이 현재보다 작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3〉 소득종류별 종합소득 및 원천징수 현황

(1) 소득종류별 종합소득 (십억원)								
	합계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 소득	일시 재산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2006년	65,001	2,167	4,674	44,488	13,146	23	1	502
2007년	77,124	3,430	6,276	49,572	17,177	0	5	664
2008년	85,083	3,170	5,776	54,568	20,845	0	4	719
2009년	90,226	3,358	5,416	57,920	22,596	0	7	929
비중 (%)								
2006년	100.0	3.3	7.2	68.4	20.2	0.0	0.0	0.8
2007년	100.0	4.4	8.1	64.3	22.3	0.0	0.0	0.9
2008년	100.0	3.7	6.8	64.1	24.5	0.0	0.0	0.8
2009년	100.0	3.7	6.0	64.2	25.0	0.0	0.0	1.0
(2) 소득종류별 원천징수소득 (십억원)								
	합계	근로 소득	퇴직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연금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1997년	291,707	231,696	8,570	14,450	695	0	33,399	1,714
1998년	344,183	245,336	20,998	17,683	728	0	55,932	1,809
1999년	340,604	253,589	18,776	18,909	913	0	43,989	2,304
2000년	360,248	271,275	18,515	23,539	1,791	0	38,432	3,999
2001년	526,427	383,598	16,009	37,186	2,673	0	37,572	4,984
2002년	528,570	435,608	12,952	41,362	3,077	0	28,849	5,316
2003년	604,114	501,451	16,229	47,466	4,753	4	26,308	6,950
2004년	662,061	558,577	16,331	48,780	5,157	15	24,880	6,695
2005년	671,462	567,298	16,778	47,891	4,762	46	26,005	8,679
2006년	723,404	608,260	18,104	53,950	5,252	71	26,919	10,692
2007년	836,252	705,376	21,632	56,232	6,558	292	30,651	15,188
2008년	863,707	727,063	23,079	57,137	6,680	448	33,777	15,136
2009년	896,948	755,045	25,991	57,699	7,307	620	37,324	12,869
비중 (%)								
1997년	100.0	79.4	2.9	5.0	0.2	0.0	11.4	0.6
1998년	100.0	71.3	6.1	5.1	0.2	0.0	16.3	0.5
1999년	100.0	74.5	5.5	5.6	0.3	0.0	12.9	0.7
2000년	100.0	75.3	5.1	6.5	0.5	0.0	10.7	1.1
2001년	100.0	72.9	3.0	7.1	0.5	0.0	7.1	0.9
2002년	100.0	82.4	2.5	7.8	0.6	0.0	5.5	1.0
2003년	100.0	83.0	2.7	7.9	0.8	0.0	4.4	1.2
2004년	100.0	84.4	2.5	7.4	0.8	0.0	3.8	1.0
2005년	100.0	84.5	2.5	7.1	0.7	0.0	3.9	1.3
2006년	100.0	84.1	2.5	7.5	0.7	0.0	3.7	1.5
2007년	100.0	84.3	2.6	6.7	0.8	0.0	3.7	1.8
2008년	100.0	84.2	2.7	6.6	0.8	0.1	3.9	1.8
2009년	100.0	84.2	2.9	6.4	0.8	0.1	4.2	1.4

출처: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3-2-3 소득종류별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4-1-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현황 I (소득종류)

IV. 세입 및 세출에 미치는 영향 239

특히 <표 IV-1-4>에서 보듯이 현재도 근로소득세의 대부분을 30~60세의 근로연령층이 부담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가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의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다. 다만 근로연령층의 근로소득 분배는 고연령층이나 근로연령층의 다른 소득 분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인구구조 변화에도 덜 둔감한 편이므로 자연세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향후 근로소득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 및 성장률 둔화, 소득분배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세수전망을 시도하였던 김현숙·성명재(2011) 및 김현숙(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소득세수가 다소 감소하거나 소득증가율이 높아야 겨우 현재 수준(GDP 대비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론과 비슷하였다.

<표 IV-1-4>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령별 신고 현황

	과세대상자						과세미달자	
	급여총계		과세표준		결정세액		급여총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실적 (천명, 십억원)								
합 계	8,539	322,379	8,539	121,298	8,515	12,849	5,751	47,124
30세 미만	1,839	42,916	1,839	12,222	1,834	585	1,717	10,046
30세 이상	2,804	100,731	2,804	33,696	2,793	2,733	1,592	16,571
40세 이상	2,228	105,725	2,228	41,639	2,221	4,764	1,298	12,639
50세 이상	1,274	60,898	1,274	27,912	1,271	3,798	725	5,569
60세 이상	395	12,108	395	5,828	395	968	418	2,299
비중 (%)								
30세 미만	21.5	13.3	21.5	10.1	21.5	4.6	29.9	21.3
30세 이상	32.8	31.2	32.8	27.8	32.8	21.3	27.7	35.2
40세 이상	26.1	32.8	26.1	34.3	26.1	37.1	22.6	26.8
50세 이상	14.9	18.9	14.9	23.0	14.9	29.6	12.6	11.8
60세 이상	4.6	3.8	4.6	4.8	4.6	7.5	7.3	4.9

출처: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4-2-3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Ⅲ(성, 연령)

다음으로 소득세 중에서 세수규모가 두 번째로 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1세대 1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하에 비과세, 농지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하에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권상장법인 주식(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이상인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과 장외거래하는 주식)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이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향후 가계 및 기업부문의 토지, 주택, 주식 등의 자산 규모(〈표 IV-1-6〉에서 보듯이 토지 56%, 주택 21%, 주식 12% 정도의 비중)와 자산가격 수준이 향후 양도소득세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향후 우리나라 가계부문 및 기업부문의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개인 순저축률 감소 등 경제 전반의 저축률이 하락할 것이고, 특히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비금융자산이 줄어드는 대신 금융자산이 증가하는데 주식비중이 줄어들고 예금 및 채권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다소 상승(주가는 하락)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토지, 주택, 주식 위주의 양도소득세제하에서는 양도소득세수가 크게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령층일수록 주택 마련 및 주택 확장을 위한 부동산 거래수요가 작아 인구 고령화에 따라 부동산 거래량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1-5〉에서 보듯이 부동산 거래량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 들어 토지, 건축물, 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모두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부동산 거래량 추이

	토지거래량	건축물거래량	아파트거래량
	면적(천㎡)	연면적(천㎡)	호수(채)
1991	1,467,734		
1992	1,206,527		
1993	904,761		
1994	982,819		
1995	1,250,907		
1996	2,165,912		
1997	2,222,945		
1998	2,337,928		
1999	2,288,499		
2000	2,121,634		
2001	2,106,137		
2002	2,579,110		
2003	2,857,011		
2004	3,382,550		
2005	3,805,460		
2006	2,892,195	184,639	1,128,501
2007	2,533,512	153,538	839,727
2008	2,397,746	149,025	889,074
2009	2,488,808	151,506	929,698
2010	2,175,499	152,371	849,215

출처: 부동산정보 종합포털 온나라(<http://www.onnara.go.kr/>)

〈표 IV-1-6〉 양도소득세 신고(예정 + 확정) 현황

## (1) 연령별 분포

	실적 (십억원)				비중 (%)			
	양도 소득	과세 표준	결정 세액	양도 차익	양도 소득	과세 표준	결정 세액	양도 차익
합 계	54,244	52,957	8,784	-3,370	100.0	100.0	100.0	100.0
20세 미만	105	100	18	-4	0.2	0.2	0.2	0.1
20세 이상	621	589	107	-42	1.1	1.1	1.2	1.2
30세 이상	3,923	3,757	631	-373	7.2	7.1	7.2	11.1
40세 이상	11,261	10,945	1,726	-977	20.8	20.7	19.6	29.0
50세 이상	15,336	14,990	2,490	-1,109	28.3	28.3	28.4	32.9
60세 이상	12,707	12,460	2,057	-565	23.4	23.5	23.4	16.8
70세 이상	9,407	9,239	1,560	-273	17.3	17.4	17.8	8.1
기 타	884	874	195	-28	1.6	1.7	2.2	0.8

출처: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5-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현황 I 및 5-2-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현황 I

## (2) 자산종류별 분포

	실적 (천건, 십억원)				비중 (%)			
	자산 건수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양도 소득	자산 건수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양도 소득
합 계	898	128,479	58,376	54,244	100.0	100.0	100.0	100.0
토지	624	57,831	17,612	30,340	69.5	45.0	30.2	55.9
건물	230	56,648	34,168	16,712	25.6	44.1	58.5	30.8
고가주택	8	8,803	3,219	4,245	0.9	6.9	5.5	7.8
기타주택	167	29,689	20,046	7,251	18.6	23.1	34.3	13.4
기타건물	55	18,156	10,903	5,216	6.1	14.1	18.7	9.6
부동산에관한권리	17	4,412	3,746	548	1.9	3.4	6.4	1.0
주식	21	8,702	2,326	6,317	2.4	6.8	4.0	11.6
주권상장주식	2	2,562	637	1,908	0.2	2.0	1.1	3.5
코스닥상장주식	0	123	43	79	0.0	0.1	0.1	0.1
비상장주식	19	6,017	1,645	4,330	2.1	4.7	2.8	8.0
기타자산	6	886	525	327	0.7	0.7	0.9	0.6
특정시설물이용권	6	810	496	281	0.7	0.6	0.9	0.5
기타	0	76	29	47	0.0	0.1	0.0	0.1

출처: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5-1-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III(자산종류, 보유기간) 및 5-2-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III(자산종류, 보유기간)

한편, 이자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등이며,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이자소득세수는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특히 채권, 예금 규모와 이자수준에 의존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비금융자산이 줄어드는 대신 금융자산이 증가하는데 주식 비중이 줄어들고 예금 및 채권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실질금리가 하락할 전망이므로 이자소득세수 증가추세를 제약할 것이다.

배당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외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조합 등)로부터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등이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배당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배당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다시 주주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Gross-Up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영업잉여 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식보유 비중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형펀드 수익이 크게 증가하기 어려워 향후 배당소득세수가 크게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업종을 불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가계부문의 영업잉여 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사업소득세수는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

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때문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지만 향후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데, 법률, 회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세수의 둔화추세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표 IV-1-7〉 사업소득세의 연령별 신고 현황

	실적 (천명, 십억원)				비중 (%)			
	인원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소득세	인원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소득세
합 계	2,952	4,917	39,607	1,224	100.0	100.0	100.0	100.0
30세 미만	650	1,001	4,570	156	22.0	20.4	11.5	12.8
30세 이상	875	1,517	11,156	347	29.6	30.9	28.2	28.4
40세 이상	801	1,399	15,150	458	27.1	28.4	38.3	37.4
50세 이상	421	695	6,355	191	14.3	14.1	16.0	15.6
60세 이상	206	305	2,376	71	7.0	6.2	6.0	5.8

출처: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4-4-5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한편, 연금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이 포함된다. 〈표 IV-1-8〉 및 〈표 IV-1-9〉에서 보듯이 현재는 퇴직급여가 연금수령액보다 2.5배나 많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성숙으로 인한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 기업연금 가입자의 증가 등으로 향후에는 연금소득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박형수·송호신(2011)에 따르면 현행 4대 공적연금이 유지될 경우 이들 공적연금의 연금지급 규모는 2010년 현재 GDP 대비 2.7%에서 2050년에는 1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따라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를 제외한 연금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누진율로 과세하는 현행 세제가 유지될 경우 연금소득세수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관대한 공제제도<sup>49)</sup>로 인해 연금소득 증가가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표 IV-1-10>에서 보듯이 국민연금<sup>50)</sup> 수급자의 3분의 2 정도가 연간 120만~36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향후 다소 연금 수급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이 정도의 연금소득자는 [그림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연금지급액이 급증하더라도 실제 소득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정도는 많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준욱 등(2004)에서도 기여단계에서는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연금 수령 시에 과세하는 우리나라의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과세베이스를 현재에서 미래로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향후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미래 재정수입 증대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낮아져 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현재의 소득세 부담은 감소하지만, 미래의 연금소득은 매우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평생 세부담은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 49) 정액공제 50만원 이외에 정액공제 후 연금수입에 대해 정률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360만원까지는 25%, 720만원까지는 15%, 720만원 초과는 5%를 공제해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제 이외에 최저연금보장제도도 있는데, 최저보장액이 65세 이상은 120만원, 65세 미만은 70만원이다.
- 50)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현재도 수급자가 많은 반면, 국민연금은 1988년에 제도가 도입되어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2008년부터 나타나는 등 제도가 아직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해 향후 수급자가 급증하는 등 연금지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표 IV-1-8〉 퇴직소득세의 연령별 신고 현황

	실적 (천명, 십억원)				비중 (%)			
	퇴직 인원	퇴직 급여	과세 표준	결정 세액	퇴직 인원	퇴직 급여	과세 표준	결정 세액
합 계	2,932	25,406	11,005	646	100.0	100.0	100.0	100.0
30세 미만	666	2,048	723	38	22.7	8.1	6.6	5.8
30세 이상	945	6,697	2,852	155	32.2	26.4	25.9	24.0
40세 이상	641	8,091	3,675	208	21.9	31.8	33.4	32.2
50세 이상	406	7,039	3,166	192	13.9	27.7	28.8	29.8
60세 이상	274	1,531	589	53	9.4	6.0	5.3	8.2

출처: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4-4-3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Ⅲ(10분 위, 성, 연령)

〈표 IV-1-9〉 연금소득세의 연령별 신고 현황

	실적 (천명, 십억원)				비중 (%)			
	인원	연금 수령	연금 소득	결정 세액	인원	연금 수령	연금 소득	결정 세액
합 계	2,724	9,979	41	0	100.0	100.0	100.0	100.0
30세 미만	17	27	0	0	0.6	0.3	0.0	0.0
30세 이상	18	50	0	0	0.7	0.5	0.0	0.0
40세 이상	81	321	3	0	3.0	3.2	6.6	2.0
50세 이상	282	2,018	25	0	10.3	20.2	62.2	59.0
60세 이상	2,326	7,563	13	0	85.4	75.8	31.2	39.0

출처: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4-4-6 거주자의 연금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IV. 세입 및 세출에 미치는 영향 247

〈표 IV-1-10〉 국민연금 수급금액별 수급자 분포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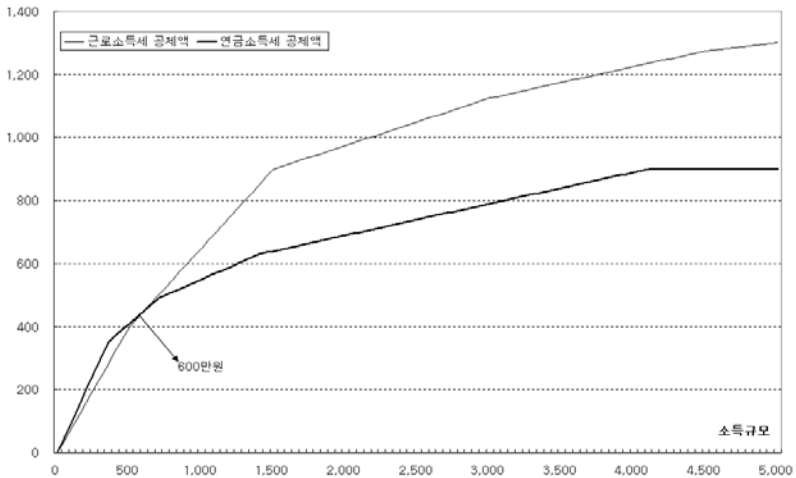
연간급여 (만원)	합 계	120 미만	120~240	240~360	360~480	480~600
수급자수	2,330,128	126,299	1,037,512	521,955	236,872	143,887
(비중, %)	100.0	5.4	44.5	22.4	10.2	6.2

연간급여 (만원)	600 ~720	720 ~840	840 ~960	960 ~1080	1,080 ~1,200	1,200 이상
수급자수	98,886	68,170	44,609	27,260	15,692	8,986
(비중, %)	4.2	2.9	1.9	1.2	0.7	0.4

출처: 『2010년 국민연금통계연보』

[그림 IV-1-1]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공제액 비교



## (2) 자산 관련 세목 :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종합합산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별도합산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한편,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에만 과세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과세하는데, 다만,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양도 및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 전체의 자산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비금융자산이 줄어드는 대신 금융자산이 증가하는데 주식 비중이 줄어들고 예금 및 채권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토지, 주택, 주식 등의 보유 또는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이들 세목의 세수는 잔액(stock)으로 과세되는 자산보유 관련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유량(flow)에 대해 과세하는 자산거래 관련 세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IV. 세입 및 세출에 미치는 영향 249

〈표 IV-1-11〉 종합부동산세 연령별 현황

	합계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실적 (십억원)				
합 계	318	149	139	30
20세 미만	1	0	0	0
20세 이상	2	1	2	0
30세 이상	13	6	6	1
40세 이상	50	27	20	3
50세 이상	101	55	38	8
60세 이상	89	41	38	10
70세 이상	53	16	30	7
기 타	9	3	6	1
비중 (%)				
20세 미만	0.2	0.0	0.3	0.2
20세 이상	0.7	0.3	1.1	0.4
30세 이상	4.1	4.3	4.5	1.9
40세 이상	15.7	18.2	14.2	9.8
50세 이상	31.7	36.7	27.3	27.0
60세 이상	27.9	27.6	27.0	33.8
70세 이상	16.8	10.8	21.5	24.7
기 타	2.9	2.0	4.0	2.3

출처: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7-1-3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Ⅲ(성·연령)

(3)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대상은 거주자가 사망하면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며,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된다. 증여세 과세대상도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증여 재산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된다.

향후 고령자 가구가 많아지면 상속 및 증여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

고 1인당 자산규모도 증가할 것이므로 상속증여세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1-6]에서 보듯이 일본의 경우에도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1991년 이전까지 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자산가격의 상승 등으로 상속증여 관련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표 IV-1-12〉 상속세 피상속인의 연령별 현황

	신고 현황			결정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실적 (명)						
합 계	3,151	3,703	3,771	2,603	3,997	4,340
40세 미만	30	51	44	17	37	33
40세 이상	112	135	131	68	120	105
50세 이상	338	379	377	225	353	352
60세 이상	726	808	776	504	782	760
70세 이상	998	1,182	1,223	829	1,236	1,405
80세 이상	929	1,132	1,209	940	1,457	1,676
기타	18	16	11	20	12	9
비중 (%)						
40세 미만	1.0	1.4	1.2	0.7	0.9	0.8
40세 이상	3.6	3.6	3.5	2.6	3.0	2.4
50세 이상	10.7	10.2	10.0	8.6	8.8	8.1
60세 이상	23.0	21.8	20.6	19.4	19.6	17.5
70세 이상	31.7	31.9	32.4	31.8	30.9	32.4
80세 이상	29.5	30.6	32.1	36.1	36.5	38.6
기타	0.6	0.4	0.3	0.8	0.3	0.2

출처: 국세청 『2010 국제통계연보』 6-1-3 피상속인의 연령별 신고 현황 및 6-2-5 피상속인의 연령별 결정 현황

〈표 IV-1-13〉 증여세 수증인의 연령별 현황

	신고 현황		결정 현황	
	인원	증여재산액	인원	증여재산액
실적 (천명)				
합 계	66.8	9,548	96.7	15,539
10세 미만	1.6	142	1.6	137
10세 이상	2.8	317	3.3	511
20세 이상	9.3	1,450	12.2	2,086
30세 이상	15.1	2,356	21.5	3,411
40세 이상	18.1	2,534	27.0	4,442
50세 이상	12.2	1,739	18.3	2,909
60세 이상	7.3	965	12.1	1,995
기 타	0.4	46	0.7	49
비중 (%)				
10세 미만	100.0	100.0	100.0	100.0
10세 이상	2.4	1.5	1.6	0.9
20세 이상	4.2	3.3	3.4	3.3
30세 이상	13.9	15.2	12.7	13.4
40세 이상	22.6	24.7	22.3	21.9
50세 이상	27.1	26.5	27.9	28.6
60세 이상	18.2	18.2	18.9	18.7
기 타	10.9	10.1	12.5	12.8

출처: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6-3-4 수증인의 성별 신고 현황 및 6-4-7 수증인의 성별 결정 현황

#### (4) 법인세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만 과세한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영리법인은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하고 비영리법인은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만 과세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의 소득은 결산서상의 당기순손익에 세법상의 익금산입·손금산입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업·손금불산업을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계산된다<sup>51)</sup>. <표 IV-1-14>에 정리된 산업별 과세표준 및 총부담세액 비중을 보면 제조업 40% 이상, 금융·보험업 20% 내외, 도소매업 및 건설업 각 10% 내외, 서비스업 9% 내외, 운수·창고·통신업 4% 내외, 부동산업 3~4% 수준의 순서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 전체의 영업잉여 비중이 하락할 전망이지만, 순국민가처분소득(NNDI)에서 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증가하고 경제 전체의 금융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전반적인 법인세수의 향방은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업구조 측면에서 법인세 기여도가 가장 컸던 광공업은 뚜렷한 비중 변화가 없겠지만(Thiessen et al. 2008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비중이 증가하는 도소매·음식숙박·교통 관련 산업·기타 서비스업과 비중이 감소하는 농림어업·건설업·금융부동산업의 상대적 수익성이 얼마나 변화하느냐에 따라 향후 법인세수의 변화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특히 송호신(2011)에서 추계한 업종별 법인세 유효세율(<표 IV-1-15>에 정리됨)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업종별 비중 변화방향을 비교해 보더라도, 유효세율이 전 업종 평균보다 높은 업종과 낮은 업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향후 법인세수의 변화방향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경제의 서비스화로 경기에 매우 민감한 법인세수는 향후에는

51)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며, 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이 포함된다. '손금'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며,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상품·제품의 보관료, 포장비·운반비·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판매부대비용,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인건비, 고정자산의 수선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 이자 등이 포함된다.

그 변동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기업  
부문의 투자비중이 증가하고 특히 운송장비, 기계류 등 설비투자 비중  
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현재와 같을 경우 법인세  
수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비교적 확실하다.

〈표 W-1-14〉 법인세의 업태별 현황

(1) 총 신고 법인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171.2	201.0	240.4	271.4	303.5	316.8	333.3	352.6	372.1	398.3	419.4
동·임·어업	1.0	1.1	1.8	1.8	1.9	2.0	2.2	2.1	2.7	3.7	4.9
광업	0.8	0.9	0.9	0.9	0.9	1.0	1.0	1.0	1.0	1.0	1.1
제조업	43.3	58.4	68.3	73.2	79.6	81.6	82.5	83.5	81.1	85.2	89.9
전기·가스·수도업	0.1	0.2	0.2	0.2	0.2	0.2	0.2	0.2	0.3	0.7	0.9
건설업	32.5	38.8	46.0	54.6	62.5	64.6	66.2	69.7	72.1	76.0	77.6
도소매업	41.9	48.2	57.9	65.0	73.6	76.4	80.7	84.7	88.1	93.2	97.6
음식·숙박업	1.1	1.4	1.6	1.9	2.0	2.0	2.3	2.8	3.1	3.4	3.6
운수·창고·통신업	6.8	7.8	13.5	14.3	17.9	18.4	20.2	21.3	22.6	24.2	25.4
금융·보험업	7.7	7.3	6.9	8.8	10.3	9.9	10.4	11.2	12.2	13.1	13.4
부동산업	4.2	4.4	5.2	6.0	7.3	8.6	9.9	11.4	13.3	15.3	16.6
서비스업	23.8	28.1	33.5	40.8	42.4	47.3	52.7	59.4	67.3	73.4	78.1
보건업	0.4	0.5	0.6	0.6	0.7	0.7	0.8	0.8	0.9	1.0	1.1
기타 업종	7.6	4.1	4.1	3.1	4.1	4.1	4.2	4.5	7.4	8.3	9.1
동·임·어업	0.6	0.5	0.7	0.7	0.6	0.6	0.6	0.6	0.7	0.9	1.2
광업	0.5	0.4	0.4	0.3	0.3	0.3	0.3	0.3	0.3	0.3	0.3
제조업	25.3	29.1	28.4	27.0	26.2	25.8	24.7	23.7	21.8	21.4	21.4
전기·가스·수도업	0.1	0.1	0.1	0.1	0.1	0.1	0.1	0.1	0.1	0.2	0.2
건설업	19.0	19.3	19.1	20.1	20.6	20.4	19.8	19.8	19.4	19.1	18.5
도소매업	24.5	24.0	24.1	24.0	24.3	24.1	24.2	24.0	23.7	23.4	23.3
음식·숙박업	0.6	0.7	0.7	0.7	0.7	0.6	0.7	0.8	0.8	0.8	0.9
운수·창고·통신업	4.0	3.9	5.6	5.3	5.9	5.8	6.1	6.0	6.1	6.1	6.1
금융·보험업	4.5	3.6	2.9	3.3	3.4	3.1	3.1	3.2	3.3	3.3	3.2
부동산업	2.5	2.2	2.2	2.2	2.4	2.7	3.0	3.2	3.6	3.8	4.0
서비스업	13.9	14.0	14.0	15.0	14.0	14.9	15.8	16.8	18.1	18.4	18.6
보건업	0.3	0.2	0.2	0.2	0.2	0.2	0.2	0.2	0.2	0.2	0.3
기타 업종	4.4	2.0	1.7	1.1	1.4	1.3	1.3	1.3	2.0	2.1	2.2

(단위: 천개, %)

(단위: 십억원, %)

(2) 파세표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32,659	61,585	64,191	73,558	101,694	101,805	128,978	133,057	147,764	181,555	177,878
농·임·어업	65	87	41	76	116	115	222	195	245	269	437
광업	66	96	167	251	298	334	133	523	444	594	576
제조업	15,572	28,764	32,193	29,122	43,810	48,233	65,071	59,330	59,941	76,353	81,493
전기·가스·수도업	1,702	3,465	2,441	4,578	7,300	6,957	7,592	6,043	6,011	5,864	3,565
건설업	2,036	3,738	3,484	6,198	7,623	9,544	10,958	14,256	15,144	18,310	16,237
도소매업	2,782	5,142	6,543	7,465	9,290	9,056	10,455	11,654	14,123	15,956	17,390
음식·숙박업	91	409	367	346	429	361	342	574	626	691	681
운수·창고·통신업	963	1,657	1,918	3,580	6,293	5,670	7,700	7,209	8,062	6,322	6,701
금융·보험업	6,337	14,142	11,580	16,475	16,345	11,316	13,785	20,818	27,356	37,281	28,716
부동산업	605	611	797	769	2,226	2,955	3,392	3,456	5,595	5,168	5,841
서비스업	1,949	2,264	3,214	3,877	5,420	4,884	6,878	8,618	9,810	14,215	15,474
보건업	78	108	87	102	106	116	149	173	225	258	262
기타 업종	414	1,103	1,358	718	2,438	2,266	301	206	180	274	504
농·임·어업	0.2	0.1	0.1	0.1	0.1	0.1	0.2	0.1	0.2	0.1	0.2
광업	0.2	0.2	0.3	0.3	0.3	0.3	0.1	0.4	0.3	0.3	0.3
제조업	47.7	46.7	50.2	39.6	43.1	47.4	51.2	44.6	40.6	42.1	45.8
전기·가스·수도업	5.2	5.6	3.8	6.2	7.2	6.8	6.0	4.5	4.1	3.2	2.0
건설업	6.2	6.1	5.4	8.4	7.5	9.4	8.6	10.7	10.2	10.1	9.1
도소매업	8.5	8.3	10.2	10.1	9.1	8.9	8.2	8.8	9.6	8.8	9.8
음식·숙박업	0.3	0.7	0.6	0.5	0.4	0.4	0.3	0.4	0.4	0.4	0.4
운수·창고·통신업	2.9	2.7	3.0	4.9	6.2	5.6	6.1	5.4	5.5	3.5	3.8
금융·보험업	19.4	23.0	18.0	22.4	16.1	11.1	10.9	15.6	18.5	20.5	16.1
부동산업	1.9	1.0	1.2	1.0	2.2	2.9	2.7	2.6	3.8	2.8	3.3
서비스업	6.0	3.7	5.0	5.3	5.3	4.8	5.4	6.5	6.6	7.8	8.7
보건업	0.2	0.2	0.1	0.1	0.1	0.1	0.1	0.1	0.2	0.1	0.1
기타 업종	1.3	1.8	2.1	1.0	2.4	2.2	0.2	0.2	0.1	0.2	0.3

(단위: 십억원, %)

(3) 총부담세액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7,693	14,573	14,929	17,234	22,346	21,550	26,715	26,536	35,411	37,307	34,855
농·임·어업	16	19	8	15	22	18	40	30	49	44	79
광업	14	23	36	56	60	67	28	70	107	70	30
제조업	3,281	5,992	6,576	5,841	8,669	9,100	12,171	10,473	14,583	13,707	14,278
전기·가스·수도업	465	957	673	1,267	1,956	1,856	2,010	1,470	1,502	1,398	851
건설업	521	953	886	1,388	1,617	2,061	2,484	3,016	3,516	4,021	3,219
도소매업	679	1,271	1,575	1,778	2,111	2,005	2,315	2,395	3,184	3,373	3,422
음식·숙박업	25	125	105	90	107	87	83	131	150	163	149
운수·창고·통신업	244	332	469	768	1,195	1,148	1,658	1,366	1,968	1,093	1,232
금융·보험업	1,625	3,845	3,150	4,481	4,228	2,844	3,478	4,935	6,607	9,013	6,884
부동산업	227	202	321	198	578	767	886	831	1,369	1,419	1,500
서비스업	474	558	799	948	1,259	1,121	1,467	1,750	2,283	2,898	3,052
보건업	19	27	22	24	25	28	31	30	53	49	48
기타 업종	103	270	309	381	517	448	63	38	39	59	112
농·임·어업	0.2	0.1	0.1	0.1	0.1	0.1	0.2	0.1	0.1	0.1	0.2
광업	0.2	0.2	0.2	0.3	0.3	0.3	0.1	0.3	0.3	0.2	0.1
제조업	42.6	41.1	44.0	33.9	38.8	42.2	45.6	39.5	41.2	36.7	41.0
전기·가스·수도업	6.0	6.6	4.5	7.4	8.8	8.6	7.5	5.5	4.2	3.7	2.4
건설업	6.8	6.5	5.9	8.1	7.2	9.6	9.3	11.4	9.9	10.8	9.2
도소매업	8.8	8.7	10.5	10.3	9.4	9.3	8.7	9.0	9.0	9.0	9.8
음식·숙박업	0.3	0.9	0.7	0.5	0.5	0.4	0.3	0.5	0.4	0.4	0.4
운수·창고·통신업	3.2	2.3	3.1	4.5	5.3	5.3	6.2	5.1	5.6	2.9	3.5
금융·보험업	21.1	26.4	21.1	26.0	18.9	13.2	13.0	18.6	18.7	24.2	19.7
부동산업	2.9	1.4	2.2	1.1	2.6	3.6	3.3	3.1	3.9	3.8	4.3
서비스업	6.2	3.8	5.4	5.5	5.6	5.2	5.5	6.6	6.4	7.8	8.8
보건업	0.3	0.2	0.1	0.1	0.1	0.1	0.1	0.1	0.1	0.1	0.1
기타 업종	1.3	1.9	2.1	2.2	2.3	2.1	0.2	0.1	0.1	0.2	0.3

〈표 IV-1-15〉 업종별 법인세 유효세율

(단위: %)

업종분류 (표본수)	5년 평균(2006~2010년)				향후 산업비중 변화방향
	법인세비용 기준	법인세부담액 기준		(전업종 대비)	
		(전업종 대비)	(전업종 대비)		
전 업종 (2443)	26.4	100	25.3	100	
- 제조업 전체 (1525)	26.3	100	24.8	98	↓
· 음식료품 및 담배 (140)	32.1	122	30.3	120	
· 섬유, 의복 및 신발 (101)	26.5	100	25.5	101	
· 나무 및 종이제품 (54)	24.2	92	19.4	77	
· 석유, 화학, 의약품 (418)	27.8	105	25.9	102	
· 고무, 광물, 금속 (337)	26.9	102	23.7	94	
· 전자, 통신 (112)	21.3	81	23.7	94	
· 기계, 장비 (186)	24.8	94	25.2	100	
· 운송장비 (162)	22.2	84	20.8	82	
· 기타제품 (15)	26.5	100	29.9	118	
- 비제조업 전체 (784)	26.7	101	26.4	104	
· 농어업 및 광업 (17)	27.4	104	19.1	75	↓↓
· 전기, 가스 공급업 (53)	23.7	90	23.4	92	
· 건설업 (155)	33.6	127	41.6	164	↓↓
·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174)	25.9	98	25.4	100	↑
· 운송업 (69)	30.3	115	19.8	78	↑
·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업 (103)	25.9	98	25.4	100	
· 전문서비스업 (163)	20.7	78	18.2	72	↑
· 기타 서비스업 (50)	28.0	106	27.4	108	↑↑
- 금융업 전체 (127)	25.3	96	24.6	97	↑
· 은행업 (34)	24.1	91	29.6	117	
· 증권업 (50)	25.8	98	22.8	90	

주: 법인세비용은 현금주의 회계기준, 법인세부담액은 발생주의 회계기준임. 음  
영처리는 전 업종 대비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업종을 표시함.  
출처: 송호신(2011)

(5) 소비 관련 세목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우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며, 수출이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외국인관광객 및 외국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sup>52)</sup>을 적용하고, 기초생활 필수재화 및 용역·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문화 관련 재화 및 용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미가공 식료품 및 문화 관련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sup>53)</sup>하고 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한편, 개별소비세는 <표 IV-1-16>과 같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본세율은 휘발유가 475원/ℓ, 경유가 340원/ℓ이며,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주세는 주류(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종가세(출고가격×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0.5%를 부과하고, 개별소비세액의 30%(등유, 중유, 수송용부탄의 경우는 15%), 교통·에너지·환경세액(휘발유, 경유)의 15%, 주세액의 10%(주세율 70% 이상인 주류의 경우는 30%) 등 부가세(surtax) 형

52) 영세율은 세율을 영(零)으로 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은 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여 환급받는 제도이다.

53) 면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태로 부과한다. 농어촌 특별세도 UR 타결에 따라 농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조달방법으로 도입되었는데,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가(surtax)하고 있다.

〈표 IV-1-16〉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품 목	세 율	품 목	세 율
〈제1호〉		〈제3호〉	
○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20%	○ 승용자동차	
○ 수렵용 총포류	"	- 2,000cc 초과, 캠핑용자동차	10%
○ 녹용·로얄제리·향수	7%	- 2,000cc 이하, 이륜자동차	5%
〈제2호〉		* 1,000cc 이하 경차 과세제외	
○ 보석	20%*	〈제5호〉	
○ 귀금속제품	"	○ 전기냉방기	5%
○ 고급사진기	"	○ 전기냉장고	"
○ 고급시계	"	○ 전기세탁기	"
○ 고급모피	"	○ 텔레비전수상기	"
○ 고급용단	"	〈과세장소〉	
○ 고급가구	"	○ 경마장	500원
〈제4호〉		○ 투전기장	10,000원
○ 휘발유	475원/ℓ (529원/ℓ)	○ 골프장(회원제)	12,000원
○ 경유	340원/ℓ (375원/ℓ)	○ 카지노	50,000원
○ 등유	90원/ℓ	- 폐광지역(내국인)	3,500원
○ 중유	17원/ℓ	- 외국인	면세
○ 프로판(LPG)	20원/kg	○ 경륜장·경정장	200원
○ 부탄(LPG)	252원/kg (275원/kg)	〈과세유흥장소〉	
○ 천연가스(LNG)	60원/kg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주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10%
○ 부생연료유	66원/ℓ		

- 주: 1. 제2호 품목의 세율은 기준금액(200만원) 초과금액, 고급가구는 개당 500만원/조당 800만원 초과금액  
 2. 제4호 품목 중 휘발유·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  
 3. 5호 품목은 월간소비전력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제품  
 4. ( ) 안은 현재 적용하는 탄력세율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0. 10.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 전반의 소비성향이 상승하겠지만 순국민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sup>54)</sup>지면서 부가가치세의 세원이 되는 민간최종소비 지출 증가세는 제한될 것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가 해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해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증가도 제한될 것이다.

한편, 고령인구의 증가는 항목별 소비패턴의 큰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표 IV-1-17>에 정리된 현행 소비 관련 세제하에서의 평균유효세율<sup>55)</sup>이 향후에도 유지될 경우 소비 관련 세제의 세수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 추정해 보았다. 제Ⅲ장 4절 '라. 코호트 분석'에서 인구 고령화로 소비 비중이 증가할 항목으로 나타난 식료품, 광열수도,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통·통신, 기타소비 등 6개 항목 중에서 식료품, 보건, 기타소비 등 3개 항목은 평균유효세율이 평균보다 낮고 나머지는 높다. 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출수준이 작아지는 주거비, 교육, 교양·오락 등 3개 항목 중에서 교육, 교양·오락은 평균유효세율이 평균보다 다소 낮다. 따라서 항목별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한 소득 관련 세목의 세수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의 2010년 연령별 소비패턴이 유지될 경우 2020년 및 2030년에 노인가구 비중이 증가<sup>56)</sup>함에 따라 소비 관련 세수가 어떻게

54) 기업부문 비중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 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 박사의 도움으로 받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와 이에 대한 surtax 형태로 부과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대상으로 2009년을 기준으로 소비 항목별 평균유효세율을 추정하였다. 정부소비는 대부분 면세되고 있고, 기업부문의 최종소비지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6) 가구주 연령별 가구비중은 다음과 같은 통계청의 “가구주의 연령별 추계가구-전국”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가구주 연령대	2010년	2020년	2030년
~39세	27.3	20.5	16.9
40~49세	25.8	22.2	17.7
50~59세	22.1	23.9	22.1
60세~	24.8	33.4	43.3

변동할지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표 IV-1-18>를 보면 현행 소비세제가 유지될 경우 소비관련 세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령화가 더 진전됨에 따라 노인가구의 소비패턴이 지금과 달라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 전체의 소비성향이 높아져 소비 관련 세수가 증가하겠지만, 경제 전체의 소비패턴이 고령자가 선호하는 항목 위주로 변동하더라도 소비 관련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중립적이므로 소비 관련 세수의 증가 추세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17〉 소비항목별 세부담

(단위: 가구당 평균금액은 천원, 평균유효세율은 %)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특수세, 주세) + 동특세/교육세			소계			고명화 와의 관계
	세부담	지출규모	평균 유효세율	세부담	지출규모	평균 유효세율	세부담	지출규모	평균 유효세율	
식음료품 및 비주류음료	90	3,200	2.80				90	3,200	2.80	↑
주류 및 담배	45	290	15.35	28.21	90	31.21	73	290	25.06	
의류 및 신발	125	1,372	9.09				125	1,372	9.09	↑
주거 및 수도광열	135	2,370	5.68	89.42	626	14.27	224	2,370	9.4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61	787	7.80	0.03	100	0.00	61	787	7.80	
보건	0	1,534	0.00				0	1,534	0.00	↑
교통	219	2,798	7.83	145.64	1,698	8.57	365	2,798	13.04	↑
통신	125	1,376	9.08				125	1,376	9.08	↑
오락·문화	74	1,168	6.33				74	1,168	6.33	↓
교육	168	2,804	5.98				168	2,804	5.98	↓
음식 숙박	262	2,881	9.09				262	2,881	9.09	
기타 상품 및 서비스	96	1,934	4.95	0.45	53	0.75	96	1,934	4.97	↑
합계	1,398	22,514	6.21	264	2,568	10.26	1,662	22,514	7.38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특소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세부담	지출규모	평균 유효세율	세부담	지출규모	평균 유효세율		
개별 소비세	등유	5	66	7.54	소주	10	29	35.16
	도시가스	44	378	11.54	맥주	14	39	35.16
	LPG(프로판)	0	41	0.90	위스키 등	2	5	35.16
	LPG(부탄)	40	141	28.67	기타	3	17	14.50
	승용자동차	46	698	6.64	계	28	90	31.21
	고급가구	0	100	0.00	취발유	72	680	10.62
	고급시계, 사진기, 보석류	0	53	0.75	경유	27	321	8.44
	소 계	136	1,477	9.21	주세	99	1,001	9.92
					교통 에너지 환경세			
					소 계			

- 주: 1. 주세  
 2. 개별소비세 중 등유, 도시가스, LPG(프로판·부탄)  
 3. 개별소비세 중 고급가구  
 4. 개별소비세 중 승용자동차, 교통·에너지·환경세

〈표 IV-1-18〉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가 소비 관련 세수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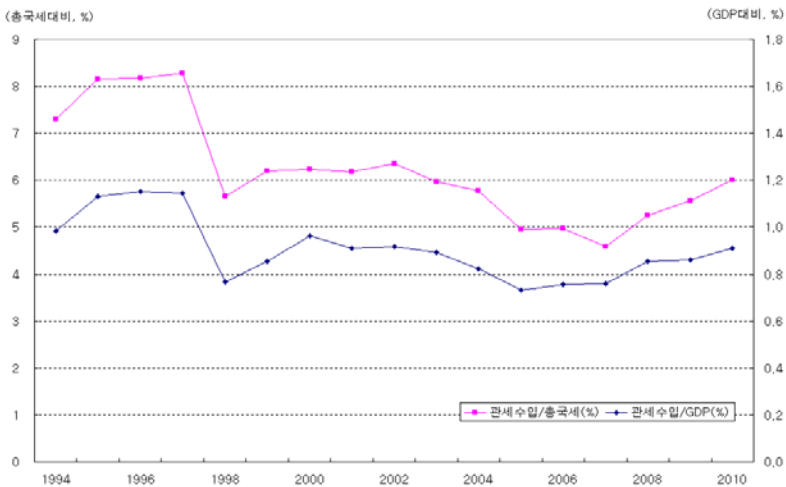
	평균유효세율 (%)	가구주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비중(2010년, %)				조세수입 추계결과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0년	2020년	2030년
식음료품 및 비주류음료	2.80	12.3	12.9	13.4	20.6	0.41	0.43	0.45
주류 및 담배	25.06	1.2	1.0	1.4	1.4	0.31	0.32	0.32
의류 및 신발	9.09	6.8	6.3	6.6	5.5	0.57	0.57	0.56
주거 및 수도광열	9.45	9.8	9.1	9.8	13.9	1.01	1.04	1.08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7.80	4.8	3.2	3.7	4.0	0.31	0.31	0.31
보건	0.00	6.3	5.1	6.5	11.9	0.00	0.00	0.00
교통	13.04	12.8	10.5	12.7	10.8	1.52	1.51	1.50
통신	9.08	5.8	5.8	6.8	5.5	0.54	0.54	0.53
오락, 문화	6.33	6.2	5.7	5.1	5.1	0.35	0.35	0.34
교육	5.98	9.3	20.3	11.6	2.5	0.65	0.60	0.53
음식, 숙박	9.09	12.9	12.8	13.7	11.2	1.15	1.13	1.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4.97	11.8	7.4	8.7	7.6	0.44	0.43	0.42
합 계	7.38	100.0	100.0	100.0	100.0	7.27	7.22	7.17

(6) 관세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만 부과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입물품에 대해 종가세(수입물품의 가격 × 관세율표상 세율) 형태로 수입자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그림 IV-1-2]에서 보듯이 1990년대 중반 GDP 대비 1.2% 수준에 달하던 우리나라 관세수입은 0.8%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수입 증가 및 환율 상승으로 0.9%까지 회복된 상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전체 GDP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관세수입은 FTA 체결 확대, 도하개발아젠다(DDA) 다자간 무역협상에 따른 관세율 인하 등 관세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V-1-2] 우리나라의 관세수입 추이



## 나. 세목별 지방세수입

인구 고령화에 따라 세목별로 세수변동 방향이 다양하게 나타난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수 여건이 낙관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주민세(최근에 신설된 지방소득세 포함)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로 부과되는 소득할, 급여총액에 연동되는 종업원할 및 종량세인 균등할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소득세 항목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그 변화방향이 뚜렷하게 예측되지 않는다.

〈표 IV-1-19〉 세목별 지방세수입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실 적	비중	실 적	비중	실 적	비중
총 지방세	435,243	100.0	454,798	100.0	451,679	100.0
취득세	72,615	16.7	69,160	15.2	66,439	14.7
등록세	72,536	16.7	71,429	15.7	71,314	15.8
면허세	765	0.2	726	0.2	735	0.2
레저세	8,643	2.0	9,890	2.2	10,023	2.2
공동시설세	5,433	1.2	5,885	1.3	5,912	1.3
지역개발세	1,000	0.2	926	0.2	908	0.2
지방교육세	45,139	10.4	48,644	10.7	47,944	10.6
주민세	74,115	17.0	81,630	17.9	75,519	16.7
재산세	37,551	8.6	44,113	9.7	44,233	9.8
자동차세	23,699	5.4	26,109	5.7	28,340	6.3
주행세	32,702	7.5	30,812	6.8	32,871	7.3
농업소득세	0	0.0	0	0.0	0	0.0
도축세	519	0.1	524	0.1	557	0.1
담배소비세	27,610	6.3	29,204	6.4	30,107	6.7
종합토지세	53	0.0	0	0.0	9	0.0
도시계획세	18,828	4.3	21,828	4.8	22,692	5.0
사업소세	7,311	1.7	7,995	1.8	8,080	1.8
과년도수입	6,724	1.5	5,923	1.3	5,996	1.3

〈표 IV-1-20〉 지방세 세목별 과세대상 및 세율

세 목	과세대상 또는 납세의무자	세 율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의 취득	○ 일반 : 취득가액의 2% (개인간 주택 유상거래 50% 경감) ○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 : 취득가액의 10% ○ 대도시 내의 공장 신·증설 : 취득가액의 6%
등록세	○ 과세물건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 부동산·선박·법인등등기, 자동차·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등록	○ 부 동 산 : 0.2~2.0% (개인간 주택 유상거래 50% 경감) ○ 선 박 : 0.02~1% ○ 자 동 차 : 0.2~5% ○ 법인등기 : 0.1~0.4%
레저세	○ 경륜·경정·경마 등	○ 발매액의 10%
면허세	○ 각종 면허	○ 제1종~제5종별로 구분 ○ 대도시·시·군별로 3,000원~45,000원까지 차등과세 ※ 대도시 : 인구 50만 이상
주민세	○ 균등할 - 개인 : 세대별 - 법인 : 사업장별	○ 균등할(종량세) - 개인 · 주소를 둔 개인 : 10,000원 이내에서 조례로 결정 ·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 법인 : 50,000~500,000원 (자본금액·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1㎡당 250원(연면적 330㎡ 이하 비과세)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토 지 : 0.07~0.5% - 종합합산과세대상 : 0.2~0.5% - 별도합산과세대상 : 0.2~0.4% - 분리 과세대상 : 0.07~4% ○ 건축물 : 0.25~4% ○ 주 택 : 0.15~0.4% ○ 선 박 : 0.3%, 5.0% ○ 항공기 : 0.3% ※ 소액부징수 : 2,000원 미만

〈표 IV-1-20〉의 계속

세 목	과세대상 또는 납세의무자	세 율
자동차세	○ 차종별*로 과세되는 종량세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등	○ 승용차(CC당, 영업·비영업구분) : 18~24원 (비영업용 80~220원) ○ 승합차(대당) : 25~100천원(비영업용 65~115천원)
주행세	○ 휘발유·경유 등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자	○ 교통세액 × 360/1,000(탄력세율, 영146의14) * 법정세율 300/1,000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담배사업법 제2조)	〈법정세율〉 ○ 킬로그램당 : (20개비당)641원 ○ 엽 킬런 : 50g당 3,270원 ○ 파이프담배 : 50g당 1,150원 ○ 씹는담배 : 50g당 1,130원 ○ 법새맡는 담배 : 50g당 820원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총액의 5%	○ 부가가치세와 동일
도 축 세	○ 소 돼지의 도살	○ 시가의 1%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지방소득세	○ 소득할 : 소득세액, 법인세액 ○ 종업원할 : 종업원의 월급여총액	○ 소득할 : 본세의 10% ○ 종업원할 : 월급여총액의 0.5%
공동시설세 * 목적세	○ 공동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 건축물(주유소, 백화점, 유흥장 등), 선박	○ 건축물·선박가액 : 0.05%~0.13% ○ 주유소, 백화점, 유흥장 등 : 건축물 등의 2배 ○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 : 토지·건축물 가액의 0.023%
도시계획세 * 목적세	○ 토지, 건축물, 주택	○ 토지·건축물·주택 시가표준액의 0.15%
지역개발세 * 목적세 * '92신설	○ 발전용수(수력발전을 하는 자) ○ 지하수(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채광자원을 원료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자) ○ 컨테이너(컨테이너 취급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 원자력발전(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자)	○ 10㎡당 2원 ○ 1㎡당 20원~200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1TEU당 15,000원 ○ 1킬로와트시당 0.5원 ※ 소액부징수 : 2,000원 미만
지방교육세 * '01신설	○ 등록세 ○ 레저세 ○ 주민세 균등할 세액  ○ 재산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등록세액의 20% ○ 레저세액의 40%(’08년까지 60% 적용) ○ 주민세 균등할 세액의 10% (인구 25만 이상인 시 25%) ○ 재산세액의 20% ○ 자동차세액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50%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0. 10.

두 번째와 세 번째, 다섯 번째 세수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로 비금융자산에 대해 부과되므로 1인당 비금융자산 규모와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취득세와 등록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수년간은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도 어느 정도 축적한 베이비 부머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자산규모가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들 세목의 지방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자산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면 증가세가 하락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세의 일정비율로 부과되고 있는 주행세와 자동차세도 고령자의 선호가 크지 않은 소비항목으로 향후 관련 세수가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종합해 보면, 중앙정부는 소비과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인구 고령화 진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세수 확대가 가능하지만, 재산과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확보에 불리해 보인다. 그러나 <표 II-2-2>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중앙정부의 세수는 감소하지만 지방정부의 세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전망결과와 상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혹여 우리나라 지방세수에서 자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에 2배에 달하므로 지방세수 세목별로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다른 것이 아닌지 추가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으나, 지방세의 자산과세가 소득과세나 자산과세에 비해 인구 고령화에 의한 세수증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정부 실제 세수 데이터에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의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좀 더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표 IV-1-21〉 인구구조변화/소득증가와 지방세수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중		1인당 소득수준		adj. R <sup>2</sup>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지방정부 세수	-0.019	-1.975	0.127	4.346	0.018	5.326	0.971
소득과세	-0.016	-1.080	0.041	5.238	0.007	5.929	0.979
소비과세	-0.010	-1.132	0.028	6.368	0.005	6.669	0.991
자산과세	0.004	2.629	0.077	6.149	-0.008	-3.336	0.922

〈표 IV-1-22〉 우리나라 및 OECD 국가의 중앙/지방정부 세수구조

## (1) 우리나라

(단위: %)

	세수/GDP						비중					
	1965	1975	1980	1990	2000	2008	1965	1975	1980	1990	2000	2008
중앙정부/연방정부												
소득과세		3.27		6.09	5.93	7.41		25.8		43.3	40.5	46.5
소비과세		8.77		7.51	7.76	7.43		69.3		53.5	52.9	46.7
재산과세		0.62		0.45	0.97	1.08		4.9		3.2	6.6	6.8
주정부												
소득과세		0.00		0.00	0.00	0.00						
소비과세		0.00		0.00	0.00	0.00						
재산과세		0.00		0.00	0.00	0.00						
지방정부												
소득과세		0.34		0.34	0.60	0.85		22.7		10.4	18.1	21.9
소비과세		0.34		1.10	0.90	0.95		22.7		33.5	27.1	24.5
재산과세		0.82		1.84	1.82	2.08		54.7		56.1	54.8	53.6
정부전체												
소득과세		3.74	4.61	8.40	10.31	14.05		26.2		43.5	47.4	54.9
소비과세		9.12	10.71	8.62	8.66	8.38		63.8		44.6	39.8	32.7
재산과세		1.44	1.37	2.29	2.79	3.16		10.1		11.9	12.8	12.3

IV. 세입 및 세출에 미치는 영향 271

(2) OECD 평균

(단위: %)

	세수/GDP						비중					
	1965	1970	1980	1990	2000	2008	1965	1975	1980	1990	2000	2008
중앙정부/연방정부												
소득과세	9.62	10.55	9.59	9.70	10.53	10.30	41.5	48.0	50.8	48.9	48.9	50.4
소비과세	12.41	10.42	8.69	9.37	10.24	9.56	53.5	47.4	46.0	47.3	47.6	46.8
재산과세	1.17	1.03	0.61	0.75	0.75	0.56	5.0	4.7	3.2	3.8	3.5	2.7
주정부												
소득과세			2.23	2.93	2.96	3.45			52.0	55.7	59.3	55.0
소비과세			1.72	1.73	1.46	2.11			40.1	32.9	29.3	33.7
재산과세			0.34	0.60	0.57	0.71			7.9	11.4	11.4	11.3
지방정부												
소득과세	4.48	3.29	2.52	2.55	2.42	2.38	78.5	80.0	70.2	67.6	63.0	59.8
소비과세	0.00	0.14	0.23	0.35	0.47	0.57	0.0	3.4	6.4	9.3	12.2	14.3
재산과세	1.23	0.68	0.84	0.87	0.95	1.03	21.5	16.5	23.4	23.1	24.7	25.9
정부전체												
소득과세	13.85	15.73	19.41	20.48	21.96	21.90	54.7	57.5	63.2	62.5	62.5	63.5
소비과세	9.58	9.79	9.74	10.47	11.28	10.81	37.8	35.8	31.7	31.9	32.1	31.3
재산과세	1.90	1.85	1.57	1.82	1.90	1.80	7.5	6.8	5.1	5.6	5.4	5.2

주: 음영 처리된 부분은 정부 전체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을 표시.

다. 사회보장기여금

박형수·송호신(2011)에 따르면 현행 4대 공적연금이 유지될 경우 이들 공적연금의 보험료 부담이 2010년 현재 GDP 대비 3.07%에서 2050년에는 3.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여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변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사회 보장부담률은 2010년 GDP 대비 7.0%에서 2050년에는 9.6%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 라. 향후 우리나라의 세수구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던 제5공화국 시절을 제외하고는 1973년 11.9% 수준에서 2007년 21.0%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부담을 포함한 국민부담률도 동일 기간 중에 12.0%에서 26.5%까지 상승하였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사회보장부담 포함)은 소득과세, 소비과세, 자산과세가 각각 51%, 32%, 12%로 구성되어 있다. 1980년 63%까지 상승하였던 소비과세는 최근 32%까지 비중이 하락한 반면,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8% 수준에서 12%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소득세 비중도 1990년에 20%에 달하였으나 최근 14%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법인세 비중도 13~14%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세율인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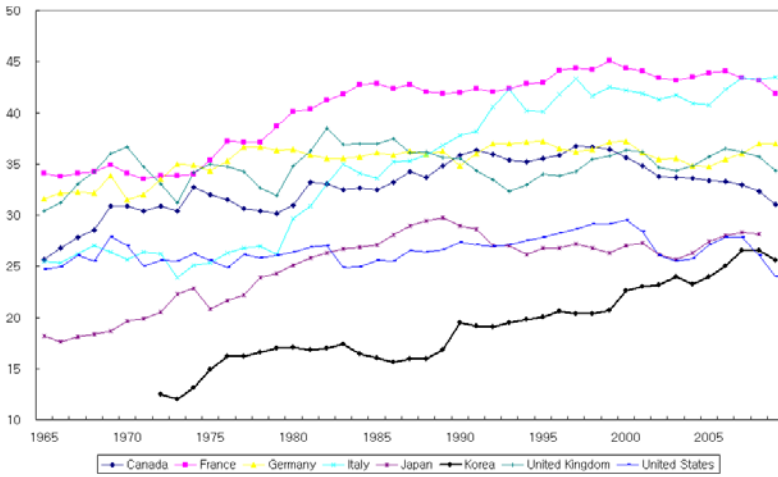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세수구조 추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과세 비중이 매우 낮는데 이는 낮은 소득세 부담에 기인하며, 최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의 급증과 G7 국가의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 하락 등으로 선진국과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자산과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자산보유 관련 세수 비중은 작은 반면, 자산거래 관련 세수 비중이 높다.

지금까지의 인구 고령화가 세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연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는 증가하겠으나 나머지 소득세 항목들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다소 감소할 전망이므로 전체적인 소득세수의 변동방향은 확실히 알기 어렵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만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 관련 과세는 전반적인 소비성향 상승으로 증가하겠지만, 재산관련 과세는 자산보유 관련 세부담은 증가하겠지만 자산거래 관련 세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소득관련 과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 관련 과세 비중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산 관련 과세의 비중은 다소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1972~2006년)와 일본(1955~2006년)의 세목별 GDP 대비 세수규모를 고령인구 비중 증가와 비교하여 살펴본 [그림 IV-1-6]에서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중이 비슷했던 시기의 일본과 국민부담률이 거의 동일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소득과세 세수가 다소 작은 반면, 소비과세나 자산과세 세수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는 1991년(고령인구 비중 12.6%) 이전까지 약 35년 동안 고령인구 비중이 5.3%에서 12.6%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세수구조가 어떻게 변동해 왔는지 살펴보면, 소득 관련 과세와 자산관련 세수가 GDP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반면 소비 관련 세수는 1997년 소비세율 3%에서 5%로 인상하기 이전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세원 변동만으로 예측한 앞의 결과와는 달리 소비과세의 역할이 작고 자산과세 역할이 크게 나타난 것은 아마 일본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소비세제를 약화시키는 대신 자산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소비세 도입이 1989년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늦었고 2010년 현재 세율도 5%로 캐나다와 더불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또 [그림 IV-1-6]에서 보듯이 관세와 주세 수입이 절반으로 하락하고 유류 관련 세수도 증가하지 않았다.

[그림 IV-1-3] 우리나라와 G7 국가 조세/국민부담률 추이  
(1965~200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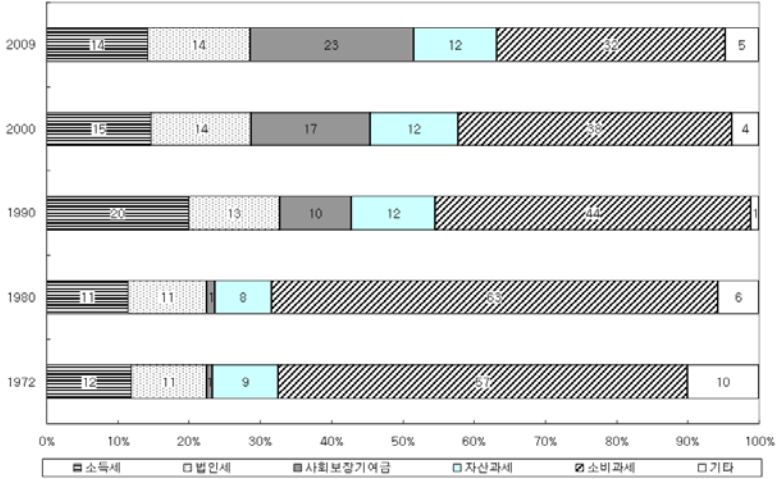


<표 IV-1-23> OECD 조세 분류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세분류

소득과세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소득세·법인세 감면분)
재산과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분)
소비과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관세, 교육세(주세·교통세·개별소비세·금융보험업자수입분), 농어촌특별세(개별소비세·관세감면분)
기타	과년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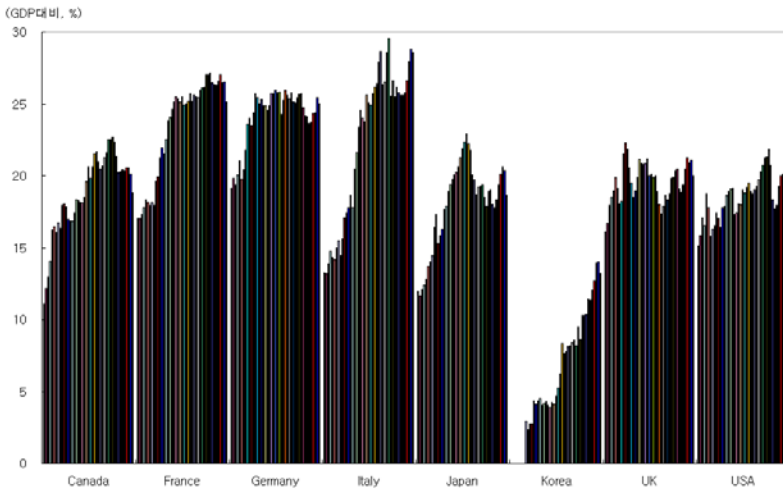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0. 10.

[그림 IV-1-4] 우리나라의 세수구조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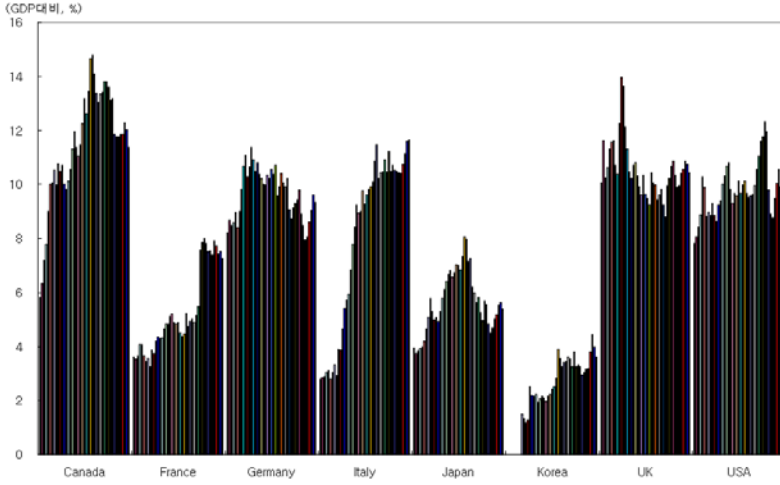


[그림 IV-1-5]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세수구조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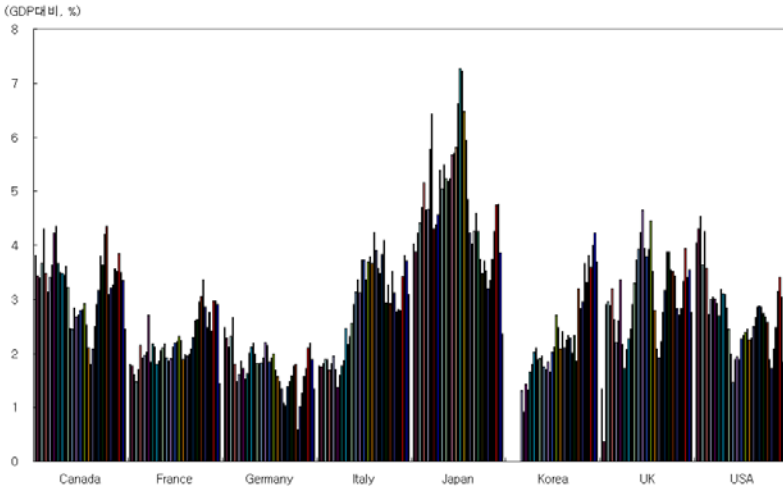
(소득과세)



(소득과세 : 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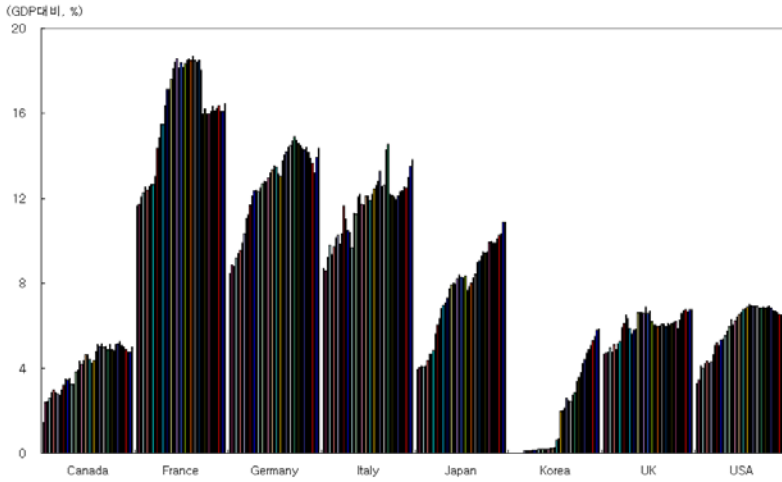


(소득과세 :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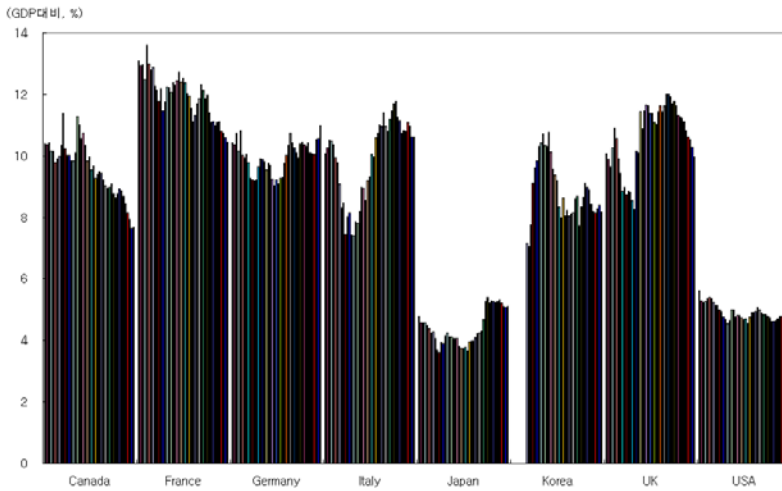


IV. 세입 및 세출에 미치는 영향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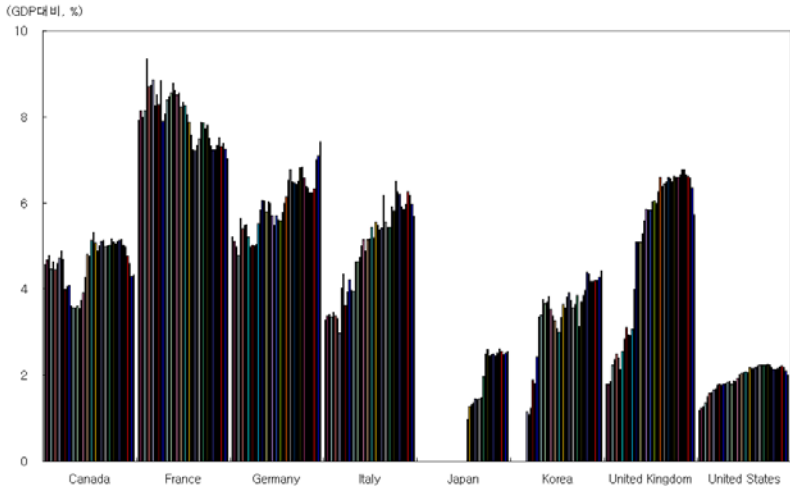
(소득과세 : 사회보장기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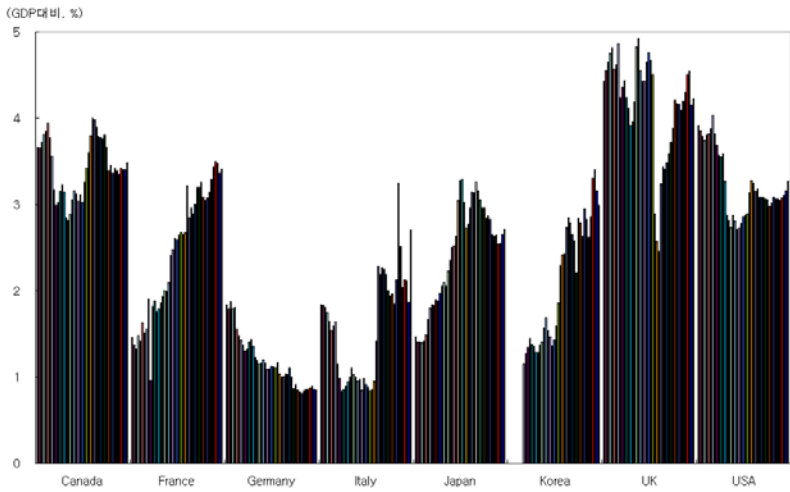
(소비과세)



(소비과세 : 일반소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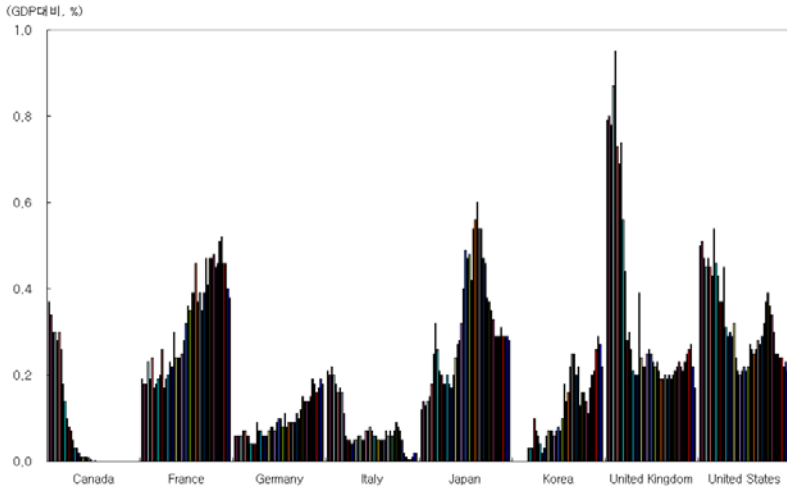


(자산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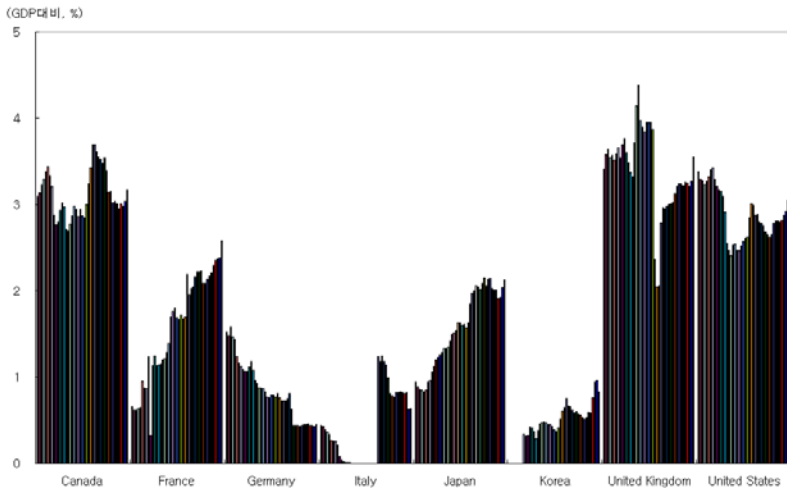


IV. 세입 및 세출에 미치는 영향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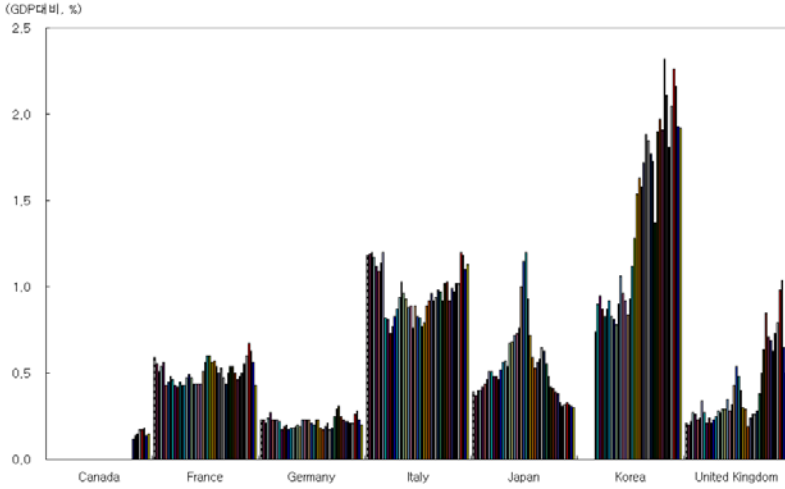
(자산과세 : 상속증여 관련 조세)



(자산과세 : 자산보유 관련 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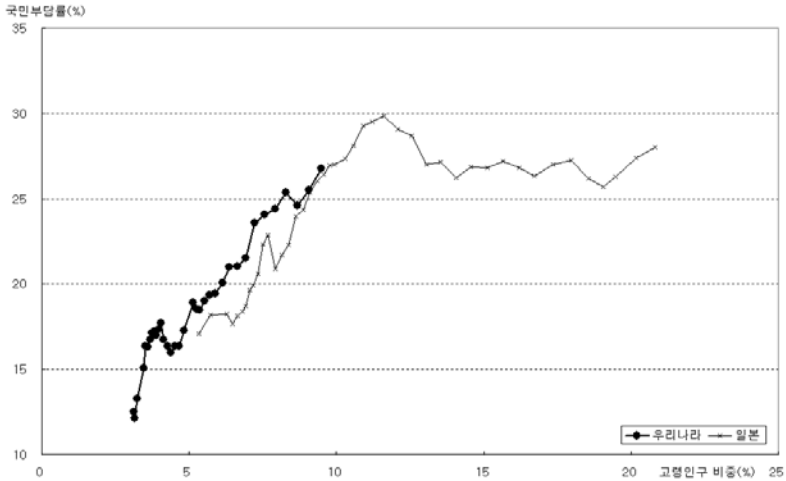


(자산과세 : 자산거래 관련 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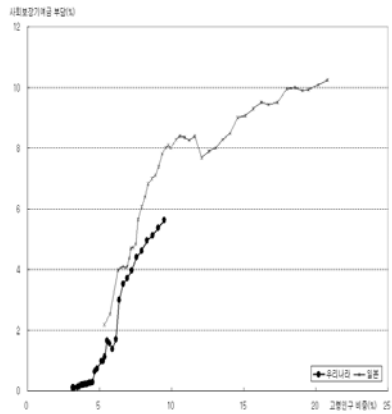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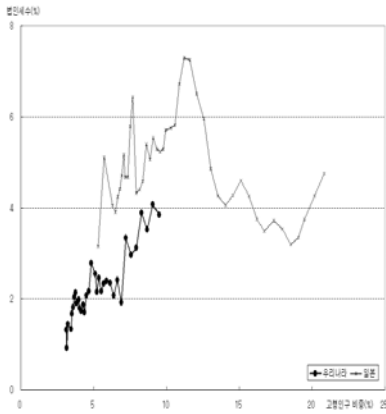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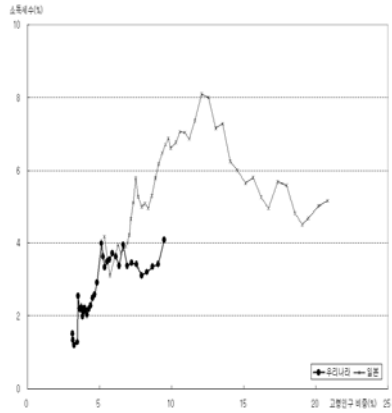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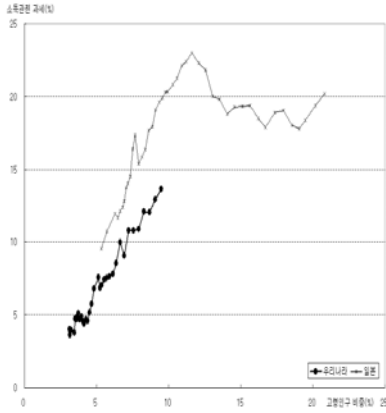


[그림 IV-1-6] 인구 고령화에 따른 한·일 조세수입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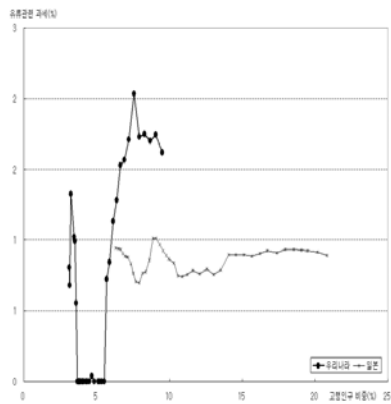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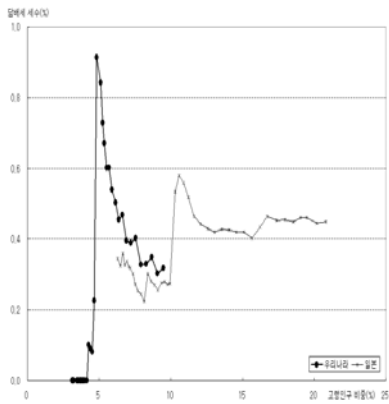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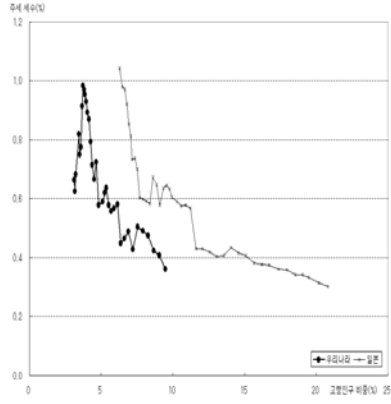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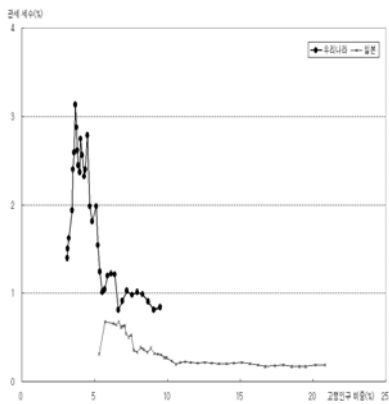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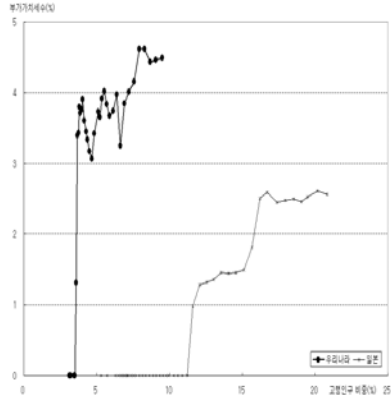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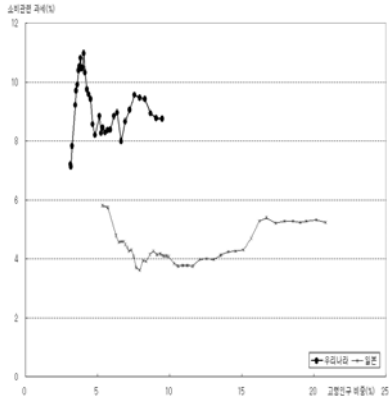
(1) 국민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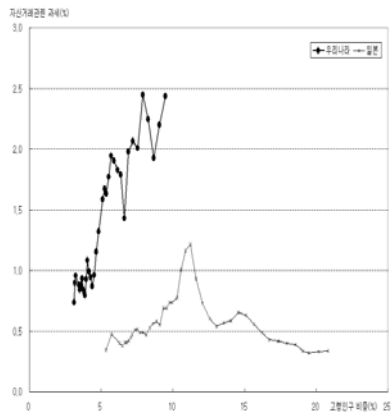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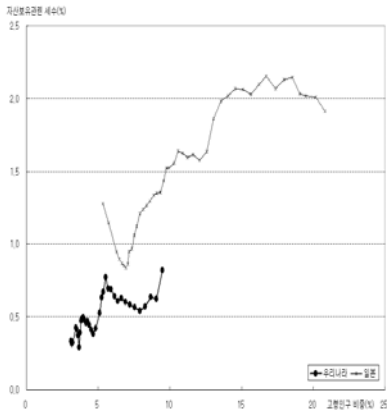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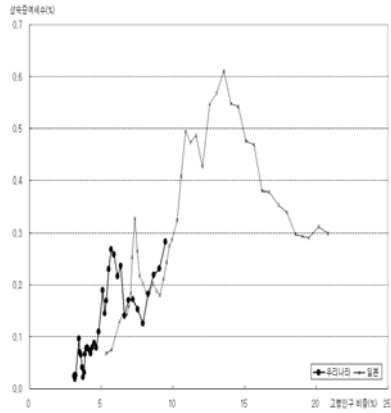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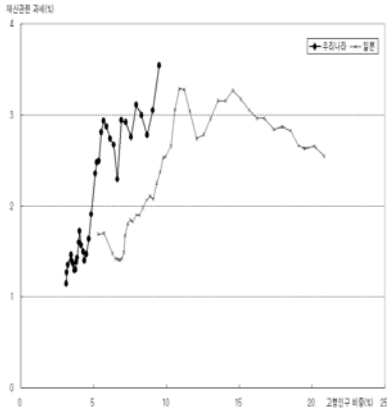
(2) 소득 관련 과세



(3) 소비 관련 과제



(4) 자산 관련 과세



## 2. 세출구조 변동에 미치는 영향

### 가. 사회복지 및 보건 지출

#### (1)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장기재정 추계<sup>57)</sup>

4대 공적연금은 3개 연금공단 및 국방부의 가장 최신의 공식적인 전망치를 활용하였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재정재계산 결과(2008년 11월)를,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최근 실시한 2030년까지의 연금재정전망 결과를, 사학연금은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의 재정재계산 결과(2010년 10월)를, 군인연금은 '국방부(국방연구원)'의 재정재계산 결과(2007년)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은 현행 제도 및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의 국민연금가입자 전체평균소득월액(A값)을 바탕으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추계하였다.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현재는 국민연금 A값의 5%이지만,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에 2028년까지 10%로 상향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부칙을 반영하여 추계하였다. 다만 동 부칙에 구체적인 일정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급여율 인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추계하였다.

4대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추계결과를 보면, 우선 보험료에 의존하는 4대 공적연금의 지출규모는 2010년 GDP 대비 2.3%에서 2050년 7.7%로 5.4%p나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공적연금 지출 증가의 대부분(GDP 대비 4.4%p)을 국민연금이 차지하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향후 20

57) 의료지출의 장기재정 추계는 저자가 수행한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2011년 3월) 및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및 총량분야 작업반(장기재정반)의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년 이상 가입한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이러한 연금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적립금 규모는 351.9조원으로 GDP 대비 30%에 달한다.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0.6%p), 사학연금(0.3%p), 군인연금(0.1%p) 등 지출규모 증가폭이 작은 편이지만, 이들 연금은 이미 적자를 시현하고 있거나 조만간 적자로 전환될 전망으로 적자보전 등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IV-2-1〉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총 수입	총 지출	수지	총 수입	총 지출	수지	총 수입	총 지출	수지	총 수입	총 지출	수지
2010	4.41	0.90	3.52	0.77	0.92	-0.15	0.37	0.28	0.09	0.09	0.20	-0.11
2015	4.59	1.07	3.52	0.77	1.03	-0.27	0.39	0.31	0.08	0.09	0.19	-0.10
2020	4.86	1.41	3.45	0.76	1.17	-0.41	0.39	0.35	0.04	0.09	0.18	-0.10
2025	4.73	1.93	2.80	0.76	1.34	-0.58	0.38	0.42	-0.04	0.09	0.19	-0.10
2030	4.87	2.39	2.48	0.78	1.50	-0.71	0.37	0.47	-0.10	0.10	0.20	-0.10
2035	4.71	2.99	1.72	0.78	1.50	-0.71	0.37	0.52	-0.15	0.11	0.22	-0.11
2040	4.63	3.82	0.81	0.78	1.50	-0.71	0.39	0.56	-0.17	0.12	0.24	-0.12
2045	4.31	4.61	-0.31	0.78	1.50	-0.71	0.40	0.60	-0.20	0.13	0.27	-0.14
2050	3.92	5.31	-1.39	0.78	1.50	-0.71	0.41	0.63	-0.22	0.15	0.30	-0.16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노령연금 지출규모는 2010년 GDP 대비 0.4%에서 2050년 3.1%로 2.7%p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2050년 지출규모는 GDP 대비 1.53%로 증가규모가 1.1%p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2-2〉 기초노령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의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2010	0.39	0.39
2015	0.53	0.44
2020	0.83	0.52
2025	1.22	0.68
2030	1.70	0.85
2035	2.09	1.05
2040	2.47	1.24
2045	2.80	1.40
2050	3.06	1.53

(2) 의료지출의 장기재정 추계<sup>58)</sup>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바탕으로 EU의 의료(Health Care) 부문 장기재정추계 방법론에 따라 조성법으로 추계하였다. 여기서 조성법(component method)이란 2010년 건강보험 급여비를 성별·연령별 1인당 급여비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한 후 해당 연령 인구 수를 곱해 합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의료비는 인구요인(demographic drivers)과 소득 등의 비인구요인(non-demographic drivers)에 의해 변동한다. 인구요인에는 고령자일수록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 수명 증가와 더불어 건강수명도 증가 등이 있으며, 비인구요인으로는 소득증가에 따라 의료수요가 탄력적으로

58) 의료지출의 장기재정 추계는 저자가 수행한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2011년 3월) 및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및 총량분야 작업반(장기재정반)의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수요 및 단가 상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가격탄력성 효과 등이 있다. 재정전망의 일부로 추계하는 것이므로 국민의료비 전체가 아니라 공공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급여만 추계하였다. 2008년 국민의료비 66.7조원 중에서 민간재원 29.8조원을 제외한 공공재원 36.9조원이 이에 해당한다. 건강보험 급여 이외의 공공재원 항목들은 별도로 추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대여명 증가규모의 절반 정도 건강수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2010년 기준 성별·연령별 1인당 총진료비 구조가 일정 정도 우측으로 이동하여 1인당 총진료비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의료서비스 단가 증가율은 1인당 소득증가율과 동일하다고 전제하되, OECD(2006)<sup>59)</sup>처럼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초과비용 증가율(excess cost growth)이 연 1% 정도 발생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EU의 장기요양(Long Term Care) 부문 장기재정추계 방법론에 한국적 현실(등급별·자격별 차등적용)을 가미하여 조성법에 따라 추계하였다. 여기서 조성법이란 2010년 장기요양급여비를 연령별(65세 미만·65세 이상) × 등급별(1등급·2등급·3등급) × 자격별(재가·시설) 등 12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장기요양 인정자 1인당 총요양비 및 총급여비를 각각 추계한 후 해당 연령 인구 수를 곱해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아직 도입 초기이므로(2008년 7월 시행) 향후 수년간 인정자 수 급증이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제도 정착 기간이 경과되면 안정화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도입 초기 3~5년에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율이 15~18%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9년 하반기부터 대상자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0년 들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기 시작

59) PROJECTING OECD HEALTH AND LONG-TERM CARE EXPENDITURES: WHAT ARE THE MAIN DRIVER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477

하였다. 따라서 향후 추이를 보다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09)의 2009~2014년 연령별 장기요양 인정자 수 추계결과(기본 시나리오)를 활용하였으며, 1인당 수가는 임금 증가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각각의 지출규모가 2010년 GDP 대비 3.1% 및 0.2%에서 2050년 6.5% 및 1.7%로 3.4%p 및 1.5%p나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제Ⅲ장 4절 '나. 연령별 소비구조' 및 '라. 코호트 분석'에서도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가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다만 선진국의 과거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의료지출 장기재정추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결과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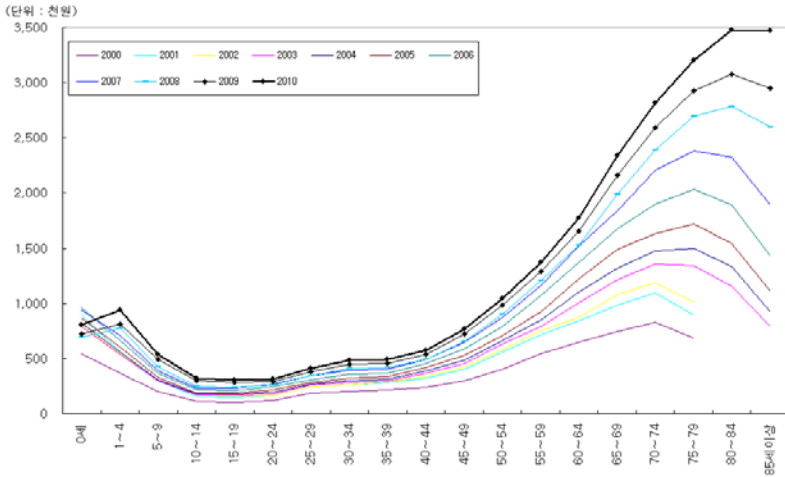
#### 〈표 IV-2-3〉 의료지출 장기재정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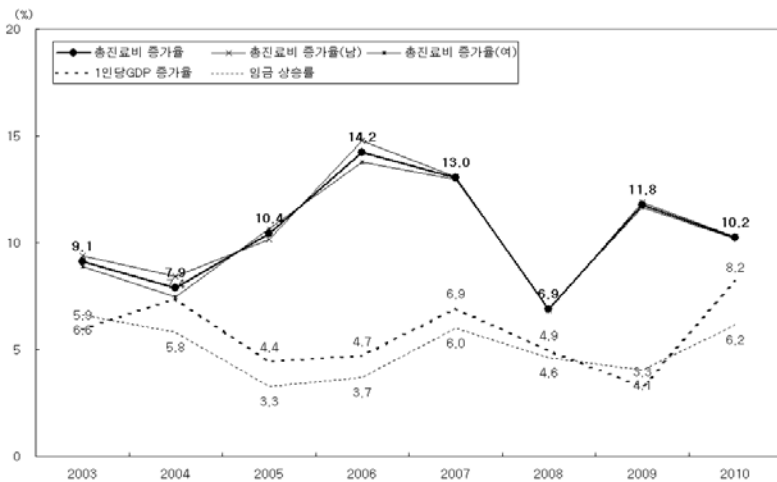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2010	3.06	0.23
2015	3.49	0.35
2020	3.96	0.42
2025	4.48	0.53
2030	5.00	0.67
2035	5.48	0.87
2040	5.91	1.10
2045	6.27	1.39
2050	6.53	1.65

[그림 IV-2-1]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 추이

(1) 적용인구 1인당 건강보험 총진료비 추이(2000~2010년)



(2) 1인당 총진료비 및 공단부담금 증가율 추이(2000~2010년)



자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연보』 2002~2009년 각 호 및 『건강보험주요통계』 2000~2010년 각 호.

###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기재정 추계<sup>60)</sup>

기초생활보장 관련 재정지출 규모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성격이 비슷한 생계급여·주거급여·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의 4개 그룹으로 구분한 후 각각 추계모형을 구축하여 조성법을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우선 생계급여·주거급여·자활급여는 해당 수급자 수에 1인당 급여액을 적용하여 추계 급여총액을 추계하는데, 기초생보 수급자 수는 2006~2007년 성별·연령구간별 수급자 비율을 통계청의 성별·연령구간별 인구추계 결과에 적용하여 추계하고 1인당 급여액은 최저생계비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연 3%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의료급여도 해당 수급자 수에 1인당 급여액을 적용하여 급여총액을 추계하는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보 의료급여 수급자 및 타 법률에 의한 수급자 수를 기초로 하여 추계하고 급여종류별 1인당 수가는 1인당 소득 증가율로 증가하고 동시에 자연 증가 등을 감안한 소득에 대한 의료비지출 탄력성이 1.1(2007년)~1.0(2050년)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교육급여는 품목별 지급 대상 수급자 수에 1인당 급여액을 적용하여 추계하는데, 교육급여 수급자는 성별·연령구간별 생계급여 수급자 수에서 19세 이하 수급자 추계 결과에 2006년 교육급여 수급자 비율(55.7%)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품목별 지급액은 2008년 1인당 지급액(입학금 및 수업료 1,079,400원, 교과서대 106,000원, 부교재비 32,000원, 학용품비 44,000원)을 기준으로 이후 매년 3%의 증가율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도 품목별 지급 대상 수급자 수에 1인당 급여액을 적용하여 추계하는데, 기초생보 수급자 중에서 신생아

60)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장기재정 추계는 저자가 수행한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2009년 10월)의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IV. 세입 및 세출에 미치는 영향 291

출산자 및 사망자 유가족에게만 지급되고 급여종류별 단가는 2009년 1인당 지급액(해산 50만원, 장제 50만원)을 기준으로 연 1%의 증가율을 적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2050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재정지출 규모를 추계한 결과 2010년 GDP 대비 0.8%에서 2050년 1.1%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계결과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대부분이 고령자들이지만, 향후 연금수혜자가 많아지면서 줄어드는 요인이 있으나, 제Ⅲ장 3절 '나. 국민소득분배 및 소득구조에 미치는 영향'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령자의 소득분배 문제가 생산연령층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상승요인도 병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V-2-4〉 기초생활보장 장기재정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

	국비								지방비	합계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급 여	교육 급여	해산 급여	장제 급여	자활 급여	소계		
2010	0.229	0.057	0.323	0.013	0.000	0.002	0.043	0.644	0.181	0.826
2015	0.214	0.053	0.348	0.009	0.000	0.001	0.052	0.654	0.184	0.838
2020	0.207	0.052	0.374	0.007	0.000	0.001	0.051	0.663	0.187	0.849
2025	0.208	0.052	0.404	0.006	0.000	0.001	0.051	0.684	0.192	0.877
2030	0.213	0.053	0.438	0.005	0.000	0.001	0.052	0.706	0.197	0.902
2035	0.224	0.056	0.472	0.005	0.000	0.001	0.055	0.746	0.207	0.953
2040	0.239	0.060	0.504	0.005	0.000	0.001	0.058	0.788	0.218	1.006
2045	0.253	0.064	0.533	0.004	0.000	0.001	0.062	0.828	0.229	1.056
2050	0.266	0.067	0.551	0.004	0.000	0.001	0.065	0.855	0.235	1.091

#### (4) 기타 사회복지 및 보건 지출에 대한 수요전망

우선 향후 주택에 대한 정부지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 판단해 보자. 향후 주거비에 대한 가계지출은 제Ⅲ장 4절의 ‘라. 코호트 분석’에서는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미·일 연령별 소비구조 비교분석이나 OECD(2005)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엇갈린 결과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제Ⅲ장 4절의 GDP의 지출 및 수요구조 측면에서의 분석에서 건설투자 비중이 낮아지고 민간소비지출 중에서 가계시설 및 운영비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의 생산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의 분석결과에서도 건설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주택에 대한 정부지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음으로 보육 등 가족 관련 재정지출은 당분간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정책으로 관련 지출규모가 증가할 수 있겠으나 향후 출산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상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출수요도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향후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 상승 등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 나. 교육

본 연구에서는 교육 관련 재정지출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과정별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한 후 합산해 보았다. 4단계 교육과정의 학생수는 2009년 기준 성별·연령별의 교육과정별 학생수/추계인구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결과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EU(2009)처럼 교육과정별로 인건비 부분과 학교시설 등 기타 지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추계하였다.

$$ES_x = \frac{T_x}{S_x} \cdot W_x + \frac{K_x}{S_x}$$

단,  $x$ (4단계 교육과정),  $ES_x$ (학생 1인당 공교육비),  $T_x$ (교원 및 사무직원수),  $S_x$ (학생수),  $W_x$ (교원 및 사무직원 1인당 인건비),  $K_x$ (기타지출)

우선 추계기간 동안 2009년 기준 교육과정별로 학생 1인당 교원 및 사무직원 수가 유지되고, 2009년 기준 교육과정별 교원 및 사무직원 1인당 인건비는 매년 임금 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학생 1인당 기타 지출은 2009년 기준의 인건비 지출 대비 비중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다만 고등교육은 고등교육기관 총지출의 극히 일부분을 공공교육지출이 보조하고 있으므로 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추계하지 않고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지출 전체를 기준으로 추계하였는데, 학생 1인당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가 매년 임금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재정을 장기전망한 결과, 향후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원 및 사무직원의 수가 감소하여 공교육 관련 지출규모는 2010년 GDP 대비 4.5%에서 2050년 3.0%로 1.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교육에 대한 가계지출비중 감소한다는 제Ⅲ장 4절 '나. 연령별 소비구조' 및 '라. 코호트 분석'의 결론과도 일치하지만, 현실에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학령인구가 1977년 1,092만명(총인구의 30.0%)에서 2009년 756만명(15.5%)으로 약 70%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교육재정 지출규모는 GDP 대비 4%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최근 5%까지 상승하였고, 교원 및 사무직원 수도 2000년 48.4만명에서 2009년 58.0만명으로 지난 10년간 20%나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교육재정 지출을 축소하기는 매우 어렵다. 실제로 초중등교육 관련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형태로 '내국세의 20.27% + 교

육세 전액'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 재정수요와 재원투입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에 향후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공급 측면에서의 개혁,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인 대응전략 및 재정추계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2-5〉 교육과정별 학생 1인당 교원 및 사무직원 수  
(2009년 기준)

(단위: 천명, 명)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 수	교원·사무직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교원·사무직원수
초등학교	3,474	175	25	17.34	0.058
중학교	2,011	109	12	16.57	0.060
고등학교	2,009	132	15	13.64	0.073
대학교	3,591	75	35	32.46	0.031
합계	11,086	492	88	19.12	0.052

〈표 IV-2-6〉 교육과정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분해  
(2009년 예산 기준)

(단위: 천원, 명)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교원수	교원 1인당 인건비	학생 1인당 기타지출
초등학교	3,762	3,948	9,384	2,293
중학교	0.058	0.060	0.073	-
고등학교	55,500	55,500	55,500	-
대학교	561	599	5,315	-

〈표 IV-2-7〉 교육재정 장기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합계	중앙정부부담
2010	1.15	0.71	1.75	0.77	4.38	3.53
2015	0.89	0.55	1.49	0.76	3.69	2.99
2020	0.85	0.45	1.12	0.69	3.11	2.53
2025	0.80	0.45	1.07	0.57	2.88	2.33
2030	0.81	0.43	1.05	0.54	2.84	2.30
2035	0.86	0.45	1.06	0.54	2.91	2.35
2040	0.87	0.48	1.13	0.54	3.01	2.43
2045	0.82	0.48	1.19	0.57	3.05	2.46
2050	0.79	0.45	1.14	0.59	2.98	2.41

#### 다. 경제 관련 재정지출

우선 SOC에 대한 정부지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 판단해 보자. 향후 교통비에 대한 가계지출은 제Ⅲ장 4절의 '라. 코호트 분석'에서는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미·일 연령별 소비구조 비교분석이나 OECD(2005)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엇갈린 결과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제Ⅲ장 4절의 GDP의 지출 및 수요구조 측면에서의 분석에서 건설투자 비중이 낮아지고 민간소비지출 중에서 가계시설 및 운영비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의 생산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의 분석결과에서도 건설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SOC에 대한 정부지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식품 관련 재정지출 수요는 제Ⅲ장 4절에서

농림어업의 산업비중이 하락하는 등 이 분야 지출규모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재정지출 수요도 광공업의 산업 비중에 뚜렷한 변화방향이 없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광열·수도 관련 가계지출비중이 증가하더라도 이 분야의 재정지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이 분야 지출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기 때문에 하락압력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외에 R&D 관련 재정지출 수요는 향후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동인력 공급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경제 관련 재정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판단은 제Ⅱ장 2절 '다. 재정규모 및 지출구조'의 우리나라와 G7국가들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에서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경제업무나 주택·지역개발 분야 지출비중이 감소한다는 추정결과와도 일치한다.

## 라. 공공행정 등 기타 재정지출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분석결과에 의한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제Ⅱ장 2절 '다. 재정규모 및 지출구조'의 우리나라와 G7국가들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에서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출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국방 분야 지출 비중은 증가한다는 추정결과는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일반공공행정, 외교·통일, 문화·체육·관광, 환경 등 분야의 재정지출 수요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3.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가. 고령화·인구 감소가 세입·세출에 미치는 영향

우선 제Ⅲ장의 분석결과와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연령별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 분포와 자산종류별 세원분포, 항목별 평균유효소비세율, 재정패널의 연령별 세부담 분포 등을 바탕으로 고령화·인구 감소가 세입규모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성적으로 분석한 제1절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과세 중에서 소득세는 연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하겠으나 세수규모가 가장 큰 근로소득세 등 나머지 소득세 항목들의 변화방향이 불명확하지만 다소 감소할 전망이므로 전체적인 소득세수는 크게 변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 전체의 영업잉여 비중이 하락하겠지만 금융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전반적인 법인세수의 향방은 명확하지 않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들의 유효세율도 전 업종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였다. 반면, 공적연금과 의료보장 관련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 4대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사회보험료 부담이 2010년 현재 GDP 대비 3.07%에서 2050년에는 3.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소비 관련 과세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성향의 상승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세수가 증가하겠지만, 순국민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항목별 평균유효세율을 감안할 때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항목별 소비패턴의 변화가 소비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소비 관련 세수의 증가추세를 제한하는 요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관세수입은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전체 GDP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FTA 체결 확대, 도하개발아젠다(DDA) 다자간 무역협상에 의한 관세율 인하 등 관세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산 관련 과세는 경제 전체의 자산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비금융자산이 줄어드는 대신 금융자산이 증가하는데 주식 비중이 줄어들고 예금 및 채권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잔액(stock)으로 과세되는 자산보유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담은 증가하겠지만, 세수 비중이 더 큰 유량(flow)에 대해 과세하는 자산거래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상속증여세는 향후 고령자 가구가 많아지고 1인당 자산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향후 관련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소득 관련 세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 관련 세수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산관련 세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미미하게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령화·인구 감소가 세출규모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분석한 제2절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제도 유지를 전제로 4대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 공교육 관련 재정지출 등의 규모를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계해 보았다. 4대 공적연금의 지출규모는 2010년 GDP 대비 2.3%에서 2050년 7.7%로 GDP 대비 5.4%p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노령연금 지출규모는 2010년 GDP 대비 0.4%에서 2050년 3.1%로 2.7%p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지출규모가 각각 2010년 GDP 대비 3.1% 및 0.2%에서 2050년 6.5% 및 1.7%로 3.4%p 및 1.5%p나 증가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관련 재정지출 규모는 2010년 GDP 대비 0.8%에서 2050년 1.1%로 다소 증가하고, 향후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원 및 사무직원의 수가 감소하

여 공교육 관련 지출규모는 2010년 GDP 대비 4.5%에서 2050년 3.0%로 1.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교육 관련 재정지출이 실제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량적 분석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성적 분석만 시도하였다. 주택 관련 재정지출 수요는 향후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주거비에 대한 가계지출이 감소한다는 분석결과와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엇갈렸지만, 건설투자 및 건설업 비중이 낮아지고 민간소비지출 중에서 가계시설 및 운영비 지출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들을 감안할 때 향후 주택에 대한 정부지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보육 등 가족 관련 재정지출은 당분간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정책으로 관련 지출규모가 증가할 수 있겠으나 향후 출산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상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출수요도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향후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 상승 등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향후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경제 관련 재정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SOC는 교통비에 대한 가계지출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과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렸지만, 건설투자 및 건설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민간소비지출 중에서 가계시설 및 운영비 지출비중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들을 감안할 때 향후 SOC에 대한 정부지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농림·수산·식품 관련 재정지출 수요는 농림어업의 산업비중이 하락하는 등 이 분야 지출규모가 줄어들 것이 확실해 보인다. 또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재정지출 수요도 광공업의 산업비중에 뚜렷한 변화방향이 없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광열·수도 관련 가계지출비중이 증가하더라도 이 분야의 재정지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이 분야 지출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기 때문에 하락압력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다만 R&D 관련 재정지

출 수요는 향후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동인력 공급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공공행정 등 기타 재정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분석결과에 의한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다만 패널회귀분석에서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출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국방 분야 지출 비중은 증가한다는 추정결과는 참고할만하다. 그러나 일반공공행정, 외교·통일, 문화·체육·관광, 환경 등 분야의 재정지출 수요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나. 정책적 시사점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 등 소득 관련 세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 관련 세수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산 관련 세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미미하게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적연금이나 의료관련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는 이러한 재정수입 증가속도에 비해 훨씬 빠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주택, SOC,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재정지출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국가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세입 확충 및 세출 절감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리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본 연구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방향 수립 및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가 세목별 및 지출분야별 정책에 시사하는 함의와 정책과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우선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 사업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금융소득 및 고부가가치 사업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소득구성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소득종류별 세부담 구조를 재편하여 소득세

의 국고조달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연금소득이 급증할 것이지만 일본처럼 관대한 연금소득 공제제도를 유지하면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세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업종별로 유효세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전반적인 법인세수의 향방이 불분명하다. 다만 기업의 설비투자 비중이 증가할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법인세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 전체의 자산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비금융자산이 줄어드는 대신 금융자산이 증가하는데 주식 비중이 줄어들고 예금 및 채권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토지, 주택, 주식 등의 보유 또는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이들 세목의 세수는 잔액(stock)으로 과세되는 자산보유 관련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유량(flow)에 대해 과세하는 자산거래 관련 세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세에서 자산 관련 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세목별로 세수변동 방향이 다양하게 나타난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수 여건이 낙관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지방세 세원 변화에 대응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대한 정책도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 전체의 소비성향이 높아져 소비 관련 세수가 증가하겠지만, 경제 전체의 소비패턴이 고령자가 선호하는 항목 위주로 변동하더라도 소비 관련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대

체로 중립적이므로 소비 관련 세수의 증가추세가 제한될 것이므로 향후 복지지출 확대 등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모색 시에 캐나다 및 일본(5%), 스위스(7.6%)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10%)의 조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 관련 세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부의 과도한 대물림 방지와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출 측면에서도 공적연금 및 의료 관련 지출에 대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공식적인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제도의 재정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혁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향후 공교육, 주택, SOC, 보육, 농업 및 중소기업 등 지원정책 관련 재정지출은 수요가 감소하겠지만 기득권층이 이러한 재정지출을 고착화시키려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를 타파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와 중장기적인 재정전략에 입각한 자원배분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광수·김근수·김재철 「인구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 가계의 주식보유와 3층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금융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권 별책, 2005년 9월.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 2008년 11월.
-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 국회예산정책처, 「고령화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현안분석 제60호, 2010년 12월.
- \_\_\_\_\_,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대응연구 제2호, 2009년 9월.
- \_\_\_\_\_,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저출산·고령화 대응 연구(종합), 2009년 12월.
- 기획재정부, 「세계적 고령화 현상과 시사점」, 2011년 7월 11일자 보도자료.
- \_\_\_\_\_, 『조세개요』, 2010년 10월.
- 김기호,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제22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년.
- 김기호·유경원, 「출산율저하가 인적투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제30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8년.
- 김소영·이종화,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제12권 제1호, 2006년 4월.
- 김종일,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한국경

- 제의 분석』, 제12권 제2호, 2006.
- 김현숙, 『주요 3대 세목 세수 장기추계 : 세원 전망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10년 12월.
- 김현숙·성명재, 「장래 소득세원 분포 변화를 고려한 장기 소득세수 추계」, 『재정학연구』, 제4권 제3호, 한국재정학회, 2011년 8월.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Ⅱ)』, 2006년 2월.
-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 2006년 7월 28일 보도자료.
- 박명수·이대창·윤정혜·박세정,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08~2018』, 한국고용정보원, 2010.
- 박형수·류덕현, 『OECD방식에 의한 우리나라 잠재GDP : 추정 및 전망(1981~2050년)』,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2006년 5월.
- 박형수·송호신, 『장기재정전망』,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1년 3월.
- 박형수·전병목,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9년 10월.
- 방하남·신동균·김동현·신현구,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성명재,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년 12월.
- 송호신, 『기업수준 자료를 이용한 법인세부담액 및 과세표준의 추정, 그리고 법인세부담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년 11월.
- 신관호·황윤재, 「인구구조의 변화가 총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분석』, 제11권 제2호, 2005년.
- 윤성훈 외,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보험연구원, 2011년 7

월.

- 윤성훈, 「저출산·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컨퍼런스 발표자료, 2010년 10월 5일
- 이상호, 「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선택: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제43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10년 8월.
- 이시균,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요인 분석, 고용이슈』, 한국고용정보원, 2007.
- 이은미,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경제적 파장」,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11.
- 이찬영,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 현상 진단: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합』, 삼성경제연구소, 2011.
- 장동구, 「고령화사회 진입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1년 9월.
- 장지연,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직업과 인력개발』, 2005.
- \_\_\_\_\_,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와 노동이동」,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7.
- 전영준, 「고령화와 재정정책의 저축에 대한 효과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12권 제1호, 한국은행, 2006년 4월.
- 최경수,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 『KDI정책포럼』, 제239호, 한국개발연구원, 2011.
- 최공필·박대근·이창용·남재현,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대응」, 『금융연구』, 19권 별책, 2005. 8, 한국금융연구원, pp. 1~60.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2010년 및 데이터베이스(<http://www.kosis.kr/>)
- \_\_\_\_\_, 『가계자산조사 결과』, 2006년 및 데이터베이스(<http://www.kosis.kr/>)

-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1991년 1996년 2000년 및 데이터베이스(<http://www.kosis.kr/>)
- \_\_\_\_\_, 『국가자산통계』, 각 호 및 데이터베이스(<http://www.kosis.kr/>)
- \_\_\_\_\_, 『도시가계조사』, 각 호 및 데이터베이스(<http://www.kosis.kr/>)
- \_\_\_\_\_,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6년 11월.
- 한국개발연구원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5-01, 총괄보고서, 2006년 12월.
-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 I )』, KDI 연구보고서 2003-06, 2003년 12월.
- 한국금융연구원,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금융 VIP 시리즈 2011-02, 2011년 3월.
- 한국은행, 「개인저축률과 거시경제변수간 관계분석」, 보도참고자료, 2009
- \_\_\_\_\_, 「최근의 가계저축률 변화추이와 하락요인」, 2002.
- \_\_\_\_\_,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10.
- \_\_\_\_\_, 『자금순환통계 : 금융자산부채잔액표』, 각 호 및 데이터베이스(<http://ecos.bok.or.kr/>)
- 황수경, 『연공임금과 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2004.

日本 總務省, 「가계조사」

Batini, Nicoletta, Tim Callen and Warwick McKibbin, "The Global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IMF Working paper, January 2006.

Brooks, Robin, "Demographic Change and Asset Prices," in

- Demography and Financial Markets: G20 Conference Proceedings, Christopher Kent, Anna Park, and Daniel rees(ed.), Sydney: Government of Australia- Treasury/ G20/ Reserve Bank of Australia, 2006, pp. 235~61.
- Bureau of Labor Statistics(BLS), *Consumer Expenditure Survey*.
- Davis, E Philip. and Christine Li, "Demographics and Financial Asset Prices in the Major Industrial Economics," Working Paper 03-07, Brunel University, London, March 19, 2003.
- De Serres A, Scarpetta S, de la Maisonneuve C, "Falling Wage Shar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ow Important is Aggregation Bias," *Empirica* 28, 2001, pp. 375~400.
- De Serres, A. and F. Pelgrin, "The Decline of Private Saving Rates in the 1990s in OECD Countries: How Much Can be Explained by Non-wealth Determinants?," *OECD Economic Studies*, No. 36, 2003.
- Disney, R. *Can we afford to grow older? A perspective on the economics of aging*, Cambridget, Massachusetts, MIT Press, 1996.
- Dixon, S., "Implications of Population Ageing for the Labour market," *Labour Market Trends*, 2003.
- Donovan, N. et al. "Geographic Mobility," *Discussion Paper*, 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 Cabinet Office, 2002.
- EU, *2009 Ageing Report*, 2010.
- Gregg, P. G. Knight, and J. Wadsworth, "The Cost of Job Loss," in *The State of Working Britain*, by P. Gregg and J. Wadsworth(ed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 Groot, W. and M. Verberne, "Aging, Job Mobility and Compensation," *Oxford Economic Papers*, 49, 1997, pp.

380~403.

- Guscina A, "Effects of Globalisation on Labour's Share in National Income," IMF Working Paper 06/294, 2006.
- Holzmann, Robert, "Aging Population, Pension Funds, and Financial Markets: Regional Perspectives and Global Challenges for Central, Eastern, and Southern Europe," The World Bank, 2009.
- Hu, Yu-Wei, "The Impact of Pension Funds on Financial Markets," OECD Financial Market Trend, November 2006.
- IMF, "How will Demographic Change Affect the Global Economy?,"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4.
- Jayadev A, "Capital Account Openness and the Labour Share of Incom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1, 2007, pp. 423~443.
- Jenkins, A. et al., "Determinants and Effects of Lifelong learning," Centre for the Economics and Education, Discussion Paper No. 19, London School of Economics, 2002.
- Johnson, P. and K. Zimmerman "Ageing and the European Labour Market: Public Policy Issues," in *Labour Markets in an Ageing Europe*, P. Johnson and K. Zimmerman(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Lindh & Malmberg, "Age structure and inflation - A Wicksellian interpretation of the OECD data,"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July, 36(1), 1998, pp. 19~37.
- Lindh & Malmberg, "Age structure effects and growth in the OECD, 1950-90,"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2(3), 1999, pp. 431~449.

- Lindh & Malmberg, "Age structure effects on investment, saving and trade," Chapter 7 in *Population aging,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the macroeconomy*, Clark et al. (eds). Edward Elgar Publishing, pp. 163~191, 2007.
- Martins J. Oliveira, Frederic Gonand, Pablo Antolin, Christine de la Maisonneuve, Kwang-Yeol Yoo., "The Impact of Ageing on Demand, Factor Markets and Growth,"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March 29, 2005.
- Miles, David, "Should Monetary Policy be Different in a Greyer World?," Springer, May 2002.
- OECD, *Ageing and Income Financial Resources and Retirement in 9 OECD Countries*, 2001.
- \_\_\_\_\_, *Facts and Figures*, 2001.
- \_\_\_\_\_,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각 호 및 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
- \_\_\_\_\_,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Detailed Tables*, 각 호 및 데이터베이스(<http://stats.oecd.org/index.aspx>)
- \_\_\_\_\_,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General Government Accounts*, 각 호 및 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
- \_\_\_\_\_,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Main Aggregates*, 각 호 및 데이터베이스(<http://stats.oecd.org/index.aspx>)
- \_\_\_\_\_, *OECD Economic Outlook*, May 2010.
- \_\_\_\_\_, *Revenue Statistics*, 각 호 및 데이터베이스(<http://stats.oecd.org/index.aspx>)
- \_\_\_\_\_, *Tax Database*, 2010.
- \_\_\_\_\_, "Tax Ratios : A CRITICAL SURVEY," *OECD Tax Policy Studies* No, 5,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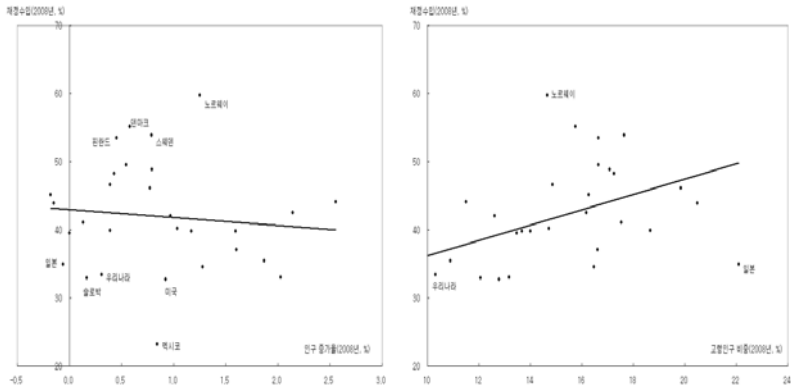
-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Live Longer, Work Longer*, OECD, 2006
- Poterba, James,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Financial Markets," NBER Working Paper 10851, 2004.
- Schmidt, Torsten and Simeon Vosen, "Demographic Change and the Labour Share of Income," RUHR ECONOMIC PAPERS #165, RWI, February 2010.
- Siegel, Jeremy J., *Stocks for the Long Run*, New York: McGraw-Hill, 1993.
- Thiessen Ulrich, Konstantin A. Kholodilin and Boriss Siliverstovs, "Does Aging Influence Sectoral Employment Shares? - Evidence from Panel Data," DIW Berlin Discussion Paper No. 785, April 2008.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8 Revision*, April 2009.
- \_\_\_\_\_,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0 Revision*, April 2011.

# [부록 1] 인구증가 및 고령인구 비중과 재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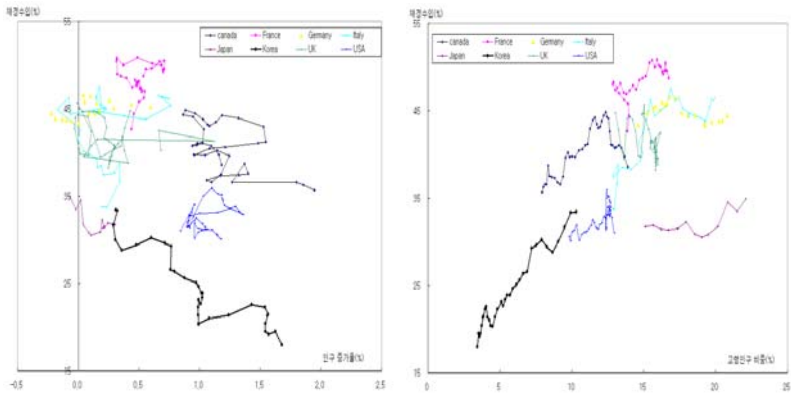
## 1. 주요 재정지표

- 재정수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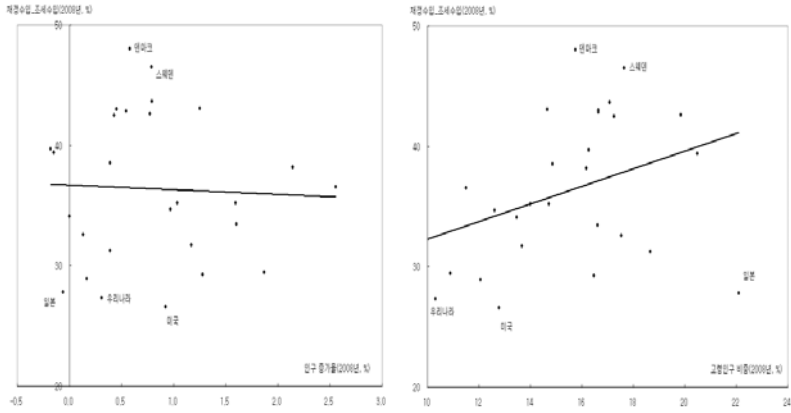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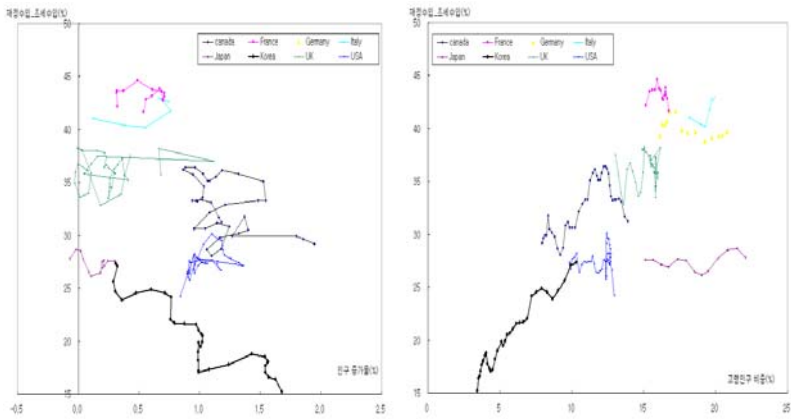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7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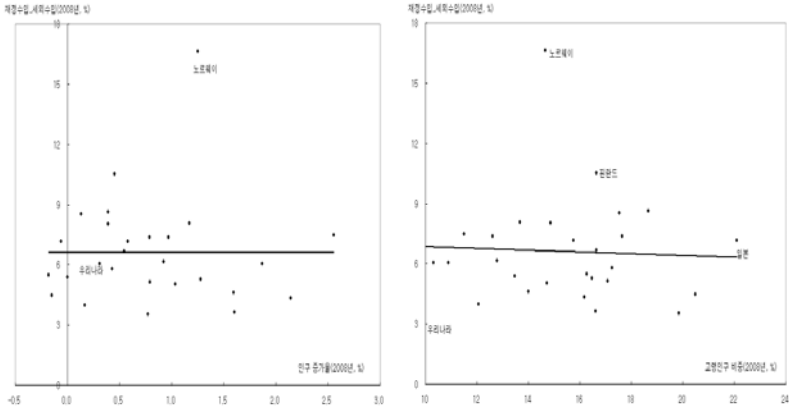
- 재정수입 : 조세수입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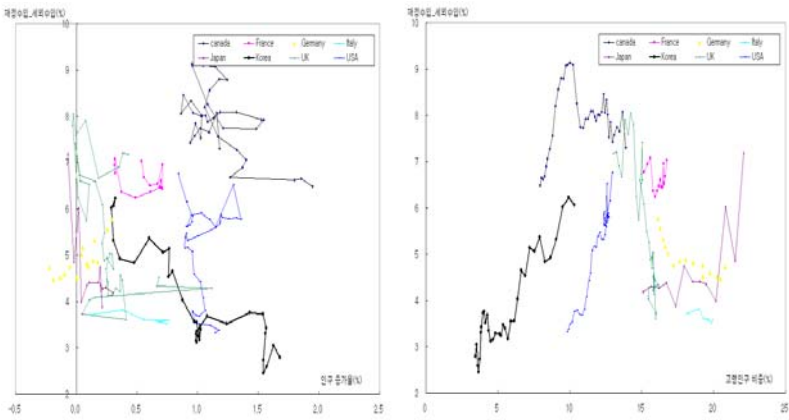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70~2009년)



- 재정수입 : 세외수입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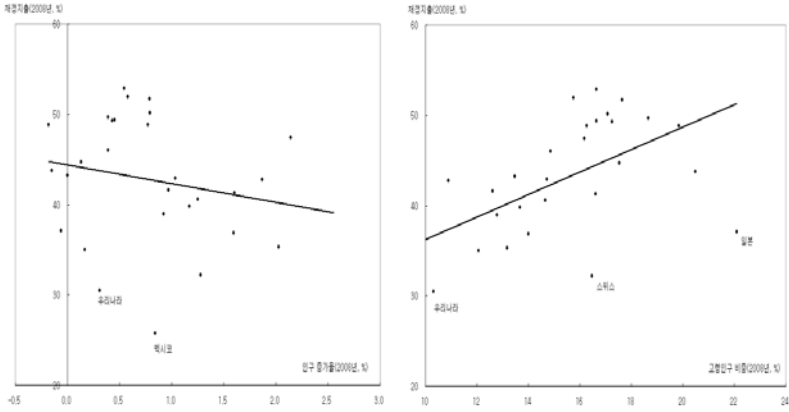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7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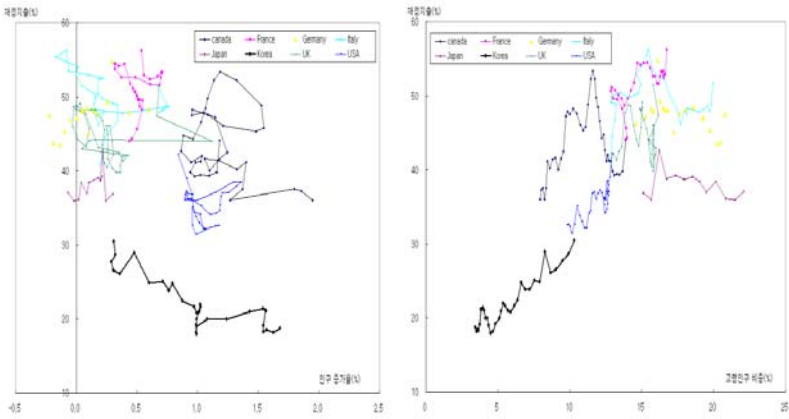


- 재정지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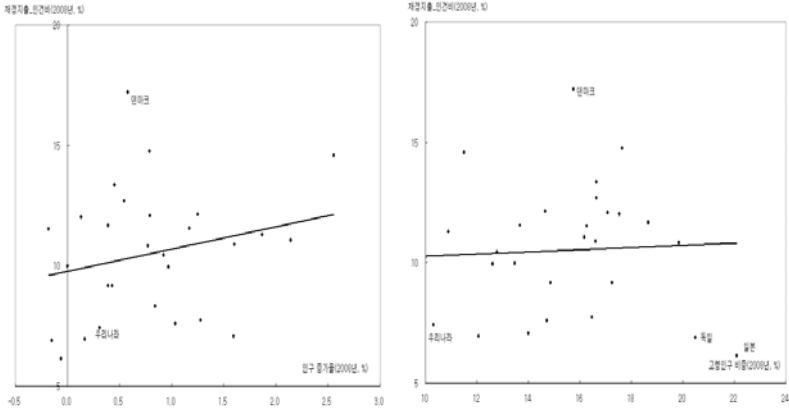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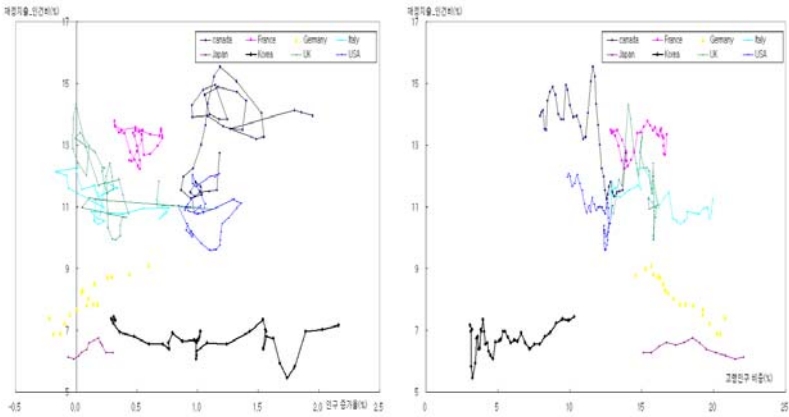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7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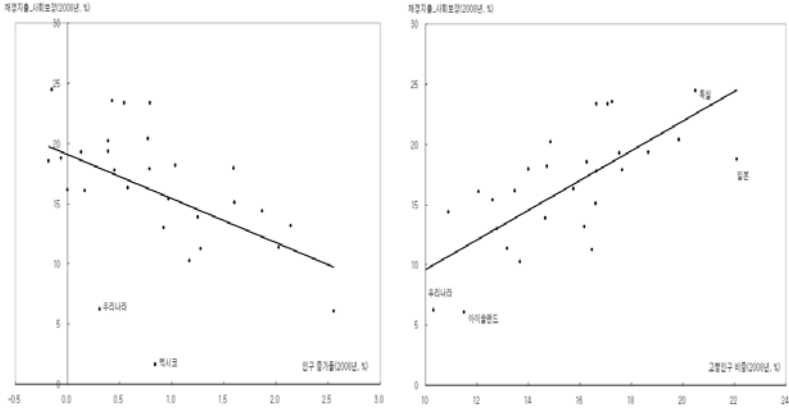
- 재정지출 : 인건비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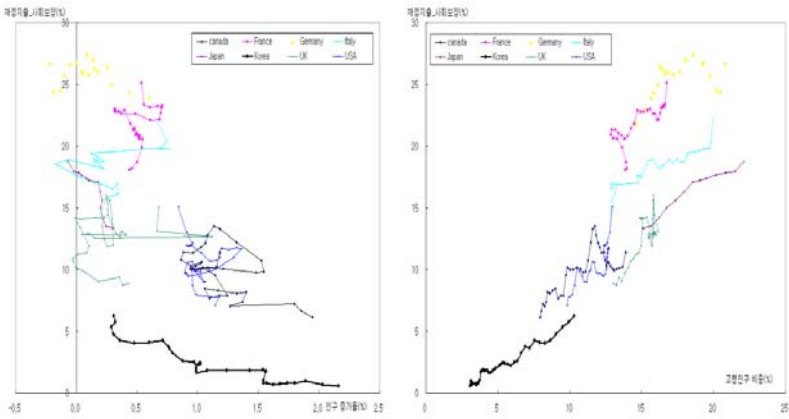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7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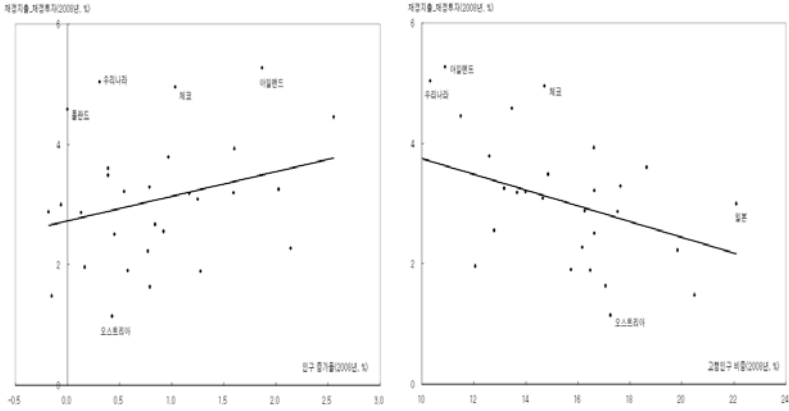
- 재정지출 : 사회보장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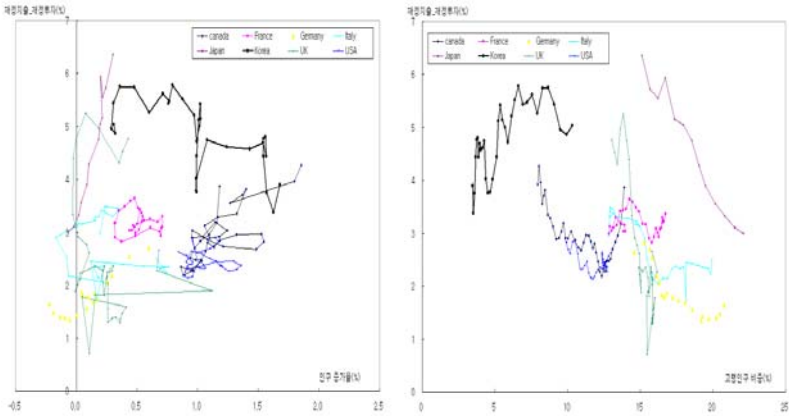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7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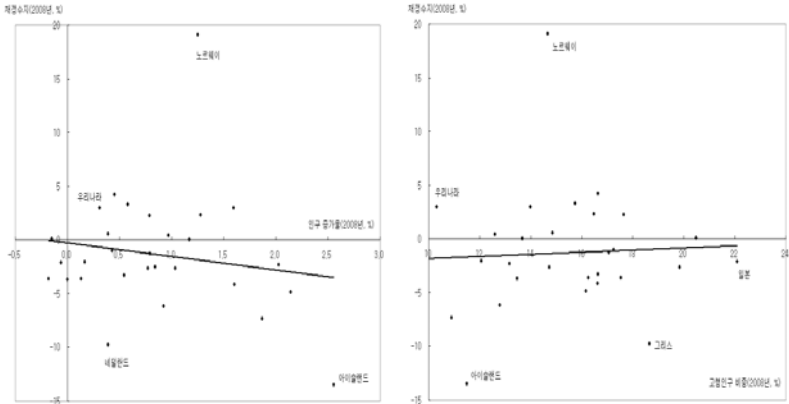
- 재정지출 : 재정투자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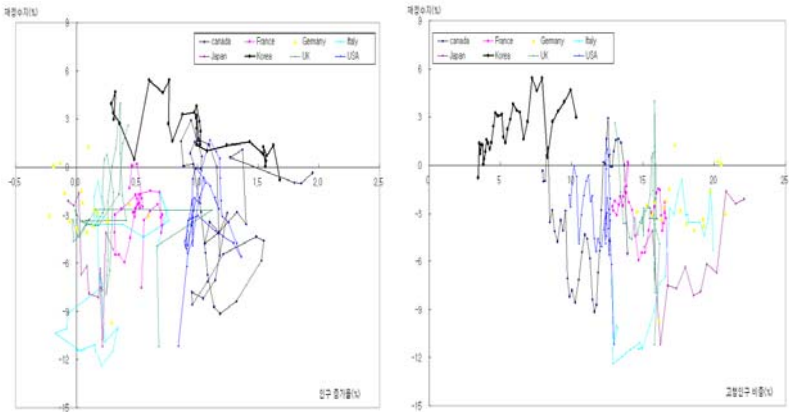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70~2009년)



- 재정수지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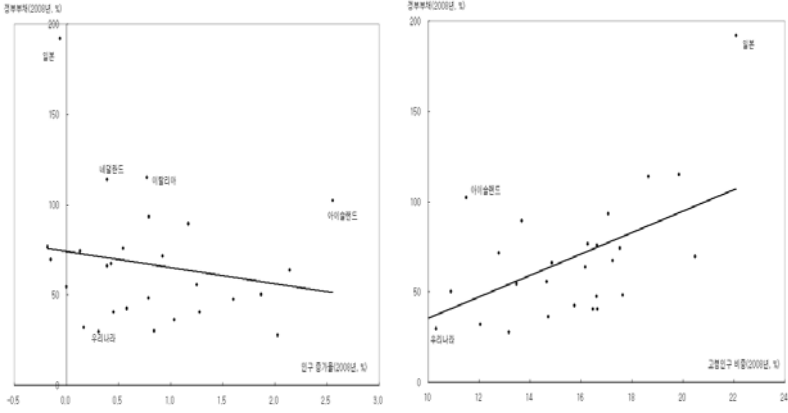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7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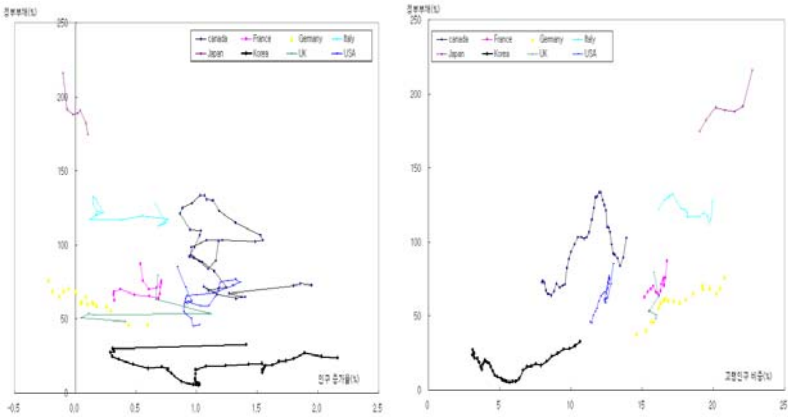


- 정부부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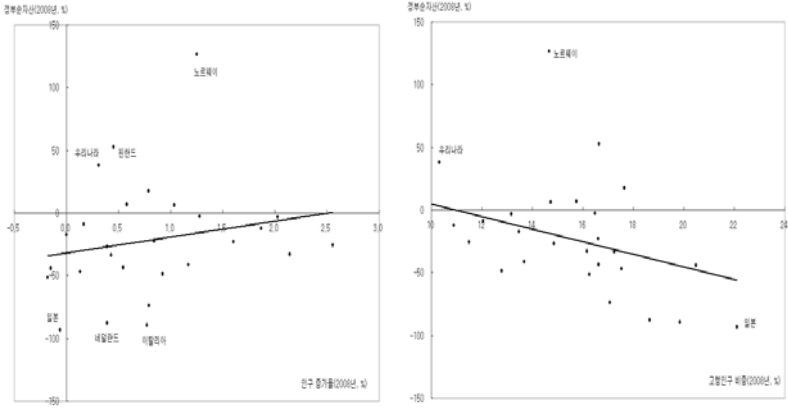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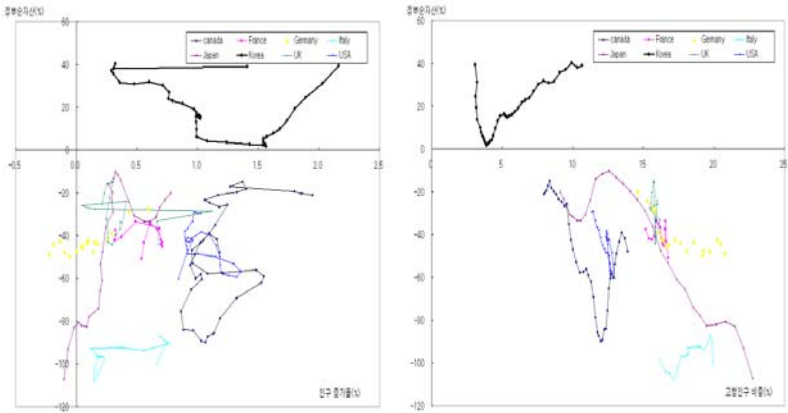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70~2009년)



- 정부 순자산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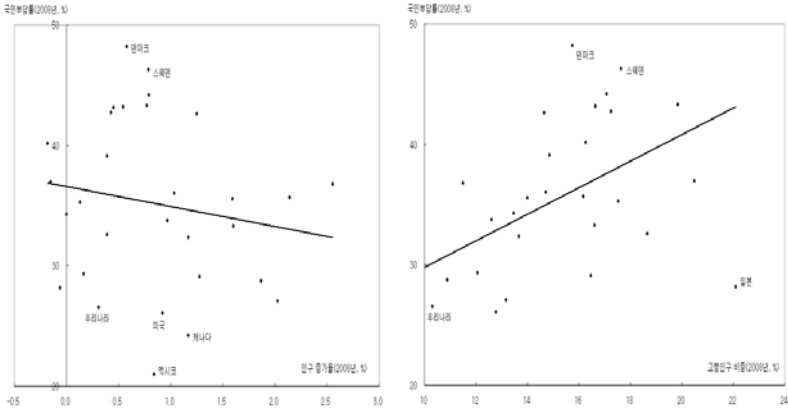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7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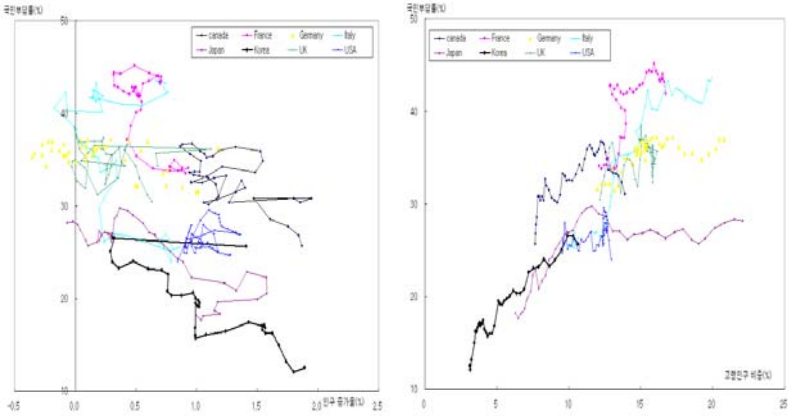
## 2. 국민부담률 및 세입구조

- 국민부담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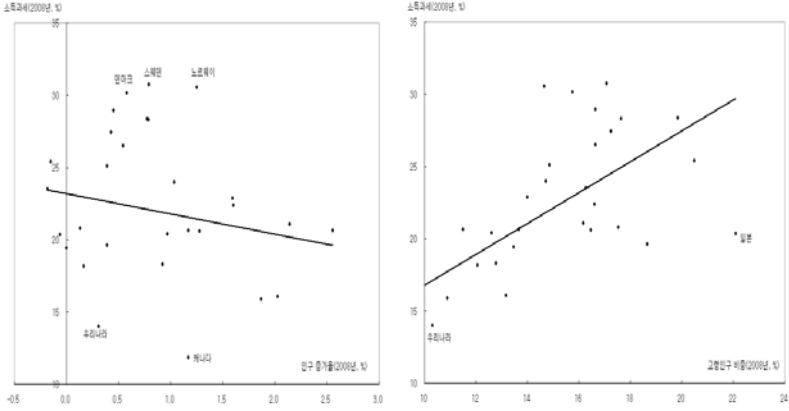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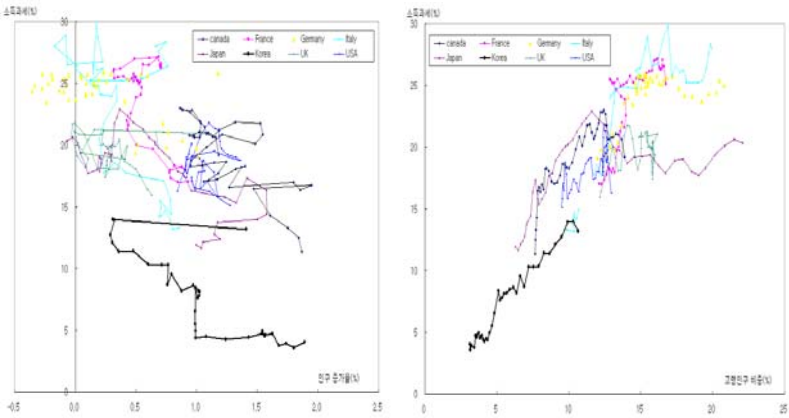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6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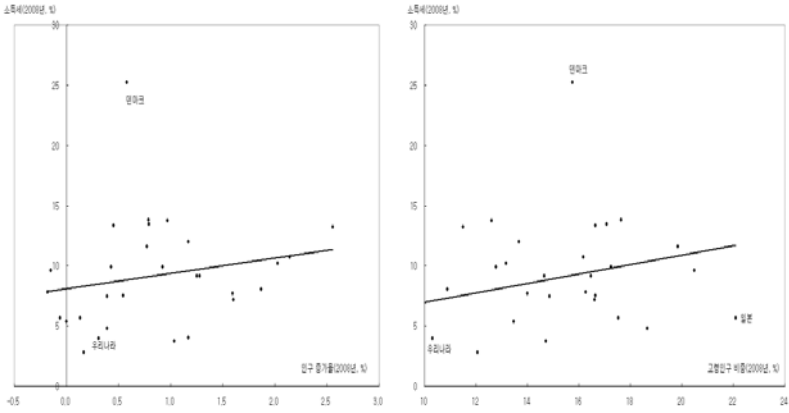
- 소득과세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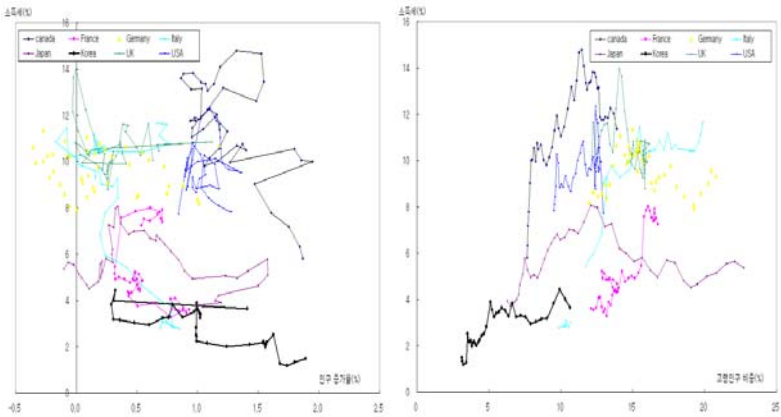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6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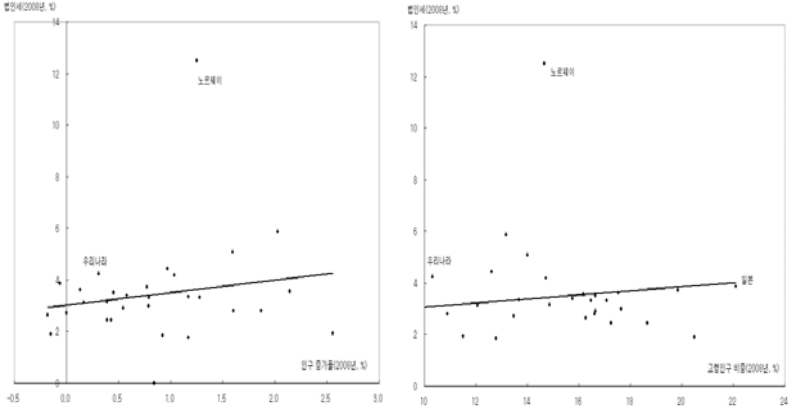
- 소득과세 : 소득세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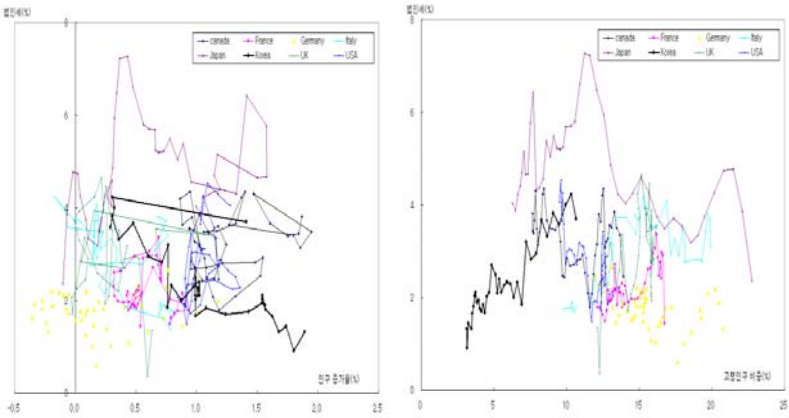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6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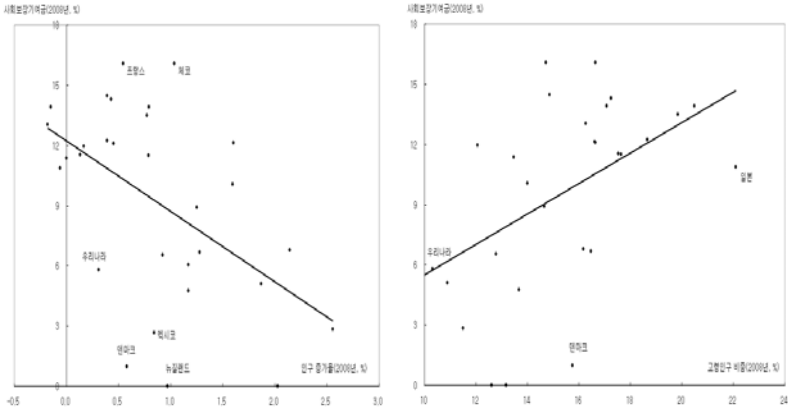
- 소득과세 : 법인세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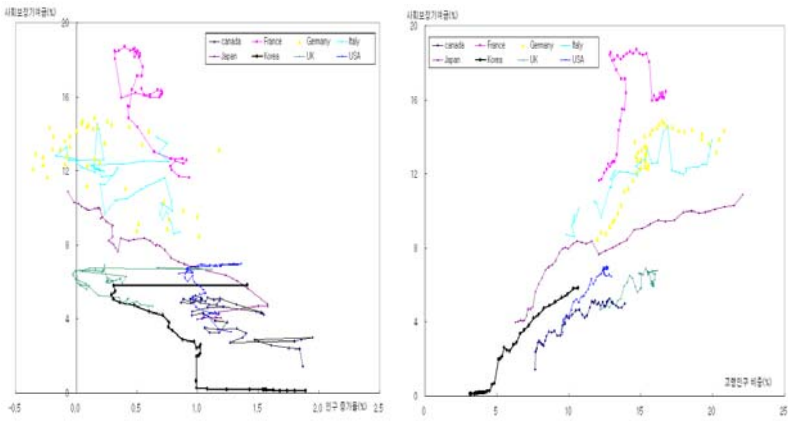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65~2009년)



- 소득과세 : 사회보장기여금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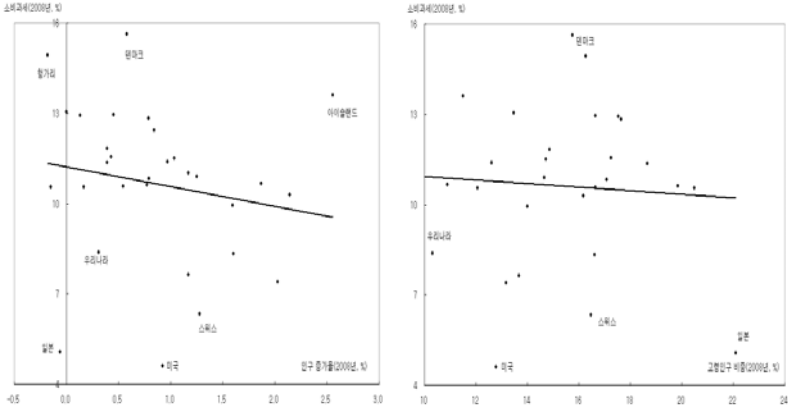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6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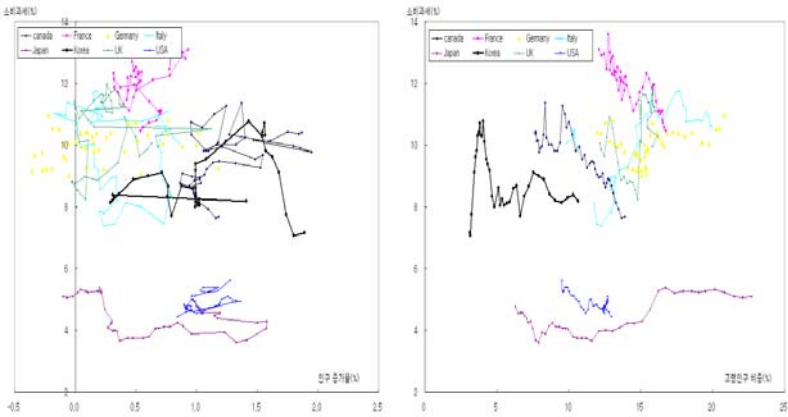


- 소비과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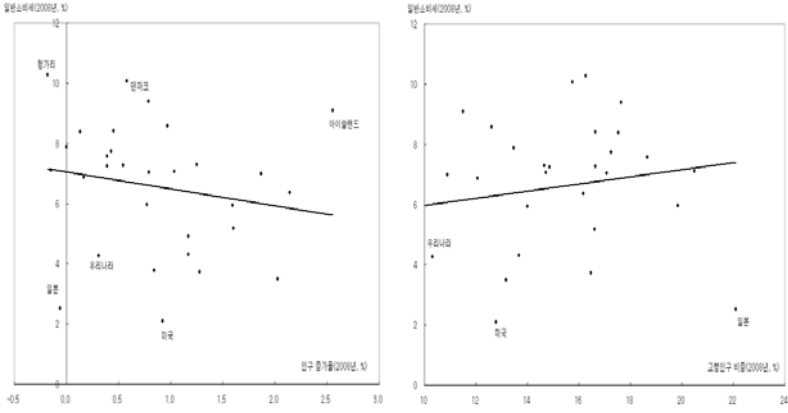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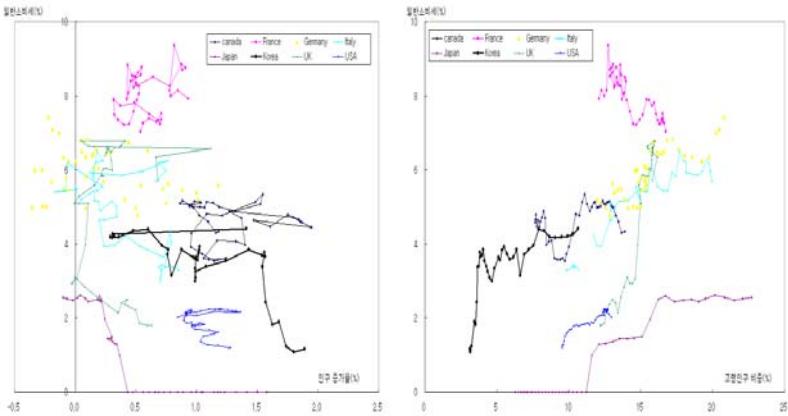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6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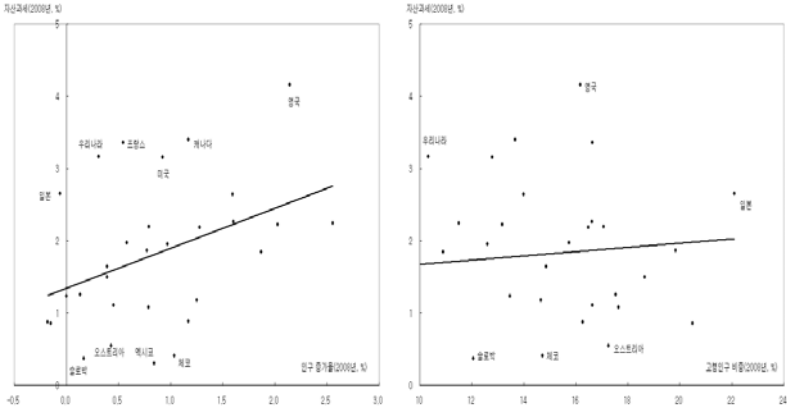
- 소비과세 : 일반소비세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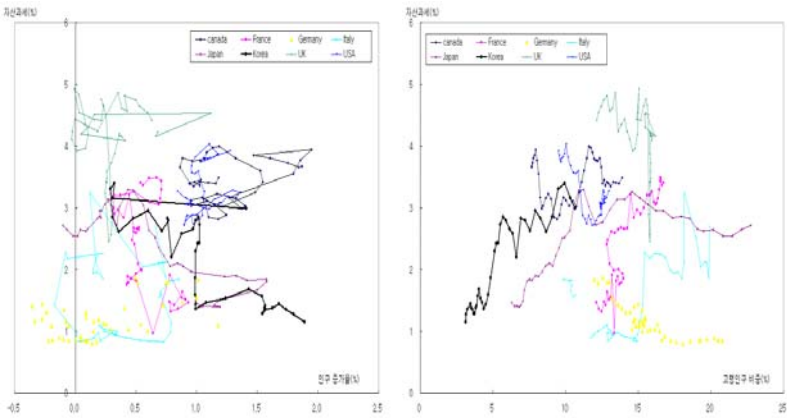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6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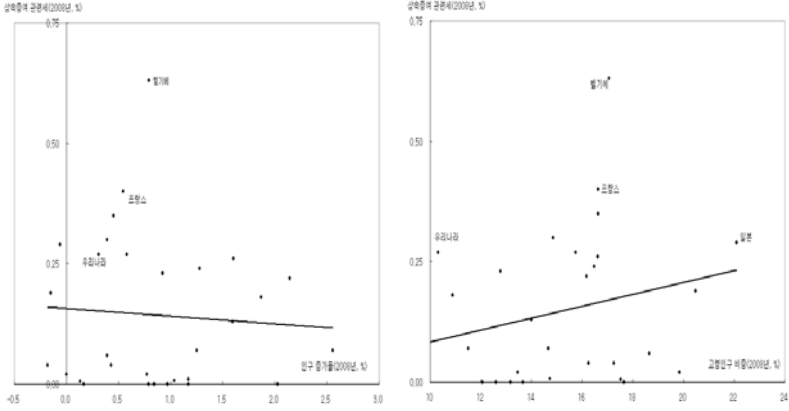
- 자산과세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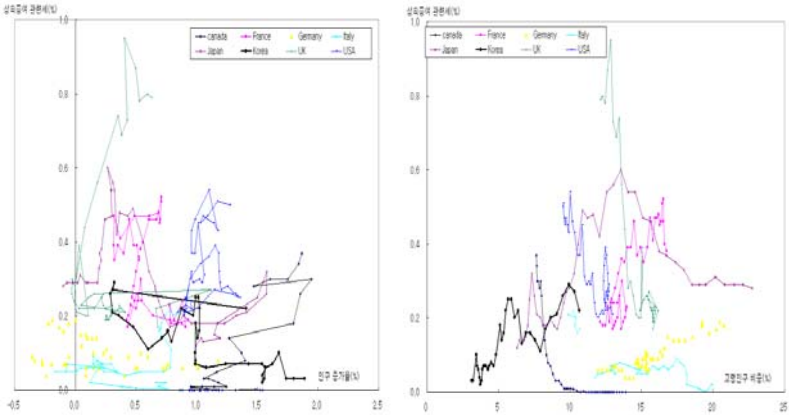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6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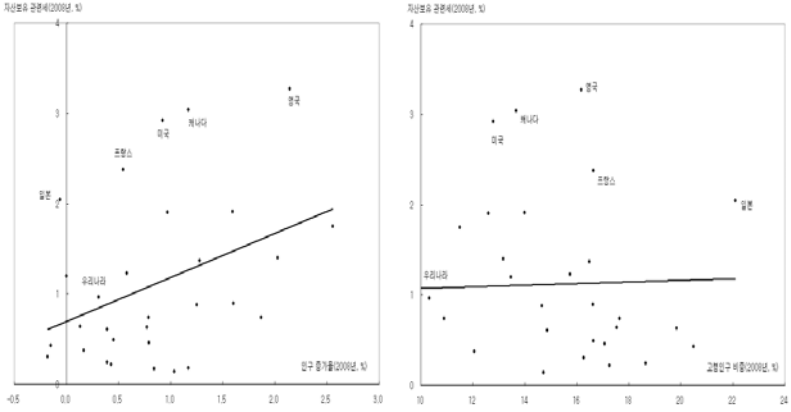
- 자산과세 : 상속증여 관련세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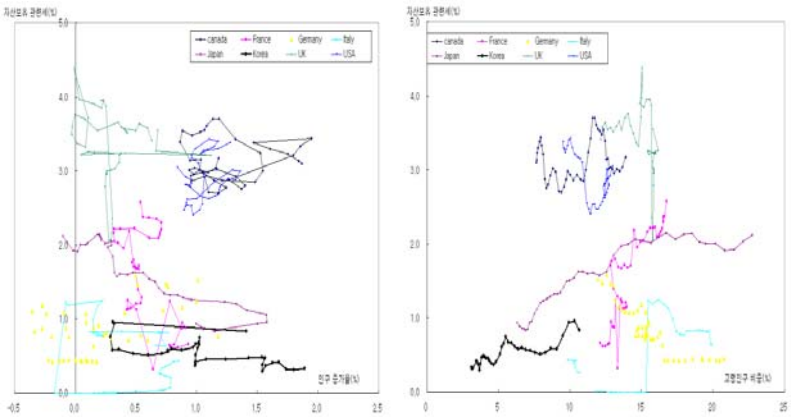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6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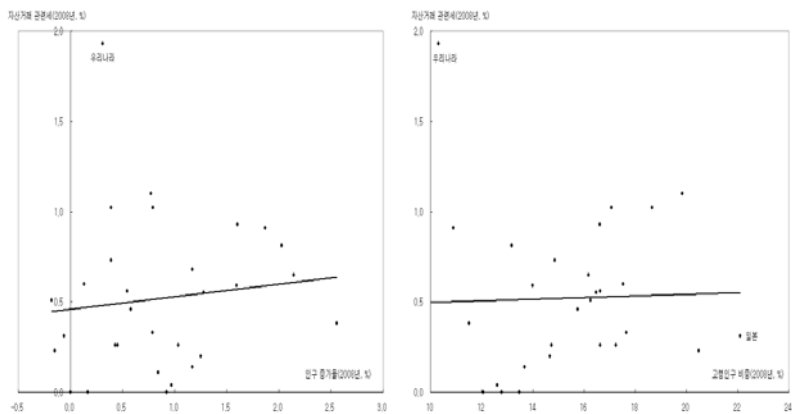
- 자산과세 : 자산보유 관련세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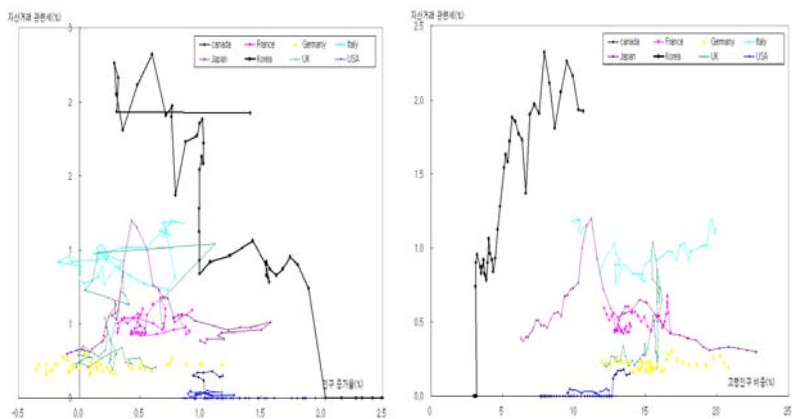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65~2009년)



- 자산과세 : 자산거래 관련세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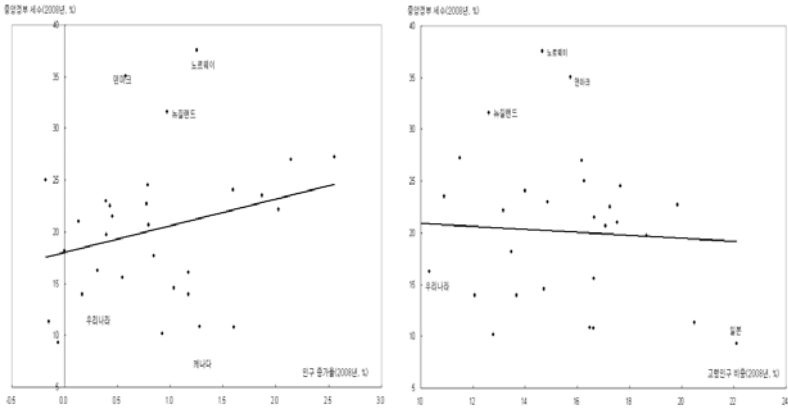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6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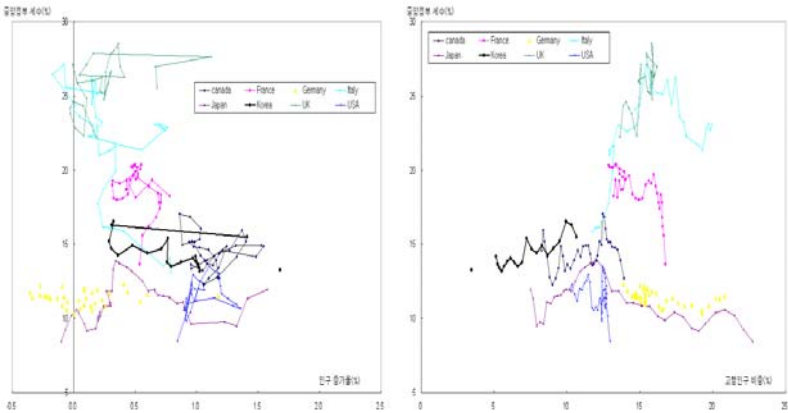


### 3. 정부별 조세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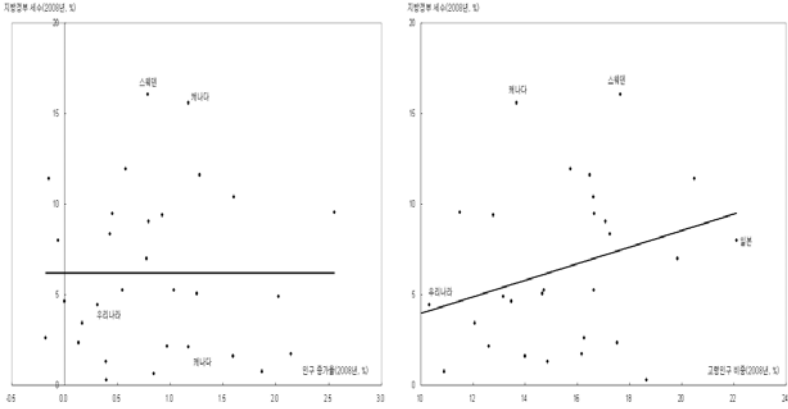
- 중앙정부 세수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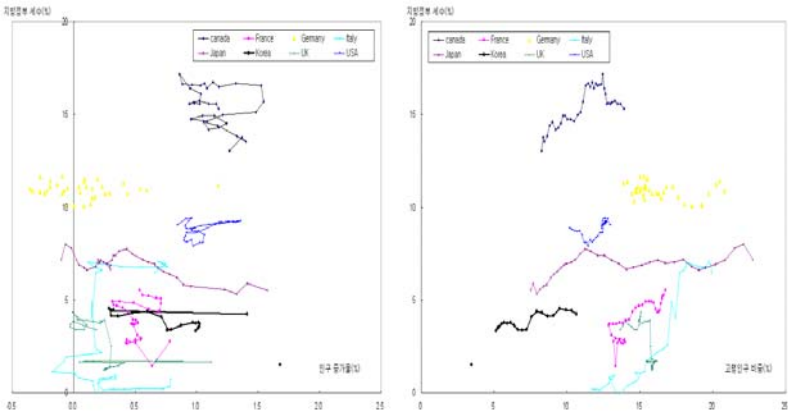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6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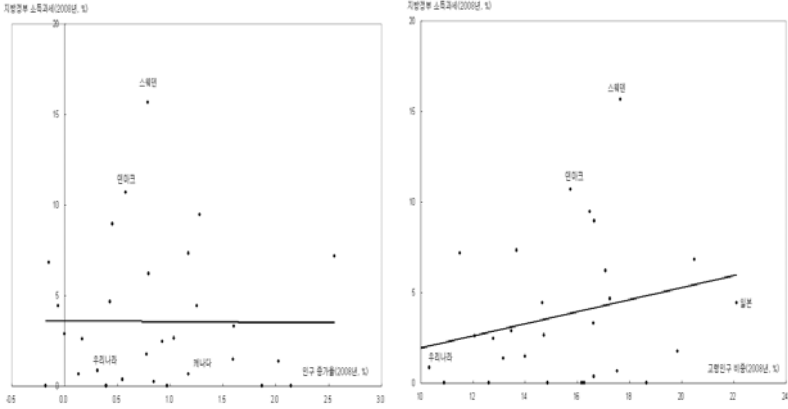
- 지방정부 세수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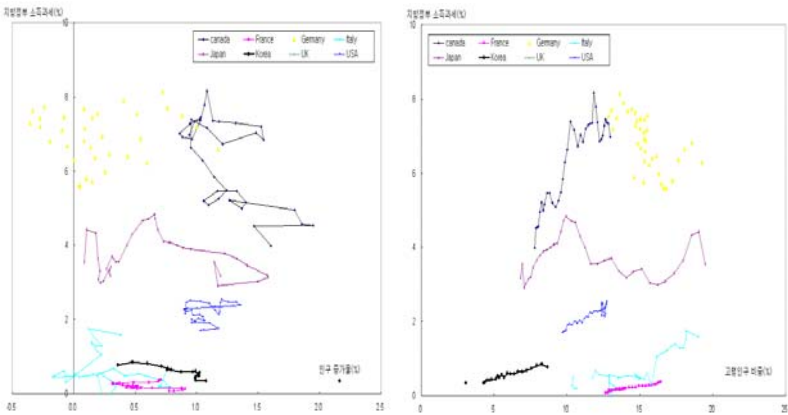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6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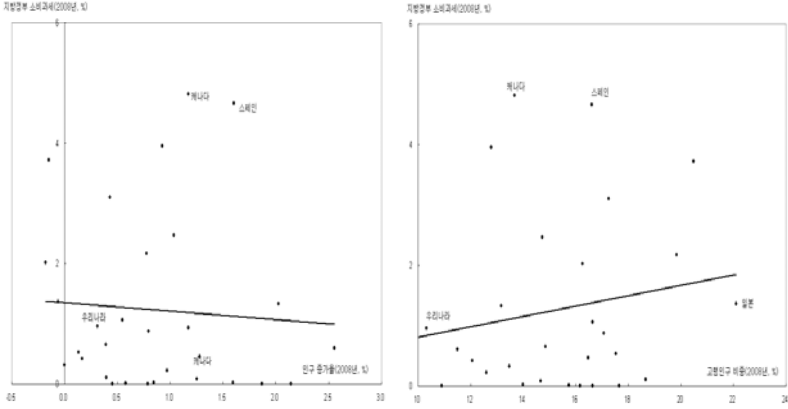
- 지방정부 세수 : 소득과세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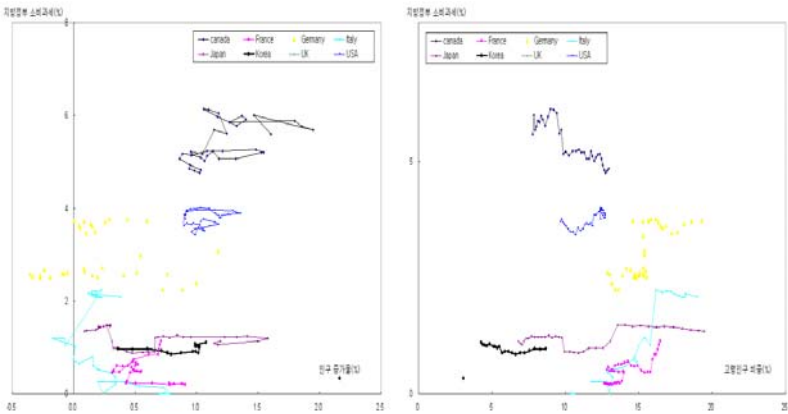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6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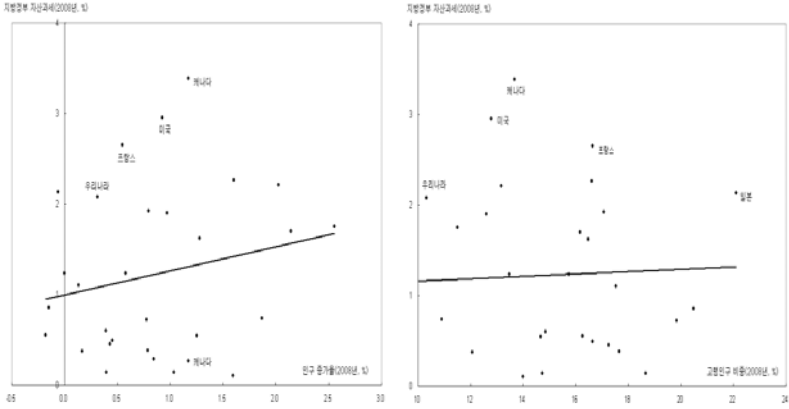
- 지방정부 세수 : 소비과세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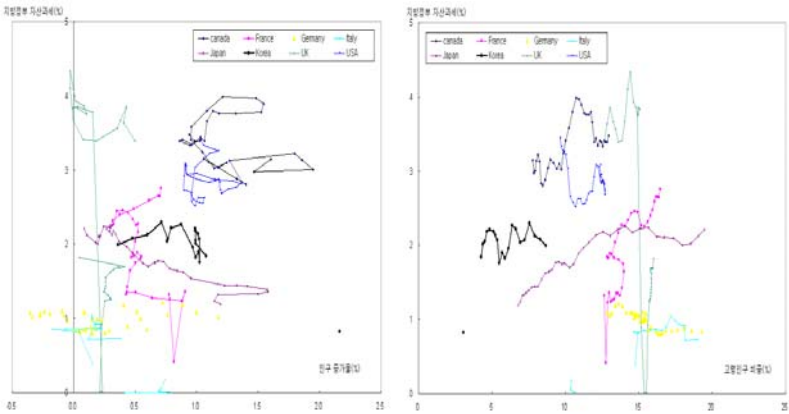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65~2009년)



- 지방정부 세수 : 자산과세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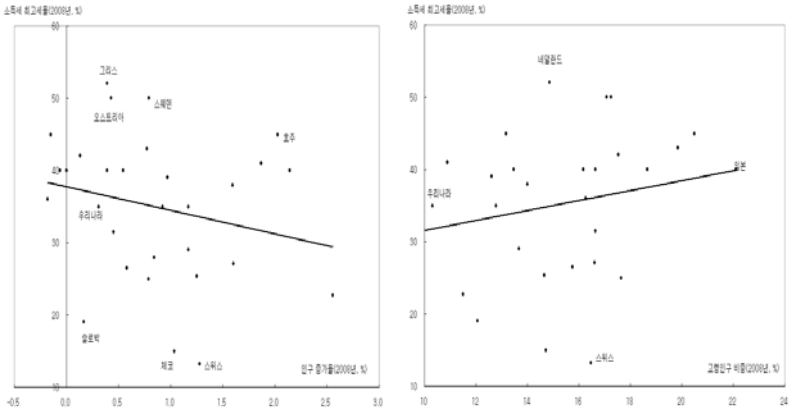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6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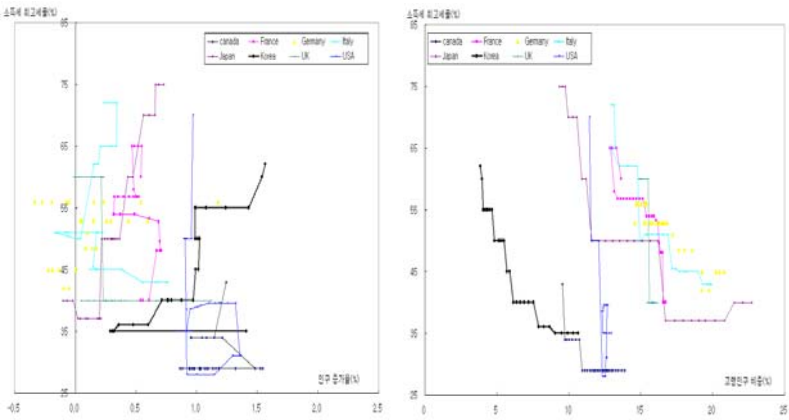


### 4. 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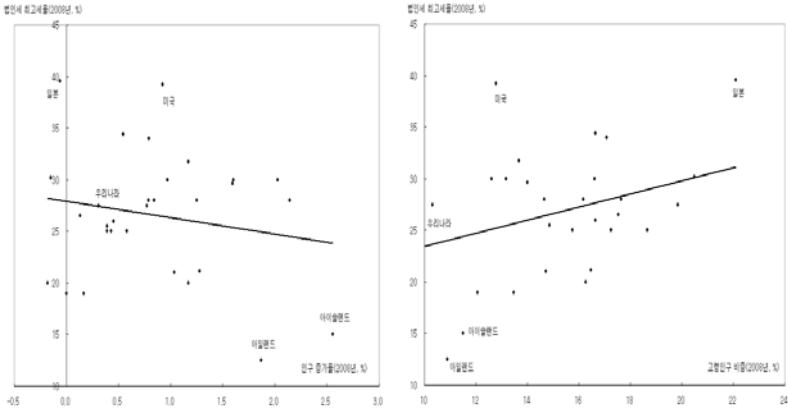
- 최고 법정소득세율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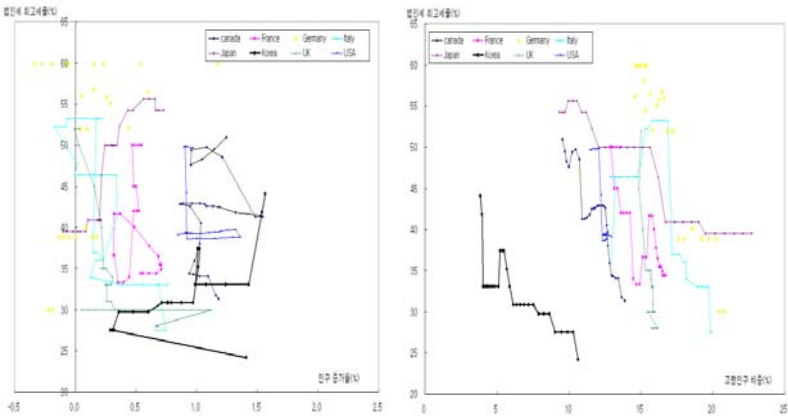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81~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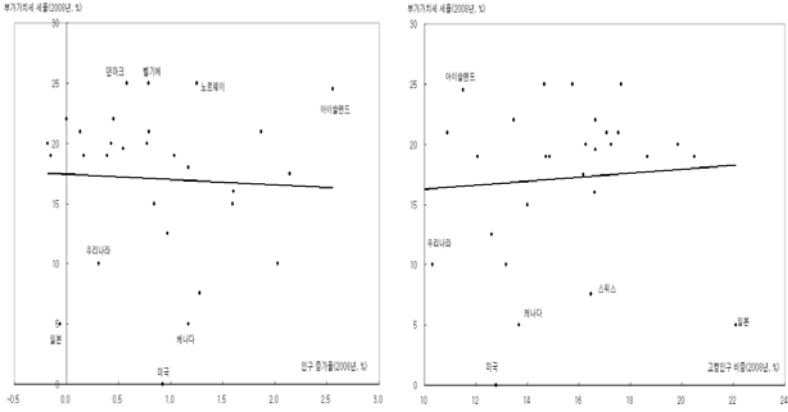
- 최고 법정법인세율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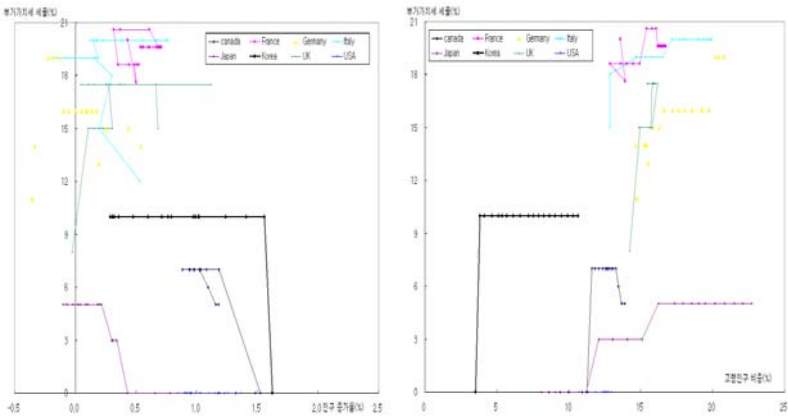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81~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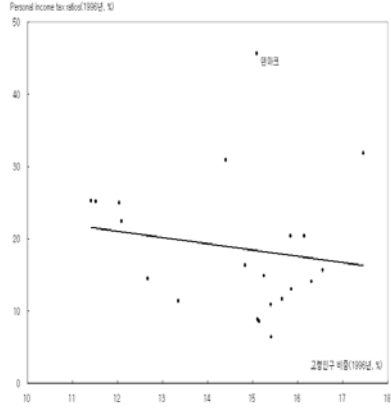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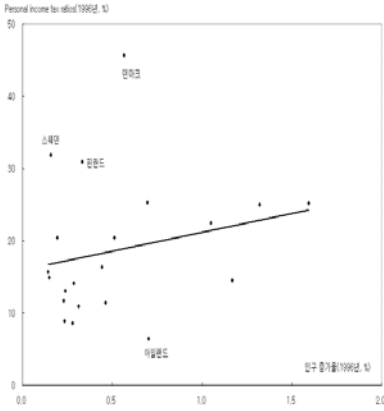
- 최고 법정부가가치세율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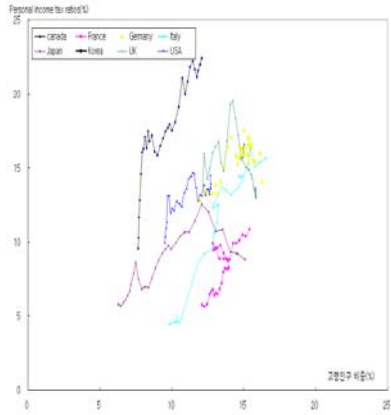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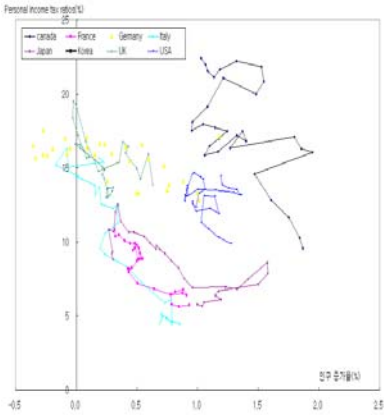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81~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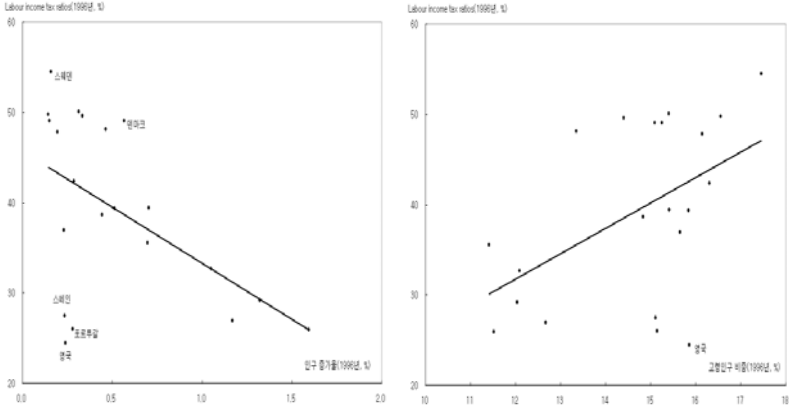
- 소득세 평균유효세율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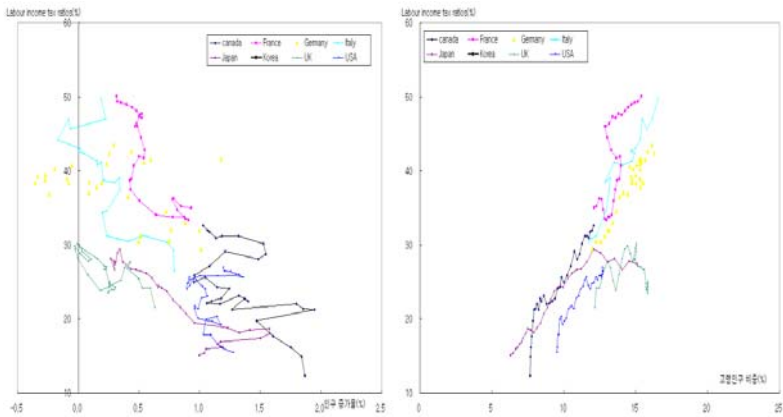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81~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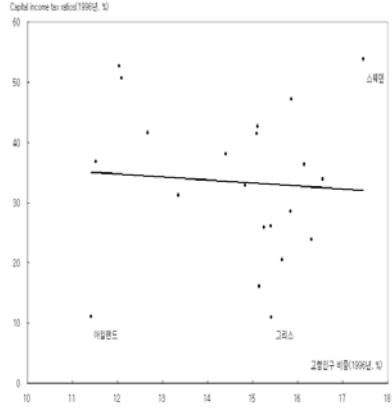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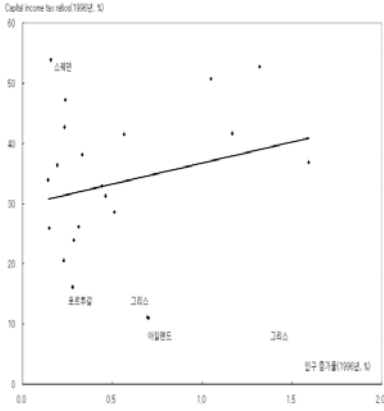
- 노동관련 평균유효세율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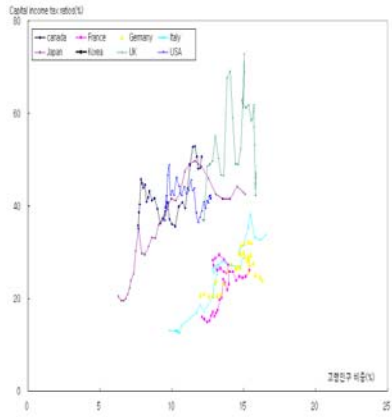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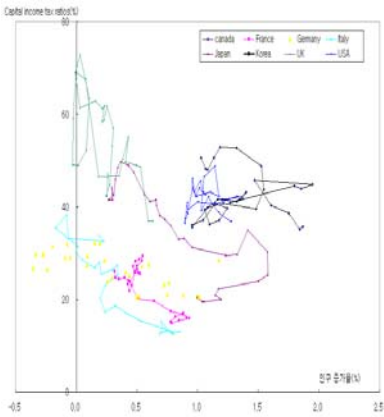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81~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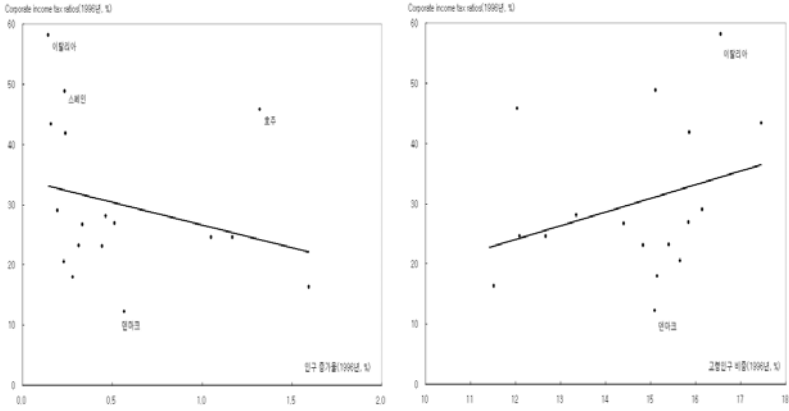
- 자본관련 평균유효세율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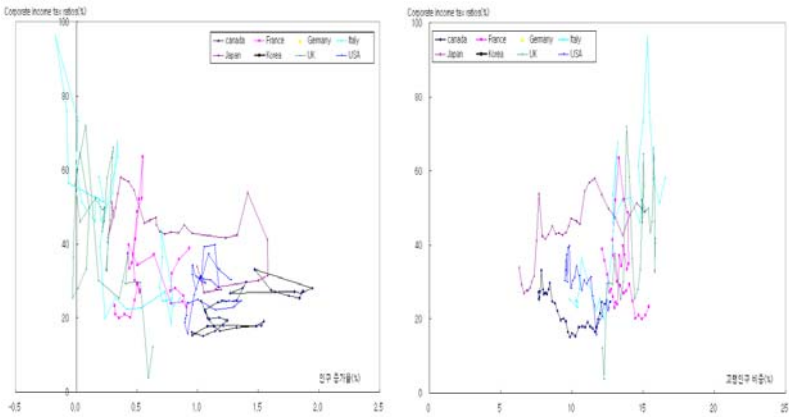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81~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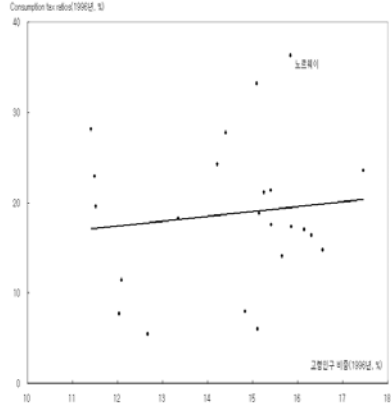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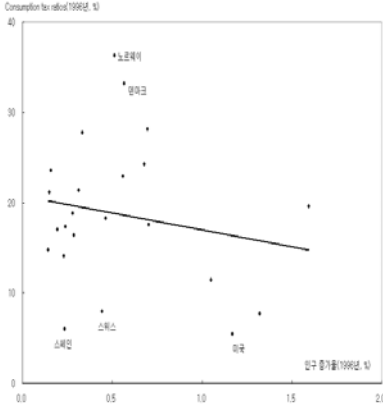
- 법인세 평균유효세율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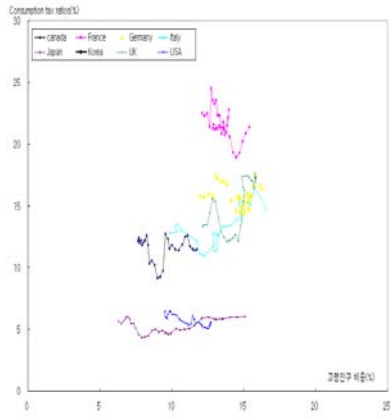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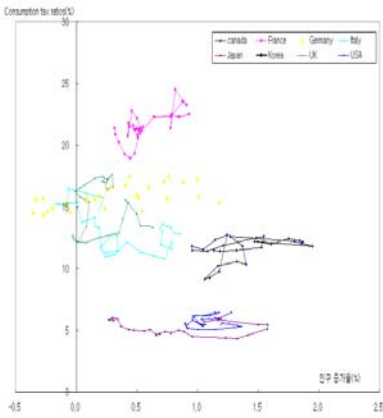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81~2009년)



- 소비 관련 평균유효세율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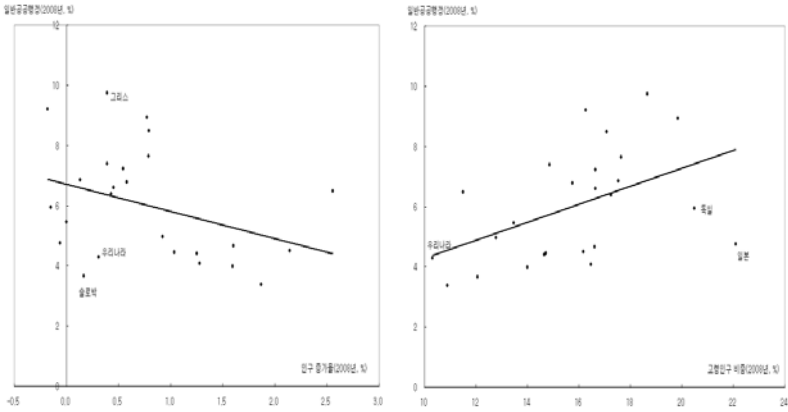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81~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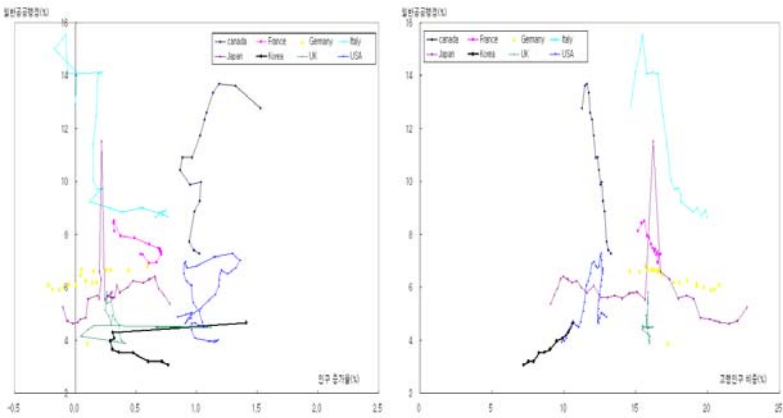


### 4. 세출구조

- 일반공공행정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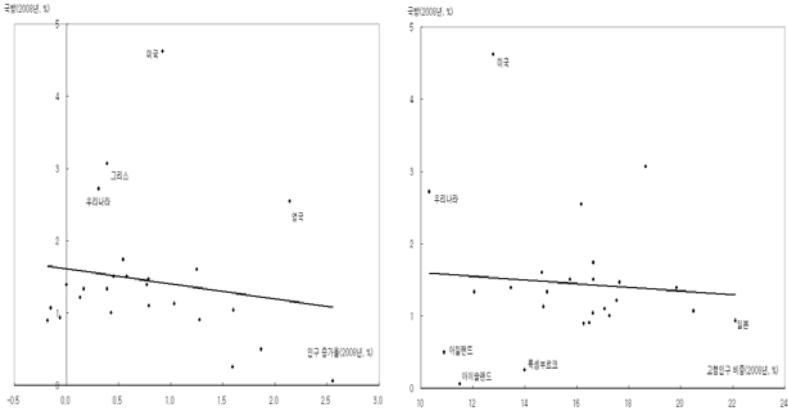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8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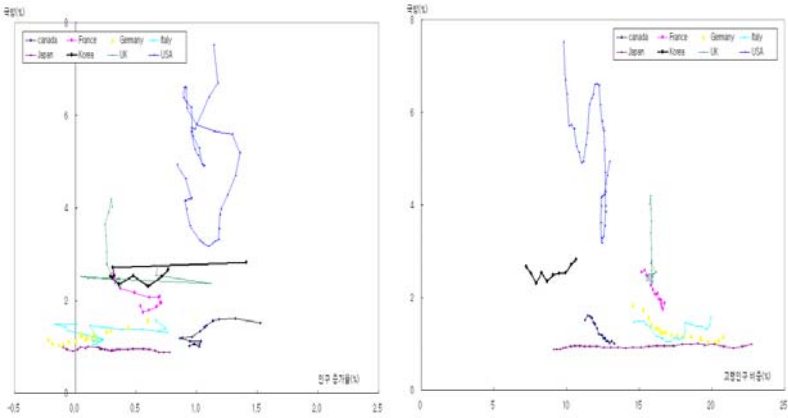


- 국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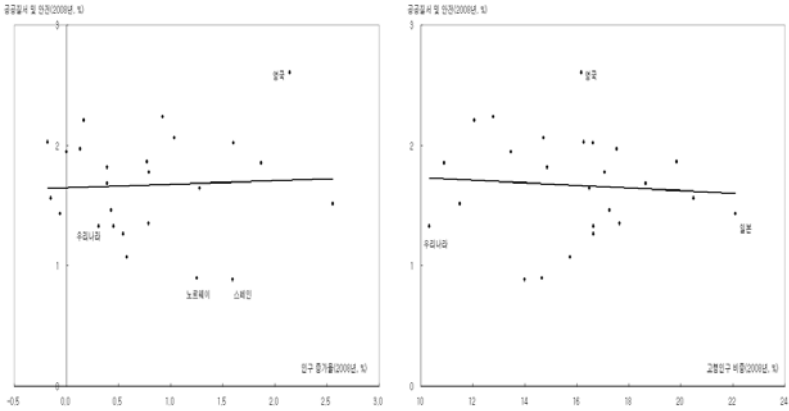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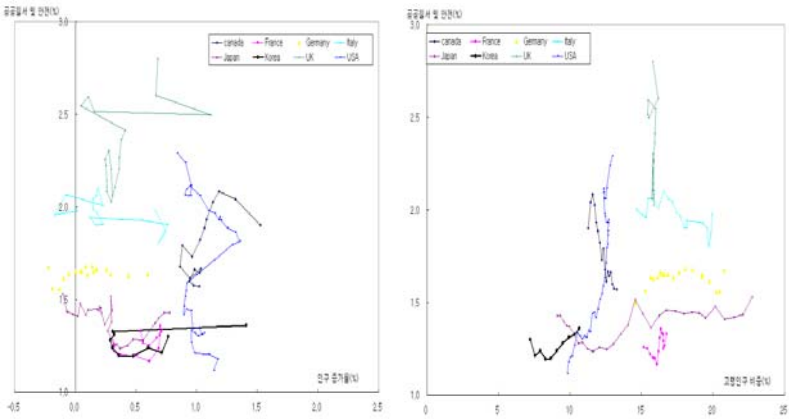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8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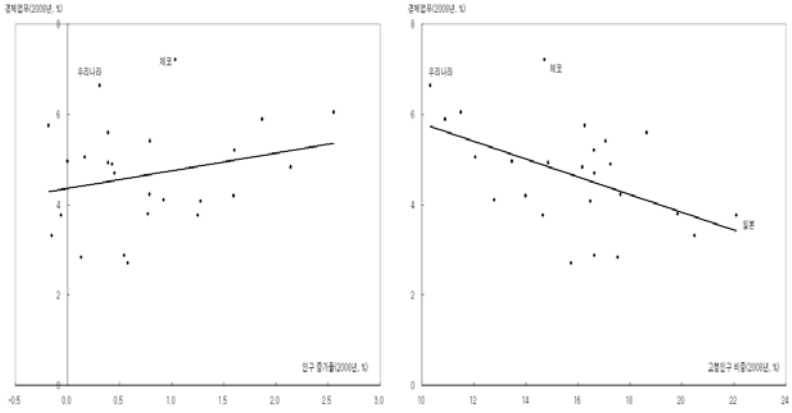
- 공공질서 및 안전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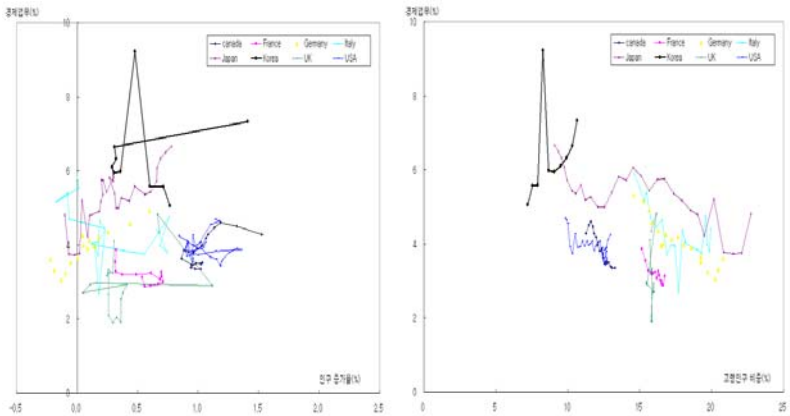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80~2009년)



- 경제업무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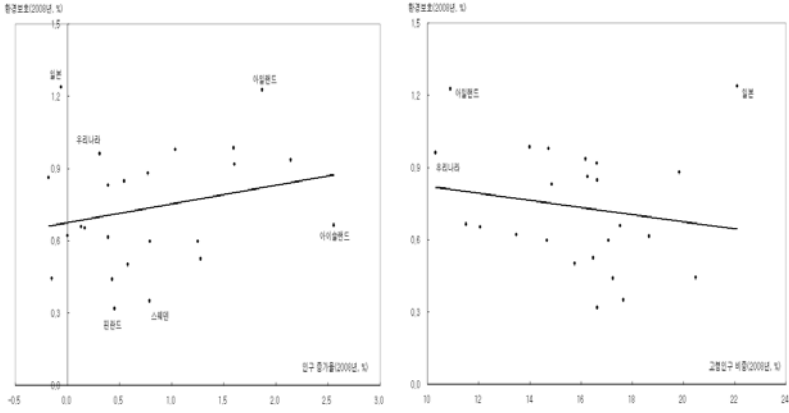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8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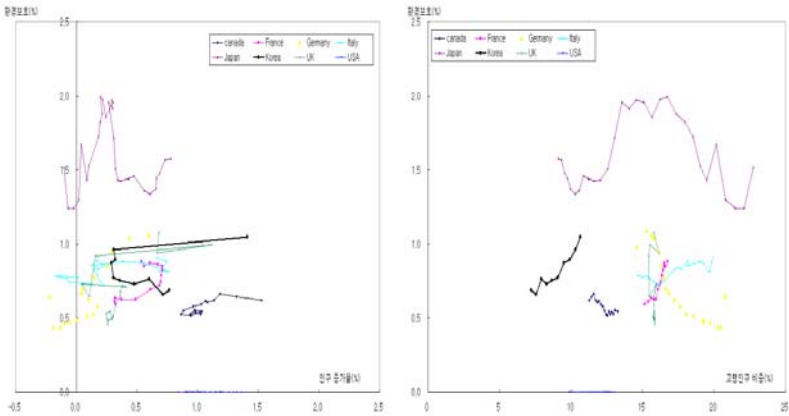


- 환경보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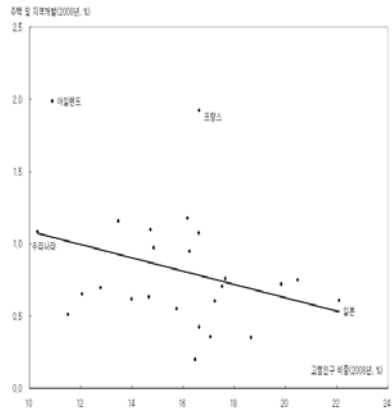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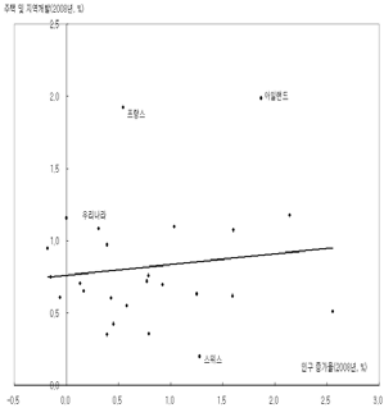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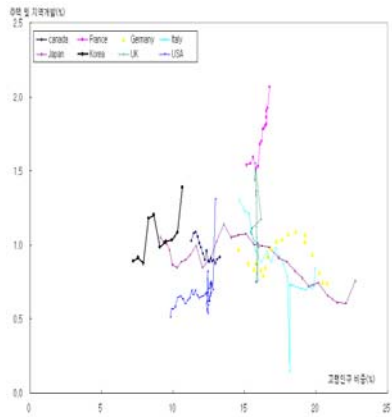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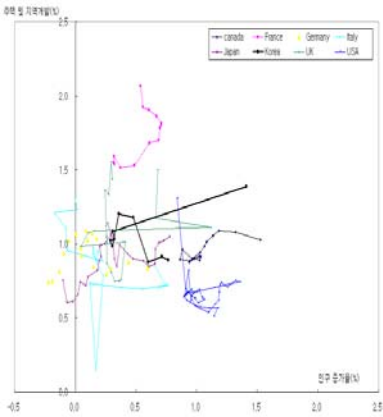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80~2009년)



- 주택 및 지역개발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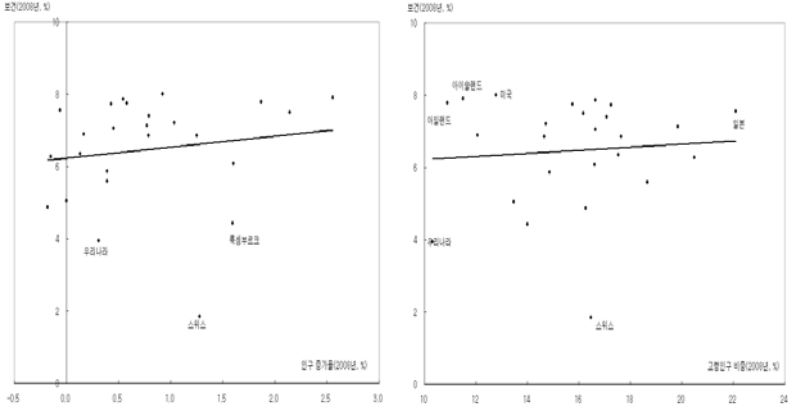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8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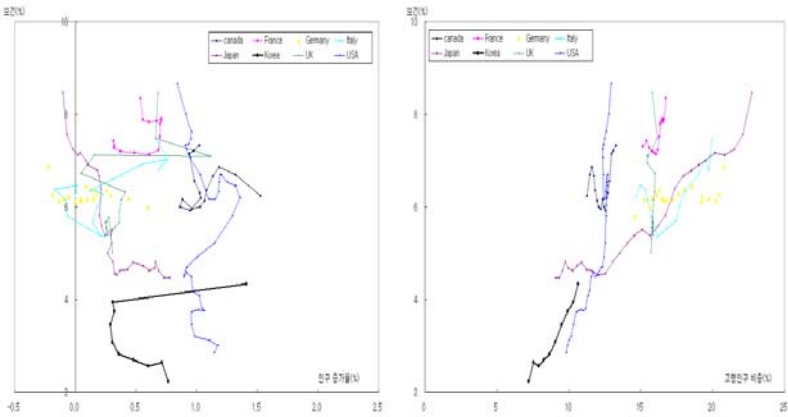


- 보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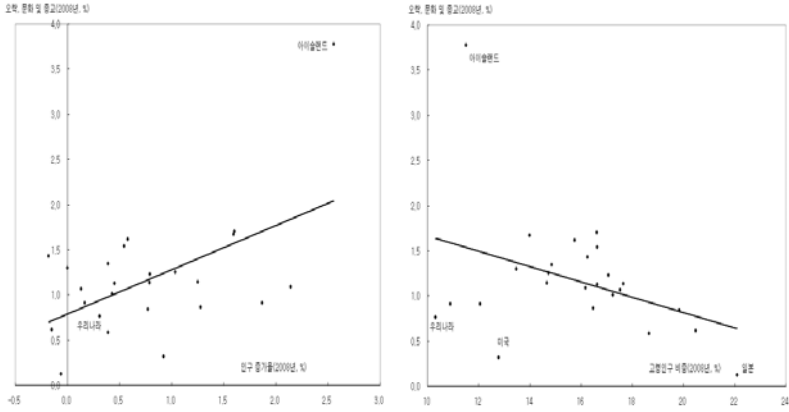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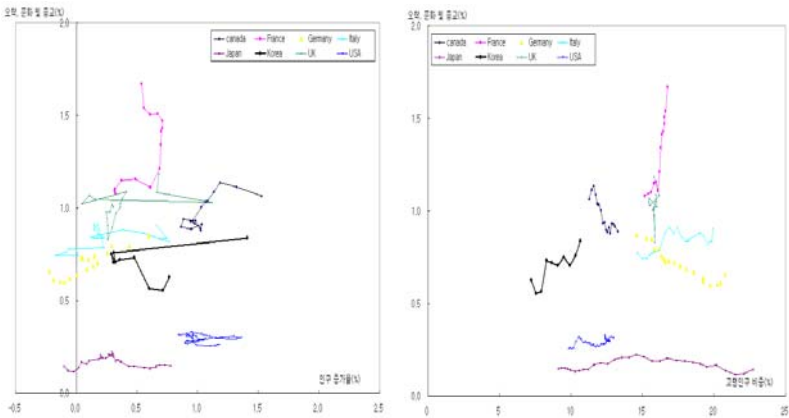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80~2009년)



- 오락, 문화 및 종교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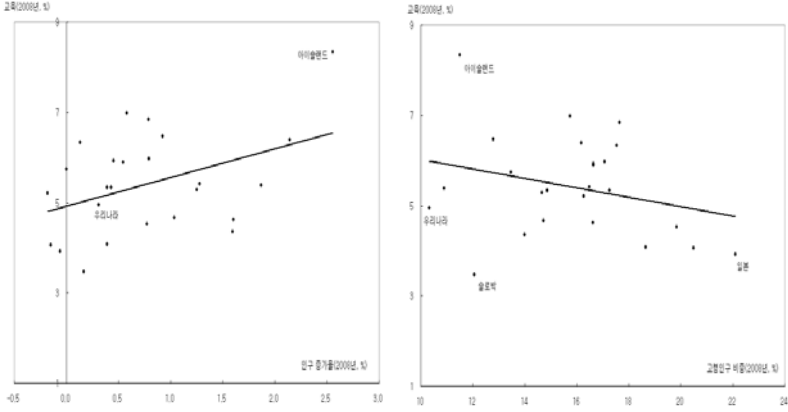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8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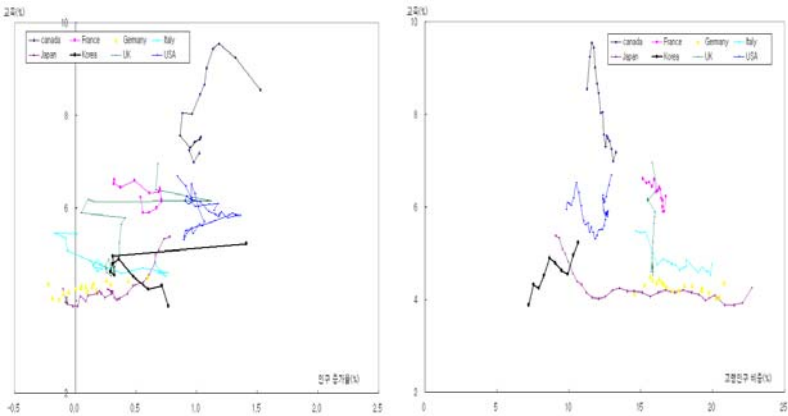


- 교육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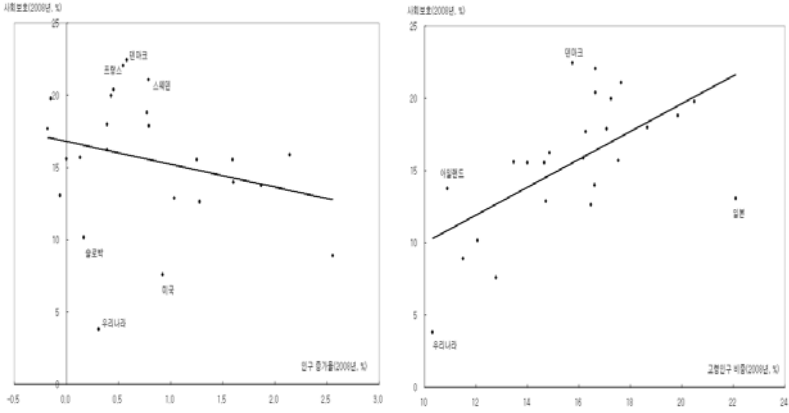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G7 : 198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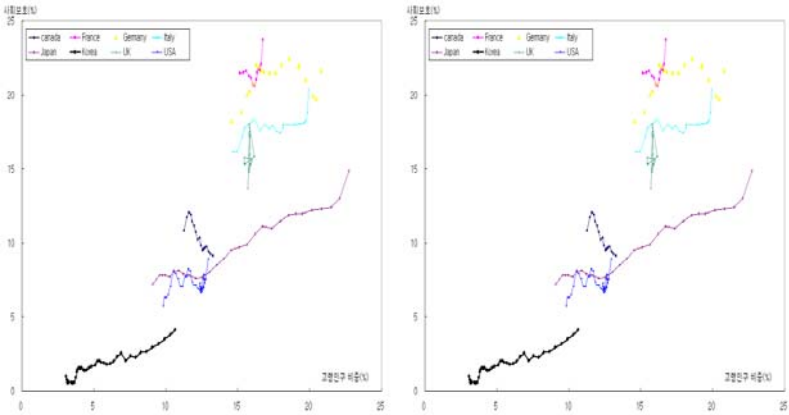


- 사회보호 -

(OECD 국가 :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및 G7 : 1980~2009년)



## [부록 2] OECD 국가의 GDP 구조 (2008년 기준)

### 1. 지출 및 수요구조 측면

OECD 국가들의 지출측면에서의 GDP 구조

(단위: %)

	지출비중				성장 기여도		
	소비지출		총고정 자본 형성	민간최종 소비지출	정부최종 소비지출	총고정 자본 형성	
	소계	민간최종 소비지출					정부최종 소비지출
Australia	71.13	53.54	17.60	28.31	0.42	0.51	1.12
Austria	71.01	52.33	18.68	22.05	0.25	0.72	0.88
Belgium	75.11	51.92	23.19	22.31	0.76	0.52	0.62
Canada	75.31	55.66	19.65	22.79	1.62	0.74	0.33
Chile	71.14	59.26	11.89	24.60	2.51	0.05	3.68
Czech	70.13	49.72	20.42	23.94	1.71	0.22	-0.37
Denmark	74.97	48.27	26.70	20.83	-0.12	0.41	-1.06
Finland	74.23	51.68	22.55	21.55	0.85	0.52	-0.08
France	80.16	56.88	23.27	21.31	0.30	0.39	0.11
Germany	75.08	56.96	18.12	19.00	0.41	0.42	0.47
Greece	92.33	73.69	18.64	19.12	2.32	0.18	-1.61
Hungary	75.74	54.15	21.60	21.41	0.20	0.21	0.68
Iceland	78.00	53.24	24.77	24.54	-4.52	1.11	-5.96
Ireland	68.90	50.70	18.21	22.11	-0.86	0.45	-3.77
Israel	82.65	57.92	24.73	18.35	1.68	0.65	0.74
Italy	79.45	59.25	20.19	20.76	-0.45	0.16	-0.85
Japan	76.30	57.81	18.49	23.09	-0.39	0.05	-0.59
Korea	70.01	54.72	15.29	29.30	0.71	0.64	-0.55
Luxembourg	47.17	32.32	14.85	20.28	1.53	0.40	0.28
Mexico	75.28	64.54	10.74	22.15	1.23	0.09	0.93
Netherlands	70.96	45.41	25.55	20.58	0.52	0.63	1.01
New Zealand	78.61	58.53	20.08	21.73	-0.63	0.79	-1.19
Norway	58.97	39.38	19.59	21.83	0.65	0.81	0.45
Poland	80.07	61.56	18.51	22.26	3.47	1.32	2.07
Portugal	86.92	66.84	20.08	22.46	1.17	0.11	-0.41
Slovak	74.76	57.14	17.61	24.74	3.37	0.91	0.47
Slovenia	71.11	52.98	18.13	28.78	1.54	1.08	2.35
Spain	76.67	57.16	19.51	28.66	-0.35	1.07	-1.46
Sweden	73.02	46.96	26.06	20.03	-0.04	0.33	0.34
Switzerland	67.52	56.63	10.88	21.13	0.76	0.19	0.11
Turkey	82.65	69.85	12.80	19.89	-0.23	0.22	-1.32
U. K.	85.92	64.20	21.72	16.63	0.27	0.34	-0.89
U. S.	87.46	70.68	16.78	17.80	-0.18	0.45	-0.96

주: 성장기여도 = 해당변수의 성장률 × 전년도 해당변수의 수준 ÷ 전년도 GDP

## OECD 국가의 민간최종소비지출 구조(1)

(단위: 지출비중, %)

	1	2	3	4	5	6	7	8	9	10	11	12
Australia	10.72	3.60	3.23	20.47	5.21	5.43	10.94	2.74	11.12	3.37	6.86	16.31
Austria	11.26	3.29	5.99	22.34	7.06	3.40	13.37	2.49	11.86	0.93	12.37	10.89
Belgium	13.00	3.49	4.83	23.58	5.66	5.32	12.00	2.28	9.54	0.49	5.80	12.87
Canada	9.16	3.54	4.48	23.23	6.39	4.48	14.43	2.29	9.86	1.32	6.80	12.47
Chile	17.07	2.82	6.40	15.16	8.37	7.62	17.11	3.60	5.89	4.73	3.03	8.21
Czech	17.03	7.93	4.35	22.74	5.34	2.87	12.05	3.63	11.13	0.77	7.13	9.37
Denmark	11.34	3.38	4.66	27.59	5.65	2.71	12.50	1.87	11.25	0.71	5.17	12.97
Finland	12.47	4.94	4.91	24.93	5.39	4.51	11.71	2.43	11.96	0.44	6.64	9.88
France	13.48	3.03	4.55	24.86	5.90	3.73	14.38	2.79	8.72	0.82	7.19	11.52
Germany	11.07	3.13	5.12	23.82	6.53	4.75	13.53	2.75	9.16	0.84	5.64	11.07
Greece	17.16	4.24	7.10	17.66	5.99	5.71	11.82	1.22	8.10	3.42	14.57	8.25
Hungary	17.84	9.98	3.39	20.87	5.43	3.64	15.39	4.12	7.43	1.09	5.32	8.07
Iceland	12.30	3.78	4.76	23.31	5.46	2.84	14.52	2.53	9.28	1.19	7.68	7.13
Ireland	9.48	5.06	4.45	21.88	6.07	4.11	11.90	3.11	6.56	1.31	12.85	10.84
Israel	16.43	2.59	2.87	23.39	6.40	3.93	15.41	4.20	8.24	2.90	5.91	9.05
Italy	14.89	2.66	7.76	21.59	7.51	3.14	13.13	2.63	6.94	0.93	10.18	10.24
Japan	14.57	2.92	3.49	24.70	3.59	4.30	11.33	3.26	10.35	2.17	7.87	10.93
Korea	12.33	2.58	5.04	16.57	3.25	5.89	11.26	4.43	7.87	7.38	8.27	13.30
Luxembourg	10.44	9.88	4.13	27.09	7.97	2.33	21.45	2.02	9.59	0.79	8.57	13.19
Mexico	23.85	2.38	2.47	23.28	4.55	4.40	14.92	4.25	5.17	2.61	4.28	8.51
Netherlands	11.30	3.01	5.34	22.54	6.41	2.70	12.22	4.28	10.55	0.56	5.24	15.60
New Zealand	17.52	n.a.	4.32	21.03	10.72	n.a.	13.19	n.a.	n.a.	n.a.	7.68	11.19
Norway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Poland	20.17	6.59	4.06	23.45	4.37	3.95	9.34	3.16	7.60	1.19	2.80	13.32
Portugal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Slovak	17.59	4.84	4.43	24.42	6.64	3.58	7.54	3.60	9.57	1.39	6.57	9.71
Slovenia	15.58	5.16	6.15	19.68	6.23	3.70	16.97	3.31	10.49	1.35	7.71	10.76
Spain	14.68	2.93	5.67	18.53	5.20	3.71	12.16	2.85	9.07	1.41	18.74	10.05
Sweden	12.35	3.54	4.93	26.56	5.33	3.26	13.10	3.29	11.63	0.30	5.50	10.64
Switzerland	10.55	3.39	3.86	23.74	4.66	14.86	7.99	2.61	7.92	0.52	7.62	12.29
Turkey	27.09	n.a.	6.02	21.27	7.51	4.29	19.37	n.a.	4.13	1.34	6.27	7.48
U. K.	9.00	3.40	5.32	20.95	5.24	1.59	14.85	2.06	11.11	1.41	10.30	13.25
U. S.	6.75	1.91	3.58	18.94	4.53	19.16	10.52	2.35	9.43	2.14	6.22	14.60

주: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2. 주류 및 담배, 3. 의류 및 신발, 4. 임료 및 수도광열, 5. 가계시설 및 운영, 6. 의료보건, 7. 교통, 8. 통신, 9. 오락문화, 10. 교육, 11. 음식숙박, 12. 기타

## OECD 국가의 민간최종소비지출 구조(2)

(단위: %)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Australia	12.38	n.a.	26.32	61.34
Austria	9.66	10.26	28.71	56.60
Belgium	8.03	8.40	31.78	50.63
Canada	12.98	8.10	24.95	52.40
Chile	8.97	n.a.	45.13	45.89
Czech	8.82	8.06	43.25	44.21
Denmark	11.29	10.45	26.05	52.00
Finland	10.02	9.14	28.86	52.19
France	8.89	7.94	30.83	52.34
Germany	10.84	9.21	28.12	49.23
Greece	6.94	10.83	33.64	53.82
Hungary	9.63	7.83	46.93	38.19
Iceland	7.74	10.24	27.80	49.02
Ireland	15.69	n.a.	33.27	48.65
Israel	8.09	7.18	29.99	55.51
Italy	9.16	10.74	30.74	50.96
Japan	8.49	7.39	26.85	56.76
Korea	6.80	7.23	25.81	58.32
Luxembourg	13.40	8.56	39.57	55.93
Mexico	9.49	6.36	41.35	43.47
Netherlands	10.17	9.64	29.60	50.35
New Zealand	18.76	n.a.	29.85	54.28
Norway	13.92	9.07	28.21	45.21
Poland	6.33	7.80	44.23	41.64
Portugal	n.a.	n.a.	n.a.	n.a.
Slovak	9.35	7.52	43.99	39.00
Slovenia	11.84	9.53	40.40	45.30
Spain	7.87	8.20	28.65	60.28
Sweden	8.68	9.25	30.58	51.90
Switzerland	n.a.	n.a.	n.a.	n.a.
Turkey	n.a.	n.a.	n.a.	n.a.
U. K.	10.51	10.92	25.33	51.72
U. S.	8.16	7.15	19.09	65.60

## OECD 국가의 총고정자본형성 구조(1)

(단위: 비중, %)

	건설투자			설비투자			경작 자산	무형 고정자산 투자
	소계	건물 건설	토목 건설	소계	운수 장비	기계류		
Australia	54.94	19.53	35.41	29.50	9.19	20.31	0.85	10.67
Austria	51.23	19.89	31.34	41.01	10.88	30.13	0.25	7.51
Belgium	n.a.	n.a.	n.a.	n.a.	n.a.	n.a.	n.a.	n.a.
Canada	67.49	29.66	37.83	25.38	7.06	18.32	n.a.	7.13
Chile	n.a.	62.08	n.a.	n.a.	37.92	n.a.	n.a.	n.a.
Czech	51.41	14.85	36.56	43.03	15.25	27.77	0.47	5.09
Denmark	54.17	28.37	25.80	35.83	10.04	25.79	-0.05	10.05
Finland	67.59	29.76	37.83	25.74	6.47	19.27	0.15	6.52
France	62.71	31.62	31.09	28.21	8.02	20.19	0.34	8.74
Germany	51.23	28.70	22.52	42.76	12.80	29.96	0.06	5.95
Greece	49.60	28.11	21.49	45.17	15.35	29.82	0.24	4.99
Hungary	55.60	19.90	35.69	39.24	9.27	29.97	0.80	4.36
Iceland	77.77	22.48	55.29	20.90	-0.11	21.01	0.57	0.76
Ireland	74.63	40.17	34.47	21.94	11.77	10.17	-0.01	3.44
Israel	46.99	26.10	20.88	42.93	9.45	33.48	0.18	9.90
Italy	51.54	24.19	27.35	44.24	9.92	34.32	0.11	4.12
Japan	50.66	14.40	36.26	42.59	8.25	34.34	n.a.	6.75
Korea	61.51	15.80	45.70	32.39	7.29	25.10	n.a.	6.10
Luxembourg	57.54	14.16	43.38	32.79	16.58	16.21	0.08	9.59
Mexico	65.45	26.76	38.69	34.53	9.89	24.64	0.02	n.a.
Netherlands	58.33	31.03	27.30	31.49	8.14	23.35	0.28	9.90
New Zealand	55.24	23.45	31.79	36.06	6.92	29.14	n.a.	8.70
Norway	n.a.	65.64	n.a.	30.19	9.09	21.10	n.a.	4.17
Poland	57.83	14.28	43.55	38.64	9.92	28.72	0.11	3.43
Portugal	n.a.	60.45	n.a.	32.49	8.87	23.62	0.87	6.18
Slovak	49.54	9.34	40.20	42.19	10.96	31.23	3.01	5.26
Slovenia	57.70	16.29	41.41	37.43	9.29	28.14	0.31	4.56
Spain	57.45	27.87	29.58	25.68	7.58	18.09	0.12	16.76
Sweden	43.26	18.00	25.26	41.62	9.65	31.97	0.33	14.79
Switzerland	35.77	20.91	14.86	56.10	6.86	49.24	0.18	7.96
Turkey	n.a.	47.75	n.a.	n.a.	n.a.	52.25	n.a.	n.a.
U. K.	58.76	20.92	37.83	34.28	6.06	28.22	n.a.	6.96
U. S.	52.86	18.59	34.26	35.77	6.65	29.13	n.a.	11.37

## OECD 국가의 총고정자본형성 구조(2)

(단위: %)

	기업부문	정부부문	가계부문
Australia	54.91	11.20	33.89
Austria	72.88	4.79	22.34
Belgium	61.84	7.64	30.52
Canada	54.09	13.98	31.93
Chile	65.14	10.39	24.48
Czech	58.21	20.67	21.13
Denmark	63.81	8.78	27.41
Finland	56.06	11.62	32.31
France	53.34	14.94	31.73
Germany	59.10	7.79	33.10
Greece	34.60	15.45	49.95
Hungary	61.64	13.50	24.86
Iceland	n.a.	n.a.	n.a.
Ireland	34.24	25.24	40.52
Israel	n.a.	n.a.	n.a.
Italy	57.54	10.65	31.81
Japan	70.44	12.86	16.70
Korea	67.67	17.18	15.14
Luxembourg	n.a.	15.75	n.a.
Mexico	60.02	10.11	29.86
Netherlands	47.31	16.93	35.76
New Zealand	n.a.	n.a.	n.a.
Norway	n.a.	n.a.	n.a.
Poland	55.36	20.59	24.04
Portugal	63.47	10.39	26.14
Slovak	71.22	7.93	20.85
Slovenia	62.30	14.93	22.77
Spain	56.77	13.70	29.52
Sweden	67.13	16.23	16.64
Switzerland	69.50	8.89	21.61
Turkey	n.a.	n.a.	n.a.
U. K.	59.29	13.64	27.07
U. S.	53.48	14.35	32.18

## 2. 분배 및 소득구조 측면

OECD 국가의 분배측면 GDP 구조(1)

(단위: %)

	비용자보수		영업잉여/혼합소득	순생산·수입세
	소계	근로소득		
Australia	48.16	42.82	42.34	9.50
Austria	48.92	39.63	40.60	10.48
Belgium	51.31	37.94	37.90	10.79
Canada	51.18	n.a.	38.45	10.37
Chile	39.41	n.a.	49.08	11.52
Czech	44.29	33.75	46.68	9.03
Denmark	56.42	51.50	28.87	14.71
Finland	49.35	39.56	39.26	11.39
France	52.11	38.43	34.58	13.32
Germany	49.27	40.04	39.25	11.48
Greece	36.44	28.34	52.74	10.82
Hungary	46.38	36.00	39.75	13.88
Iceland	56.26	n.a.	29.99	13.75
Ireland	44.41	41.11	44.22	11.14
Israel	51.16	n.a.	33.75	15.09
Italy	41.92	30.59	45.26	12.82
Japan	52.05	44.55	38.57	7.89
Korea	46.27	40.49	42.01	11.72
Luxembourg	43.60	37.91	46.04	10.36
Mexico	27.99	n.a.	61.49	10.52
Netherlands	49.43	38.68	39.24	11.33
New Zealand	45.03	n.a.	43.04	11.93
Norway	42.99	34.96	47.73	9.46
Poland	37.32	32.70	49.46	13.22
Portugal	49.83	38.66	37.33	12.85
Slovak	36.42	28.10	54.99	8.59
Slovenia	50.85	43.73	36.76	12.40
Spain	48.83	38.02	42.57	8.60
Sweden	53.82	40.77	29.83	16.35
Switzerland	60.83	50.82	35.81	3.37
Turkey	n.a.	n.a.	n.a.	n.a.
U. K.	53.21	44.92	35.26	11.53
U. S.	56.43	45.89	35.67	6.94

## OECD 국가의 분배측면 GDP 구조(2)

## (1) 부문별 배분

(단위: 비중, %)

	경제전체	가계부문	정부부문	기업부문
Australia	100.00	72.00	20.67	7.32
Austria	100.00	71.72	24.16	4.12
Belgium	100.00	69.43	26.56	4.01
Canada	100.00	67.45	24.35	8.19
Chile	100.00	73.80	22.55	3.64
Czech	100.00	67.38	24.97	7.65
Denmark	100.00	50.13	36.51	13.36
Estonia	100.00	63.46	25.49	11.05
Finland	100.00	61.58	32.29	6.12
France	100.00	75.25	24.70	0.06
Germany	100.00	73.99	22.22	3.79
Greece	100.00	80.85	11.83	7.31
Hungary	100.00	69.20	23.45	7.34
Ireland	100.00	67.14	20.73	11.82
Italy	100.00	79.01	23.58	-2.60
Japan	100.00	74.43	18.45	7.12
Korea	100.00	64.35	25.73	9.92
Luxembourg	100.00	57.33	34.36	8.31
Mexico	100.00	76.63	14.90	8.47
Netherlands	100.00	53.93	33.11	12.96
Norway	100.00	46.21	47.04	6.75
Poland	100.00	71.01	20.65	8.34
Portugal	100.00	82.54	20.79	-3.33
Slovak	100.00	72.05	20.52	7.43
Slovenia	100.00	71.21	24.74	4.05
Spain	100.00	76.09	23.58	0.33
Sweden	100.00	55.48	33.08	11.34
Switzerland	100.00	79.23	19.53	1.24
U. K.	100.00	66.86	21.45	11.69
U. S.	100.00	84.90	13.87	1.23

## (2) 가계부문 소득구조

(단위: GDP 대비, %)

	가계부문 비용자보수	가계부문 영업잉여	가계부문 재산소득	가계부문 순재산소득
Australia	48.32	14.26	7.50	1.02
Austria	49.04	15.17	9.89	7.99
Belgium	52.70	13.28	11.30	9.33
Canada	51.16	8.96	8.90	7.67
Chile	39.41	10.15	17.11	14.62
Czech	43.76	14.88	4.15	3.23
Denmark	55.52	7.62	7.73	0.75
Estonia	52.19	9.09	6.31	1.04
Finland	49.53	11.92	6.87	4.10
France	52.42	15.31	9.32	6.85
Germany	49.30	13.60	18.66	15.96
Greece	36.37	28.19	9.78	7.90
Hungary	47.05	14.34	5.03	2.99
Ireland	44.05	14.08	4.33	-0.27
Italy	41.90	21.94	15.89	14.05
Japan	52.33	13.33	4.93	2.13
Korea	46.24	13.33	8.94	4.63
Luxembourg	28.23	9.08	4.23	2.05
Mexico	28.07	26.28	17.94	16.46
Netherlands	48.58	11.37	10.54	4.88
Norway	42.09	6.87	4.32	0.35
Poland	38.07	24.98	4.27	2.79
Portugal	49.81	14.58	12.99	7.20
Slovak	38.87	24.82	2.87	1.59
Slovenia	50.86	15.54	3.11	1.71
Spain	48.82	21.47	6.56	3.27
Sweden	53.75	7.65	6.24	3.03
Switzerland	58.68	7.29	13.85	10.95
U. K.	53.16	11.08	12.51	7.98
U. S.	56.38	18.41	16.35	7.69

## 3. 생산 및 산업구조 측면

## OECD 국가들의 산업구조

## (1) 비중

(단위: %)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음식 숙박·교통	금융· 부동산	기타 서비스업
Australia	2.55	19.70	7.42	21.25	30.51	18.56
Austria	1.71	23.19	7.06	23.68	23.79	20.57
Belgium	0.67	17.72	5.49	22.74	29.49	23.90
Canada	n.a.	n.a.	n.a.	n.a.	n.a.	n.a.
Chile	3.50	35.57	8.29	17.05	20.46	15.12
Czech	2.54	31.01	6.60	25.26	17.87	16.72
Denmark	1.19	20.18	5.46	21.82	24.69	26.67
Finland	2.87	25.00	7.25	19.70	23.09	22.09
France	2.04	13.63	6.66	18.85	33.38	25.44
Germany	0.90	25.61	4.04	17.83	29.48	22.15
Greece	3.15	13.05	5.15	34.60	19.09	24.95
Hungary	4.25	24.91	4.40	21.26	22.82	22.36
Iceland	6.37	17.94	9.36	18.49	24.89	22.94
Ireland	1.30	23.79	7.72	17.50	28.99	20.69
Israel	1.87	16.74	4.94	17.79	35.25	23.41
Italy	2.01	20.77	6.16	22.27	27.75	21.04
Japan	1.43	21.26	5.99	20.09	26.90	24.33
Korea	2.68	29.45	7.03	19.76	20.32	20.76
Luxembourg	0.36	9.14	5.32	21.92	48.16	15.11
Mexico	3.30	29.32	7.06	27.66	19.96	12.70
Netherlands	1.81	19.79	5.79	21.18	27.83	23.62
New Zealand	n.a.	n.a.	n.a.	n.a.	n.a.	n.a.
Norway	1.21	40.65	4.85	15.89	17.68	19.71
Poland	3.73	24.28	7.26	26.18	19.46	19.08
Portugal	2.29	17.35	6.81	25.72	23.53	24.30
Slovak	3.10	29.75	8.26	25.89	18.47	14.52
Slovenia	2.51	25.50	8.33	22.56	22.25	18.84
Spain	2.66	17.03	11.40	24.47	22.85	21.58
Sweden	1.76	22.13	5.37	19.79	24.42	26.54
Switzerland	1.27	22.27	5.42	22.15	23.60	25.30
Turkey	8.46	21.98	5.23	31.87	21.04	11.42
U. K.	0.78	16.16	6.45	21.03	32.66	22.92
U. S.	1.23	16.57	4.72	18.24	33.76	25.47

## (2) 성장기여도

(단위: %)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음식 숙박·교통	금융· 부동산	기타 서비스업
Australia	0.39	-0.34	-0.14	0.03	0.14	0.60
Austria	0.17	0.86	0.04	0.20	0.71	0.50
Belgium	-0.02	-0.11	-0.01	0.16	0.86	0.39
Canada	n.a.	n.a.	n.a.	n.a.	n.a.	n.a.
Chile	0.16	-0.34	0.69	0.92	0.62	0.52
Czech	0.13	2.49	0.01	0.63	0.32	-0.23
Denmark	0.04	0.00	-0.31	-0.51	0.05	0.20
Finland	0.18	-0.08	-0.01	0.02	0.60	0.08
France	0.06	-0.28	0.01	0.08	0.32	0.31
Germany	-0.05	-0.90	-0.04	0.76	0.79	0.52
Greece	0.35	0.10	-1.01	0.44	0.56	1.31
Hungary	2.16	-0.01	-0.47	-0.60	0.39	-0.31
Iceland	0.00	1.58	-1.52	-0.73	0.00	0.38
Ireland	0.00	-0.23	-0.95	-0.47	-0.47	-0.10
Israel	0.01	1.48	0.15	0.68	1.31	0.82
Italy	0.02	-0.77	-0.14	-0.25	-0.05	0.00
Japan	n.a.	n.a.	n.a.	n.a.	n.a.	n.a.
Korea	0.16	0.91	-0.18	0.52	0.60	0.53
Luxembourg	-0.04	-1.33	-0.25	2.23	0.58	0.30
Mexico	0.07	-0.22	0.04	0.62	1.13	0.11
Netherlands	0.02	0.08	0.26	0.21	0.95	0.53
New Zealand	n.a.	n.a.	n.a.	n.a.	n.a.	n.a.
Norway	0.07	-0.40	0.08	0.37	0.28	0.65
Poland	-0.06	1.67	0.33	0.83	1.67	0.69
Portugal	0.08	-0.49	-0.31	0.43	0.59	0.19
Slovak	-0.09	2.15	0.44	3.28	1.89	-0.77
Slovenia	0.14	0.16	0.44	1.04	1.24	0.39
Spain	-0.06	-0.24	-0.19	0.23	0.38	0.97
Sweden	0.02	-0.55	-0.08	0.13	-0.07	0.31
Switzerland	0.02	0.52	0.06	0.99	-0.40	0.76
Turkey	0.36	0.07	-0.44	-0.02	1.38	0.16
U. K.	0.00	-0.51	-0.05	-0.26	0.63	0.03
U. S.	0.10	-0.47	-0.17	-0.43	0.57	0.65

## [부록 3] 주요 선진국의 자산·부채 규모 및 구성 추이

영국의 자산·부채 규모 및 구성 추이

### (1) 경제전체

(단위: %)

	1987	1992	1997	2002	2009
순자산/GDP	402.0	423.0	383.1	461.0	478.1
- 비금융자산/GDP	389.7	421.3	389.5	472.2	497.8
- 금융자산/GDP	697.8	776.3	953.6	976.4	1,805.9
- 순금융자산/GDP	12.2	1.7	-6.4	-11.2	-19.7
- 금융자산/총자산	64.2	64.8	71.0	67.4	78.4
비금융자산(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 Residential buildings	53.8	45.6	44.0	53.9	58.3
- Agricultural assets	2.0	1.2	1.6	1.1	0.8
- Commercial, industrial and other buildings	1.0	16.1	15.4	11.6	8.1
- Civil engineering works	12.6	10.0	13.9	11.5	10.4
- Plant and machinery	11.4	11.4	10.6	7.3	7.3
- Vehicles, including ships, aircraft, etc	3.6	3.2	3.6	2.6	2.5
- Stocks and work in progress	6.4	4.9	4.8	3.6	3.3
- Spectrum	0.0	0.0	0.0	0.4	0.3
- intangible assets	9.1	7.5	6.1	8.0	9.0
금융자산(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 Monetary gold and SDRs	0.2	0.1	0.0	0.0	0.1
- Currency and deposits	28.7	26.4	25.6	27.7	24.9
- Securities other than shares	9.1	10.5	11.7	13.1	32.2
- Total loans	20.7	20.7	17.5	20.6	17.2
- Total shares and other equity	22.8	23.4	25.6	22.1	15.1
- Total insurance technical reserves	13.3	14.8	16.6	13.7	8.9
- Other accounts receivable	5.2	4.0	2.9	2.8	1.6
금융부채(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 Monetary gold and SDRs	0.0	0.0	0.0	0.0	0.0
- Currency and deposits	31.5	29.1	26.8	29.7	26.1
- Securities other than shares	9.2	9.4	10.5	12.1	32.8
- Total loans	19.1	21.2	18.8	22.4	16.9
- Total shares and other equity	21.4	21.4	24.5	19.4	13.7
- Total insurance technical reserves	13.6	15.0	16.7	13.6	8.9
- Other accounts receivable	5.2	3.9	2.8	2.7	1.6

## (2) 가계부문

(단위: %)

	1987	1992	1997	2002	2009
순자산/GDP	376.1	384.1	429.6	458.6	519.3
- 비금융자산/GDP	243.1	222.6	199.1	291.5	331.4
- 금융자산/GDP	196.0	236.8	301.5	252.9	297.7
- 순금융자산/GDP	132.9	161.5	230.5	167.1	187.9
- 금융자산/총자산	44.6	51.5	60.2	46.5	47.3
비금융자산(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 Residential buildings	75.6	77.6	78.7	81.9	82.8
- Agricultural assets	2.8	2.1	2.7	1.5	1.0
- Commercial, industrial and other buildings	3.2	2.6	2.5	1.6	1.0
- Civil engineering works	0.1	0.1	0.1	0.1	0.0
- Plant and machinery	0.6	0.6	0.8	0.6	0.7
- Vehicles, including ships, aircraft, etc	3.5	3.7	4.2	2.2	1.7
- Stocks and work in progress	0.9	1.0	0.9	0.5	0.4
- Spectrum	0.0	0.0	0.0	0.0	0.0
- intangible assets	13.3	12.4	10.0	11.7	12.5
금융자산(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 Monetary gold and SDRs	0.0	0.0	0.0	0.0	0.0
- Currency and deposits	29.7	27.7	21.5	26.9	28.5
- Securities other than shares	3.0	2.2	2.3	2.0	0.8
- Total loans	0.7	0.4	0.3	0.2	0.4
- Total shares and other equity	16.1	17.9	21.2	15.6	13.1
- Total insurance technical reserves	46.4	47.7	52.0	52.2	53.9
- Other accounts receivable	4.3	4.2	2.8	3.1	3.3
금융부채(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 Monetary gold and SDRs	0.0	0.0	0.0	0.0	0.0
- Currency and deposits	0.0	0.0	0.0	0.0	0.0
- Securities other than shares	0.0	0.1	0.3	0.3	0.5
- Total loans	88.5	90.1	90.6	91.8	94.3
- Total shares and other equity	0.0	0.0	0.0	0.0	0.0
- Total insurance technical reserves	0.0	0.0	0.0	0.0	0.0
- Other accounts receivable	11.5	9.8	9.0	7.8	5.2

## 독일의 자산·부채 규모 및 구성 추이

## (1) 경제전체

(단위: %)

	1992	1996	2000	2004	2009
순자산/GDP	374.8	379.6	380.2	387.6	449.6
- 비금융자산/GDP	364.0	377.6	380.6	392.4	430.3
- 순금융자산/GDP	10.8	2.1	-0.4	-4.8	19.2
비금융자산(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Fixed assets	80.5	83.2	81.1	77.5	78.4
Tangible fixed assets	80.0	82.6	80.5	76.8	77.8
Cultivated assets	0.1	0.1	0.1	0.1	0.1
Machinery and equipment	12.9	12.0	11.5	10.8	10.6
Buildings and structures	66.9	70.5	68.9	65.9	67.1
Dwellings	36.6	39.6	39.7	38.6	39.8
Other buildings and structures	30.4	31.0	29.2	27.3	27.3
Intangible fixed assets	0.6	0.5	0.6	0.7	0.6
Land underlying buildings and structures	19.5	16.8	18.9	22.5	21.6

## (2) 가계부문

(단위: %)

	1992	1996	2000	2004	2009
순자산/GDP	249.9	269.4	297.3	311.9	360.3
- 비금융자산/GDP	183.4	194.3	200.7	210.0	238.1
- 금융자산/GDP	116.8	136.7	168.2	173.3	186.7
- 순금융자산/GDP	66.6	75.1	96.5	101.9	122.2
- 금융자산/총자산	38.9	41.3	45.6	45.2	44.0
비금융자산(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Fixed assets	74.2	77.6	74.8	70.5	72.3
Tangible fixed assets	74.0	77.4	74.5	70.3	72.0
Cultivated assets	0.2	0.1	0.1	0.1	0.1
Machinery and equipment	4.0	3.5	3.0	2.4	2.0
Buildings and structures	69.9	73.7	71.4	67.8	70.0
Dwellings	60.9	65.4	64.5	62.4	63.0
Other buildings and structures	9.0	8.4	6.9	5.4	6.9
Intangible fixed assets	0.2	0.2	0.3	0.3	0.2
Land underlying buildings and structures	25.8	22.4	25.2	29.5	27.7
금융자산(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Currency and deposits	48.1	44.0	36.7	36.8	39.2
Securities	24.3	27.4	34.5	31.0	26.5
Insurance technical reserves	27.7	28.6	28.8	32.2	34.3

## 캐나다의 경제전체 자산·부채 규모 및 구성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
순자산/GDP	366.6	372.6	379.6	404.5	389.3
- 비금융자산/GDP	364.5	374.7	381.3	409.8	400.7
- 금융자산/GDP	807.6	821.6	787.9	894.9	894.8
- 순금융자산/GDP	2.1	-2.1	-1.7	-5.3	-11.4
- 금융자산/총자산	68.9	68.7	67.4	68.6	69.1
비금융자산(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Residential structures	27.8	27.8	27.3	27.1	27.7
Non-residential structures	23.7	23.8	24.6	24.5	24.4
Machinery and equipment	8.1	7.7	7.6	7.8	7.1
Consumer durables	7.3	7.0	6.6	6.6	6.6
Inventories	4.2	4.0	3.9	3.6	3.5
Land	29.0	29.8	30.0	30.4	30.8
금융자산(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Official reserves	0.3	0.3	0.4	0.4	0.4
Canadian currency and deposits	9.7	10.0	11.0	10.7	10.7
Foreign currency and deposits	1.2	1.4	1.6	1.6	1.8
Consumer credit	2.7	2.8	3.0	3.0	3.0
Loans	3.9	4.1	4.6	4.0	3.9
Mortgages	7.3	7.5	8.2	8.0	8.1
Short-term paper	3.0	2.8	3.2	2.5	2.3
Bonds	9.6	9.4	10.5	10.8	10.9
Savings bonds	0.2	0.1	0.1	0.1	0.1
Foreign investments	6.3	6.1	4.6	4.7	4.8
Shares	20.1	20.0	14.8	16.8	18.0
Corporate claims	11.9	12.0	14.5	13.8	13.2
Government claims	1.9	1.8	2.3	2.6	2.6
Life insurance and pensions	11.9	11.7	10.4	10.7	10.8
Trade accounts receivable	2.3	2.2	2.3	2.1	2.1
Other assets	8.1	7.8	8.6	8.2	7.6
금융부채(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Canadian currency and deposits	10.0	10.1	11.2	10.8	10.7
Foreign currency and deposits	1.1	1.4	1.4	1.2	1.3
Consumer credit	2.7	2.7	3.0	3.0	3.0
Loans	3.8	4.1	4.5	3.9	3.7
Mortgages	7.3	7.5	8.2	8.0	8.0
Short-term paper	3.2	3.0	3.4	2.7	2.5
Bonds	13.2	12.5	14.1	14.5	14.9
Savings bonds	0.2	0.1	0.1	0.1	0.1
Foreign investments	0.0	0.0	0.0	0.0	0.0
Shares	30.1	30.4	25.1	27.3	28.2
Corporate claims	4.7	4.9	5.6	5.3	5.1
Government claims	1.9	1.8	2.3	2.6	2.5
Life insurance and pensions	11.9	11.6	10.4	10.7	10.6
Trade accounts payable	2.3	2.2	2.3	2.1	2.1
Other liabilities	7.9	7.7	8.3	7.9	7.3

## 일본의 경제전체 자산·부채 규모 및 구성 추이

	1980	1990	2000	2009
순자산/GDP	561.3	797.6	573.2	576.0
- 비금융자산/GDP	557.9	786.2	546.8	519.4
- 금융자산/GDP	621.6	1,006.3	1,120.6	1,169.6
- 순금융자산/GDP	3.4	11.4	26.5	56.5
- 금융자산/총자산	52.7	56.1	67.2	69.2
1. 비금융자산(비중)	100.0	100.0	100.0	100.0
(1) 생산자산	44.9	28.8	43.9	50.6
a 재고	7.4	2.9	3.2	3.4
b. 유형고정자산	37.4	25.6	40.1	46.2
(a) 주택	10.0	6.0	9.0	9.7
(b) 주택이외의 건물	8.5	6.1	8.6	9.8
(c) 기타 구축물	12.3	8.6	16.1	20.8
(d) 운송용기계	1.3	0.8	1.0	1.2
(e) 기타 기계설비	5.3	4.2	6.4	6.8
(f) 육성자산	0.1	0.0	0.1	0.1
(g) (공제) 총자본형성과 관련된 소비세	0.0	0.1	1.0	2.2
c. 무형고정자산	0.1	0.3	0.6	0.9
(2) 유형비생산자산	55.1	71.2	56.1	49.4
a. 토지	55.0	71.2	56.1	49.4
(a) 택지	43.3	60.8	46.8	41.1
(b) 경지	7.3	5.6	3.6	2.5
(c) 기타 토지(임지를 포함)	4.4	4.8	5.7	5.7
2. 금융자산(비중)	100.0	100.0	100.0	100.0
(1) 화폐용금, SDR	0.0	0.0	0.0	0.0
(2) 현금, 예금	29.8	25.4	28.9	23.8
(3) 대출	31.7	31.0	28.8	23.5
(4) 주식이외의 증권	11.8	12.1	15.0	20.9
(5) 주식, 출자금	8.2	13.3	8.9	8.4
가운데 주식	7.0	12.5	7.5	6.8
(6) 금융파생상품			0.4	1.1
(7) 보험, 연금 준비금	3.2	4.6	6.7	7.1
(8) 기타 금융자산	15.3	13.6	11.4	15.1
3. 부채(비중)	100.0	100.0	100.0	100.0
(1) 화폐용금, SDR	0.0	0.0	0.0	0.0
(2) 현금, 예금	30.1	26.1	29.5	25.0
(3) 차입	31.5	31.7	29.5	24.9
(4) 주식이외의 증권	12.6	13.2	16.0	23.1
(5) 주식, 출자금	8.6	14.0	10.5	10.8
가운데 주식	7.4	13.2	9.0	9.0
(6) 금융파생상품			0.4	1.3
(7) 보험, 연금 준비금	3.2	4.7	6.8	7.5
(8) 기타 부채	14.0	10.2	7.4	7.4

<국문요약>

##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박형수 · 홍승현

본 연구에서는 세입, 세출 등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고령화·인구 감소가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국민소득의 지출, 분배, 생산측면, 고용공급 및 수요 구조, 가계소득 및 소비구조, 자산규모 및 자산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세입·세출 규모 및 각각의 구조에 미치는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특히 성장률 둔화로 세입 및 지출 증가율도 하락할 전망이므로 세입 및 지출규모 자체 보다는 세수 및 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세목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크게 세원 변동과 세제 변화 두 가지가 있지만 미래의 조세정책을 예견할 수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세원의 변동방향을 짐작하여 세목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만 분석(qualitative analysis)하였다. 세목별 세원에는 소득, 소비, 자산 수준과 같은 규모변수 외에 금리, 주가, 부동산 가격 등 가격 변수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소득 관련 세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 관련 세수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산 관련 세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미미하게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4대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 공교육 관련 재정지출 등의 규모를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계했으며, 이러한 정량적 분

석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성적 분석만 시도하였다. 공적연금이 나 의료관련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는 이러한 재정수입 증가속도에 비해 훨씬 빠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주택, SOC,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재정지출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국가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세입 확충 및 세출 절감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 Study on the Fiscal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Hyung-soo Park · Seung Hyun Ho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declining population and ageing society on the overall public finance in terms of economic growth, income level, labor market, consumption-saving behavior, etc. Since the demographic changes we are experiencing are naturally associated with slower growth in revenue and spending, we focus more on changes in structure rather than changes in the levels of revenues and spendings.

Two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tax revenues are changes in the tax base and the tax system. Since change in the tax system is hard to predict, this study analyzes how future changes in the tax base will affect tax revenues, especially focusing on the qualitative changes in the diverse taxes. Both volume factors income, consumption, wealth and price factors interest rate, stock index, real estate price that affect tax revenues are considered in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demographic change will bring a higher level of income-related tax revenues, a moderately higher level of consumption-related tax revenues, but a decreasing or at least stagnant level of asset-related tax revenues.

In addition, long-term projections (until year 2050) under the

current system are provided regarding major public pensions, public health insurance fund, expenditures on social safety net and public education, etc. Our results show that public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costs will grow faster than their revenues, becoming a major burden on future fiscal management. To cope with this problem, author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continue its efforts to increase tax revenues and economize spending in the future.



## 〈著者略歴〉

박형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승현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미국 Yal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성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장광남 "

## 研究報告書 11-10

###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

2011년 12월 23일 인쇄

2011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박형수·홍승현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상 일 인 쇄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1

ISBN 978-89-8191-558-2

---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13,000원